

5·18 39주년 기념 학술대회

5·18연구의 계보학

사회 : 지병근 | 조선대 교수

09:30-10:00	등록	
10:00-10:30	개회식	
10:30-11:10	기조강연	5·18 사건의 현재화, 지구화: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극복을 위하여
		정일준 고려대학교
11:10-11:40	발표 1 역사	5·18, '진실'의 레짐과 계보학
		김봉국 전남대학교, 토론: 김형주 전남대학교
11:40-12:10	발표 2 문학예술	빛진 자들의 타인에 대한 공감의 방식 -5·18 문학 연구의 기원·담론·도약
		최현주 순천대학교, 토론: 공종구 군산대학교
12:10-13:30	점심 식사	
13:30-14:00	발표 3 정치	5·18 민주화운동과 한국 민주주의
		민 희 경희대학교, 토론: 정재관 고려대학교
14:00-14:30	발표 4 젠더	'5·18 광장'의 여성과 '애국 시민'의 경계
		김영희 연세대학교, 토론: 한순미 조선대학교
14:30-15:00	발표 5 기억투쟁	5·18의 제도화와 기억의 자리
		박경섭 전남대학교, 토론: 김기곤 광주전남연구원
15:00-15:20	휴식	
15:20-15:50	발표 6 가해자	제노사이드와 정치적 학살(politicide)의 가해자 연구와 5·18
		곽송연 서강대학교, 토론: 정문영 전남대학교
15:50-16:20	발표 7 트라우마	5·18 자살과 트라우마의 계보학
		김명희 경상대학교, 토론: 홍성태 대구대학교
16:20-17:00	종합토론: 정명중 전남대 교수	



이철우
5·18기념재단 이사장

안녕하십니까?

5·18기념재단이 마련한 5·18 39주년 기념 학술대회의 시작을 알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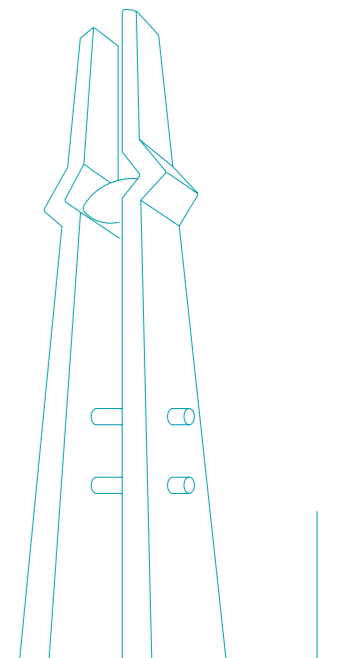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는 '5·18연구의 계보학'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5·18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고 또 누적되었습니다. 그 결과물들이 수많은 논문과 단행본으로 출간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연구 성과들에 대한 체계적인 조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5·18에 대한 연구는 종종 중언부언 길을 잃기도 했고, 뚜렷한 지향점 없이 표류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2020년 40주년을 앞두고 그간 수행된 연구들을 되돌아보는 작업이 시급해 보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기존의 성과들을 정리하고 분류하는 작업만으로는 후속 세대들의 5·18연구에 방향성을 부여하고 힘을 실어주기 어려울 것입니다. 본 학술대회가 5·18연구를 '계보학'적으로 살펴보려는 것은 그런 이유입니다.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를 '5·18연구의 계보학'으로 삼은 것은 그간 5·18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 의해, 어떤 지형 속에서 연구되어 왔는가, 그리고 그 가시성의 장에서 가시화되지 못한 문제들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이와 같은 질문들을 던져 봄으로써 그

간의 연구들을 개관하고 향후 5·18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이 학술대회의 목표입니다. 또한 5·18연구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 기획, 실천의 장을 마련하여 5월 정신을 재조명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2020년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학술대회를 위해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조강연을 맡아주신 정일준교수님을 비롯한 모든 발표자·토론자·사회자 선생님들께 감사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5·18 39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축하해주신 이용섭시장님, 김동찬 시의회의장님, 장휘국교육감님을 비롯한 이번 학술대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5·18 민주화운동의 연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립위해 ‘5·18 연구의 계보학’이란 주제로 열리는 “5·18 39주년 기념 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높이 승화시키고 뜻깊은 학술대회를 마련해 주신 이철우 이사장님을 비롯한 5·18 기념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기조 강연과 발표를 해주실 전문가 여러분께도 각별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부당한 국가권력에 맞섰던 평범한 사람들의 위대한 항쟁으로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끈 자랑스러운 역사가 되었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지나 국가와 전 세계가 5·18 민주화운동을 자랑스러운 민주역사로 인정했고, 민주·인권·평화의 광주정신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밝혀야 할 진실이 많고 불순한 세력들이 오월 역사를 왜곡·폄훼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올바르게 기억되고 기록될 때 강한 힘을 갖습니다. 5·18이 광주를 뛰어넘어 국민 모두의 자부심이 되기 위해서는 오월의 역사를 바로 세워 우리 안에 살아 숨 쉬는 현재이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월의 진실을 밝히고 민주·인권·평화가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향해 멈춤 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5·18, 세계의 5·18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이 되는 내년에는 세계인이 기억하고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진정한 5·18의 전국화, 세계화를 이룰 것입니다. 숭고한 오월 정신이 현재를 넘어 미래로 뻗어 나가게 할 것입니다.

오늘 학술대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위대한 정신과 가치를 함께 나누고, 그동안 5·18 연구를 정리하고 분류하는 것을 넘어 5·18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5·18 39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거듭 축하드리며, 모든 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 동 찬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한 해의 수고를 거둬들이는 결실의 시기에 '5·18연구의 계보학'이란 주제로 "5·18 39주년 기념 학술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150만 광주공동체의 뜻을 담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모로 힘든 가운데에서도 지난 40년 간 집적된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연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조망함으로써 5·18 40주년을 뜻깊게 기리기 위해 의미 있는 학술대회를 마련해주신 5·18기념재단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고매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기조강연과 발표, 토론에 임해주실 여러 연구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80년 5월의 광주공동체는 불의와 폭거에 의연히 항거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내었으며, 위대한 민주정신과 숭고한 대동정신을 보여줬습니다.

1997년 국가법정기념일로 지정된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평화와 민주, 그리고 공존을 향한 오월 광주의 정신과 동아시아 국가들의 민주화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기리기 위해 2011년 5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전 세계가 경의를 표하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지난 10월31일 5·18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근거법률인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80년 5월의 정의로운 진실을 온전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가 5·18의 진실이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고 명백하게 밝혀짐으로써 세계의 5·18로 확고하게 자리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5·18 39주년 기념 학술대회"의 개최를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학술대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장 휘 국
광주광역시교육감

오월 광주가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로 거듭나고, 5·18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기까지 수많은 압박과 탄압에도 진리를 탐구해 온 연구자들의 희생과 노고가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39주년 5·18 기념 학술대회를 위해 애써주신 5·18기념재단과 여러 연구자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40주년을 앞두고 '5·18 연구의 계보학'을 주제로 한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치하하고, 향후 과제를 조망함으로써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당한 역사적 평가와 보편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위대한 역사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이루어낸 오월 정신은 매우 숭고하며, 5·18 민주화운동과 같은 역사가 있는 한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이 등재되는 과정에서는 5·18이 한국을 넘어 아시아 여러 국가의 민주주의와 인권 지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세력들은 40여 년이 지난 오늘까지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목소리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끊임없는 왜곡과 폄훼를 바로잡고, 올바른 역사교육을 통한 민주시민 육성을 위해 '5·18 교육 전국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육청은 올해 교육부, 전국의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모든 학교에서 5·18 계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교육 자료를 개발 및 배포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했습니다. 더불어 내년 40주년에는 이를 더욱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오늘 학술대회의 성과가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콘텐츠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이 자리를 위해 애써주신 5·18기념재단과 멀리 광주까지 오신 여러 발제자와 토론자분들을 환영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CONTENTS

기조강연 : 5·18 사건의 현재화, 지구화: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극복을 위하여

발표 : 정일준(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12

5·18, '진실'의 레짐과 계보학

발표 : 김봉국(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HK연구교수) 24

토론 : 김형주(전남대 5·18연구소 전임연구원) 34

빛진 자들의 타인에 대한 공감의 방식-5·18 문학 연구의 기원·담론·도약

발표 : 최현주(순천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38

토론 : 공종구(군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52

5·18 민주화운동과 한국 민주주의

발표 : 민 희(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SSK연구단 연구교수) 56

토론 : 정재관(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66

'5·18 광장'의 여성과 '애국 시민'의 경계

발표 : 김영희(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70

토론 : 한순미(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연구교수) 93

5·18의 제도화와 기억의 자리

발표 : 박경섭(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전임연구원) 89

토론 : 김기곤(광주전남연구원 사회환경 연구실장) 106

제노사이드와 정치적 학살(politicide)의 가해자 연구와 5·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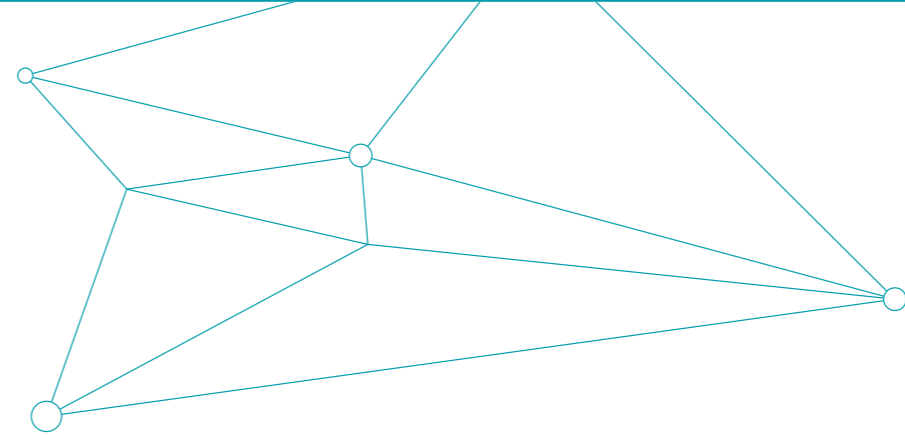
발표 : 곽송연(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선임연구원) 110

토론 : 정문영(전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 118

5·18 자살과 트라우마의 계보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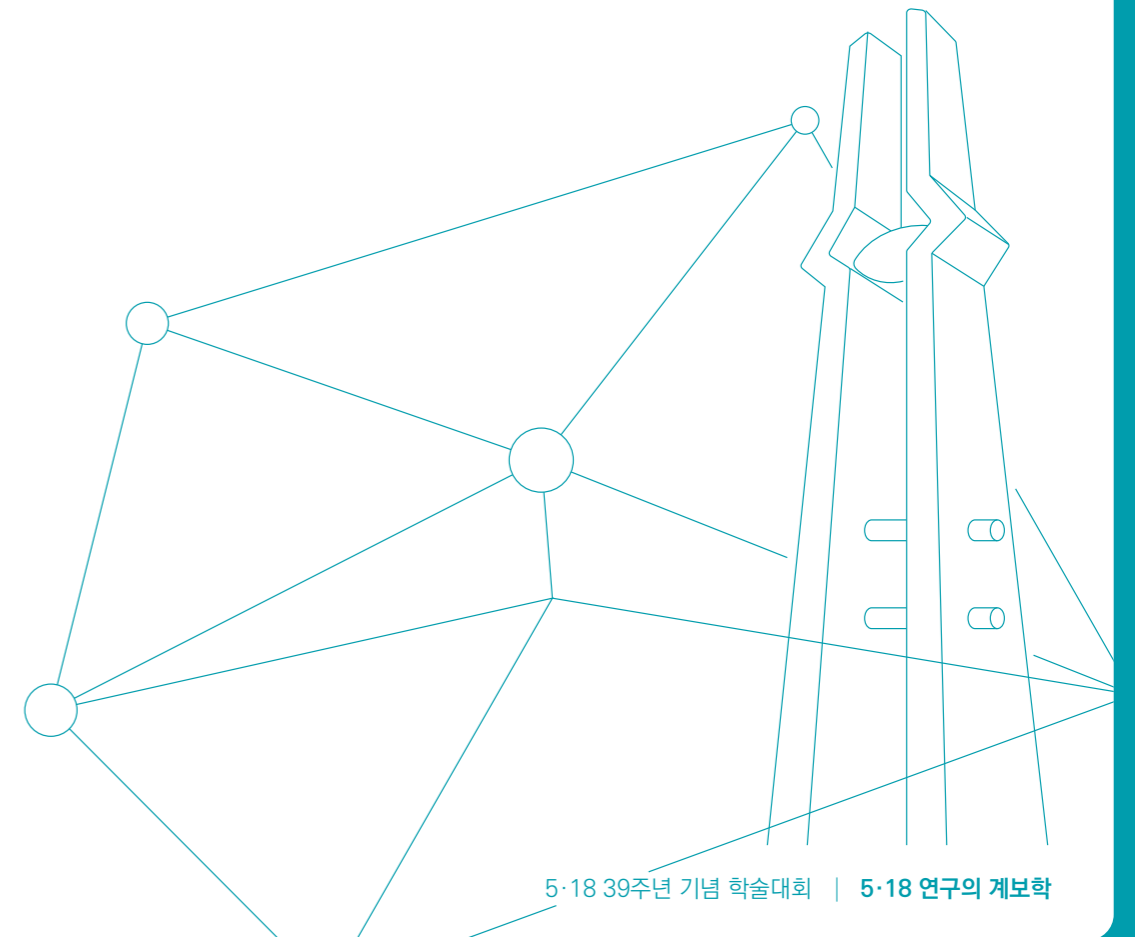
발표 : 김명희(경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122

토론 : 홍성태(대구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후연구원) 141



기조강연

5·18 사건의 현재화, 지구화: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극복을 위하여



5·18 사건의 현재화, 지구화: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극복을 위하여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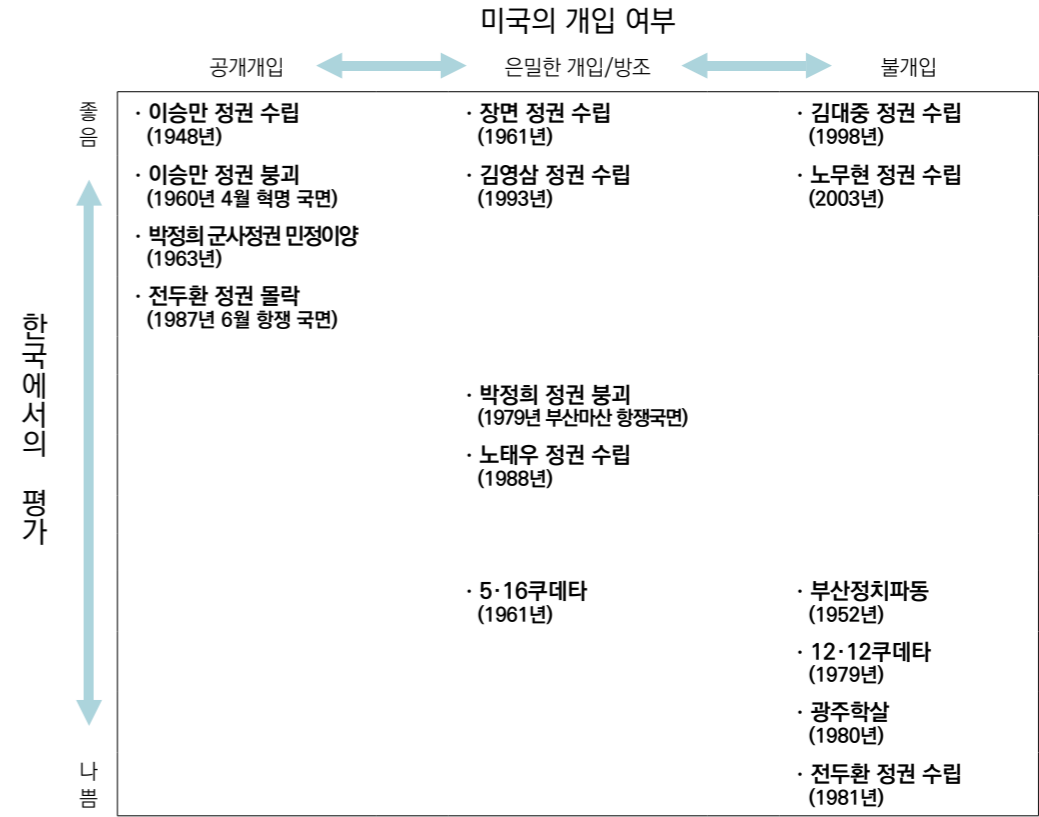
정 일 준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지금 1980년 5·18 사건을 발표하는 화자는 스스로를 국제관계의 역사사회학(Historical Sociology of International Relations) 전공자라고 생각한다. 최근에는 지구역사사회학(Global Historical Sociology)이라는 이름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한다. 주로 한미관계, 남북관계, 그리고 미군관계를 연구했다. 미국자료를 이용해서 한국 현대사를 연구했다. 그러다 보니 한국 사회변동을 ‘내재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바깥 세계와의 연결(connection)과 상호작용(interaction)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데 익숙하다.

한미관계와 5·18 사건

미국이 대한민국 건국과 한국전쟁 그리고 자본주의 산업화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한국 민주화와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다(정일준 외 2014). 오해가 없기 바란다. “미국이 한국 민주주의에 영향을 끼쳤다”는 진술은 미국이 “의도적으로 좋은 영향을 끼치고자 했다”거나 “결과적으로 한국 민주화에 기여했다”는 의미가 아니다. 한미관계의 특수성 나아가 한국의 총체적인 미국식변형(Total American Transformation of South Korea)으로 말미암아 부지불식간에 한국사회구조와 한국인의 사회행위가 미국식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로 제도화되었다는 의미이다. 미국이 선한 의도 또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한국에 개입했건, 한국이 미국을 좋아하건 또는 싫어하건 상관없이 미국은 한국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

사하고 있다. 다음 <그림 1>은 한국의 주요정치변동에 대한 미국의 공개개입-은밀한 개입-불개입을 한축으로 하고 한국에서의 평가를 다른 한 축으로 삼아 정리한 것이다. 한국의 민주주의 이행과 관련해 볼 때 미국이 공개개입하여 찬사를 받은 경우는 이승만 정권 붕괴시기, 5·16쿠데타 이후 민정이양 국면 그리고 5공화국 전두환 정권 말기이다. 1980년대 이후 한국에서 반미감정과 반미주의 나아가 반미운동이 대두한 데에는 12·12쿠데타와 광주학살에 대한 미국의 불개입 그리고 전두환 정권 수립을 미국이 지지한 점이 크게 작용했다.



여기서 우리는 미국의 한국정치에 대한 개입양식이 선택성(選擇性, selectivity)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미국 개입양식의 선택성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다음 그림은 미국의 한국내정에 대한 연루(involverment)가 미국의 국익(national interest)과 양립가능한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요컨대 4월혁명 국면에서 미국은 (공개)개입이 미국의 국익을 추구하는 방식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러한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광주학살 국면에서 미국의 입장은 애매했다. 불개입을 택했고, 결과적으로 학살을 방조했다.

한미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의 제국으로서의 성격을 이해해야 한다. 미국을 제국주의로 보는 것과 제국으로 보는 것은 매우 다르다. 제국은 제국주의적이지 않으면서 제국통치를 행할 수 있다. 한미관계를 동등한 주권 국가들 사이의 수평적 외교관계로 보느냐, 수직적 지배와 종속관계로 보느냐, 아니면 후원-수혜관계로 보느냐 입장이 엇갈린다. 또 한미관계를 군사동맹관계를 중심에 두고 보느냐, 자본주의 경제관계를 핵심으로 보느냐, 아니면 사회문화적 교류를 강조하느냐에 따라 달리 볼 수 있다. 처음에 군사동맹, 나중에 경제교류, 최근에 문화적 동화로 강조점이 이동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또한 한미관계는 일방적으로 전개되지 않았다. 이를 다음 그림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한미관계를 군사동맹이나 양국간 권력엘리트관계로 환원시킬 수 없다. 미국제국이 한국을 자신의 영향력 안에 붙들어두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는 것은 연성권력(Soft Power)이다. 한국이 군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도 얼마나 미국화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다음의 <그림 2>이다.

¹⁾ 이 글은 원래 2019년 11월 5·18 민주화운동 39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기존 연구동향에 대한 리뷰논문으로 발표하려고 기획했다. 나중에 주최 측에서 <기조연설>로 자리매김한 것을 알았다. 논문은 차후 제출하기로 하고 기조연설을 따로 준비했다. 이유는 복합적이다. 하나는 광주에서 5·18에 대해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지 인지하게 된 것이다(2009 도올 김용옥 광주 MBC 특강; 2019 김상봉 교수 발표문). 다른 하나는 최근 쟁점으로 떠오른 2016·17년 촛불집회 당시 계엄문건 논란이다. 더 중요한 이유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가 요동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민주주의는 안팎으로 도전받고 있다. 한가하게 과거연구를 회고할 것이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가 직면한 위기를 중심으로 5·18의 현재적 의의를 자유로운 형식으로 발표하고자 한다. 형식도 미안하고 내용도 미숙하다. 인용을 삼가주시되 비판은 환영한다. ijchung@korea.ac.kr

변형의 차원

		군사	정치	경제	문화(주체형성)
시 간	1950년대	제도화 1: 군대	제도화 2: (민간) 엘리트	원조경제	GI문화
	1960년대	과대성장한 군	군의 정치개입	경제성장	군대문화
	1970년대	자주국방	일인독재 제도화 (유신체제)	군수산업화 (부국강병)	사회의 병영화
	1980년대	신병전	권력승계 제도화	구조조정 1 (경제자유화)	사회의 자유화
	1990년대	탈병전	정권교체 제도화	구조조정 2 (산업지구화)	문화의 지구화
	2000년대	협력적 자주국방	다두제 제도화	구조조정 3 (금융지구화)	일상생활의 지구화

다음의 <표 1>은 국제관계이론에서 본 국가정체성과 민족정체성이다. 민족 정체성이나 국가 정체성 양자를 포괄해서 보여준다. 이를 통해 국가나 민족 어느 한쪽을 정당하게 고려하지 않거나 또는 물상화시키는 오류를 벗어날 수 있다.

<표 1> 국제관계이론에서 본 국가정체성과 민족정체성

국 가 정 체 성	민 족 정 체 성	부재	물상화	사회적 구성
부재	부재	다원주의	국가 근본주의(주류국제관계이론)	국가 중심적 구성주의
물상화	물상화	근본주의 인류학	1. 이중 근본주의: 김구, 김규식 (분단정권수립 반대)	2. 체계적 민족 근본주의: 이승만 정권, 북한 정권(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통일 민족주의: '북진통일', '조국은 하나')
사회적 구성	사회적 구성	구성주의 인류학	3. 비교 사회적 민족 구성주의: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정권 (반공 민족주의: '조국 근대화', '선진화', '세계화')	4. 체계적 민족 구성주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 (국가도 민족도 구체적 시공간 속에서 민주적으로 만들어짐: '햇볕정책', '평화번영정책', '신한반도체제')

많은 연구자들과 지식인들이 '5·18'을 근현대 한국의 저항전통에 위치시켜 해석하고자 한다(역사성Historicity 우위의 접근법). 5·18 사건을 한미관계와 국가-시민사회 관계(또는 민군관계)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맥락에서 재조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지구성Globality 우위의 접근법). 역사학이나 사회과학 이외의 학문분야에서는 '성찰성(Reflexivity) 우위의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

5·18 사건, 꿈보다 해몽? 또는 영구해석?

5·18 사건에 대해서는 15년 전에 「5·18 담론의 변화와 권력-지식관계」라는 논문을 발표한 적 있다. 거기서 다음과 같은 푸코 논문 인용으로 글을 시작했다

해석은 자기 자신을 끝없이 해석하고, 항상 다시 시작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두 가지 중요한 결과가 나타난다. 먼저 이제부터는 해석이 항상 '누구?'에 의한 해석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즉 우리는 기의 속에 있는 것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가 해석해 놓았는가를 해석하는 것이다. 해석의 기초는 다름 아니라 해석자 자신이며, --- 두 번째로 해석은 항상 자기 자신을 해석해야 하며, 결국 자기 자신에게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미 만기(滿期)가 된 기호(記號)의 시대나 역시 매우 선형적(線形的)인 변증법(辯證法)의 시대와는 반대로 우리는 이제 순환적(個環的)인 해석(解釋)의 시대를 맞고 있다. 이 시대는 그것이 이미 지나온 곳을 다시 통과해야만 하는데, 결국 그것이야말로 해석이 실제로 당연하고 있는 유일한 위험이다 ... 일관성 있고, 적절하고, 체계적인 표지처럼 기호가 다른 것보다 먼저, 본래부터,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는 경우 해석은 죽게 된다. 해석이 살아있다는 것은 오로지 해석 밖에 없다고 믿는 것이다(미셸 푸코·정일준 편역 1999; 강조 필자).

'1980년 5월 광주'의 진실을 추적할 수 있는 조건을 묻고자 했다. '5월 광주'라는 사건의 의미는 '과거의 그곳'에 고정된 것일 수 없고 끊임없는 해석학적 순환(Hermeneutic Circle)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리하여 광주와 다른 지역 그리고 당사자 세대와 후대가 5·18 사건을 두고 지평융합(fusion of horizon)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청이었다. 5·18 사건을 지금, 여기서 어떻게 현실에서 계승,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을 배후에 전제하면서, 당시까지의 5·18 담론을 추적하고 이를 앞으로 어떻게 연구하고 또 확산시켜 나갈 것인지 그 방법론을 모색하고자 했다.

5·18 민중항쟁은 '1980년 5월 광주'라고 하는 특정한 시공간에서 벌어진 역사적 사건(事件)이다. 그렇지만 5·18 담론은 이제 특정한 시간대도, 특정한 공간도 초월한다. 5·18 민중항쟁 당시 영웅적으로 투쟁했던 주체들의 희생에 의해 이제 5·18 담론은 초월적 상상력(超越的 想像力)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현실 속에서 매순간 한계에 부딪쳐 우왕좌왕하는 우리에게 초월적 상상력은 마르지 않는 사회학적 상상력(社會學的 想像力)의 원천을 제공한다.

그런데 국가폭력(國家暴力)의 희생자(犧牲者)라는 소극적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5·18 담론을 민주와 인권이라는 담론과의 관계 속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해 나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점이 있었다.

5·18 담론은 5·18 민중항쟁에 직간접으로 관련된 모든 이들의 삶과 분리 될 수 없다. 그래서 추진력을 얻지만 또 한계도 있다. '피해의식'과 '주체의식'은 당사자와 주위 사람들로 국한되는 한 강도(彈度)는 높아도 범위(範圍)는 제한된다. 주체(主體), 진실(眞實) 그리고 경험(經驗)은 사회적으로 구성(構成)된다. 지식의 역사성(historicity)을 담지하는 것은 어떤 주장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그 무엇을 재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진술이 등장할 수 있는 조건(條件)을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다. 현실에서 진실(眞實)은 항상 권력(權力)과의 관계에서 구성되고 또 재구성된다. 그렇다면 '1980년 5월 광주'의 진실한 지식이 가능한 조건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여기서 우리는 지식의 가능성 조건이라는 비판적 질문이 한편으로는 경험적(經驗的, empirical)인 질문이면서 또 다른 측면에서는 초월적(超越的, transcendental)인 성격을 지녔음을 유의해야 한다.

두 가지 편향을 비판하고자 했다. "하나는 경험주의(經驗主義) 즉 주체중심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객관주의(客觀主義) 즉 자료중심주의이다. '5월 광주'의 의미는 당시 광주시민들의 체험이나 그들을 둘러싼 기억으로 환원될 수 없다. 또한 그것은 '5월 광주'를 둘러싸고 쏟아져 나온 온갖 문서들, 진술들에 고착될 수 없다."

우리가 '5월 광주'라는 암반(巖盤)에 대해 고고학적(考古學的, archaeological)인 접근을 넘어서고자 한다면, '5·18 담론'이라는 담론구성체(談論構成體, discursive formation)가 권력-지식관계 속에서 어떻게 형성되고 또 해체, 재구성되는 지를 살펴야 한다, 여기서 푸코의 계보학(系譜學, genealogy)은 매우 시사적이다. 푸코가 이야기 하는 계보학은 담론을 대상의 영역을 구성하는 권력이라는 관점에서 포착하고자 한다. 따라서 어떤 담론의 수용가

능성을 질문하는 것은 진실 그 자체를 심문하는 것과 연결 되어있으며, 진실의 지위와, 진실에 아로새겨진 권력효과(權力效果)와도 맞닿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진실체제(眞實體制, regime of truth)**는 진술을 통치하여 과학적으로 수용 가능한 일련의 진술을 구성하여 과학적인 절차에 의해 증명하거나 기각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 진실은 권력체제와 순환적(個環的)인 관계를 맺고 있다. 만약 진실이 제도나 실천의 연결망과 다시 연루된다면 **주체의 계보학**을 채택해야 한다. 권력과 지식이 끊임없이 관계를 맺고 있다면 진실게임을 연구함으로써 스스로를 주체로 형성하는 과정 즉 주체화(主體化, subjectivation)라는 핵심개념을 다시 불러들여야 한다. 인간과학이 발생시키는 진실은 권력-지식 연계관계에 의해 전해진 것 인데,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구성하는 현대적 형식을 주관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푸코의 지적 궤적은 주체가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조건을 고고학적(考古學的)으로 탐구하는 데서, 진실 그 자체가 자신을 주체로 구성하는 주요 가능성의 조건이라는 계보학적 주장으로 나아갔다고 할 수 있다. 방법론적으로는 철저하게 주체를 탈중심화(脫中心化, de-centering)하면서도, 윤리적으로 주체를 재중심화(再中心化, re-centering)하는 푸코의 비판전력이 앞으로 5·18 담론을 연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5·18 민중항쟁과 관련하여 현실적, 학문적 쟁점을 염두에 둘 때, 2004년 논문의 목적은 지극히 제한적이었다. 먼저, 5·18 민중항쟁 이후 국가, 정치사회, 시민사회 그리고 광주 지역사회라는 담론공간(談論空間)에서 5·18 담론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지를 파악하고자 했다. 권력-지식관계 속에서 5·18 담론의 궤적을 추적해보자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광주항쟁 이후 논문이나 책자의 형태로 공식 출간된 문건을 중심으로 5·18 담론의 현주소를 살펴보고자 했다. 끝으로, 현 단계 5·18 담론의 쟁점을 소개하면서 지금 여기에서 이를 어떻게 계승발전 시킬 것인가를 논의해보고자 했다. 과연 무엇을 얼마나 더 밝히고, 또 그것을 어떻게 기억하며 또 계승할 것인가?

5·18 담론의 딜레마: 5·18의 국가승인과 제도화 이후

5·18 사건이 일어난 1980년부터 2000년대 상반기까지 국가(國家)-정치사회(政治社會)-시민사회(市民社會)-지역사회(地域社會, 광주) 각 영역에서의 투쟁과 이 영역들 사이의 세력관계 변화가 5·18 담론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1987년 6월항쟁기까지 5·18 담론은 국가가 독점(國家獨占)한 가운데 ‘광주사태’라고 명명되었다. 정치사회 대부분은 침묵을 강요당했지만, 광주 현지는 물론 지역적으로는 전국적으로 시민사회 수준에서 꾸준한 저항담론(抵抗談論)이 추구되었다. 5·18 담론은 밑으로부터의 저항과정에서 사회운동을 통해 사실상 전국화(全國化)되었던 것이다. 6월항쟁을 거친 후 6공화국 출범과 더불어 5·18 담론은 국가 부문과 정치사회에서 공식적으로 부활(復活)한다. 이제 5·18 민중항쟁은 ‘민주화운동’으로 국가에 의해 공식 자리매김 된 가운데 이를 ‘민중항쟁’ 또는 ‘무장봉기’ 등으로 보다 급진적으로 재해석하고자 하는 시도가 나타났다, 1995년 5·18특별법 제정과 더불어 5·18 담론은 국가에 의해 승인받게 되며 5·18 담론의 권력담론(權力談論)으로의 전환 즉 국가화(國家化)가 이루어졌다. 여기서 딜레마가 발생한다. 1980년의 ‘광주학살’은 한국정부가 수립된 지 한 세대가 지난 다음에 다시금 국가에 의해 자행되었다는 점에서 ‘제주 4·3’ 같은 **국가형성기의 국가폭력**이나 ‘보도연맹사건’ 같은 **한국전쟁 중의 국가폭력**과도 확연히 구분된다. 또한 광주학살은 비교적 짧은 기간인 10여년 만에 국가로부터 재평가 받고 또 공식적으로 승인받았다는 점에서도 앞서의 학살과 구분된다. 신군부(新軍部)에 의해 자행된 광주학살이 그만큼 한국사회에 커다란 상처와 엄청난 균열을 낳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권위주의정권이 통치불가능상태에 빠질 만큼 엄청난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사실 광주학살을 거쳐 탄생한 5공화국은 전두환 집권 기간 내내 정당성문제로 시달렸다. 똑같은 군사 쿠데타이긴 하지만 전두환과 신군부의 쿠데타는 박정희의 쿠데타와 출발이 달랐다. 잔혹한 학살은 격렬한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광주학살’은 반미감정(反美感情)을 확산시켰다.

첫째, 5·18 담론은 국가승인(國家承認)을 받은 후부터 이제까지의 저항담론에서 권력담론의 일부로 위치가 바뀌었다. 5·18 담론은 국가에 의해 위로부터 강제되어온 여타 담론 중 하나로 위상이 다시 자리매김 되었다. 바로 이 점이 당대에 사회운동을 통해 밑으로부터 전국화되었던 5·18 담론이 왜 후대에 광주지역에서조차 제대로 계승되고 있지 못한 지에 대한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다. 둘째, 5·18 담론은 국가담론에 포섭됨으로써 이제 저항담론의 위치

에서 벗어나 국가안보(國家安保)나 경제발전(經濟發展) 또는 민주주의(民主主義) 같은 여타 국가담론과의 관계설정 문제가 대두했다. 다시 말하면 5·18 담론 이 이제는 상호 경쟁하는 여러 권력담론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하면서 더 이상 특권적인 지위를 자임할 수 없게 되었다는 말이다. 5·18 담론은 이제 민주시민 모두가 기억해야 할 부채(負債)에서 다른 담론과 경쟁하면서 개별 시민에게 기억시켜야 할 속제로 남게 되었다. 셋째, 5·18 담론이 한국사회의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국가담론으로 자리 잡게 됨으로써 이제 이를 민족담론(民族談論), 평화담론(平和談論) 나아가 인권담론(人權談論)과 어떻게 접합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했다. 이는 한편으로는 5·18 담론을 미국에 대한 문제제기, 시민의 생활상의 문제, 기본적인 인권의식으로까지 확대시키는 과제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5·18 담론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한국 민주주의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착시키는 과제이기도 했다.

그런데 기존의 5·18 담론 연구는 5·18 담론의 국가화 이전을 주 대상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저항담론, 이론(異論, heterodoxy)의 지위에 있을 때의 5·18 담론을 주로 다루고 있다. 문제는 5·18 담론이 권력담론의 일부가 된 이후이다. 5·18 담론구성체(談論構成體)를 보면 첫째, 1987년 6월항쟁을 통해 담론공간이 개방되기 전까지 5·18 담론은 국가의 공식해석으로 독점(獨占)되고 당사자는 침묵(沈默)을 강요당했으며 국가의 공식해석과 다른 모든 여타 해석은 배제(排除)되었다. 둘째, 6공화국 수립과 더불어 5·18 담론은 부활했다. 이제 국가의 권력담론과 타협하는 민주화운동론(民主化運動論)과 여전히 저항담론을 추구하는 민중항쟁론(民衆抗爭論)이 서로 맞서며 정통이론(正統理論)의 지위를 차지하고자 경쟁했다. 셋째, 5·18 담론이 국가에 의해 승인되고 권력담론에 포섭됨으로써 일정 정도 국가화가 이루어졌다. 이제는 5·18 담론이 여타 담론을 억제하거나 주변화시키는 기능을 하게 되었다. 5·18 담론을 여전히 진실담론(眞實談論)으로서 추구하고자 하는 흐름과 더불어 권력담론화한 5·18 담론에 대한 비판과 저항이 시작된다. 5·18 담론이 분화(分化)하는 것이다. 5·18 담론을 ‘민주화운동’이라 부르느냐 또는 ‘민중항쟁’이라 부르느냐 하는 것은 그리 큰 차이가 아니게 되었다. 물론 담론투쟁(談論鬭爭)을 통해 ‘1980년 5월 광주’를 어떻게 기억(記應)하고 또 재현(再現)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중요하다. 그렇지만 권력-지식관계에서 볼 때, 정통을 다투는 두 담론은 이미 특권화된 권력담론 안에서의 우호적 경쟁(友好的 競爭)이지, 권력담론 대 저항담론 또는 권력담론 대 진실담론의 적대적 갈등(敵對的 葛藤)이 아니다. 5·18 담론의 국가승인 이후 5·18 담론구성체는 이미 의견(意見)의 영역 즉 말할 수 있는 영역으로 들어왔다. 나아가 이제 5·18 담론을 ‘민주화운동’이라 부르건 ‘민중항쟁’ 또는 나아가 더 급진적인 어떤 이름을 지어 부르건 간에 바로 그러한 호명 자체가 5·18 담론을 둘러싼 이견(異見)을 억견으로 내몰고 또 억압하게 되었다. 다른 지역, 다른 세대의 한국 시민 나아가 세계 시민에게 5·18 담론을 확산시키고 깊이 침투시키기 위해서는 5·18 담론 자체를 보다 많은 이들의 시선에 개방함으로써 새로운 접근과 새로운 해석을 가능하게 해야 할 것이다. ‘정통 5·18 담론’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보다 많은 이야기꾼들의 이야기를 통해 ‘다양한 5·18 담론’이 다른 각도에서 끊임없이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절대공동체(최정운)? 역사적 공동체(정근식)? 항쟁공동체(김상봉)?

5·18 사건을 사회과학에서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들어서였다. 그렇지만 5·18 사건을 해석하는 독자적인 틀을 제시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말부터였다. 최정운 교수는 ‘절대공동체’론(최정운, 1999)을 정근식 교수는 코원적 상상력에 입각한 ‘역사적 공동체’(정근식, 2003) 개념을 김상봉 교수는 ‘항쟁공동체’(김상봉, 2010)를 주장했다. 5·18 사건은 공수부대의 야만적 폭력에 저항하여 ‘절대공동체’가 형성되는 초기 국면과 ‘해방광주’라는 두 번째 국면, 그리고 ‘도청사수투쟁’이라는 마지막 국면으로 나눌 수 있다. 정근식은 “5·18 민중항쟁의 첫째 계기에서의 인간존엄성의 옹호는 물론이고, 두 번째 계기에서의 공동체적 질서, 세 번째 계기에서의 역사적 희생 또한 전자를 완성시킨, 상이하지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역사적 자산”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해방광주가 긴장과 갈등이라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들은 ‘절대공동체’에 대한 찬사와 동등하거나 유사한 관심을 받을 만한 가치를 갖는다”는 것이다. 그는 “해방광주는 내부간 갈등과 투쟁보다는 외부의 적에 대한 공통의 이해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순수하고 동질적인 경험으로 인식되었다”고 본다. 5·18 사건의 마지막 국면의 교훈을 “미래적 전망에 치중하는 것”으로 보면서 정교수는 “보다 역사적인 안목에서 자아와 역사적 공동체의 통일을 지향했던 세

번째 국면의 문제도 이론틀 속에 보다 적극적으로 끌어들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짓는다. 최정운은 “해방광주의 복잡한 상황전개는 5·18의 민중들이 학생이건, 운동권이건, 노동자건, **혁명의 의도**가 없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평가한다. “해방광주는 절대공동체가 분해되며 일상으로의 복귀가 진행되는 과정”이었다는 것이다. “광주시민들이 해방 첫날부터 원했던 것은 그들의 삶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군부와의 투쟁, 같이 이룰 수 없는 두 개의 목표”였다고 보는 그는 “현실적으로 그들이 이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외부의 지원, 즉 **타 지역의 봉기와 미국의 지원**”이었다고 진단한다. 최교수도 결코 마지막 항쟁과 죽음의 의미를 과소평가하지 않는다. 그 젊은이들의 피어린 항쟁이 “결국 광주의 진실을 지켰다”고 본다. 나아가 “그들이 … 모두 살아남기 위해 총을 버리고 도청을 비워줬더라면 지금 우리에게 남겨진 5·18의 유산은 이만 못했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최교수의 ‘절대공동체’라는 경험적 공동체 분석과 정교수의 ‘역사적 공동체’라는 초월적 공동체 구상이 상호대립하기보다는 상호보완적(相互補完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절대공동체’(絶對共同體)는 1980년 5월 18일부터 21일에 이르는 짧은 기간 동안 광주지역의 전 계급계층이 모두 망라된 것이었다. 지역적으로는 광주에 국한되고 시기적으로 매우 짧다는 한계가 있지만, ‘절대’공동체라고 이름 붙일 만한 내적 결속을 갖춘 강력한 공동체였다. ‘체험공동체’(體驗共同體)는 유가족 단체, 부상자 단체, 구속자 단체 등 피해자 개별 단체나 이들의 연합단체를 비롯해서 5월항쟁 국면에서 직접 체험할 기회를 가졌던 이들의 공동체이다. 체험을 통해 몸에 आरो새겨진 국가폭력과 이에 대한 항쟁의 흔적은 시간이 지나도 강렬성을 잃지 않고 있지만, 지역적으로나 계급적으로 널리 확산되기 힘든 단점이 있다. ‘기억공동체’(記憶共同體)는 1980년 5월의 광주항쟁이 일단 종료된 이후 1995년 전두환·노태우가 구속되기까지 5월항쟁 당사자들의 조직과 공동체를 넘어 다양한 민중운동단체와 민주화운동 단체 및 개인들이 광주사건을 기억하면서 투쟁해나간 것을 말한다. 이와는 달리 역사공동체(歷史共同體)는 체험공동체로부터 경험적 상상력(經驗的 想像力)을 그리고 기억공동체로부터는 초월적 상상력(超越的 想像力)을 공급받아 지금,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만들어야 할 미래의 공동체이다.

이런 분석적 구분으로부터 우리는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어떤 공동체도 단허있지 않다. 심지어 짧은 기간 동안 존재했던 ‘절대공동체’조차도 상상력의 원천으로 여전히 살아있다. 둘째, 직접적인 체험이나 간접적인 기억 모두 어떤 종류의 ‘상상력’으로 전환(轉換)되어야 시공간적인 한계를 넘어 지평을 확장해나갈 수 있다. 셋째, 체험공동체로부터 ‘경험적 상상력’을 추출해 내는 작업은 체험공동체 성원들의 또 다른 희생(犧牲) 또는 양보를 필요로 한다. 넷째, 기존의 ‘기억’공동체로부터 ‘초월적 상상력’으로 전환되어가는 과정은 보편적 가치(普遍的 價値)를 새롭게 형성해가는 과정이다. 이미 당연시된 가치나 경직된 이념으로 고착된 것이 아니다. 다섯째, 역사공동체는 새롭게 탄생해야 할 미래형(未來形)이지 예측가능하거나 사전에 틀지어진 어떤 모델을 따라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5·18 담론은 역사공동체의 형성과 밀접한 상호작용을 겪으면서 영구해석(永久解釋)될 운명에 내맡겨져 있다. 권력-지식 복합체로서의 5·18 담론구성체(談論構成體)는 항상 현실의 사회구성체(社會構成體)와 긴밀한 상관관계 속에서 형성, 변형, 재구성 될 것임을 의미한다.

김상봉의 ‘항쟁공동체와 지양된 국가’라는 접근은 철학적 성찰로서 탁월하다. 지구역사사회학적으로 볼 때 국가는 타국과의 국제관계 속에서 대내적으로 정당한 폭력을 독점한다. 5·18 사건을 다룬 연구성과들을 점검하면서 본인은 5·18 사건이 마치 거실에 액자처럼 걸려있는 듯하다. 이쪽저쪽 벽으로 옮겨 달면서 감상의 편의를 도모하는 듯하다. 문제는, 바우만이 『현대성과 홀로코스트』에서 지적하듯이, 광주학살이 ‘벽에 걸린 그림’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창문’이라는 사실이다. 영구전쟁기계인 한미동맹이 견재하고, ‘영원한 적’인 북한이 존재하는 한 국가폭력은 하시라도 무고한 시민을 향할 수 있다. 2016년 촛불봉기 당시 계엄검토 문건은 제2의 광주학살이 언제라도 재발할 수 있는 개연성을 보여준다. 광주학살과 광주민중항쟁은 5·18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

5·18 사건을 지구촌에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제국의 성격과 한미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의 정치경계가 어떻게 변형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한국 현대사를 미국제국의 내부로 인식하고 민주주의 및 자본주의와의 함수관계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한국 현대사를 미국제국이라는 틀 안에서 바라본다는 것은 역사로서의 현재에 작용하는 안팎과 위아래의 힘들을 존재론적으로 전제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방법론적으로 한국 국가의 형성과 변형을

개별 시민주체의 형성 및 변형과 동시에 추적함을 의미한다. 역사 이래로 한국사는 제국사와 연동되었다. 주권을 전제로 근대 이후에 형성된 국가간체제를 인식의 출발로 삼는다면, 시간물신주의(chronofetishism)나 현재중심주의(tempocentrism)의 함정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울 것이다. 다음의 <표 2>는 안보와 자유의 상호관계에 따른 평화와 통일의 전망을 정리한 것이다(정일준, 2011).

<표 2> 안보와 자유의 상호관계에 따른 평화와 통일의 전망

		자유에 따른 정체성		
		민중(저항적)	시민(타협적)	국민(순응적)
쟁점	통일	민중지향적 통일 (민족우선, 국가무시)	시민지향적 통일 (연방제)	국민지향적 통일 (흡수통일)
	평화	민중지향적 평화 (민주화, 자주화)	시민지향적 평화 (남북교류, 상호이해)	국민지향적 평화 (현상유지, 북한무시)
	안보	민중지향적 안보 (안보쟁점 무시)	시민지향적 안보 (안보 부차화)	국민지향적 안보 (국가우선, 대결만능)

가로축은 자유의 향유여부와 정도에 따라 늘어놓았다. 국가에 순응하면 국민(國民)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다고 본다. 저항하면 민중(民衆)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것이다. 양자사이에서 타협적 자세를 보이면 시민(市民)이라는 정체성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타협적이라고 해서 비판을 중지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국가권위를 존중하면서도 시시비비를 가리는 성숙한 자세를 의미한다.

세로축은 안보, 평화, 통일이라는 쟁점을 제시했다. 국민지향적 안보는 국가를 우선 하고 국가를 중심으로 북한과 대결하는 자세를 뜻한다. 역대 권위주의 정권에서 추구된 대북자세이다. 시민지향적 평화는 시민중심으로 남북교류(南北交流)를 촉진하고 북한에 대한 이해(理解)를 증진시키는 입장을 뜻한다.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에서 추진된 대북정책이 대체로 이에 해당한다. 문재인 정권도 이 연장선에 있다. 민중지향적 통일은 국가를 무시하고 민족을 우선시하면서 밑으로부터의 통일을 추구하는 시각이다. 1960년대 4월혁명 국면에서의 통일운동이나, 1980년대 말에서 1990년 초까지 이어진 학생운동 중심의 통일운동이 이에 해당한다. 국민지향적 통일을 추구하면 남한 중심으로 북한을 흡수통일(吸收統一)하자는 이야기가 된다. 국민지향적 평화는 남한중심으로 군사적으로는 현상유지하면서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등한시하는 입장이다. 북한내부의 민주화(民主化)와 인권향상(人權向上)을 선결조건으로 강조한다. 반면에 민중지향적 안보라는 개념은 성립불가하다. 왜냐하면 민중이라는 전복적(顛覆的)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국가안보라는 쟁점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민중지향적 평화는 민주화의 확산과 자주화의 진전이라는 국내투쟁을 강조한다. 시민지향적 안보는 안보라는 쟁점을 인식하고 그것의 중요성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다른 여타의 쟁점보다 우선한다거나 가장 중요하다는 가치판단을 하지는 않는다. 요컨대 안보쟁점을 상대화하는 태도이다. 시민지향적 통일은 결국 북한을 상대방으로 승인하고 비교적 장기간의 과도기를 두는 연방제 형태의 남북통합 방안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5·18 사건, 무엇을 할까?

1999년 5월 학술단체협의회는 5·18 사건과 한국 사회의 진로를 주제로 하여 “5·18은 끝났는가?”라는 제목으로 심포지엄을 열었다(학술단체협의회 편 1999). “5·18은 끝났는가?”라는 반문이 함축하듯, “그에 대한 답은 긍정적이지 못하다.” 5·18 사건은 ‘폭도들의 난동’으로 낙인찍혀 오랜 기간 정부공식 매체가 ‘광주사태’라고 불렀다. 1987년 6월항쟁 이후에야 비로소 정부당국은 5·18 사건을 ‘민주화운동의 일환’으로 인정했다. 마침내 1995년에 전직 대통령인 전두환과 노태우가 구속되고 5·18 특별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학단협의 당시 공식입장이었다. 5·18 사건이 발발한 지 20년이 지난 2001년 3월 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는 당시까지의 5·18 민중항쟁 연구를 총괄하는 『5·18 민중항쟁사』를 발간했다. 편찬위원회는 발간사를 통해 “오월정신의 국민적 공감 대 확산 즉 전국화(全國化)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유

감이며 ... 발표명령자와 암매장의 진상도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는 동안에도 2001년 국회에서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2002년 동법이 시행되고 국립 5·18묘지로 승격되는 변화가 있었다. 적어도 법률적으로 볼 때 광주항쟁희생자는 국가에 의해 독립운동 유공자나 6·25전쟁 유공자와 같은 반열로 승인된 셈이다. 5·18 사건은 이제 충분히 국가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9년에는 『5·18 민주항쟁에 대한 새로운 성찰적 시선』이 출판되었다. 여기서는 제1부에서 “‘다른 지점’에서 본 5·18 민주항쟁”으로 영남과 전북에서 본 5·18, ‘88만원 세대’가 보는 5·18 광주, 탈식민주의 관점에서 보는 ‘5·18의 반미’를 다뤘다. 제2부에서는 ‘다른 비판의 눈’으로 본 5·18 민주항쟁을 다뤘다. 코원주의, 자율주의, 급진민주주의, 아나키스트, 그리고 파리코원에서 바라본 5·18 민주항쟁을 다뤘다. 제3부 5·18 민주항쟁의 현재화에서는 “5·18 민주항쟁의 현재화,” “5·18 기억의 정치화와 민족,” “응답으로서의 역사,” “광주민주항쟁의 탈혁명화,” “5·18의 기억과 계승, 그리고 제도화”가 다루어졌다.

2010년에는 광주민주항쟁 3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가 열렸다. 발표논문집이 『5·18 30년, 새로운 민주주의의 모색』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모두 네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인군도시 광주?”, “5·18 30년의 역사와 실천 I: 광주문제 해결을 위한 5원칙의 현황과 과제”, “5·18 30년의 역사와 실천 II”, “5·18과 새로운 실천-대안사회, 대안운동”

관점의 다양화와 주제의 다변화가 이루어졌다. 그렇지만 열정과 생생함 보다는 거리두기와 의미부여, 그리고 제도화된 실행이라는 인상이 강하다.

1980년 5월 당시 광주시민은 자기 생명을 버리는 용기를 보여줌으로써 한국 시민이 더 이상 군부독재의 노예로 남아있지 않을 것임을 내외에 천명했다. 이런 용기가 1980년대 내내 민주화운동을 이끌어간 상상력의 원천이었을 뿐 아니라, 미국의 한국군부독재정권에 대한 태도변화를 가져왔고, 나아가 군부정권 자체의 민주화에 대한 양보를 초래했다.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으로서의 광주의 진실은 하나다. 그렇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시각(視覺)은 당시부터 이미 여러 갈래였다. 시간이 흘러 이제는 해석(解釋)에 해석이 여러 겹 더해지고 있다. 신군부(新軍部)에 의해 칠해졌던 ‘빨갱이 폭도’라는 빨간 페인트는 어느 정도 벗겨졌다. 길고도 굵어진 민주화과정을 통해 이제 그날의 ‘폭도’는 광주민주유공자로 자리매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가폭력(國家暴力)의 실제적 진실이 명쾌하게 들어나지 않았고, 학살자 처벌이 미흡하다고 느끼기도 한다. 여기에 1980년 당시 미국의 역할에 대한 의혹까지 감안한다면 ‘5·18 사건’에 대한 해석은 아직 미완(未完)이다.

앞으로 올 세대와 다른 지역주민 나아가 세계의 민주시민이 5·18 사건으로부터 경험적 상상력과 초월적 상상력을 얻어서 보다 평화롭고 정의로운 역사공동체를 추구해 나가기 위해 무엇을 할까? 먼저 우리는 5·18 담론이 더 이상 저항담론이나 진실담론의 지위에 머물러있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권력담론의 일부로서 5·18 담론은 주변화되어 지방화될 위험에 다분히 노출되어있다. 이를 전국화하고 나아가 세계화하기 위해서는 5·18 담론을 한국에서의 여타 권력담론과의 긴장관계에서 항상 새롭게 재조명해야 한다. 또 5·18 담론을 인류보편적인 가치의 언어로 승화시킴으로써 세계화시켜 나가야 한다. 5·18 담론이 국가에 의해 승인된 그 순간부터 그것은 여타 담론과 끝없는 등가원리(等價原理)의 작동에 연루되었음을 명심해야겠다. 5·18 담론이 생명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후세의 재해석을 견뎌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당대의 당사자가 해석을 독점하고자 하는 욕망을 버려야 한다. 정통해석의 추구는 이론(異論)을 허용치 않겠다는 욕심에서 나아가 필연적으로 억견의 지위에 이르고자 하는 욕망을 배태하기 때문이다.

상상력을 자극하는 한 5·18 사건은 온전히 현재형이다. 사건으로서의 프랑스혁명이 아직도 현재진행형인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문제는 5·18 사건의 기억실천과 해석실천이 현실의 한국 민주주의, 안보와 자유에 어떻게 접속되는냐이다. 한국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이자 공고화된 민주주의의 국가이다. 부르주아 혁명도 완수했다(정일준 2019). 방법론적 일국주의(methodological nationalism)와 몰역사주의(ahistoricism)를 넘어 5·18 사건을 다시 자리매김할 때이다. ‘항쟁사’라는 시간축과 광주 ‘지역성’을 넘어 지구적 연결과 상호작용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것이 국가냐?”라는 질문과 ‘나라다운 나라’라는 슬로건은 5·18 사건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목 차

1. 문제제기: 지금, 여기서 ‘1980년 광주’란 무엇인가?

5·18의 유산

일국사적 시각: 국가-정치사회-시민사회의 관계변화와 5·18 담론

지구역사사회학적 시각: 지구 민주주의의 전환점으로서의 5·18

2. 5·18 진리체제의 형성: 시민사회-정치사회 주도, 1980-1997

1) 운동을 통한 밑으로부터의 전국화(1980-1987)

2) 입법을 통한 위로부터의 국가화(1988-1997)

3. 5·18 진리체제의 변형: 정치사회-국가 주도: 1997-2017

1) 제도화의 역설, 지방화(1997-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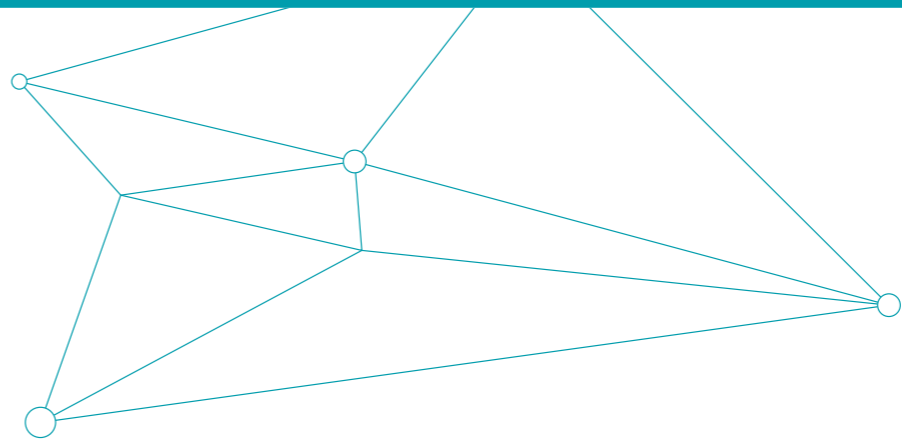
2) 민주화의 교착, 고립화(2007-2017)

4. 5·18 진리체제의 전환: 국가를 넘어 지구적 연관성에 본 5·18

1) 기억과 기록에서 사건으로: ‘80년 광주’라는 보편 사건(프랑스혁명과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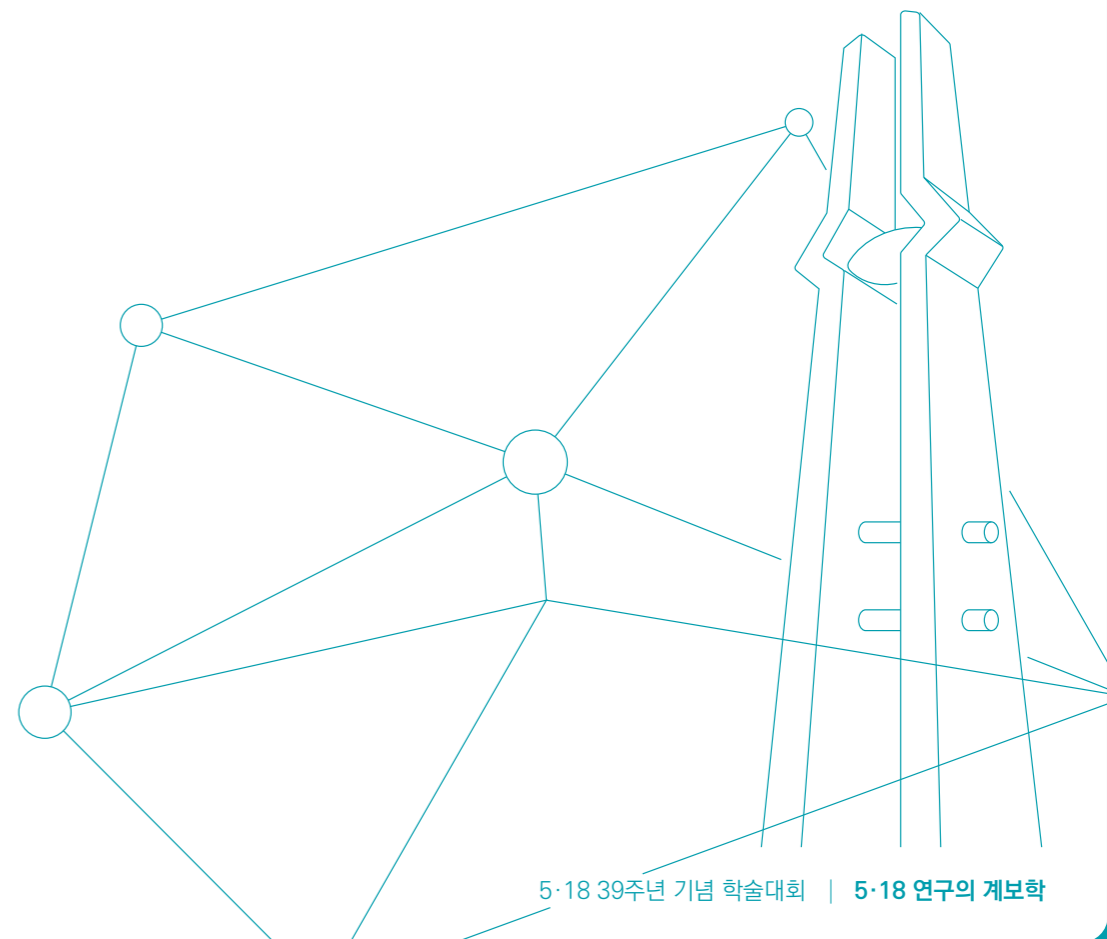
2) 탈국가화를 통한 보편화: 국가적 진리체제를 넘어서 보편적 윤리주체 형성으로

5. 맺음말: 5·18의 유산을 인류의 보편자산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전략



발표 1

5·18, '진실'의 레짐과 계보학



5·18 39주년 기념 학술대회 | 5·18 연구의 계보학

5·18, ‘진실’의 레짐과 계보학

김 봉 국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HK연구교수)

- 1. 왜곡과 무관심 사이에서
- 2. 왜곡의 타자로서의 ‘진실’
- 3. 왜곡에 긴박된 ‘진실’의 효과
- 4. ‘진실’의 미래

1. 왜곡과 무관심 사이에서

올해 언제부터인가 매일 아침 필자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5·18조사위 즉각 가동!’, ‘5·18발포 명령자 전두환 재조사!’, ‘5·18역사왜곡 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회 앞 5·18농성단 소식이 올라오고 있다. 이를 보면 5·18 민주화운동은 여전히 한국사회의 뜨거운 감자 중 하나인 듯하다. 하지만 또 다른 쪽에서 “5·18 관심 없어요. 수능에 안 나오거든요”(광덕고 1학년), “광주출신이 아닌데, 5·18에 대해서 논할 자격이 있나요?”(타 지역민), “모든 광주 시민들이 당사자다, 우리는 끼어들 때가 없지”(대인시장 상인)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어느 순간 5·18이 무관심과 냉소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도 같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5·18의 기념과 계승의 마당이 시민에게 주인으로 함께 할 자리를 내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이미 5·18은 국가기념일이 되었고 그 투쟁 기록은 유네스코(UNESCO)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으로 인정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5·18은 왜곡과 폄훼의 대상이 된 채, 더 이상 우리의 심장을 달구지 못하는 과거가 된 것일까? 이 글은 오늘날 5·18에 대한 왜곡과 무관심이 병존하게 된 이유를 5·18연구가 걸어온 길을 성찰하는 과정에서 살펴보고, 왜곡과 무관심의 너머에 있을 5·18의 미래를 상상하며 5·18연구의 방향성에 대한 나름의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지금까지의 5·18연구와 대화를 시도한 것이다. 미리 고백하면 축적된 수많은 5·18관련 연구물 전체를 분석하는 것은 필자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었다. 대신 5·18관련 주요 저술들, 5·18연구의 경향성을 분석한 논문들, 일정 기간 단위로 우수한 5·18연구 성과를 엮은 간행물, 5·18기념재단이 발행한 책자, 학술회의자료집, 용역보고서 등을 중심으로 5·18연구의 추이와 성격을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5·18연구 성과를 ‘진실의 레짐

(regime)과 계보학’을 통해 재맥락화한 가운데 5·18연구가 걸어왔고 서있는 인식지평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시도했다. 그럼 한 중견 연구자의 5·18연구에 대한 회고로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보자.

최근 5·18 40주년을 앞두고 지난 학술연구를 성찰하고 전망을 모색하는 마당이 곳곳에서 열리고 있다. 그 중 5·18연구의 추이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해온 한 연구자의 진단은, 5·18 학술연구가 걸어왔고 서있는 위치와 마주할 미래에 대해 적잖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1980년대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5·18을 연구한다는 것은 맑스가 마주했던 어려움을 그대로 만날 가능성이 컸다. 적어도 이 시기에 5·18을 연구할만한 연령층의 학자에게 5·18은 객관적인 사건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신의 삶에 엄청난 충격을 준 사건이었다. 이들에게 5·18은 자신의 삶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건이었으며, 그런 만큼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40주년 이후에는 5·18에 대한 학술연구는 전혀 다른 지평에 위치할 가능성이 크다. 미래의 연구자들은 점차 5·18에서 현재의 연구자들보다 자유로운 처지에 있을 것이며, 보다 객관적일 수 있고, 5·18을 직접 겪었던 사람들의 시선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40주년이 넘어가면서 5·18에 대한 학술적 관심이 약해지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²

무엇보다 선배 연구자의 지적은 과거 5·18 학술연구가 놓여 있던 환경과 인식지평을 갈파하고 있다는 점에서 깊고 무겁게 다가온다. 5·18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거나 그것의 자장에서 삶을 고민하고 영위해야 했던 동시대의 연구자에게 5·18은 객관화된 연구의 대상이기 이전에 자신의 신체와 정신에 새겨진 그 무엇이었다. 1980년대 광주의 진실을 알리고 학살자를 처벌하는 것이 민주화운동이었고, 87년 체제로 제도적 민주화가 실현된 이후 지금까지도 5·18은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사회개혁의 좌표설정에도 주요 준거로 자리하고 있다.

문제는 5·18과 일체화된 5·18연구가 남긴 결과에 있다. 무엇보다 5·18의 진실규명을 중심으로 한 조사와 연구는 80년 5월 당시부터 군사정권과 극우세력의 은폐, 왜곡에 대한 반박의 성격이 강한 것이었다. 1990년대 들어 ‘5·18특별법’이 제정되고 광주학살의 주범들이 사법처리 되기까지 5·18연구의 최우선 과제는 국가폭력과 그로 인한 피해의 실상을 밝히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왜곡-진실’을 둘러싼 ‘지배-저항집단’ 간 논쟁은 5·18의 담론지형을 특정 방향으로 구조화했다. 특히 조작과 왜곡의 주 논리였던 반공주의와 지역주의를 비판했던 과정에서, 진상규명작업은 벗어나고자 했던 반공주의와 지역주의의 거울 앞에 반복해서 5·18을 세웠다. 한마디로 반박의 대상과 마주보고 대화하며 나의 정체성을 입증해야 했던 꼴이었다. 그 결과 나의 정체성이 타자에 비추어 규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왜곡과의 대화는 5·18연구가 부정했던 바로 그 왜곡과 동일한 프레임과 담론지형 안으로 5·18의 진실을 결박시키고 말았다. 2000년대 이후 5·18연구의 지향과 스펙트럼이 다양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5·18의 ‘진실’은 이런 구조화된 담론장 내에서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 형국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5·18의 진실이 일정하게 구조화된 장(場) 속에서 논의되었다는 점은, ‘무엇이 진실인가?’ 라는 문제보다 ‘어떻게 진실이 만들어지는가?’의 시각에서 왜곡과 진실을 둘러싼 논쟁을 응시하도록 이끈다. 이와 관련해서 진실의 문제가 자아와 타자의 통치(government)에 출발임을 강조한 푸코(Michel Foucault)의 논의는 적잖은 시사점을 준다.

진실은 하나의 진술이 만들어지고 분배되고 통용되고 작용하도록 만드는 질서화된 절차의 체계라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실은 권력관계와 순환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권력이 진실을 생산하고 떠받쳐 주고 있으며, 역으로 진실은 권력의 효과를 유도하고 확산시키는 것이죠. 진실의 체계라는 말이 그래서 생긴 것입니다. (...) 그러므로 문제는 인간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생산해 내는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이고 제도적인 체제를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권력의 체계로부터 진실을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이것은 이미 환상입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바로 권력이니까요-진실의 권력을 사회적이며 경제적이며 문화적인 헤게모니로부터 떼내야 하는 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³

2 최정기, 「40주년 이후, 5·18학술연구는?: 40주년까지의 성과와 한계에 근거하여, 「40주년 이후 5·18 방향 설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자료집), 5·18기념재단, 2019.

3 Michel Foucault, Colin Gordon 엮음·홍성민 옮김, 「권력과 지식」, 나남출판, 1991, 167쪽.

계보학적 탐구를 통해 '진실의 체계'를 말하고 있는 푸코에게 있어서, 진실은 권력 밖에 있는 것도 아니며 권력을 결여하고 있는 것도 아닌 '권력 그 자체'이다.⁴ 진실은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진실 그 자체'가 통치의 핵심 장치이기 때문이다. 즉 "진실의 레짐은 진실에 의해 인간에 대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방식과 의미가 (사회적 차원에서)체제화되고 (개인적 차원에서)주체화된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⁵ 그렇다고 진실의 정치가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지배 권력이 자신의 진실 메커니즘을 통해 생산한 진실을 준거로 개인의 사고와 실천을 규정하고자 하는 반면, 저항 주체는 자신의 진실을 내세워 지배 권력의 진실담론을 문제시하고 맞서기도 한다. 이처럼 한 사회의 진실이 '지배-저항'과 그에 연동된 '통치-비판'의 역동적 상호작용 속에서 구성된다는 점을 인식한다면, 하나의 진실은 경쟁하는 또 다른 진실(둘 중 하나는 거짓으로 평가되겠지만)과의 대화를 통해 일정하게 구조화된 것임을 이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 진실 역시 본질적이고 고정불변한 것이 아닌 상대적이며 가변적인 성격을 갖게 된다.

이런 푸코의 논의를 5·18의 왜곡과 진실의 문제로 옮겨오면, 지금껏 '왜곡-진실'을 둘러싼 투쟁과 그 투쟁을 통해 밝힌 진실이라는 것 자체가 정치적 게임의 장에서 '지배-저항', '보수-진보'의 두 진영이 벌인 힘의 역학관계 및 지역주의와 밀착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사실상 1980년 5월 당시부터 신군부세력은 5·18을 '북괴의 지령을 받은 간첩, 공산분자, 또는 불순세력에 의한 폭동'이라고 규정한 자신의 진실을 통해, 학살과 정권찬탈을 정당화하고 대중에 대한 통치력을 강화했다. 이런 조작과 왜곡에 다른 아닌 지배 권력의 진실에 맞서 광주 진실을 알리고자 했던 '대항기억'과 투쟁이 바로 5월운동이었다.

5·18의 진실을 둘러싼 투쟁사를 감안했을 때, 우리가 보다 주의해야 할 점은 5·18에 두 차원의 '진실'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하나는 구체적 행위와 사건 및 그것들의 연쇄적 사건사로서의 '진실'이다. 다른 하나는 선택과 배제의 과정을 거쳐 구체적 행위 및 사건을 계열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 연쇄적 사건과 행위의 참 의미를 해석한 결과 드러난 '진실'이다. 전자의 진실이 후자의 진실을 구성하는 전제이자 필요조건이지만, 역으로 후자의 진실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전자의 진실은 불가피하게 기억과 망각의 대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5·18의 왜곡은 과거 사실의 조작을 폭로하거나 알지 못했던 과거 사실의 발견으로만 해결될 수 없다. 그 보다는 과거 사실이 나름의 내러티브를 통해 어떻게 해석되고 의미 부여되는지를 따져야 한다. 더 나아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전망 속에서 새로운 진실을 만들어가야 한다. 즉 5·18의 진실을 추구하는 행위는 곧 그것의 현재화를 위한 '의미투쟁'이자, 그것을 통해 '5월 정신'을 대중 속에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현재적 진실을 구성하는 실천이야말로 왜곡과 폄훼를 일소하는데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놓고 보면, 40주년을 앞둔 이 시점에서 객관적 거리를 유지한 채 지금껏 우리가 쫓은 5·18의 '진실'은 무엇이었으며, 왜 '우리가 알고 있는 5·18의 진실이 이런 것인지'를 물어야 한다. 이와 함께 그렇게 도달한 '진실'은 어떠한 역학관계와 인식지평의 산물이며, 의도했건 하지 않았건 간에 그 '진실'이 만들어낸 효과의 명암은 무엇인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걸어온 길에 대한 성찰을 통해 미래에 5·18의 진실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 것인지 생각해보자.

2. 왜곡의 타자로서의 '진실'

지금까지의 '진실'을 둘러싼 5·18연구의 위치를 가늠하기 위해서 우선 5·18진상규명투쟁의 역사를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5·18연구 역시 진상규명투쟁의 파고와 연동되어 이루어져왔기 때문이다. 주지하듯이 5·18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여정 자체가 80년 5월 당시부터 지금까지 시종일관 왜곡, 조작, 유언비어와의 싸움이었다. 전두환 군사독재세력은 열흘간의 항쟁기간은 물론 항쟁이 진압된 이후에도 언론을 장악하고 '5·18을 북한의 사주를 받은 폭도들의 난동'으로 몰아갔다. 모든 정치적 회합이나 전두환 정권을 비판하는 어떠한 출판 행위도 철저히 금지당한 채, 이른바 9시 '땡전뉴스'가 일방적으로 집권세력을 미화했다. 5·18의 실상에 관한 기사는 국내에 어떤 대중매체를 통해서도 다루어질 수 없었고, 오직 학살을 자행한 전두환 정권의 왜곡과 조작만이 사실로 받아들여지도록

강요되었다. 한마디로 권력이 구축한 '왜곡의 레짐' 속에서 5월이 진술되었다.

하지만 권력의 왜곡과 조작에도 불구하고 침묵과 망각을 강요당한 5월의 진실을 기억하고 알리고자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항쟁 직후 5·18유가족이 중심이 되어 치러진 '합동제사'를 통해 5월의 이야기는 조금씩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이후 '5·18의거 유가족회'를 비롯한 여러 5·18유관단체들이 결성되어 5월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투쟁을 이어갔다. 80년대와 90년대 항쟁의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몸을 던지고 불살라 침묵하는 언론을 대신해 5월의 진실을 알렸다. 또 정부 당국의 체포와 고문에 대한 공포를 뒤로 하고 감시를 피해 5·18의 실상을 기록한 《죽음은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1985)와 같은 보고서가 출판되기도 하였다. 소설가 임철우는 "끝내 아무도 달려와 주지 않았던 그 봄날 열흘, 저 잊힌 도시를 위하여 이 기록을 바친다"며 《봄날》을 썼다. 이렇듯 항쟁 이후 진실을 규명하고 학살자를 처벌해 올바른 역사를 복원하고자 했던 기억투쟁이자 문화운동이며, 사회의 민주화와 통일을 지향했던 '5월운동'을 통해 광주의 진실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갔다.

특히 1983년 말 조성된 '유화국면'을 계기로 5·18진상규명문제는 전국적 이슈로 급부상했다. 학원자율화조치로 인해 침체되었던 학생운동이 활력을 되찾았고, 학생운동세력의 확장과 가세로 5·18 진상규명투쟁은 한층 고조되었다. 이제 광주의 진실은 점차 전국화 되었고, 망자들이 모셔진 구 망월묘역은 '민주화의 성지'로서 언제부터인가 순례의 장소가 되었다. 결국 민주화를 열망하는 전국민적 저항이 결집된 1987년 6월항쟁과 그 여파로 열린 1988년 '광주청문회'를 통해 처음으로 5·18은 민주화운동으로 공식 인정되었다.

하지만 '광주청문회'는 5·18의 진실을 철저하게 규명하지도, 학살 책임자의 처벌도 진행하지 못한 채 흐지부지 되어버렸다. 이후 5·18이 재차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게 된 것은 소위 '문민정부'라고 명명되는 김영삼정권에 들어서서이다. 공소시효를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시민·사회단체는 '5·18진상규명과 광주항쟁 정신계승 국민위원회'를 조직하고 5·18 진상조사와 학살자 처벌을 위한 고소·고발운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1995년 검찰은 전두환, 노태우를 비롯한 피고인 35명에 대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어이없는 논리를 들며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후 사법처리운동은 '5·18특별법' 제정 투쟁으로 이어졌고, '노태우 비자금' 폭로사건을 맞이해 절정에 이르렀다. 결국 학살책임자 처벌 문제에 소극적이었던 김영삼정부 역시 여론에 밀려 '5·18특별법'을 제정을 수용했다. 특별법에 의해 열린 재판을 통해 1997년 대법원은 12·12를 '군사반란'으로, 5·18을 '내란 및 내란 목적을 위한 살인 행위'로 규정했다.

이 판결로 무려 17년여에 걸친 진상규명과 학살자처벌투쟁은 일단락되었다. '폭도'와 '빨갱이'로 내몰렸던 광주시민은 '민주투사'로서 명예를 회복했으며, 5월 영령들은 양지 바른 망월동 신묘역에 모셔졌다. 또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1997년)을 비롯해서 5·18관련 각종 법률과 위원회가 제정·조직되어, 5대 원칙(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명예회복, 피해보상, 기념사업)에 따른 5·18문제 해결 역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쳐 지금까지 5·18의 왜곡과 폄훼는 일부 극우세력에 의해 한층 더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새롭게 '진상조사위원회'를 발족시켜 왜곡과 폄훼에 대응하려 하고 있지만, 보수정당의 반발 속에 진척을 보이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요컨대 80년 5월 이후 5월운동은 최근 발행된 5·18 관련 대중서의 글 제목처럼 '진실을 향한 투쟁'이었으며, 그 투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지금까지의 5·18학술연구 역시 결코 이와 같은 사회적 논쟁과 현실정치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최근 5·18연구의 추이와 성격을 분석한 연구는 이를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관련하여 몇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주제로 본 상황은 어떠한가? 2000년을 전후한 시기까지는 5·18연구로 분류되는 주제들 중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영역은 아무래도 '5·18 사건 관련'이었다. 이는 1990년 무렵부터 2000년을 전후한 시기까지 5·18연구의 핵심 과제가 진실규명이었기 때문이다. 1980년 5월에 광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왜 군부는 총을 쏘았는가? 수많은 시민들이 살상당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계엄군의 잔인한 무력 앞에서 시민들은 어떻게 저항할 수 있었는가? 등과 같은 질문들이 이 시기 연구를 주도하고 있었다.

4 Michel Foucault, 위의 책, 165쪽.

5 김예란, 「진실의 레짐과 미디어」, 『방송문화연구』 29-1, KBS공영미디어연구소, 2017, 21쪽.

5·18연구가 갖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그것이 스스로 자신의 영역을 확장해 왔으며, 시기별로 그때그때의 정세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5·18의 연구영역은 동 시기 한국사회의 문제 및 광주지역의 정치사회학적 지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5·18이 갖는 사회적 의미 역시 지속적으로 변형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연구영역 역시 변화하고 있다. 그것은 대체로 1980년대에는 당시의 지배세력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 및 민주화를 의미했다면, 1990년대에는 과거청산과 민주·인권·평화 등 5·18의 전국화와 세계화 및 5·18 정신의 보편화를 의미했다. 그러다가 2000년대 중반이 지나면서부터는 (...) 5·18 자체의 의미나 문화예술 등 지역 내의 주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역시 한국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보수화 및 민주주의의 퇴행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⁶

거시적 차원에서 간단명료하게 5·18연구의 흐름을 개괄하고 있는 위 내용은, 항쟁 이후 5·18연구가 한국사회의 시대정신과 정치·사회·문화의 변화에 조응하며 연구의 영역과 내용을 조정해왔음을 잘 보여준다. 이와 같은 5·18연구의 경향성은 5·18관련 조사연구의 핵심 지원 기관이라 할 수 있는 5·18기념재단이 최근 5년간 펼친 각종 학술행사 및 조사연구용역사업의 추이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된다. 특히 최근 5·18기념재단의 학술사업에서 두드러진 현상은 5·18 왜곡과 폄훼에 대응한 행보가 대폭 늘었다는 점이다. 최근 발행된 한 용역보고서는 2018년 기준 최근 5년간 재단이 개최하거나 지원한 학술대회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 번째는 ‘일간베스트’와 같은 인터넷 사이트를 비롯한 사이버공론장에서 급증하고 있는 5·18 왜곡 및 폄훼 현상에 대한 다각적 비판 및 대응 방안을 모색하거나, 문재인 정부 이후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특별법 제정과 진상규명문제를 둘러싼 법률적 근거와 논리를 마련하는 학술대회가 진행됨.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한국은 물론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갖는 의의와 위상을 확고히 하려함. 두 번째는 5·18 민주화운동 및 5월운동의 전국화·세계화를 지향하며 5·18 민주화운동이 국내외의 다른 민주화운동에 미친 영향을 재조명하는 가운데, 타 운동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5·18 및 5월운동의 현재적 의미를 재정립하려는 학술대회가 개최됨. 이 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인권과 평화의 문제는 물론 새로운 공동체 건설의 모델 또는 이론화를 모색하는 계기로 삼음(...)⁷

재단의 용역보고서는 현재 5·18이 처한 두 가지의 곤경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다. 한쪽으로는 비록 일부 극우세력에 한정되지만 5·18 왜곡과 폄훼에 대응해야 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5·18의 전국화·세계화를 지향하는 가운데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과 실천이 대중 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그것의 현재적이고 미래적인 가치와 전망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5·18의 보편화를 위한 학술연구가 지속되어왔다는 것을 고려하면, 최근 왜곡문제가 학술연구의 영역으로 등장한 것은 새로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80년 항쟁 이후부터 왜곡은 계속되었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 그 시도는 집요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연구가 수행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5·18연구가 위치했던 사회역사적 환경과 그로 인한 연구의 추이 및 성격을 살펴보았을 때, 5·18연구의 기초이자 관련 연구영역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여전히 ‘진실’의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사회의 정치적 국면이 전환되고 사회적 이슈가 변화함에 따라 5·18연구는 (집합)기억, 매체, 재현, 정동, 증언, 죽음, 공동체, 인권, 평화 등 다양한 주제와 문제의식이 횡단하며 적지 않은 연구 성과를 축적해왔다. 또 5·18 정신의 보편화뿐만 아니라 학제 간 통섭을 꾀하며 문학, 역사, 철학, 사회학, 인류학, 정치학, 법학 등으로 연구영역 역시 확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0년 5월항쟁 이후 현재까지 5·18연구는 왜곡과의 대화 속에 진실규명문제에 매몰되어 있는 경향이 강하다. 무엇보다 5·18이 한국사회의 이념과 진영과 지역대결의 현실정치지형에 밀착된 결과 ‘진실’을 둘러싼 논쟁은 여타의 연구 의제와 문제의식을 압도한 채 5·18의 미래적 비전 설정에 장애가 되고 있기도 하다.

문제는 이 ‘진실’을 둘러싼 논쟁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정하게 구조화되었다는 점이다. 80년 5월항쟁 당시부터 전두환정권과 보수세력에 의해 사실의 조작과 왜곡이 지속되었고, 이것을 기정사실화한 ‘왜곡의 체제’에 맞선

것이 5월운동이자 5·18진실규명연구의 일차적 목적이었다. 그리고 이 5·18의 진실규명을 목적으로 한 조사연구가 여타의 5·18연구를 파생시키는 원천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지배 권력이 덧씌운 반공주의와 지역주의 왜곡프레임을 비판하기 위해 5·18연구 역시 반공주의와 지역주의의 안티(Anti)테제 하에서 항쟁을 바라보았다. 그 결과 ‘왜곡의 체제’에 대한 대항기억을 구축하고자 했던 5·18연구의 ‘진실의 체제’ 역시, 반공주의와 지역주의의 틀에 정박한 채 그 논리를 파탄내기 위한 5월의 ‘진실’을 진술해왔다. 요컨대 지배 논리와 대화 속에서 5월을 조망한다는 것은 그 지배의 논리와 언어를 반복해 5월의 사람과 운동과 죽음과 분노와 슬픔과 환희를 말한다는 것이며, 그러하기에 5월의 몸짓과 감성은 일정하게 순화되어야 했고 지배의 법칙이 허용하고 안내한 길 위에서만 재현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왜곡과의 대화에 의해 정향된 진실규명은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5·18기념재단이 편찬한 5·18관련 대중서 역시 같은 맥락에서 진실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

언뜻 보면 왜곡 세력이 같은 의도를 가지고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것 같지만, 상황에 따라 왜곡의 강조점과 패턴, 방식은 달랐다. 이를 고찰함으로써 그들의 의도와 계획을 읽을 수 있다. 그들이 감추려 한 것에 5·18의 진실이 숨어 있는 것이다.⁸

4월혁명과 6월항쟁 등 여타 민주화운동과 달리 극우 기득권 세력이 유난히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왜곡·폄훼하는 이유는 진실이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발표 책임자와 여러 비밀공작의 진상이 은폐되어 있기 때문에 자위권 발동을 운운하거나 북한 특수군 침투설을 주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국가가 책임지고 명백하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⁹

여기에서 “그들이 감추려 한 것에 5·18의 진실이 숨어 있는 것”이라는 주장이나 “진실을 왜곡·폄훼하는 이유는 진실이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진술 모두, 5·18의 진실 규명이 왜곡·폄훼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정하게 정향되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보다 더 주목할 만한 것은 그 해결책을 제시한 부분이다. “무엇보다 국가가 책임지고 명백하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라는 주장은, 사회적 논쟁을 종식시키고 공적 권위의 힘을 통해 5·18의 위상을 확보하게 다지려는 의도라는 점에서 당연하게 생각될 수도 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러한 진술이야말로 지금까지 우리가 국가권력을 향한 ‘인정투쟁’이라는 지향 속에서 5·18의 문제를 바라보았고, 또 국가권력을 통해 왜곡의 문제를 해결하려 한 (무)의식적 태도를 드러내준다. 과연 그렇게 해서 왜곡이 끝날 것인가? 꼭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껏 우리가 추구했던 5·18의 진실은 왜곡의 프레임이 선정한 인식지평 위에서 그 왜곡의 논리 및 양상을 마주보고 구성되었던 진실은 아니었을까? 또 국가권력이 인정한 ‘민주화운동’으로서의 5·18의 진실만은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과연 5·18의 의미는 왜곡의 타자로만 한정될 수 있을 것인가? 또 ‘민주주의’로만 수렴될 수 있는 것일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우리의 구조화되고 정향된 5월을 바라보는 시각이 (무)의식적으로 파생시킨 문제는 무엇이며, 또 망각한 5월의 ‘진실’은 무엇일까? 40주년을 앞둔 지금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된 것 같다.

3. 왜곡에 긴박된 ‘진실’의 효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까지 우리가 규명하려 했던 5월의 진실은 ‘왜곡’과의 대화였다. 그리고 왜곡에 대한 반박을 통해 5월의 죽음이 ‘민주주의’를 위한 희생이었음을 국가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진실투쟁이었다. 이렇듯 왜곡과 마주한 채 그것에 긴박된 5월의 진실은 끊임없이 국가적 승인을 욕망했으며, 국가가 허락한 ‘민주주의’라는 깃발 아래 자리 잡기를 원했다. 하지만 과연 80년 5월의 진실을 ‘민주주의’라는 하나의 문맥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 어쩌면 민주주의만을 강조한 이면에는 반공주의에 기초한 왜곡의 공세에 방어적 입장만을 취한 채 다채로운 5월의 진실에 눈감아버린 과오가 있는 것은 아닌지 물을 필요가 있다. 또한 정치적 타협으로 제도화된 5월

6 최정기, 「5·18연구소 20년과 5·18 연구: 연구 성과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16-4, 전남대학교5·18연구소, 2016, 20-21쪽.

7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5·18기념사업 및 5·18기념재단 발전방안 연구」, 5·18기념재단, 2018, 109쪽.

8 은우근, 「5·18, 진실과 거짓말: 그들은 왜 5·18을 왜곡·조작하는가?」, 5·18기념재단 기획, 『너와 나의 5·18』, 오월의 봄, 2019, 197쪽.

9 은우근, 위의 글, 230쪽.

의 기념과 의례가 지워버린 5월의 또 다른 진실이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 볼 필요 역시 있다. 오늘 우리는 '왜곡'과 국가적 '인정'이라는 이중의 심급에 의해 망각해버린 5월의 '진실'을 되찾아야할 시점에 와있는 듯하다.

'왜곡'과 '국가'로 정향된 5월의 진실을 성찰하는 통로로 과거청산, 지역, 세대의 주제어를 상정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 과거청산은 그토록 원했던 국가로부터의 5·18에 대한 공식적 '인정'의 결과라는 점에서, 지역과 세대는 현재 전국화와 현재화를 지향하는 5·18 계승사업이 소통해야 할 대상이라는 점에서, 지금껏 '진실'을 축으로 전개되어온 5·18운동과 연구가 처한 곤경과 문제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즉 과거청산, 지역, 세대는 과거와 현재의 5·18이 소통하고 인정받기를 원했던 방식이나 대상이었기에, 우리가 구축한 5·18의 진실이 과연 그것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으며 어떤 결과를 발생시켰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먼저 지역의 문제를 들여다보자. 주지하듯이 5·18 민주화운동의 발생지인 광주는 더 이상 80년 5월의 고립되고 외로운 '바위섬'이 아니다. 매년 국가 주도로 5·18기념식이 열리며, 5월영령을 추모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망월묘역을 찾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가 '민주화의 성지'로 불릴수록, 5·18 정신의 계승을 부르짖을수록 타 지역의 반응은 싸늘하다. 광주가 5·18을 통해 민주주의를 강조할수록, 다른 지역은 자기 지역의 민주화운동의 사례를 찾아서 기념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 '광주만이 민주화운동을 했나?'라는 불멘소리도 들린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 여러 원인들이 있겠지만 필자의 개인적 생각으로 '촛불혁명' 이후 한국사회에서 보편적 가치로 재차 강조된 '민주주의'의 주도권을 둘러싼 지역 간 경쟁에 한 원인이 있어 보인다. 특히나 5·18에서 6월항쟁으로 이어지는 민주화 정신의 계승을 표방했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민주주의'는 지역정체성에 주요한 요소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 '민주주의'라는 가치와 상징자본을 중심으로 중심-주변의 공간 배치가 재편되면서, 지역의 위상과 정체성이 '민주주의'와 같은 특정 가치를 준거로 규정당하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문제는 한국사회의 정치지형에서 지역주의와 이념대립이 겹쳐지면서, 지역 간 정치적 경쟁구도가 5·18로 상징되는 민주주의를 축으로 역전되었다는 점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이 주목을 끈다.

이러한 5·18 의미의 급반전은 공식적인 역사의 호명이 '광주사태'에서 '5·18 민주화운동'으로 대체되는 것뿐만 아니라, 정치의 주변부에 속했던 광주의 이미지가 '민주화의 영역'으로 추앙되는 데 반해 정치의 중심부였던 대구·경북(소위 TK)의 이미지는 '반민주의 배후지'로 추락하는 것을 의미했다. 이에 따라 광주 사람과 대구·경북 사람은 각각 진보와 보수, 개혁 세력과 기득권 수호 세력으로 이미지의 고착화가 이루어졌다.¹⁰

위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1996년 전두환·노태우의 사법처리로 호남과 영남 간 '민주주의'를 축으로 한 정치적 역학관계 및 지역 이미지는 역전되었다. 대구지역의 '2·28 민주외거' 기념식과 기념공원조성, '인혁당 재건위' 사건 희생자를 기리는 4·9제, 부산의 '10·18 부마항쟁' 정신을 기리는 부산민주공원 조성과 부산민중항쟁 기념사업, 서울을 중심으로 한 '6·10 민주항쟁'의 기념양상은 뒤바뀐 정치적 환경에 대한 지역의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가 보편적 가치로서 시민권을 획득한 것을 넘어 지역 간 정치적 상징경쟁에 유력한 자원이 되면서, 5·18을 통한 민주주의의 독점 현상에 대한 반감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타 지역의 5·18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5·18이 현실정치에서 특정 진영이나 정치세력의 전유물로 되고 있다는 부정적 인식이 깔려있다. 또한 자기 지역의 민주화운동과 5·18이 다를 것 없다는 확일적 시각도 존재하고 있는 듯하다. 이처럼 현재의 5·18은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의 민주주의 경험과 접속하고 소통할 학술적 자원을 마련하고 있지 못한 듯 보인다. 5·18의 전국화를 가로막는 여러 객관적 장애요인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주체적 관점에서 보자면, 과거 5·18연구가 '민주주의'의 깃발만을 내세웠을 뿐 광주의 5·18이자 모두의 5·18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구체적 보편성'으로서의 5·18의 진실을 구축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요즘 세대의 5·18에 대한 인식 역시 구조화된 5·18연구에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관련하여 소위 '88만 원 세대'의 5·18 광주에 대한 생각을 분석한 한 연구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필자의 질문들에 답해준 학생들로 국한해볼 때, '88만 원 세대'는 일부 소수를 제외하면 '5·18 광주'에 대해 큰 관심이 없고 흐릿하게 또는 무덤덤하게 기억하며, '민주화'에 기여하였다는 정도의 교과서적·참고서적 평가를 하는 선에 머물러 있다. '88만 원 세대'의 이 같은 무관심이나 건조한 태도를 이해하고자 할 때 '도덕론'이란 편한 접근법을 택해서는 안된다. '5·18 광주'에 대한 그들의 기억은 소위 '민청학련 세대', '긴급조치 세대', '386 세대'로 불린 이들이 '전승해준' 것이고 그들이 주도한 '민주화'의 효과들 안에서 '표준화된' 것이다. 필자가 원고를 작성하면서 절감한 것은, '88만 원 세대'의 기억과 관련된 우려나 안타까움이 아니라 그들의 구체적 삶에 대한 연구와 필요성이었다.¹¹

'5·18 광주'와 '88만 원 세대'의 관계를 탐문했던 위 글의 필자는, 글의 말미에 애초 기획과는 달리 후자에 초점을 맞추어 전자를 사고할 것을 주문한다. 그는 앞 세대로부터 '민주화운동'이라는 '표준화'된 5·18에 대한 인식을 전달받은 '88만 원 세대'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왜 5·18이 그들의 일상적 삶과 교감을 형성하지 못하는 무덤덤한 과거사 정도로 남겨지게 되었는지를 문제적으로 바라볼 것을 요청한다. 그들에게 5·18은 '4·19 → 5·18 → 6월항쟁'과 같이 '화살표(→)'를 통해 균일한 것으로 의미화 된 '민주화운동'의 하나일 뿐, 현재 자신의 삶과는 동떨어진 과거일 뿐이다. 이와 같은 5·18에 대한 표준화된 기억의 책임으로부터 5·18연구 역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80만 원 세대'의 5·18에 대한 인식은 반공주의 콤플렉스로 인해 자신을 '자유민주주의'의 깃발 아래로 귀속했던 획일화된 5·18의 진실이 낳은 효과이다.

마지막으로 국가에 의해 제도화된 과거청산 문제를 5·18연구와 관련하여 검토해보자. 광주문제해결의 5원칙 중 첫 번째인 진상규명문제에는 그 외 책임자 처벌, 피해보상, 명예회복, 기념의 방향과 내용을 좌우하는 근본 요소이다. 뿐만 아니라 과거청산의 방향, 범위가 모두 진실규명에 근거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과거청산작업은 진실의 문제와 연동되어 진행될 수밖에 없다. 역으로 국가 주도로 일정한 법과 절차에 따라 과거청산이 진행된다는 것은 국가가 정한 과거청산의 방향, 범위, 절차, 내용에 맞게 과거가 인위적으로 선택되거나 배제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진실의 문제와 과거청산은 서로가 서로를 규정짓고 재편하는 계기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5·18의 경우 불완전한 진실규명이 불완전한 과거청산의 계기가 되었고, 국가주도의 과거청산과정이 재차 과거를 은폐하고 망각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국가에 의한 5·18 과거청산의 문제점을 망자들의 유언과 신체를 통해 비판한 한 연구는, 왜곡에 긴박되어 국가로부터의 인정을 갈망하는 5·18의 진실이 직면한 딜레마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국가에 의한 청산작업은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시신의 몸을 깨끗이 닦고 염을 하는, 몸을 낮춰 예를 표하는 행위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소독을 조건을 배제된 자를 포함하는 행위이자 끊임없는 방역작업이었다. 야생의 울음을 지닌 산 자들의 신체가 국가에 포획된 순간 산 자들은 그들이 내어 준 밥을 먹고, 그들의 기준을 따라야 했다. 애초에 산 자들이 의도했던 과거청산의 충만함은 정형화되고 단순화되었다. 예컨대 망월동 신(新)묘역에서 추모와 묵념은 모든 것이 탈각된 허무와 같았다. 많은 것을 얻었으나 아무것도 남지 않은 공허. 반면에 망월동 구(舊)묘역에서 추모는 늘 뭔가 꿈틀거리는 것이 있었다. 구(舊)묘역은 언제나 미안함과 슬픔이 요동치는 공간이었다. 하지만 과거청산과정을 거친 후 가슴을 진동케 했던 그 '무엇'은 사라지고 위압적인 경관과 엄숙함만이 남게 되었다.¹²

국가에 의한 과거청산이 '정화'와 '염승'을 통해 5월영령의 죽음을 국가주의 내로 포박했다는 필자의 주장은 적실하다. 국가 주도의 과거청산은 산자들의 죽은 자들과의 대화를 국가가 설정한 범주와 내용에 한정해서 허락했다. 즉 망자들이 남긴 몸과 언어는 국가가 허락하는 진실의 범위, 즉 민주주의라는 맥락 속에서만 획일적이고 무미건조하게 인식될 뿐이었다. 이는 과거청산의 기초를 이룬 5·18의 진실 자체가 왜곡에 맞서 국가적 인정을 목적으로 한 진실이었기에, 국가가 내어준 자리에서 진실을 말하고 또 그 진실에 따라 과거청산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11 김보현, 「'88만 원 세대'에게 '5·18 광주'는 희미하고 무덤덤한 과거사?: '생성'이 없는 '기억'은 사라진다.」, 『5·18 민주항쟁에 대한 새로운 성찰적 시선』, 한울, 91쪽.

12 김형주, 「주술적 홀림과 망령들의 재현: 5·18항쟁 과거청산에 관한 연구노트」, 『감성연구』 19,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19, 55쪽.

10 노진철, 「영남에서 본 5·18: 국가권력에 의한 배제」, 『5·18 민주항쟁에 대한 새로운 성찰적 시선』, 한울, 2009, 26쪽.

국가로 정향된 5·18의 ‘진실의 레짐’이 5·18의 과거청산 자체를 결정한 것이다. 결국 이념이나 국가 너머의 5·18의 진실은 여전히 언어화되지 못한 채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다.

4. ‘진실’의 미래

최근 5·18 민중항쟁 39주년을 맞아 ‘5·18왜곡과 진상규명’을 주제로 개최된 학술교류포럼에서 5·18진상규명의 필요성을 주장한 글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이 발생한지 39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규명은 아직도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 일각에서는 더 규명할 진실이 남아 있느냐면서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980년 5월 광주에서의 최초 발표명령자와 집단 발표 명령자를 아직까지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행방불명자 규모와 압매장의 진실도 마찬가지다. 최근에는 헬기사격과 전투기 광주 폭격 대기설, 80위원회 및 511연구위원회의 5·18 군 기록 조작 의혹 등이 새로 밝혀야 할 과제로 제기됐다. 무엇보다 전두환 회고록과 인터넷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북한군 개입설 등 터무니없는 왜곡과 폄훼 시도는 왜 아직도 진상규명이 필요한지를 절감하게 한다.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하고 왜곡과 폄훼를 막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국민통합 때문이기도 하다. 5·18 민주화운동의 왜곡과 폄훼는 국민통합을 가로막고,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기 때문이다. 진상규명이 되지 않아서 가해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피해자로서는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채 누구를 용서해야 할지 용서할 대상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국민통합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일 수밖에 없다. 5·18 민주화운동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이나 왜곡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이나 모두에게 ‘국가차원의 공식적인 진상보고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5·18 민주화운동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의 경우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확인(팩트 체크)의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더 이상의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논란을 종식시키고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진상보고서 채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¹³

위 글이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5·18의 진실규명문제는 한국사회에서 여전히 논쟁 중이며, 앞으로도 한 동안 지속될 것 같다. 위 글의 필자는 진실규명의 필요성을 첫째 최근 제기된 각종 의혹 및 터무니없는 왜곡과 폄훼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고, 둘째 5·18을 둘러싼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함이라고 주장한다. 이어 그 진상규명의 방식으로 ‘국가차원의 공식적인 진상보고서’ 채택을 강조하고 있다. 필자가 제기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5·18의 진실을 둘러싼 논쟁은 조사를 통해 팩트 체크(fact check)를 한다고 해서 정리될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80년 항쟁 당시부터 5·18은 그 자체로 한 번도 대화의 대상이 되어 본 적이 없다. 죽은 자와 남겨진 자 모두 한국현대사의 오랜 족쇄인 반공주의의 틀 내에서 자기검열을 거쳐 그들과 대화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5·18의 ‘왜곡-진실’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논란은 5·18 자체에 기인하기보다는 한국사회의 반공주의를 축으로 한 진영 대결에 보다 근원이 있다.

위 내용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논란의 해결책으로 ‘국가차원의 공식적인 진상보고서’의 채택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국가권력 또는 권위를 통해 5·18의 진실을 공고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국가가 만든 것은 아니다. ‘국가에 의한 과거청산이나 역사바로세우기의 기능은 사회통합이 아니라 갈등을 결정으로 해결하는’ 한정적 효과만 있을 뿐이다.¹⁴ 즉 특정 진실이 국가에 의해 공식화되었다고 해서 논란이 종식되지도 않을뿐더러, 국가차원의 진실 규명 자체가 국가로 수렴될 수 없는 5·18의 다채로운 진실을 담보해줄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2000년대 중반 이후 급증한 극우세력의 5·18왜곡문제를 다룬 저술에서 한 연구자는 왜곡의 양상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는 은유처럼 그들이 생산해내는 5·18왜곡담론은 자신들의 시각에 맞게 짜 맞춰지고 재구성되면서 독특한 왜곡 효과를 유발하고 있다. 지난 30년 동안 신군부의 학살과 5·18 민주화운동의 정당성을 밝혀내는 과정에서 발굴·정리된 자료들이 5·18항쟁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자료로 악용되고 있다. 왜곡담론의 생산자들인 보수세력들은 이들 자료를 전용하면서도 자료의 생산처, 원자료의 역사적 맥락 등은 밝히지 않고, 자신들의 자의적 입론에 따라 자료를 재배치, 재가공하여 황당한 주장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삼고 있다. 특히 5·18항쟁 당시의 사진과 영상물의 경우 장소와 상황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생략한 채 ‘광주사태’ 혹은 ‘광주 폭동’이라는 조작된 스토리를 뒷받침하는 재료로 사용하고 있다.¹⁵

5·18왜곡의 성격을 간파한 위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왜곡과 진실은 동일한 사료에 기초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같은 자료를 근거로 하면서도 왜곡을 만드는 것은 실증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과 해석의 차이에 기인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왜곡과 진실은 과거 그 자체가 아닌 현재의 정치적 지향과 목적에 따른 과거를 바라보는 입장과 해석의 차이임을 알 수 있다. 그렇기에 5·18을 둘러싼 왜곡과 진실의 논쟁은 수많은 자료의 고의적 폐기와 조작으로 인한 어려움 때문만은 아니다. 설사 새로운 증거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논쟁이 종료될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그 증거 역시 또 다른 왜곡의 자료로 얼마든지 조작되거나 재배치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미래에 5·18의 진실은 무엇이어야 할까? 이 논할 가치가 없는 소모적 왜곡과의 대결장에서 5·18의 진실을 찾아야 할까? 이제는 과거의 잔재인 왜곡에 대응한 5·18의 진실에서 후세대와 미래를 향한 5·18의 진실로 중심을 이동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5월을 매개로 지역과 세대를 넘어 소통하기 위해서도, 그 정신의 현재화와 보편화를 위해서도 40주년 이후 5·18연구는 ‘왜곡’과 ‘무관심’ 중 ‘무관심’과의 대화로 재정향될 필요가 있다.

글을 시작하며 언급했던 선배연구자의 5·18연구에 대한 진단을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5·18의 자장 속에서 살았던 동시대 연구자에게 5·18과의 거리두기는 쉽지 않은 딜레마이다. 역사가 필연적으로 망각을 통한 기억의 과정이라면, 동시대 연구자에게 5·18은 망각될 수 없는 체험이자 현재의 자신이기도 하다. 때문에 망각이 주는 거리와 그로부터 시작되는 대자적 인식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경향이 존재했다. 지난 40여년 우리에게 5·18은 그러했다. 하지만 왜곡과 폄훼에 맞선 그 잊지 않음이 오히려 죽은 자와 그(녀)를 뒤따르던 산 자의 진실을 말하기 보단, 왜곡과 폄훼에 대해 ‘아니다’라고만 말해왔던 진실은 아닌지, 또 광주시민을 학살한 그 국가권력에게 ‘폭도와 빨갱이가 아니’라고 항변하며, 스스로를 인정해줄 것을 요청해왔던 그런 진실은 아닌지 되돌아볼 때가 되었다. 왜곡과 폄훼에 붙들린 진실만을 가지고 5월의 미래를 전망하기엔 5월의 진실은 너무도 많은 사연과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국가를 향해서 기대고 배당받은 5월의 진실을 통해서도 5월의 왜곡도 무관심도 막을 수 없어 보인다. 우리가 추구해온 5·18의 진실이 어떤 레짐과 지평 위에 놓여있는지 성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제 5·18의 역사화를 통해 5·18의 또 다른 진실을 추구해야 할 시점이다.

13 김정호, 「5·18 역사왜곡과 법적대응」, 『5·18왜곡과 진상규명』(5·18 민중항쟁 39주년 기념 학술교류포럼 자료집), 5·18기념재단, 2019, 39쪽.

14 노진철, 앞의 글, 29쪽.

15 오승용·한선·유경남, 『5·18왜곡의 기원과 진실』, 5·18기념재단, 2012, 10~11쪽.

「5·18, ‘진실’의 레짐과 계보학」에 대한 토론문

김 형 주 (전남대 5·18연구소 전임연구원)

1. 계보학적 접근으로 5·18 ‘진실’의 레짐을 추적한다는 것

이 글의 목적은 5·18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검토하여 5·18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 글은 “그동안 진행되어온 5·18관련 주요 저술들, 5·18연구의 경향성을 분석한 논문들, 일정 기간 단위로 우수한 5·18연구 성과를 엮은 간행물, 5·18기념재단이 발행한 책자, 학술회의자료집, 용역보고서”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글은 기존의 연구들을 평면적으로 분석하는 것에서 벗어나 기존 연구가 생성된 맥락과 함의를 추적하였습니다. 계보학이 일반화된 개념이나 법칙을 거부하고, 형이상학적 진리를 부정하면서 오히려 그것들의 이면을 파헤쳐 감춰진 담론과 권력의 작용을 드러내는데 있다면, 이 글은 그러한 관점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다고 봅니다. 이 글은 기존의 5·18연구가 진상규명활동과 상관관계 속에서, 권력이 제기한 담론과의 쟁투 속에서 진행되었고, 그 결과 “5·18연구는 부정했던 바로 그 왜곡과 동일한 프레임과 담론지형 안으로” 결박되었음을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기존에 시도되지 않았던 접근방식으로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5·18의 ‘진실’이 권력의 ‘왜곡’ 프레임에 대응하는 과정을 통해 구조화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은 상당히 날카로우면서도 매우 논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글은 ‘무엇이 진실인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어떻게 진실이 만들어지는가?”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5·18에는 두 차원의 ‘진실’이 있는데, 하나는 구체적인 사실로서 ‘진실’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의 의미를 해석한 결과 드러난 ‘진실’인데 후자에 더 주목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자의 ‘진실’이 만들어지는 맥락과 역학관계, 그것의 효과를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5·18연구의 방향을 모색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발표자는 그동안 ‘왜곡’과의 쟁투라는 프레임 속에서 생겨난 ‘진실’을 벗어나, 다른 ‘진실’을 찾아 나설 때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찰하는 통로로 지역과 세대, 과거청산을 상정합니다. 이 지점에서 토론자는 어떤 곤경과 맞닥뜨렸습니다. 지역과 세대, 과거청산이라는 세 가지 주제어에 대한 분석이 진행되면 될수록 이 글이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 5·18의 어떤 (고정된) ‘진실’을 찾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토론자가 생각할 때 발표자가 이 세 가지 주제어를 통해 분석하려고 했던 것은 지역과 세대, 과거청산의 문제에서 등장했거나 파생된 담론들과 전략을 밝히고 숨겨진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글은 그것에 충실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의 문제를 논의할 때 타 지역의 5·18에 대한 시선과 “지역 간 정치적 경쟁구도가 5·18로 상징되는 민주주의를 축으로 역전되었다”는 분석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하지만 이 글은 의도치 않게 어떤 ‘방향’을 던지지 제시하기도 합니다. “광주의 5·18이자 모두의 5·18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구체적 보편성’으로서의 5·18의 진실을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국적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은 이를 단편적으로 보여줍니다. 다른 측면이긴 하지만 세대의 문제를 다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계보학은 상당한 자료에 대한 섭렵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아쉽게도 ‘88만원 세대’에 관한 논의만을 다루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세대에 대한 분석에서는 지역과 과거청산에 대한 분석만큼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2. ‘왜곡’, ‘진실’의 대당인가?

이 글의 주요한 주제어는 ‘진실’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대당으로 보이는 ‘왜곡’이 등장합니다. 발표자가 보기에 5·18의 ‘진실’은 지배 권력의 ‘왜곡’과의 쟁투 속에서 의미화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권력이 제기한 ‘왜곡’ 프레임을 벗어날 수 없었고, 그런 점이 5·18의 미래를 구상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왜곡’과의 쟁투라는 프레임 속에서 생겨난 ‘진실’을 벗어나, 다른 ‘진실’을 찾아 나설 때라고 강조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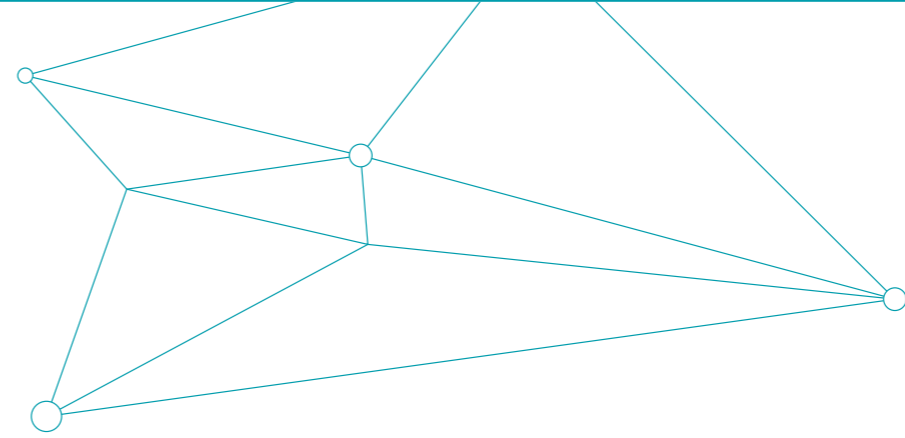
여기에서 토론자는 또 다른 곤경과 마주했습니다. ‘왜곡’이라는 용어에 대해 일종의 혼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발표자가 그 용어 자체보다 이면의 역학관계와 그로 인해 만들어진 프레임을 문제 삼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에서 이 용어가 지속적으로 등장하다 보니 혼란스러웠습니다. 특히 ‘왜곡’은 특정 사실을 전제로 하는데 이는 발표자가 지적했듯이 입장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즉 ‘왜곡’이라는 단어에는 가치판단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글의 맥락상 발표자가 사용하는 ‘왜곡’은 지배 권력의 ‘왜곡’을 의미하는데 이때의 ‘왜곡’은 ‘어떤 사실’이 있는데 국가가 그것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실은 아직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혹은 사실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서로 다른 ‘진실’이 공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발표자가 이미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왜곡’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차라리 신군부의 논리 혹은 신군부와 보수세력이 주장하는 ‘진실’이라고 불러야 하지 않을까요? 즉 서로 다른 ‘진실’을 정립시키려는 쟁투 속에서 ‘5·18의 진실’이 특정 프레임에 포박되어 버렸다고 말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문제를 이렇게 설정하면, 혹은 용어를 바꾸면, 논의가 더 풍부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글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의미화된 ‘진실’의 각축장을 다양한 시각에서 검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5·18연구 혹은 연구자가 특정 입장에서 다른 입장의 논리와 마주하면서 성장해왔던 것이 문제라면, (지배권력이 주장하는 ‘진실’은 ‘왜곡’이라는) 입장을 버림으로써 해석의 여지를 더 넓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꼭 지배권력의 편에 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이는 이 글이 지적하는 바로 그 ‘프레임’을 벗어나는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5·18연구도 민주화운동과 폭동, 지배와 저항이라는 고정된 틀에서 빠져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3. 두 가지 곤경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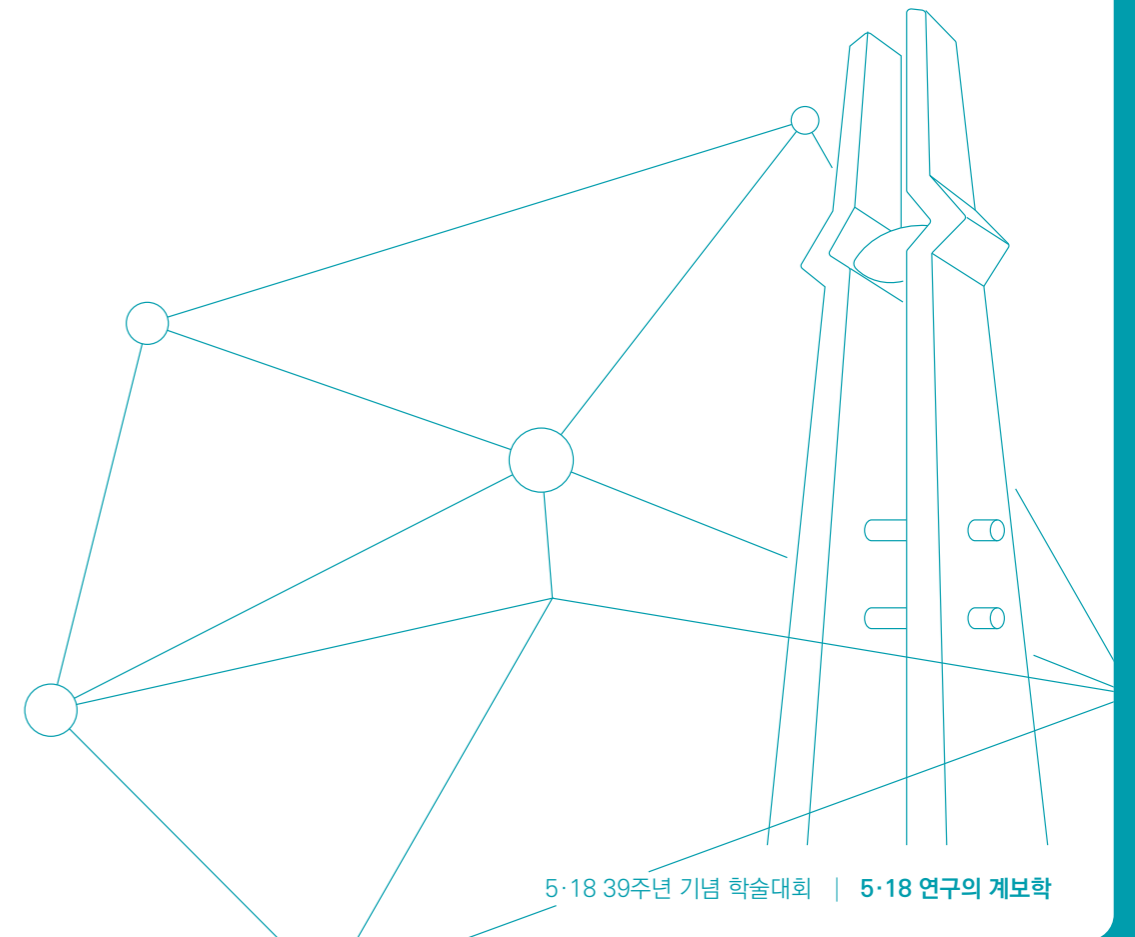
따라서 이 글은 애초에 기대고 있는 계보학이라는 관점과 방법에 보다 충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근본적으로 지향하고자 했던 ‘진실’의 레짐을 파헤치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진실’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서로 다른 ‘진실’들이 어떻게 구축되어 왔는지 그것의 전략과 기술, 효과가 무엇인지 알아가는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5·18의 ‘진실’에 대한 해석의 가능성을 끊임없이 열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글에서는 5·18연구

가 지배권력이 설정한 프레임에 결박되어 버렸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표나 분석이 좀 더 보완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이 글이 지역의 문제를 다룰 때 타 지역의 시선이나 지역 간 정치적 경쟁구도 뿐만 아니라 광주지역 내의 문제도 다룰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발표자가 타 지역과 비교를 통해 '민주주의'라는 상징자본을 둘러싼 각축 과정으로 분석한 것처럼 5·18항쟁 당시, 혹은 최근 몇 년간의 광주지역의 문제도 비슷한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표 2

빛진 자들의 타인에 대한 공감의 방식 -5·18 문학 연구의 기원·담론·도약



5·18 39주년 기념 학술대회 | 5·18 연구의 계보학

빛진 자들의 타인에 대한 공감의 방식 -5·18 문학 연구의 기원·담론·도약

최현주 (순천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1. 텍스트해석의 다양한 힘과 시선들
2. 5월문학 연구의 기원과 담론의 구조
 - 1) 진상규명과 죄의식의 재구성
 - 2) 가치중립성과 문예미학적 담론 효과
 - 3) 치유와 애도의 아포리아
3. 오월의 현재화를 위한 5월문학 연구의 도약
 - 1) 가치중립성과 미학주의의 극복
 - 2) 운동성과 정치성의 복원
4. 미래(?)의 5월문학을 꿈꾸며

.....아아, 지금 당신들은 도대체 무엇 하고 있는가. 왜 이 도시를 잊어버렸는가. 우리는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당신들의 잠자리는 평안한가. 당신이 꾸는 꿈은 아름다운가. 그대들과 우리들은 이 순간 얼마나 아득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인가.

- 『봄날』 5권 399쪽

1. 텍스트해석의 다양한 힘과 시선들

5·18은 한국현대사를 가장 극명하게 표상해주는 상징체이자 부유하는 기표이다. 그리고 지금 한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사회구성체적 모순을 압축적으로 함의하고 있기도 하다. 분단, 외세, 민중, 이념의 분열과 갈등……. 지금 우리의 정치·사회적 실상을 보여주는 거울이자, 리트머스 시험지이다. 그런 점에서 5·18은 현재적이고, 그래서 더 문제적이다. 5·18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국립묘지에서 기념과 추모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적 아이러니, 여전히 지금도 이 모순과 부조리의 극단에 5·18은 우리 곁에서 숨 쉬고 있다.

그러한 5·18에 대한 진정한 탐색 과정은 최윤의 소설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에서의 주인공 ‘소녀’를 추적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¹⁶ 무분별한 여정을 넘나드는 ‘소녀’야말로 우리가 탐색해야 할 5·18일 것이다. 하지만

16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의 이동을 추정하는 일은 이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선적인 이동이 아니라 그 주변 지역을 모두 답사해야 하는 면을 만드는 이동으로, 시간이 걸리고 말이 삭제된 무한한 내적 요인을 동시에 추리해야 하는 복잡한 이동이 된다. 그녀의 무분별한 여정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그녀의 가능한 내면으로 들어가야 했고, 그 속에 그녀와 같이 머무르면서 내면의 지시를 따라야 했다. 그것은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었다. 매번의 추적에서 그녀는 우리를 멀리멀리,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앞지르는 수밖에 없었고, 그 거리만큼 그녀의 흔적은 절망적으로 희미해졌다. (최윤,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 『5월문학총서·2 소설』, 5·18기념재단, 2012, 276쪽.)

우리는 ‘소녀’(5·18)의 선적/면적 이동과 그녀의 내면의 지시를 포착해내야 하기에 시간/공간적으로 앞지르는 그녀의 흔적을 찾아내다가 결국 절망에 도달할 뿐이다.

이같은 소녀(5·18)찾기의 절망에 지금 우리가 도달해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지나친 자조 혹은 위악일지도 모른다. 그녀에게 진 빛을 제대로 갇아보고 싶어서 절망적으로 그녀의 흔적을 추적하는 존재가 지금의 나/우리 자신일 것이다. 말로 표상할 수 없는 부조리한 상황의 중심에 서 있는 지금 우리에게 5·18은 여전히 앞서거나 뒤서면서 온전한 진실 찾기를 갈구하는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 요구에 답변하는 것이 우리의 역사적·윤리적 책무일 터이다.

그리고 우리보다 더 일찍 빛진 자들이었던, 하여 그러한 절망의 극단에 서 있던 이들이 바로 5월문학의 시인과 작가들이었다. 대상의 온전한 흔적과 실체를 알 수도, 말할 수도 없었던 이들, 그저 5월 쓰러져간 이들에 대해 빛진 자로서만, 엄청난 죄의식과 부끄러움을 가진 자로서만 살아가야 했던 이들이 바로 5월문학을 일구어냈다. 그들은 무분별한 이동 경로를 앞서거나 뒤서는 소녀(5·18)의 내면까지 포착해내야 했지만 그들에게는 소녀의 내면과 그것을 표현할 말을 갖지 못한 이유로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그들은 말로 설명하거나 표상할 수 없음이라는 아포리아를 숙명으로 간직한 빛진 자들이었다. 그럼에도 5월문학의 시인 소설가들은 그러한 숙명을 온몸으로 끌어안은 채 5월문학의 산맥을 일구어냈다.

돌아가신 이들의 내면과 말을 갖지 못한 채 그저 아포리아의 숙명을, 빛진 자로서 돌아가신 이들에 대한 죄 닦음의 방편으로 씌어진 작품들을 연구하고 비평한다는 것 또한 아포리아의 세계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혼돈과 절망의 아포리아를 추체험하고 재구성하려는 시도는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 될지도 모른다. 단지 흔적의 흔적을 간신히 어루만지는 데서 시작해서 그대로 끝날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글은 불안함과 불온함으로부터 출발한다. 어쩌면 그것은 언어의 재현불가능성으로 인한 불안함과 더불어, 그동안 5월문학의 연구와 해석이 비판적으로 거리를 두고 멀리하려 했던 정치적 해석의 불온함 때문일 것이다. 여기서의 불온함은 김수영의 정치적 불온함과 마주한다.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라는 역설적 경구는 미학적으로 아름답지만 정치적으로는 불온하다. 불온한 것이 가장 미학적이 될 수 있음을 일찍이 김수영은 설파하였지만 그간 5월문학 연구의 주된 논지는 정치적 불온함에 대한 불편함을 일관되게 노출시켜 왔다. 5월문학 연구가 문학주의, 미학주의의 자장에 가깝다면 김수영은 비문학주의, 정치주의의 자장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역사적 텍스트들이 불온하고 정치적인 해석을 근간으로 하는 이유는 모든 역사 텍스트, 혹은 역사적 사실을 기초로 한 문학 텍스트들이 정치적 이념과 인간들의 이데올로기 투쟁을 담아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텍스트와 콘텍스트와의 상호작용, 텍스트들은 이전의 텍스트들과 이데올로기적으로 혹은 인정 투쟁의 방식으로 이전의 텍스트들의 힘의 작동을 균열시키거나 그 힘의 동력을 기반으로 자신의 이데올로기적 기반을 재생산해낸다. 그러한 정치적 인정 투쟁과 이데올로기 생산의 모든 과정에 헤게모니가 작동할 뿐 아니라 거기에 관여하는 이들은 자신의 정치적 지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정한 텍스트 읽기는 텍스트가 작동시키는 징후적이거나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는 힘들, 비판적이면서도 변화 가능한 힘들의 특정한 배치를 규명하는 작업¹⁷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5월문학에 대한 연구사를 돌아보는 작업 또한 각각의 텍스트들이 지닌 정치적 시선과 이데올로기적인 힘들의 배치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5월문학이 이념적이고 정치적 속성의 또다른 힘들인 운동성과 실천성을 근원적으로 포획해냈기 때문이다. 그간 5월문학에 관한 연구들 또한 눈에 띄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징후적으로 연구자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위치에서 5월문학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텍스트들은 징후적으로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거나 그것에 대한 비판적 힘을 배치해나간다는 점에서 5월문학에 관한 연구들 또한 정치적 자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 글은 다양한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지점을 불온하게 의식하면서 빛진 자의 마음으로 5·18 텍스트들을 읽고 분석하였다. 하지만 공감보다는 비판적 거리를 두고 불온한 정치적 관점 아래 선택과 배제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 이 글의 문제의 지점이라 하겠다.

17 도미니크 라카프라, 옥영수 옮김, 『치유의 역사학으로-라카프라의 정신분석학적 역사학』, 푸른역사, 2008, 28쪽.

2. 5월문학 연구의 기원과 담론의 구조

1) 진상규명과 죄의식의 재구성

5월문학은 오월항쟁의 시작부터 마지막날 도청을 지키면서 희생되었던 분들에 대한 빛진 마음, 그들에 대한 죄의식과 부끄러움으로부터 출발하였다. 빛진 자들이 쓰러져간 이들에 대한 마음의 빛을 갹기 위해서 시와 소설을 쓰기 시작했고, 스러져 간 이들의 이유와 내력을 더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창작의 불씨를 지피기 시작했던 것이다.

김준태의 「아 아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를 시작으로 ‘오월시’ 동인들의 시와 ‘시와 경제’ 동인들의 시가 나오게 되었다. 소설에서도 1980년대 중반 임철우의 단편 「봄날」과 윤정모의 「밤길」이 창작되어 나오면서 희생자들에 대한 죄의식과 더불어 5·18에 대한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하는 5월문학의 거대한 산맥이 그 단초를 이루어나 가게 되었다.

그리고 5월문학이 활발하게 창작되어 나오면서 당대의 현장비평가들은 5월문학을 조명하고 그 현상과 문제점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시작하게 된다. 5월문학에 대한 비평의 핵심은 문학의 현장성과 운동성에 대한 긍정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그러한 긍정의 배경에는 당대의 현장비평가들 또한 오월에, 5월문학에 빛진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가장 주류의 문예 잡지 『창작과비평』을 주도했던 최원식은 ‘새로운 독재 권력에 정면으로 격렬히 부딪혔던 광주항쟁’은 패배였지만 ‘우리나라 민족운동사에 불멸의 각인’¹⁸이었다고 오월항쟁의 의의를 천명하고 있다. 그는 특히 홍희담의 「깃발」이 기존의 5월문학들의 외재적 접근을 넘어서 광주항쟁을 내재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인물의 형상화 방식에 있어서 기계적이라는 비판도 함께 내놓게 된다. 이러한 최원식의 5·18 소설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향후 5월문학을 보는 기준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황정현은 1989년에 쓴 「1980년대 소설론」에서 하나의 역사적 사건을 형상화하기 위해서는 소재주의적 측면을 극복하고 문학의 내적 논리에 따라 예술성을 확보하고 승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홍희담의 「깃발」이 강도 높은 현장성에 압도되어 예술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하나의 결점이고, 다른 하나의 결점은 지나치게 무산자 계급의 시각으로 편중되어 있다¹⁹ 고 비판하고 있다.

김우창은 “오늘 우리가 민주화를 백일하에 말할 수 있는 것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신념과 양심에 따라 행동한 사람들에게 힘입은 것이다. 이 불확실성으로 하여 그들의 용기와 성취는 더 빛나는 것이다.”²⁰라고 하면서 신념과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바로 5·18이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일 것이라 주장한다. 이같은 그의 해안은 결과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불의에 대항하여 행동하고 실천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5·18의 현재화에 대한 궁극의 대안을 제시해놓고 있다.

일찍이 『문학과 지성』을 창간했던 평론가 김현은 「보이는 심연과 안 보이는 역사 전망 - 꽃을 보는 두 개의 시선」이란 글을 통해 5월문학의 근원적인 창작방법의 부조리를 예리하게 제시했다.

80년대에 시작 활동을 한 거의 모든 시인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그 원죄 의식을 드러낸다. <중략> 대부분은 시인들은, 성실하고 고통스럽게 광주와 마주친다. 광주 체험은 그러나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그것을 사회시키는 데 시인들은 큰 고통을 겪는다. 광주를 노래하는 순간, 그 노래는 체험의 절실함을 잃고 자꾸만 수사가 되려 한다. 성실한 시인들의 고뇌는 거기에서 나온다. 광주에 대해 눈감을 수는 없다.²¹

위의 문면에서와 같이 김현은 오월항쟁을 소재로 한 문학작품이 체험의 절실함과 수사방식, 역사적 사실과 미학적 형상화의 모순과 갈등에 처하게 될 수 있음을 선언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향후 역사적 진상규명이 먼저인가, 예술적 형상화가 먼저인가, 정치성인가 미학인가라고 하는 5월문학의 모순과 긴장의 자장을 선구적으로 설정해 놓고 있다.

18 최원식, 「광주항쟁의 소설화」, 『창작과비평』 1988년 여름호, 286쪽.

19 황정현, 「1980년대 소설론」, 『5월문학총서4·평론』, 5·18기념재단, 2013, 198쪽.

20 김우창, 「광주항쟁의 패배와 승리」, 『한국논단』 9권, 1990, 21쪽

21 김현, 「보이는 심연과 안 보이는 역사 전망 - 꽃을 보는 두 개의 시선」, 『문학과 사회』 1990년 가을호(『김현문학전집』7, 문학과 지성사, 1992, 294쪽에서 재인용)

임현영은 「5월항쟁문학 5단계론」²²라는 글에서 10여 년에 걸쳐 이루어진 5월항쟁문학의 진행과정을 5단계로 나누었다. 1단계에서는 현지 문학인에 의한 항쟁의 실록의 요소, 실록문학의 성격(김준태의 「아 아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를 비롯한 문병란의 시), 2단계에서는 강력한 탄압과 표현의 자유의 박탈 속에서 상징적인 의미로서의 피해자의 모습이 부각(임철우의 「직선과 독가스」), 3단계에서는 변혁운동의 동조자와 희생자들의 모습이 희미하게 등장(문순태의 「일어서는 땅」), 4단계에서는 항쟁 참여자들과 주변적 인물의 부각(윤정모 「밤길」)부터 변혁주체 세력의 형상화(홍희담 「깃발」), 5단계에서는 이념의 계승작업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면서 문학사적으로 볼 때 5월의 이념은 아직 과도기이며 민족사적인 먼 과제로 나아가는 걸음마를 딛고 있는 수준이라 평가하였다.

이강은 「광주민중항쟁에 대한 소시민적 문학관을 비판한다」라는 글에서는 “광민항쟁은 노동자계급의 당파성에 입각한 철저한 재해석을 바탕으로 형상화되어야 한다는 전제로 광민항쟁의 문학적 형상화 역시 현실적으로 요구되는 노동자계급의 사상적 단련에 기여해야 된다는 일차적 목적으로 시작되어야 한다.”²³ 는 논지가 제시되면서 80년대의 지배적 담론이었던 노동자계급의 당파성에 입각한 소설창작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공종구는 『봄날』이전의 임철우 소설에 드러난 알레고리적 상황 설정의 원인을 두 가지로 제시하는데, “하나는 광주에 대해 무관심과 방조로 일관했던 사람들에게 대한 원망의 감정, 다른 하나는 권력의 불법적 폭력과 그로 인한 광주의 불행과 재앙에 대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방관하거나 도피하는 데서 오는 부끄러움 때문”²⁴ 이었다고 진단한다. 그러면서 그는 임철우가 미학적 고려를 하지 못한 채 자신의 무의식을 강박적으로 호출했던 것은 살아남은 자의 죄의식과 부끄러움 같은 원한의 감정이었음을 밝혀내고 있다.

또한 방민호는 「광주항쟁의 소설화, 미완의 탐」에서 광주를 이야기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살아남은 자들이 남겨진 삶을 이야기하는 것과 새로워진 현실 위에서 광주에 새로운 이념적 지평을 부여하는 방식이 있었다고 분석해낸다.

문학은 공식적인 역사가 죽여버린 진실을 부활시켜 내는 숭고한 사명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므로 정치가 모든 것이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대에 정치적 문학은 그 자체로서 비난받을 어떤 이유도 갖지 못한다. <중략> 그러므로 문학과 정치의 긴장을 추구하면서도 문헌면에 서는 것, 정치를 통과하여 문학의 경지에 이르는 것, 이것이 야말로 정치적 문학이 이루어내야 할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²⁵

그는 5월문학이 오월의 역사적 진실을 부활시켜내는 숭고한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설파하면서 정치적 문학이 이루어야 할 과제로 문학과 정치의 긴장 속에 문학의 경지를 고양하는 것이라 보고 있다. 5월문학이 정치성을 강조하면서도 문학의 본령을 추구해야 한다는 이전의 필자들의 논지를 그는 이 글에서도 반복하고 있다.

2) 가치중립성과 문예미학적 담론 효과

5월문학 연구의 새로운 단계는 오월항쟁의 총체성을 형상화한 임철우의 『봄날』로부터 방향전환이 이루어지게 된다. 『봄날』 이후부터 5월문학의 새로운 과제와 형상화방식이 요구된다는 이유로 ‘오월문학사’는 제2단계에 들어선다²⁶는 김형중의 천착에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은 5월문학 연구의 새로운 단계는 오월이 제도화되고 기념화되기 시작하는 과정과도 겹친다. 이는 오월에서, 5월문학에서 현장성과 운동성이 소거되어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5월문학에 대한 연구가 점점 현장성과 운동성으로부터 멀어져가는 흐름과도 같은 맥락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5월문학에 관한 연구와 분석 또한 현장비평가보다는 대학의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되기 시작한다.

이성욱은 역사적 사건을 소설화하는 경우 실제적 진실의 복원과 미학적 완성도가 요구된다고 전제하면서 “광주민중항쟁은 계급투쟁 혹은 거대담론 중심성의 향도 아래 의미의 ‘과잉결정’을 겪게 되었다”²⁷ 고 진단한다. 그 때문에 “

22 임현영, 「5월항쟁문학 5단계론」, 「길을 찾는 사람들」, 92권 5호, 1992.5. 192쪽.

23 이강은, 「광주민중항쟁에 대한 소시민적 문학관을 비판한다」, 『5·18 민중항쟁과 문학·예술』, 5·18기념재단, 2006, 176쪽.

24 공종구, 「임철우 소설의 트라우마: 광주 서사체」, 『현대문학이론연구』 11집, 1999, 10쪽.

25 방민호, 「광주항쟁의 소설화, 미완의 탐」, 『5·18 민중항쟁과 문학·예술』, 5·18기념재단, 2006, 199쪽.

26 김형중, 「『봄날』 이후」, 『5·18 민중항쟁과 문학·예술』, 5·18기념재단, 2006, 251쪽.

27 이성욱, 「오래 지속될 미래, 단절되지 않는 ‘광주’의 꿈」, 『5·18 민중항쟁과 문학·예술』, 5·18기념재단, 2006, 372쪽.

광주에 대한 전면적인 서사가 그간 제대로 성취되지 못한 것은 결국 ‘광주 소설’들이 구체보다는 추상 쪽으로 기울어졌기 때문”²⁸ 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는 『봄날』이 보고문학이라는 의심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 ‘사실 그대로’ 재현해야 한다는 작가의 강한 열결성 때문이라고 본다.

왕은철은 「5·18항쟁의 예술적 형상화 - 예술가의 역사의식과 윤리적 책무에 관하여」이란 글에서 “예술이 독자로부터 외면받지 않으려면 독창적 방식의 예술을 통해 리얼리티를 구현해야 하는데 5·18의 리얼리티는 그때 그 시절의 리얼리티가 아니라, 그 이후로 변화에 변화를 거듭해 온 현실 속의 리얼리티”²⁹ 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5·18을 소재로 한 예술이나 문학이 끊임없이 운동성의 차원에서 변화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시기 5월문학 연구의 새로운 장을 열게 한 글이 바로 김형중 「세 겹의 저주 - 〈저기 소리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 다시 읽기」이다. 그는 5월문학이 새로운 단계로 들어서야 하는 이유로 『봄날』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규정짓는다.

오월을 문학적으로 완결짓고자 하는 욕망, 가능한 한 더 이상 오월에 대해서는 말할 것이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말하려는 욕망, 본질을 규정하려는 욕망, 최종적인 ‘오월 정신’을 드러내려는 욕망, 말하자면 ‘총체성’과 가능한 한 완벽한 ‘반영’에 대한 욕망, 오월에 대한 남성적 글쓰기라 할 만한 이 길의 절정에 『봄날』이 있다.³⁰

『봄날』이 총체성을 구현해냄으로써 앞으로의 소설은 새로운 단계로 진입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방식은 오월이라는 이름을 가진 바이러스의 감염 경로에 대한 병리학적 진술이 되거나 감염의 경로를 소설 밖의 모든 장소와 시간들 속으로 무한 확장³¹되어야 함을 역설한다. 또한 그는 이를 더욱 구체화하여 「『봄날』 이후」라는 글에서 “오월은 제도화되어 가고 있다”³² 고 하면서 “우리는 ‘오월’이 세대를 넘어 그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탈피’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오월’이 ‘오월’ 아닌 것들의 영역으로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오월’은 ‘오월’로부터 벗어나 ‘오월’ 아닌 것들과 부딪쳐야 한다.”³³고 강조함으로써 오월의 현재화라고 하는 궁극의 과제에 대한 의미있는 대안을 제시해놓고 있다.

5월소설의 문예학적 연구에서 일종의 ‘인식론적 단절’의 지점을 형성했다고 평가받는 정명중의 「5월’의 재구성과 의미화 방식에 대한 연구 - 소설의 경우」이라는 글 또한 새로운 5월문학 연구의 지평을 열어간다. 그는 ‘5월’을 소재로 한 소설들이 선부른 전망의 제시로 부채의식을 상쇄하려고 하거나 진상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는 증언의 욕구가 노출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운동(정치)으로서의 문학’에 대한 작가의 지향이 과도한 이념의 강박을 불러와 작위적이고 기계적인 작품을 산출함으로써 문학적 형상화의 당위를 뒷전으로 해왔다고 주장한다.

비로소 5월을 놓고 ‘체험’과 ‘수사’ 사이의 괴리와 갈등을 본격적으로 겪어야 하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한 갈등 속에서 ‘체험’의 식상함을 일고하고 ‘수사’의 혁신을 통해 예술성을 획득해야 한다는 과제가 새롭게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체험’의 원심력과 구심력을 적절히 조절할 줄 알면서 5월을 예술적으로 현명하게 헤쳐 나올 작가들이 진정 필요한 때이다.³⁴

또한 그는 「5월 항쟁의 문학적 재현 양상」이라는 글에서 초기 5월 문학의 가장 긴박한 목표는 그러한 분리주의 혹은 고립으로 탈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초기 5월 문학의 향방이 문학을 이끈 비평적 담론들의 흥망 성쇠와 함께할 수밖에 없었음을 진단하고, “다소의 과장이 허용된다면 「깃발」 주위에 몰려든 ‘깃발들(이데올로기)’이 꺾이면서, 한편으로는 ‘속류’ 텍스트주의자들(실체는 없다. 오직 텍스트만 있다)의 담론에 밀려 ‘5월문학’은 물론 이려니와 5월 항쟁의 진실은 역사의 뒀안길로 물러날 채비를 해야 했다”³⁵고 지적한다. 기존의 담론과 그 구조에 5월

문학의 연구가 매몰될 수도 있다는 그의 문제의식의 단초를 여기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

신지연은 「오월광주 - 시의 주체 구성 메커니즘과 젠더 역학」이란 글에서 5월문학이 “오월광주에 연원을 둔 민족·민중적 주체를 최초 단계에서 구성해내고 국가권력에 대항하는 새로운 이데올로기 생산의 발판을 마련했다”³⁶고 밝히고 있다. 특히 그는 “오월광주-시들은 ‘오월 이후의 나는 누구인가’ 혹은 ‘오월 이후 우리가 나아갈 길은 무엇인가’라는 내면화된 물음을 동력으로 삼고 있다”³⁷라고 강조하면서 5·18의 현재화에 대한 나름의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 5월문학에 대한 탁월한 박사논문을 썼던 전성욱은 5월문학이 총체성의 반영에 경도될 경우의 위험성을 다음과 같이 경고한 바 있다.

전형성의 창출을 통해 총체성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재현의 기획은, 그 총체성이라는 개념에 투영된 과도한 현실개입의 의지로 인해,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오히려 관념성을 극대화하고 만다.³⁸

그는 그간의 5월문학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화두를 건드리고 있다. 그러나 그의 논의가 5월 문학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부터 촉발된 것이긴 하지만 5월문학에 대한 그간의 편향된 시선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것 같기도 하다. 총체성의 의지가 관념성의 극대화로 연결될 수 있지만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형상화하려는 창작에의 열정이 더욱 고양된다면 총체성에 대한 강박을 넘어설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3) 치유와 애도의 아포리아

5월문학의 기원은 빛진 자들의 부끄러움과 죄의식이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하지 못하였다는 부끄러움과 자신만 살아남았다는 죄의식이 문학적 승화의 방식으로 제시되었던 것이다. 살아도 죽은, 죽으려 해도 죽지 못하는 복합심리가 과도한 신경증으로, 혹은 분열증으로 빛진 자들의 삶의 존재가치를 부정하게 만들어오기도 하였다.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 살아도 살 수 없는 이들에 대한 치유와 돌아가신 이들에 대한 애도의 방식에 대한 문학적 시도들이 이루어졌다. 역사적 사실의 총체성보다도 한 개인의 심리적 증상, 일상의 고통, 파편화된 내면을 토로하는 소설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최윤의 「저기 소리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로부터 출발하여 권여선의 『레카토』, 김경욱의 『야구관 무엇인가』, 이혜경, 『사슴 사냥꾼의 당겨지지 않는 방아쇠』, 그리고 한강의 『소년이 온다』에 이르는 작품들에서 상처입은 자들의 치유와 쓰러져가신 이들에 대한 불가능한 애도의 문제에 대한 형상화 작업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러한 창작의 흐름이 바로 그에 대한 비평적 대응으로 이어져 인간 개개인의 세밀한 내면과 정서, 혹은 정동의 차원에서 치유와 애도의 문제를 담론화하였던 것이다.

차원현은 「포스트모더니티와 오월 광주」라는 글에서 “원한과 복수심에 바탕을 둔 비틀리고 왜곡된 반항에서 출발하여 윤리적 연대 위에 서 있는 자기 확신적 저항의 아름다움 정신에 도달할 때까지 멈춤 없이 자기 부정의 송고한 드라마를 만들어 왔던 것이 5·18에 관한 문학의 역사였다.”³⁹고 전제하고 5월 문학에 내재된 불가능한 애도와 성급한 승화의 방식을 문제삼는다.

심영의는 한강의 『소년이 온다』를 “외상의 치유를 말하기보다는 타자와 분리되지 않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주체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는 소설”로 평가하고, 이 소설이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이라거나 저항의 역사를 되살린다거나 하는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단지 인간에 대한 존엄, 그리고 충격과 분노라는 감정의 공유, 곧 공통의 느낌 구조(그것이 양심이든, 윤리적 분노이든)에 의해서라는 것의 확인에 있다.”⁴⁰고 평가하였다.

조연정은 권여선, 이혜경, 김경욱, 한강, 박솔뫼의 작품을 대상으로 이들 소설의 근본적 목적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민주화 투쟁의 ‘원사건’으로서 광주를 재점검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이 글에서 이미 벌어진 사태를 명명

28 위의 글, 375쪽.

29 왕은철, 「5·18항쟁의 예술적 형상화 - 예술가의 역사적의식과 윤리적 책무에 관하여」, 『5·18 민중항쟁과 문학·예술』, 5·18기념재단, 2006, 428쪽.

30 김형중, 「세 겹의 저주 - 〈저기 소리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 다시 읽기」, 『5·18 민중항쟁과 문학·예술』, 5·18기념재단, 2006, 231쪽.

31 위의 글, 235쪽

32 김형중, 「『봄날』 이후」, 『5·18 민중항쟁과 문학·예술』, 5·18기념재단, 2006, 248쪽.

33 위의 글, 268쪽.

34 정명중, 「5월’의 재구성과 의미화 방식에 대한 연구 - 소설의 경우」, 『5·18 민중항쟁과 문학·예술』, 5·18기념재단, 2006, 310쪽.

35 정명중, 「5월 항쟁의 문학적 재현 양상」, 『5·18 민중항쟁과 문학·예술』, 5·18기념재단, 2006, 526쪽.

36 신지연, 「오월광주 - 시의 주체 구성 메커니즘과 젠더 역학」, 『여성문학연구』 17집, 2007, 34쪽.

37 위의 논문, 45쪽.

38 전성욱, 『남은 자들의 말』, 오월의 봄, 2017, 37쪽.

39 차원현, 「포스트모더니티와 오월 광주」, 『민중문학사연구』 50집, 2012, 187쪽.

40 심영의, 「5·18소설에서 항쟁 주체의 문제 - 한강 소설 『소년이 온다』의 경우」, 『민주주의와 인권』 제15권1호, 2015, 64쪽.

불가능한 사건으로 지속적으로 현재화하는 일이 비극의 희생자들을 재차 희생시키지 않는 유일한 방법⁴¹이라고 강조한다. 이 지점에서 그는 애도의 정치학을 통해 문학의 정치성에 대한 당위를 요청하고 있다. 그는 이글에서 “광주의 상실과 슬픔은 머리로서의 이해가 아닌 몸의 감각을 통해 기억되어야 한다는 사실”⁴²을 반복적으로 강조해내고 있다.

김미정의 「‘기억 - 정동’ 전쟁의 시대와 문학적 항쟁 - 한강의 『소년이 온다』(2014)가 놓인 자리」라는 글은 “『소년이 온다』가 철지난 ‘문학적 진상규명 작업’인가, 아니면 문학의 시대정합적이고 불가피한 ‘미학적 대응인가’⁴³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된다. 그보다도 그의 구체적인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증언할 당사자가 단 한 명도 존재치 않는 세계에서 미래의 사람들은 그들과 어떻게 무엇으로 관계 맺어야 하나. 증언은 반드시 직접적 경험과 그것의 언어(=재현)적 제약 속에서만 가능한 것인가. 광주에 대한 직접적 경험도 자각적 기억도 없을 먼 미래의 세대는 어떻게 그것을 기억할 수 있을까⁴⁴

그의 논의는 5월문학에 대한 논의가 진상규명과 애도의 문제를 넘어서 광주를 직접 경험하지 못한 이들이 어떻게 그것을 기억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5월문학의 현재화 혹은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담아내고 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김소륜의 「한강 소설에 나타난 ‘분노의 정동’ 연구 - 장편소설 『소년이 온다』(2014)를 중심으로」은 ‘분노’를 단순한 감정의 차원이 아닌 행동능력의 연속적인 ‘변이’이자, ‘행동할 능력’을 의미하는 ‘정동’의 개념으로 접근한다. 그는 “광주에 관한 서사를 1980년 5월이라는 과거의 사건이 아닌, ‘지금 이 순간’ 지속적으로 경험되는 현재적 사건으로 서사화함으로써 가능해진다”⁴⁵고 전제하고, 경험으로서의 정동, 기억, 몸으로의 기억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5월의 현재화를 위한 방법으로 공감의 방식과 이를 바탕으로 한 ‘인권감수성’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 연구가 있다. 김경민은 “기록과 증언으로서의 문학, 치유와 화해로서의 문학”이 자칫 5월의 역사를 과거의 사건으로 가두어버릴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5·18을 문학으로 접하는 이들이 타인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는 과정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⁴⁶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는 것’, 즉 인권감수성을 키움으로써 타인의 입장과 감정을 공감해볼 수 있는 문학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5월문학의 현재화를 위해서, 오월을 기억하거나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이와 같은 타인의 공감을 위한 인권감수성의 부분은 새로운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3. 오월의 현재화를 위한 5월문학 연구의 요약

1) 가치중립성과 미학주의의 극복

가치중립이야말로 학문적 연구와 분석이 지향해야 할 가장 필요충분의 조건이자 태도이다. 과학과 학문이 근대에 이르러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낸 데에는 이러한 가치중립의 지향이 큰 역할을 하였다. 신과 같은 절대적 관념이나 진리, 개인의 사소한 감정이 개입되지 않는 중립적 태도야말로 대상의 본질에 대한 가장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월과 5월문학에 대한 연구의 최종적 결론들이 대부분 오월의 현재화, 혹은 지속가능한 미래로의 지향이라면 그 연구는 가치중립을 벗어나야 한다. 오월과 5월문학의 기원으로 다가서야 하고, 그것은 바로 오월이 가진 세계변혁에 대한 인간의 개입, 운동성의 지향으로부터 그 연구는 시작되어야 한다. 그간 5월문학에 대한 수많은 담론들은 각각의 에피스테메 속에서 담론의 효과를 구현해냈지만 그것은 구조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기의와 기표의 이분법적 대립항의 연쇄 속에서 의미와 더불어 그 효과가 파생되었지만 그 이분법의 구조속에 인간은

배제되어 있었다. 인간이 배제되고 운동성이 상실된 가치중립적인 학문이나 연구의 폐쇄회로에 갇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바로 구조주의에 내재된 비인간주의의 모순때문이었다.

그동안 수다한 담론과 가치를 생산해냈던 인문학⁴⁷은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의 주체적 행위능력을 배제하거나 폄하해왔다. 문학과 예술 작품을 대상으로 한 치밀한 분석과 논증, 역사적 사실 규명과 미적 형상화에 대한 사유의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치명적으로 인간이 배제되어 있었던 것이다. 역사와 예술, 진실과 아름다움의 이분법, 이성과 감성의 이분법적 구조에 매몰된 채 공감하거나 절망하거나 자책하는 살아있는 인간이 배제된 또다른 구조주의와 인문학에 함몰되어 있었던 것이 5월문학 연구의 실상이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5월문학을 르포르타주에 비교한 최원식의 논의 이후 많은 평자들이 5월문학의 문학적성과 예술적 완결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왔다. 분명 5월문학이 주제의 무게나 시의적 필요 때문에 작품의 완성도가 떨어질 수 있다. 문체는 작품의 완성도와 감동의 상관관계이다. 이는 미학의 문제이다. 이제 우리의 미학관, 예술작품에 대한 미적 태도의 기원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대체로 우리의 미학적 태도는 중고등학교 시절 문학이나 미술 시간에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학교에서의 미학교육의 근간은 예술을 위한 예술을 지향하는 순수미학을 이론적 토대로 삼았다. 이러한 순수미학은 근대 미학의 핵심으로 미적 태도로서의 관조와 대상에 대한 무관심성이 강조되었다. 순수미학은 특히 칸트의 『판단력비판』을 근간으로 한 미학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데 마르크스 미학의 대척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칸트는 『판단력비판』의 「미적 판단력의 분석론」에서 무관심성에 대한 가장 풍부하고 정치한 논의를 전개하였다.⁴⁸ 미적 태도로서의 대상에 대한 무관심이 대상과의 거리와 관조적 태도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칸트 미학을 전제로 할 경우 아름다움은 언어로 표상해낼 수 있는 현실세계보다는 현실과 거리를 두고 있는 저편의 세계, 피안의 세계에 대한 미적 형상에 주목하게 되면서 구체적 현실의 문제는 무관심하거나 깊이 있게 살피지 못하게 된다. 이처럼 순수미학 옹호자들은 문학에서 소통과 정치적 토론, 사회적 투쟁의 핵심개념들을 소거하고 정치적 허무주의⁴⁹를 유포시켰다.

이러한 순수미학은 한국 문단의 주요한 창작방법의 토대를 형성하였다. 순수문학을 지향하는 이들은 ‘문학의 자율성과 예술성’을 가장 핵심적인 화두로 내걸었다. 그들은 문학의 자율성을 지지하기 위해서 문학을 문학 외의 것(현실)과 구별지었고, 문학을 독립된 자율체로 만들기 위해 예술성과 현실성이라는 이분법적인 논리를 고안하고 유지하였다.⁵⁰ 이와 같은 순수문학관을 바탕으로 서정주 박목월의 작품을 정전으로 삼아 중고등학교에서 문학 교육을 받은 이들은 그러한 인식틀, 혹은 취향(아비투스)을 바탕으로 미적 형상성에 집착하는 순수문학적 태도를 가지고 문학작품을 감상하고 평가하게 된 것이다. 5월문학을 대하는 많은 이들 또한 이러한 미적 태도, 취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을 것 같다. 예술성에 대한 순수성, 미학적 완성도를 내면화한 이들에게 5월문학은 일정 부분 미학적 함량이 부족하거나 과도한 이념, 정치성의 노출로 비쳐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문학이 문학다워야 한다는 강박, 문학은 예술적 형상을 제대로 갖추어야 한다는 고정관념들이 5·18의 문학의 다양한 존재방식을 허용하지 못하고 있다. 문학 혹은 예술의 순수성, 진정성에 대한 가치 구분을 통해 또 다른 진리나 도덕을 설정하고 내부에 혹은 외부에 또 다른 타자 혹은 적들을 설정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5·18은 우리에게 무엇이었는가? 무엇이어야 하는가? 열림이어야 한다. 모두에게 열려있는 장으로서의 5·18이었으면 한다.

그런 점에서 김형수의 다음 글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47 마르크스, 프로이트, 니체, 소쉬르라는 일련의 선구적 집단은 사유와 인식의 체계라는 존재가 개인 주체의 힘을 초월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인간 개인은 이러한 체계 안에 존재하면서 그것들을 능가하는 힘을 갖지 못한다. 오직 체계를 이용하거나 이로부터 사용을 당하는 선택만이 있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이는 인문주의적 사유의 핵심을 단호하게 부정합니다. <중략> 변화는 곧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행위로 구성되고 또한 이 행위를 통해 이해되는 인간의 역사는 인문학의 근본 전제입니다.(에드워드 사이드, 『지향의 인문학 - 인문주의와 민주적 비판』 마티, 2008, 27-29쪽.)

48 칸트는 미적 판단이 이론적 인식을 위한 판단이나 도덕적 가치를 판정하는 판단과 달리 주관의 감정적 만족감에 근거한 판단임을 강조한다. 칸트는 미적 판단의 즐거움과 다른 감정적 즐거움을 서로 질적으로 구분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했으며, 이때 미적 판단의 즐거움이 지닌 본질적 성격을 ‘무관심적 즐거움’으로 규정한다. 쾌적함에 대한 판단이나 선함에 대한 판단이 대상에 대한 관심과 결합된 감정적 즐거움을 근거로 한 판단인 반면, 아름다움이나 숭고함에 대한 미적 판단을 규정하는 즐거움은 대상에 대한 관심에서 자유롭다는 것이다.(하선규, 『무관심성』, 『미학의 문제와 방법-미학대계2권』,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7, 51-52쪽)

49 플로베르, 말라르메와 그들의 동료 작가들은 부르주아적 사유양태를 거부한다고 주장했지만, 진귀한 꽃과 보석으로 꾸며진 비밀 정원과 같이 정화된 언어들의 세계에서 거주하는 새로운 귀족주의를 꿈꿨었다. 그러나 이 비밀 정원은 신문적 특질을 지닌 이상적인 투영일 뿐이었다. 이 작가들을 이 정원을 구축하기 위해 날 말들에서 그 소통적 용법을 제거했어야 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정치적 토론과 사회적 투쟁의 도구로서 이 날말들을 사용할 수 있었던 사람들에게서 그것들을 찬탈해야 했다. 그래서 날말들과 대상들의 문학적 화석화는 부르주아들의 니힐리즘적 전략에 봉사했다.(자크 랑시에르, 『문학의 정치』, 인간사랑, 2009, 17쪽.)

50 백지은, ‘1960년대 문학적 언어관의 지형 - 순수/참여 논쟁의 결과에 드러난 1960년대적 ‘문학성’의 양상-’, 『국제어문』 제46집, 2009, 253쪽.

신춘문에 같은 것은 쳐다볼 틈조차 없었다. 쫓겨나는 문사들이 훈련병 시절도 없이 전쟁터로 배속된 신병들처럼 곧장 전투에 참가했다. 이게 그 세대가 등장하던 풍경이다. 기성 문단의 어떤 기득권도 달가워하지 않았다. 대부분 훈련되지 않고, 선별 당하지 않으며, 축복 받지 못했다. 안정된 매체도, 혈연 학연 지연에 의존하는 위계도 없었다. 그러나 머리에 얹힌 짐은 무겁다. 자, 그들의 궤적을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⁵¹

그는 위의 글에서 낯선 문학으로의 교체, 문헌에서의 이지메를 극복하는 것이 5월문학의 과제임을 피력하고 있다. 80년대 5월문학의 기원이 형성되던 시절 전쟁터로 배속된 신병들처럼 훈련되지도 않았고 선별당하지도 않는 채 문학으로 투쟁했던 이들에 대한 신화와 같은 이야기들이 왜 이렇게 그리워지는 것일까? 신춘문예와 등단이 글쓰는 자격이나 조건으로 요구되는 문단권력, 고정된 미학적 태도로 인해 5월문학의 풍성함이 소멸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5월문학의 기원이 되었던 세대들의 풍경이 그리울 뿐이다. 풍성한 그들의 문학적 기투와 향연이 말이다

또한 황현산은 「광주 5월시의 문학사적 위상」이란 글에서 “5월의 광주는 한국의 현대시에서 시가 되는 말과 시가 되지 않는 말의 구분을 없애고 시적 주제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서정’에 새로운 깊이를 부여하였다.”⁵²고 설파한 바 있는데 광주로 인한 서정의 확장, 미학의 확장, 장르적 전통의 새로운 확장이 가능하게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5월문학으로 인해 미학주의, 순수문학주의에 포획되지 않는 새로운 문학의 등장, 새로운 문학개념과 문체주체의 등장, 장르의 해체, 민중 출신의 작가의 등장이가 가능하게 되었음을 함의하고 있기도 한다. 수많은 훈련받지 않는 문사들의 출현과 더불어 다양한 장르, 다양한 창작방식의 5월문학들이 창작되었던 것이다. 왜 그런 의의를 지금의 문학제도와 문예창작의 장에서는 현재화시키지 못하고 있는가?

2) 운동성과 정치성의 복원

사건으로서의 오월, 언어로 환원될 수 없는 사건과의 마주침이 바로 우리에게 다가선 오월이었다. 5·18이라는 사건은 기존의 언어로 표상할 수 없는 사태, 진리 포착의 계기점이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언어로 표상하거나 재현할 가능한 사건으로서의 오월, 그래서 오월은 빈틈이며 공백이고, 그래서 씌어진 텍스트가 아니라 타자의 언어가 아닌 나의 새로운 언어로 다시 써야만 할 텍스트⁵³이다.

언어로 환원할 수 없는 사건을 언어로 말해야만 하는 문학의 사명은 그래서 아포리아적이다. 더구나 전성욱에 의하면 그 말은 결코 자기의 것이 될 수 없는 익명의 말이다. 자기 것이 아닌 말로써 말해야만 하는 운명을 걸머지고 살아가야 하는 자가, 사건 이후의 문학적 주체이다.⁵⁴ 이러한 아포리아를 수행해야만 하는 것이 시인이나 작가의 숙명일 것이다.

그러면서도 문학을 통해 오월을 현재화하기 위해서는 오월담론의 자기 부정이 필요하다. 오월의 본질과 가치에 대한 다양한 정의와 의미부여의 담론들에 대한 반성과 해체가 필요한 시점이다. 5·18의 고정된 가치부여와 담론화보다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다양한 진리치를 찾아가는 많은 방법중의 하나가 5·18이라는 겸손한(?) 선언이 전제되었으면 한다. 그 도정으로부터 5·18에 대한 담론의 구조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전제로 한 5월문학 연구의 도약이 필요한 것이다. 수다한 말과 다양한 담론을 넘어선 도약, 그것은 바로 인간의 개입, 운동의 복원이다. 분석적이고 가치중립적인 연구와 비평의 장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들의 장에서 여전히 그들의 규율과 미학적 원칙에 따라야만 하는가? 그렇지 않으려면 우리에게는 정치가 필요하고 목숨을 건 도약, 몸으로의 실천이 필요할 것이다.

정치는 복수의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며, 그들 누구나 행위를 할 수 있고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정치의 근본조건이다. 이런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결과들은 우연적이고 예측할 수 없으며, “다수가 동의해야 하고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실천적 문제들이지 결코 이론적으로 고찰하거나 한 사람의 의견으로 해결될 문제들이 아니다.”⁵⁵

정치적 문제 해결은 반드시 실천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한나 아렌트의 글이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각각 다른 지점에서 다양한 방식의 정치적 행위들을 하고 있겠지만 5·18 앞에서 우리는 초라하고 무력해져 있는 우리들을 발견하곤 한다.

전성욱은 방민호의 말을 빌려와 5월문학에 대한 학술적 논의가 간소하고 빈약한 이유를 광주라는 주제가 환기시키는 노골적인 정치성 때문인지로 모른다⁵⁶고 진단한다. ‘노골적인’이라는 수식어로 한정하고 있지만 그가 문제삼는 것은 정치성이다. 광주와 관련한 지금까지의 연구들이 학술활동이라기보다는 진보운동의 차원에 기울어진 정치적 성향 때문임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5월문학을 총체성에 과도한 가치부여를 지향하는 사회주의리얼리즘에 가까운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 과연 그런가? 그가 오히려 어떤 정치적 선택을 정향하고 5월문학 연구사를 들여다 본 것은 아닐까?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5월문학에서 정치적 성향, 진보운동으로서의 성격을 배제하고 바라볼 수 있을까? 방향 감각을 상실한 이 시대 어떻게 저항하기를 계속해야 하는가에 대한 화두를 제시하면서 정치와 미학의 교섭가능성을 탐색하였던 랑시에르의 『감성의 분할』의 한 구절을 반추해야 할 것 같다.

모든 집단적 예술 퍼포먼스들을 본질적으로 ‘전체주의적’이라고 비난하는 자유주의적 유혹에 굴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⁵⁷

근원 혹은 기원으로의 복귀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치가 문학을 압도하는 것에 대한 지나친 경계나 두려움은 이제 내려 놓아도 될 시점이 되었다. 문학주의가 전면화되어 있는 현단계 문단의 흐름 속에서 본다면 그 어느 작가나 시인이 문학성을 포기한 채 정치성을 전경화시킬 작가는 없다. 그래서 남은 문제는 문학의 정치이다.

‘문학의 정치’라는 표현은 문학이 시간들과 공간들, 말과 소음,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것 등의 구획 안에 문학으로서 개입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문학의 정치는 실천들, 가시성 형태들, 하나 또는 여러 공동 세계를 구획하는 말의 양태들 간의 관계에 개입하게 된다.⁵⁸ 기존의 사상이나 가치에서 답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예술에서 문학에서 새로운 미래 사회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개입하는 것이 바로 문학의 정치화이다. 문학의 정치적 지향이란 바디우가 언명한 바와 같이 21세기 우리에게 필요한 고유명 없는 허구의 실재적 가능성을 창조해가는 과정⁵⁹일 수 있다.

이제 5월문학은 5·18이 가지고 있는 운동사적 의의나 성과 등에 정주해 있을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다양한 대안 운동들과의 새로운 결합이 필요하다. 그런 가운데 김형중의 글은 매우 설득력이 있다.

기념관과 유적지와 묘지를 벗어나 거리로 도심으로 스며들어가야 하고, 역사와 문자를 벗어나 일상의 생활과 다양한 매체들 속으로 진입해야 하며, 아직도 논란거리로 남아 있는 첨예한 문제들(가령 여성, 환경, 교육, 소수자 운동 등등의)과도 해후해야 한다. ‘마주쳐야’ 하고(알튀세르), ‘접속해야’(들뢰즈)한다.⁶⁰

55 5월의 소설에는 기억과 증언의 정치적 무의식이 징후와 흔적으로 남아 있다. 그리고 그 징후와 흔적들은 결국 잉여나 결여의 형태로 텍스트의 동일성을 훼손한다. <중략> 전형성의 창출을 통해 총체성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재현의 기획은, 그 ‘총체성’이라는 개념에 투영된 과도한 현실 개입의 의지로 인해,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오히려 관념성을 극대화하고 만다. 다시 말해, 바로 그 정치성의 과잉이 오히려 사실(잠재적 실제)의 상투화와 추상화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전성욱, 앞의 책, 37쪽.>

56 5월의 소설에는 기억과 증언의 정치적 무의식이 징후와 흔적으로 남아 있다. 그리고 그 징후와 흔적들은 결국 잉여나 결여의 형태로 텍스트의 동일성을 훼손한다. <중략> 전형성의 창출을 통해 총체성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재현의 기획은, 그 ‘총체성’이라는 개념에 투영된 과도한 현실 개입의 의지로 인해,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오히려 관념성을 극대화하고 만다. 다시 말해, 바로 그 정치성의 과잉이 오히려 사실(잠재적 실제)의 상투화와 추상화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전성욱, 앞의 책, 37쪽.>

57 자르 랑시에르, 『감성의 분할 - 미학과 정치』, 도서출판 b, 2008, 110쪽.

58 자르 랑시에르, 『문학의 정치』, 인간사랑, 2009, 11쪽.

59 우리는 확실히 우리의 허구에 대한 실재적 가능성을 창조해야만 한다. 그 허구한 새로운 형식 아래에 있는 유적인 허구다. 새로운 위치 설정은 틀림없이 새로운 정치적 용기에 대한 문제다. 그 허구를 찾는 것은 정의와 희망의 문제다. 그러나 허구의 가능성이라는 문제는 용기의 문제다. 용기는 법으로도 욕망으로도 환원할 수 없는 무언가의 이름이다. <알랭 바디우, 『투사를 위한 철학 - 정치와 철학의 관계』, 오월의 봄, 2013, 113-114쪽.>

60 김형중, 『「봄날」이후』, 268쪽.

51 김형수, 「흩어진 '중심'의 향기 - 5·18 정신의 문학적 궤적」, 『5월문학총서·4 평론』, 5·18기념재단, 2013, 17쪽.

52 황현산, 「광주 5월시의 문학사적 위상」, 『5월문학총서·4 평론』, 5·18기념재단, 2013, 40쪽.

53 작가가 의미부여한 데로 주제를 파악해내는 데 집중하는 독서에 적절한 것이 '읽을 수 있는 텍스트'이고, 독자의 다양한 의미해석에 초점을 맞춘 독서에 해당하는 것이 '쓸 수 있는 텍스트'이다. 이제 모든 텍스트 해석에는 작가의 의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의도와 상관없는 독자적인 해석과 텍스트의 재창조가 중요하다. 이처럼 바르트는 작품에 대한 과도한 관심을 갖는 신비평과는 다르게 모든 독서과정에서 텍스트를 새로 쓸 수 있는 독자에 초점을 맞추는 '쓸 수 있는 텍스트'의 의미를 강조하였다. <Paul Goring, Jeremy Hawthorn, Domhnall Mitchell, 『Studying Literature-The Essential Companion』, Oxford University Press Inc. 2001, p.316.>

54 전성욱, 앞의 책, 329쪽.

5월문학의 위기에 대한 위의 문면의 대안은 매우 유익하다.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의 ‘소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5·18에 대한 감염의 방식, 5·18의 현재화 방식에 대한 절묘한 대안 제시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우리의 민주주의는 최상의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가? 분단의 문제가 해결되어 민족구성원 개개인의 행복과 인권이 보장되고 있는가? 여순10·19와 제주4·3, 광주5·18의 재발 가능성은 영구적으로 해소되었는가? 이제 또 다른 촛불혁명은 필요하지 않게 되었는가? 라는 질문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이러한 질문에 바우만은 현대성이 계속되는 한 홀로코스트는 반복될 수 있음을 언명⁶¹한 바 있다. 우리는 우리의 절망을 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절망을 망각한 것이 희망이고 행복인 것처럼 살아오고 있지는 않았는가?

이 상황은 그 이후 지금까지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았다. 해방은 분단으로 이어지고 분단은 외세에의 반-식민지 예속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한국인의 정치적 삶은 본질적으로 식민지 국가의 곤경에 의해 규정될 수밖에 없었다. 그 곤경이란 노예적인 삶과 자유로운 죽음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다라는 것이다. 자유로운 삶을 위해서는 언제나 죽음을 각오하고 저항하고 투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야말로 식민지 민중의 곤경이다.⁶²

우리는 김상봉의 날카로운 통찰과 같이 지금의 국가적·민족적 현실을 깊이 반복적으로 반추할 필요가 있다. 동학혁명 이후, 식민지배와 6·25전쟁, 군부독재와 5·18을 지나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처한 죽음과 같은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식민지와 반식민지의 애매한 경계 속에서 매판적 권력자에 의해 끊임없이 생존의 위협을 받아온 민중들의 삶을 몰각해서는 안 될 것 같다. 문학을 창작하던 문학에 대한 비평과 연구를 하든지 간에 말이다. 죽음으로 내몰린 민중들의 모습이 제주4·3으로, 여순10·19로 광주5·18로 반복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직시하고 공감하는 문학과 문학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빛진 자로서 상처받은 타인들에 대한 공감, 그들의 고통스러운 삶에 개입하는 구체적 실천을 동반한 문학연구 방법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여기에 운동으로서의 문학과 문학연구에서의 정치성의 복원이 지금 현단계에서 요구되는 것이다.

4. 미래(?)의 5월문학을 꿈꾸며

노래하지 말아라 오월을 바람에 지는 풀잎으로 / 바람은 야수의 발톱에는 어울리지 않는 시의 어법이다 / 노래하지 말아라 오월을 바람에 일어서는 풀잎으로 / 풀잎은 학살에 저항하는 피의 전투에는 어울리지 않는 시의 어법이다 / 피의 학살과 무기의 저항 그 사이에는 서정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자격도 없다 / 적어도 적어도 광주 1980년 오월의 거리에는

- 김남주, 「바람에 지는 풀잎으로 오월을 노래하지 말아라」

권위적인 헤게모니에 의해 해석과 비판이 이루어지는 학문연구의 장 속에서 나는 무엇을 선택하고 배제하고 모방하고 부정할 수 있을 것인가? 이같은 고민의 과정은 5·18의 무게, 나의 무의식 깊은 곳에 또아리 틀고 있는 죄책감, 부끄러움, 자책, 회한, 반성 등등의 것들을 불러내는 시간들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 장의 제목대로라면 이제 지나간 과거의 시간보다 미래를 이야기해야 한다. 그런데 미래는 없다. 과거도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 다만 우리에게는 현재만이 있을 뿐이다. 내일도 날이 새고 나면 다시 오늘, 현재일 뿐이다. 그럼 점에서 5·18의 미래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무의미하거나 무책임한 일이 될 수도 있다. 5·18의 지금 오늘,

61 홀로코스트는 단순히 유대인 문제가 아니었으며 유대인 역사에만 고유한 사건도 아니었다. 홀로코스트는 우리의 합리적인 현대 사회에서, 우리 문명이 고도로 발전한 단계에서, 그리고 인류의 문화적 성취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태동해 실행되었으며, 바로 이 때문에 홀로코스트는 그러한 사회와 문명과 문화의 문제이다.(지그문트 바우만, 『현대성과 홀로코스트』, 새물결, 2013, 18쪽.)

62 김상봉, 「자기의 권리와 타인의 고통 사이에서 - 5·18의 세계사적 의미에 대하여, 「마흔살 5·18의 철학적 담론 - 대중적·보편적 의미의 5·18정신」을 주제로 한 광주정신포럼 발표문(2019.10.16.), 11쪽.

현재화를 논의해야 하는 것이다.

‘뭍’이란 말은 『죽음의 한 연구』, 『칠조어론』 등의 작품을 창작했던 박상룡의 신조어이자, 창작방법의 기초였다. 이 단어는 말·몸·맘(마음)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지(logos)·정(pathos)·의(ethos), 진·선·미를 내포하고 있다. 대부분의 문학은 이 세 가지, 즉 세계관, 인성, 감성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아는 세계관을 통해 문학적 형상화를 시도하지만 그 세계관은 이성에 기반한 지식의 차원에 한정된 것이다. 그보다 문학은 대상에 대한 태도와 인성, 그리고 구체성의 근거인 몸과 감성의 영역까지도 포섭해내야 한다. 궁극적으로 문학과 사랑과 혁명은 이성보다는 감성을 근거로 하여 촉발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랑시에르나 바디우, 아감벤이 진리의 거처를 예술에서 찾으려는 노력도 동일한 맥락으로부터 기원하는 것이리라.

지금 우리 곁에 구현되어야 5월문학은 맘과 몸과 말의 소통 체계에서 내가 아니라 타자, 우리가 아닌 다중들의 현재적 삶에 감각적이면서 구체적으로 개입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중들이 공감하고 그들의 삶의 지평을 초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정·의와 진·선·미의 체계 내에서 모두에게 공감되고 소통되는 5·18이 되어야 할 것이다. 5·18이라는 사건이 나의 일임을, 내게 발생한 일이라는 공감, 쓰러져간 이들의 삶에 개입하는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체험의 문학⁶³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5·18의 함성, 자기부정, 타자에 대한 배려 등등의 감성적이면서 윤리적인 공감, 사랑과 혁명의 정동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이제 진정한 5·18의 현재화를 위해서는 오월 정신과 5월문학의 기원을 환기하고 그 의의를 되새겨야 한다. 기존의 견고했던 자본주의와 독재권력의 압박에 투항하지 않았던 저항과 전환의 문학정신, 다양한 장르 확장과 창작방법의 모색이 5월문학의 기원에 자리잡고 있었다. 농민시인, 노동자 시인 등 계층을 넘어서 다양한 시인 작가들의 등장, 민중의 연대를 토대로 하는 집단창작 방법의 대두, 비라·르포·선전문로 폄하되었지만 다양한 창작 결과물들의 유통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문학 제도와 장의 판도를 바꾸어낸 기원이 바로 5·18이었다.

5·18은 광주를 넘어 여순10·19, 제주4·3, 대구항쟁, 부마항쟁 등의 담론들과 교섭하고 연대함으로써 인권·민주·민족·민중·평화·통일이라는 담론의 적극적인 생산활동이 필요하다. 더불어 문학의 위기와 문학의 죽음을 넘어서기 위한 노력들, 특히 영상 매체들과의 통섭을 통해 다양한 창작방식과 장르 확산에의 예술적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운동의 장으로서 다중, 대중이 참여하고 실천하는 문화예술을 생산하고 소비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아감벤이 『세속화예찬』⁶⁴에서 설파한 바 것처럼 성스러운 것에서 세속적인 것으로의 이행으로써 놀이의 영역으로 5월문학이 작동했으면 하는 바람과도 상통한다. 어쩌면 신성시되고 의례화되고 제도화된 5·18이 어떤 구속과 규율로부터 모두를 자유롭게 하는 놀이로 대중들에게 친숙하게 수용되고 향유되는 과정에서 오월과 5월 문학의 대중들과의 접점은 늘어날 것이다. 문화예술 활동에서 5·18과 대중과의 접촉 가능성, 대중 친화력, 대중의 현재적 정서, 대중의 수용 역량, 대중의 일반적인 수용 양상⁶⁵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전제로 한 문화예술의 창작과 소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처럼 대중들과의 진정한 소통을 통해 ‘우리 안의 타자’가 아니라 자기의 언어를 갖는 ‘서로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문화예술이 되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5·18이 <소통으로서의 역사>와 더불어 <바깥으로 나가는 역사>가 됨으로써 ‘서로주체’와 ‘탈주체’가 벌이는 향연⁶⁶으로써의 5월문학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김현선생의 다음의 글은 우리에게 5월문학의 현재화에 대한 응송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그의 시적 승리는, 공포의 도시에서, 좌절하여, 가난한 시인 지망생으로 만족하지 않고, 들끓처럼 저간 동료들의 뒤를 흔들림 없이 뒤따르려는 결의를 보여준 데 있다. 그는 그것이 역사의 진보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고

63 역사가 된다는 것은 이미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의미 historical significance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나 여기 오늘의 삶의 정감 속으로 투입되어야만 한다. 우리는 너무도 우리의 감성과 무관한 역사를 배워왔다.(김용욱, 『우리 너무 몰랐다』, 통나무, 2019, 219쪽.)

64 사실 성스러운 것에서 세속적인 것으로의 이행은 성스러운 것을 완전히 부적절하게 사용(아니 오히려 재생산)함으로써 일어날 수도 있다. 놀이가 바로 그것이다. 놀이의 영역과 성스러운 것의 영역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놀이의 대부분은 고대의 성스러운 제의들, 넓게 말하면 종교적인 영역에 속했던 예언 풍습과 의례에서 유래한다. <중략> 이런 사례와 성스러운 것의 세속화 속에서는 공통적으로 소용함으로 이행한다. 그러나 그 소용함은 부주의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철학자들이 인류에게 부여한 새로운 사용을 뜻한다.(조르조 아감벤, 김상운 옮김, 『세속화예찬 - 정치미학을 위한 10개의 노트』, 도서출판 난장, 2010, 110-112쪽 참조)

65 유재호, 「전북에서 본 5·18 - 문화예술적 재현 및 대중 수용의 양상」, 『5·18 민중항쟁에 대한 새로운 성찰적 시선』, 한울, 2009, 64쪽.

66 박규용, 「바깥으로 나가는 역사, 5·18」, 『민주주의와 인권』 10권 3호, 75쪽.

뇌하는 대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뒤를 이어나가기로 결심한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체험적 동지애이지, 사변적 논리가 아니다. 체험적 동지애를 그에게 계속 환기시켜 주는 것은 과거의 회상·기억이다. 그것은 의식적인 것이 아니라 전신 감각적인 것이다. <중략> 과거의 사건, 과거의 인간들은 그의 의식 속에서는 아직도 현재적이다. 그는 그 과거의 사건을 부단히 되살려내고, 죽은 사람들의 넋을 진혼하여, 그들의 뒤를 따르려 한다.⁶⁷

80년대 광주의 젊은 시인 임동확의 시에 대한 평의 일부이다. 5·18의 역사를 회상·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의식 속에 5·18이 아직도 현재적인 것이어야 하며, 온 몸으로 그들의 뒤를 따르려는 지금의 결단과 행동이 중요한 덕목임을 김현은 강조하고 있다. 그들의 뒤를 따르려는 빛진 자들의 전신감각적인 노력들이 지금 필요한 때이다.

따라서 5월문학에 대한 연구 또한 미학주의를 넘어서 시대에 대한 새로운 대응방식을 찾아내고 모색한 5월문학의 비의를 새롭게 전유해나가야 한다. 새로운 창작 방법의 모색과 장르의 확산을 통해 5·18이 제도화되고 관습화되는 것에 대한 저항의 거점으로써 5월문학의 의의를 환기하면서 비평하고 담론화하여야 할 것이다. 하여 5월문학 연구 또한 5·18을 경험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한 이들까지도 현재적 감각으로 실감하고 향유하는 5월문학을 위하여 성원하고 연대할 일이다. 문학의 예술적 완결성에 대한 고정관념, 미학과 가치중립에의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는 문학 연구와 비평의 색인이 필요한 지점이다.

참고문헌

- 공종구. 「임철우 소설의 트라우마: 광주 서사체」, 『현대문학이론연구』 11집, 1999.
- 김경민. 「공감을 통한 문학의 인권감수성 형성 : 최윤의 <저기 소리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를 대상으로 5·18 관련 인권문제의 문학적 형상화 연구」, 『민주주의와 인권』 14권1호, 2014.
- 김미정. 「'기억-정동' 전쟁의 시대와 문학적 항쟁 -한강의 『소년이 온다』(2014)가 놓인 자리」, 『인문학연구』 54집, 2017.
- 김상봉. 「자기의 권리와 타인의 고통 사이에서 - 5·18의 세계사적 의미에 대하여」, 『마흔살 5·18의 철학적 담론 - 대중적·보편적 의미의 5·18정신』을 주제로 한 광주정신포럼 발표문(2019.10.16.)
- 김소륜. 「한강 소설에 나타난 '분노의 정동' 연구 - 장편소설 『소년이 온다』(2014)를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44집, 2018.
- 김우창. 「광주항쟁의 패배와 승리」, 『한국논단』 9권, 1990.
- 김 현. 「보이는 심연과 안 보이는 역사 전망 - 꽃을 보는 두 개의 시선」, 『문학과 사회』 1990년 가을호 『김현문학전집』7, 문학과 지성사, 1992.
- 김형수. 「흩어진 '중심'의 향기 - 5·18 정신의 문학적 궤적」, 『5월문학총서·4 평론』, 5·18기념재단, 2013.
- 김형중. 「세 겹의 저주 - <저기 소리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 다시 읽기」, 『5·18 민주항쟁과 문학·예술』, 5·18기념재단, 2006.
- 김형중. 「『봄날』 이후」, 『5·18 민주항쟁과 문학·예술』, 5·18기념재단, 2006.
- 박구용. 「바깥으로 나가는 역사, 5·18」, 『민주주의와 인권』 10권 3호, 2010.
- 방민호. 「광주항쟁의 소설화, 미완의 답」, 『5·18 민주항쟁과 문학·예술』, 5·18기념재단, 2006.
- 백지은. 「1960년대 문학적 언어관의 지형 - 순수/참여 논쟁의 결과에 드러난 1960년대적 '문학성'의 양상-」, 『국제어문』 제46집, 2009.

- 신지연. 「오월광주 - 시의 주체 구성 메커니즘과 젠더 역학」, 『여성문학연구』 17집, 2007.
- 심영의. 「5·18소설에서 항쟁 주체의 문제 - 한강 소설 『소년이 온다』의 경우」, 『민주주의와 인권』 제15권1호, 2015.
- 왕은철. 「5·18항쟁의 예술적 형상화 - 예술가의 역사식과 윤리적 책무에 관하여」, 『5·18 민주항쟁과 문학·예술』, 5·18기념재단, 2006.
- 유제호. 「전북에서 본 5·18 - 문화예술적 재현 및 대중 수용의 양상」, 『5·18 민주항쟁에 대한 새로운 성찰적 시선』, 한울, 2009.
- 이강은. 「광주민주항쟁에 대한 소시민적 문학관을 비판한다」, 『5·18 민주항쟁과 문학·예술』, 5·18기념재단, 2006.
- 이성욱. 「오래 지속될 미래, 단절되지 않는 '광주'의 꿈」, 『5·18 민주항쟁과 문학·예술』, 5·18기념재단, 2006.
- 임현영. 「5월항쟁문학 5단계론」, 『길을 찾는 사람들』, 92권 5호, 1992.5.
- 정명중. 「'5월'의 재구성과 의미화 방식에 대한 연구 - 소설의 경우」, 『5·18 민주항쟁과 문학·예술』, 5·18기념재단, 2006.
- 정명중. 「5월 항쟁의 문학적 재현 양상」, 『5·18 민주항쟁과 문학·예술』, 5·18기념재단, 2006.
- 조연정. 「'광주'를 현재화하는 일」, 『대중서사연구』 20권3호, 2014.
- 차원현. 「포스트모더니티와 오월 광주」, 『민족문학사연구』 50집, 2012.
- 최원식. 「광주항쟁의 소설화」, 『창작과비평』 1988년 여름호.
- 하선규. 「무관심성」, 『미학의 문제와 방법-미학대계2권』,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7.
- 황정현. 「1980년대 소설론」, 『5월문학총서4·평론』, 5·18기념재단, 2013.
- 황현산. 「광주 5월시의 문학사적 위상」, 『5월문학총서·4 평론』, 5·18기념재단, 2013.
- 『5·18 민주항쟁과 문학·예술』, 5·18기념재단, 2006.
- 『5월문학총서·2 소설』, 5·18기념재단, 2012.
- 『5월문학총서·4 평론』, 5·18기념재단, 2013.
- 김용욱. 『우린 너무 몰랐다』, 통나무, 2019.
- 심영의. 『5·18과 문학적 파편들』, 한국문화사, 2016.
- 전성욱. 『남은 자들의 말』, 오월의 봄, 2017.
- 조희연·정호기. 『5·18 민주항쟁에 대한 새로운 성찰적 시선』, 한울, 2009.
- 도미니크 라카프라. 『치유의 역사학으로 - 라카프라의 정신분석학적 역사학』, 푸른역사, 2008.
- 에드워드 사이드. 『저항의 인문학 - 인문주의와 민주적 비판』, 마티, 2008.
- 알렉 바디우. 『투사를 위한 철학 - 정치와 철학의 관계』, 오월의 봄, 2013.
- 조르조 아감벤. 『세속화예찬 - 정치미학을 위한 10개의 노트』, 도서출판 난장, 2010.
- 지그문트 바우만. 『현대성과 홀로코스트』, 새물결, 2013.
- 자르 랑시에르. 『감성의 분할 - 미학과 정치』, 도서출판 b, 2008.
- 자크 랑시에르. 『문학의 정치』, 인간사랑, 2009.
- 한나 아렌트. 『인간의 조건』, 한길사, 2015, 53쪽.

67 김현, 「보이는 심연과 안 보이는 역사 전망 - 꽃을 보는 두 개의 시선」, 『문학과 사회』 1990년 가을호(『김현문학전집』7, 문학과 지성사, 1992, 305쪽에서 재인용)

「빛진 자들의 타인에 대한 공감의 방식 -5·18 문학 연구의 기원·담론·도약」에 대한 토론문

공 종 구 (군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오늘 발표자의 좋은 글 좋은 공부 되었습니다. 1980년 5월 18일 바로 그날, 경기도 연천에서 군 복무 중이긴 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였던 2-30대를 광주에서 보냈으면서도 이제까지 5·18에 대해 별다른 생각이나 고민없이 지내온 저에게 오늘 발표자의 글은 새삼 부끄러움을 자극하고 소환하는 좋은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5·18에 대해 단지 흔적의 흔적을 간신히 어루만지는 데서 시작하는” 발표자의 글을 읽고서 그 흔적의 흔적의 흔적을 간신히 어루만지는 질문으로 어쭙잡은 제 토론을 갈무리하고자 합니다.

서양의 근현대 철학사의 지형에서 니체는 거침없는 우상파괴를 감행하는 ‘망치’의 표상으로 등장합니다. 그러한 니체 알, ‘철학은 망치로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생각을 지닌 니체에게 이상적인 철학자란 가져오는 전복과 해체의 작업을 통해 기존의 윤리나 도덕, 규범이나 진리의 외설적 이면이나 위선을 증언하고 폭로하고 실재계의 증언자나 폭로자의 역할을 자임하는 자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5월의 문학적 현재화를 선명하게 내세우는 발표자의 글과 관련하여 ‘문학 또한 망치로 하는 것이다’라는 명제로 제 질문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하는 자들, 뿔이 있어도 자기 뿔을 챙기지 못하는 자들의 대변인 역할을 자임해야만 하는 존재들이 작가들이고 아니 작가들이어야만 하고 그러한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작가들 또한 망치를 들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학의 망치는 철학이나 사회학 또는 정치학의 망치와는 달라야 하는 것 아닐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발표자께서 오월의 현재화를 위한 과제로 제시한 ‘가치중립성과 미학주의의 극복’과 ‘운동성과 정치성의 복원’이라는 화제의 정합성을 중심으로 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가치중립성이라는 용어의 정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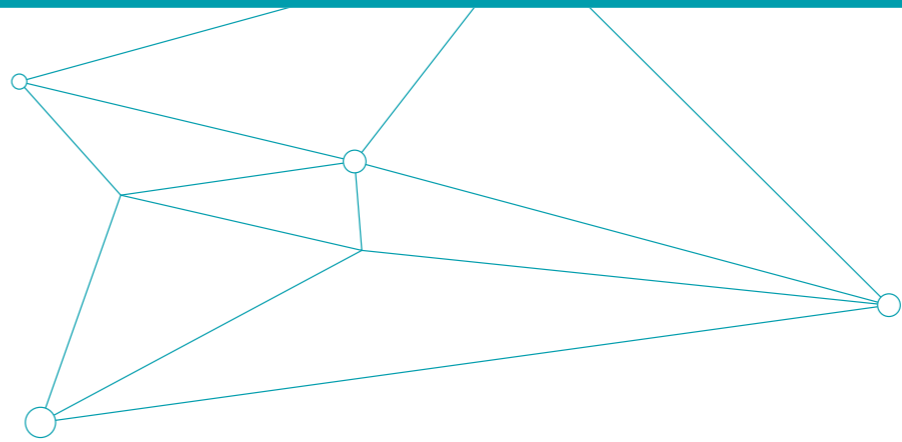
먼저 ‘가치중립성’이라는 용어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치는 결코 중립적일 수 없다는 점에서 가치중립이라는 용어는 성립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점에서 언어도단이자 어불성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체의 판단이나 평가의 개입을 전제하는 가치와 그러한 개입을 무화하는 중립 사이에는 화해불가능한 존재론적 심연이 가로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표와 기의 사이에 완전한 합치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연과 산종이 산출하는 해

체(또는 해체의 유희)를 가능하게 만드는 원죄로서의 틈새나 균열로부터 자유로운 용어나 개념은 아예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정은 비단 가치중립이라는 용어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실은 모든 언어 기호 자체가 그러한 존재론적 아포리아나 운명적 딜레마로부터 자유롭지 않을 것입니다. 사정이 그러하다고 해서 가치중립이라는 용어가 학문공동체의 대로를 확보해서는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욱이 그 용어가 문제가 되는 것은 허버마스가 ‘가치의 다원주의’를 담론적 정체성의 표지로 내세우는 포스트담론이 그 의도와는 달리 실제로 기존의 권력관계를 확대 재생산하는 데 기여하는 신보수주의라고 규정하고 있는 맥락의 연장선에서 가치중립이라는 기호 또한 성립 당시의 의도나 현재의 통상적인 용례와는 상관없이 기존의 권력구조의 재생산을 통해 궁극에는 가진자들의 기득권을 유지시켜주는 이데올로기적 도구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물론 발표자께서도 그런 맥락에서 그 용어를 사용하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문제삼고자 하는 바는 아예 지시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텅 빈 기호’인 그 용어의 사용 자체를 이제는 그만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대, 가치는 결코 중립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미학주의와 운동성·정치성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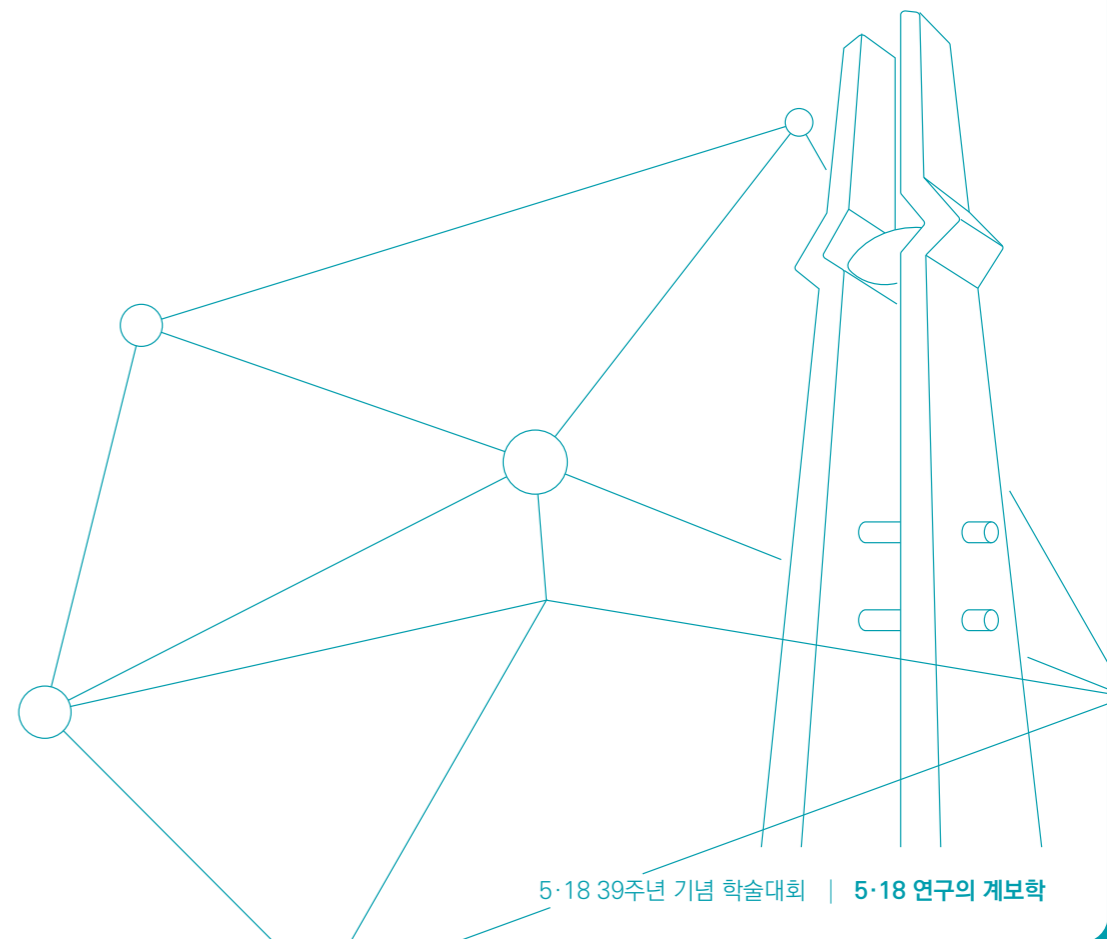
오늘 발표를 통해 발표자께서는 5·18에 대한 기억과 기록의 투쟁, 그리고 그것을 현재화하는, 아니 현재화해야만 한다고 하는 문학적 작업의 당위와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당위와 중요성에 대한 강박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각각 ‘극복’과 ‘복원’의 대상으로 규정한 목차에서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바와 같이, ‘미학주의’와 ‘운동성 및 정치성’을 배타와 상극의 이질적인 타자의 관계로 설정한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서고금의 모든 고전이 증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말의 진정한 의미에서 미학주의와 운동 및 정치성은 변증법적 지양을 통한 조화와 종합의 관계이지 상극과 배타의 관계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회 변혁에 대한 관념적 조급성과 공식주의로 인해 문학적 형상화의 과정에 소홀했던 아니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카프의 부정적인 유산과 부채 때문인지는 몰라도 한국의 문학공동체에서 그 관계가 소홀하게 다루어지거나 존중받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과잉해석의 혐의를 무릅쓰고서 드립니다. “동학혁명 이후, 식민지배와 6·25전쟁, 군부독재와 5·18을 지나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처한 죽음과 같은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식민지와 반식민지의 애매한 경계 속에서 매판적 권력자에 의해 끊임없이 생존의 위협을 받은 민중들의 삶을 몰각해서는 안 될 것 같다. 문학을 창작하던 문학에 대한 비평과 연구를 하든지 간에 말이다. 죽음으로 내몰린 민중들의 모습이 제주4·3으로, 여순10·19로 광주5·18로 반복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직시하고 공감하는 문학과 문학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발표자의 주장에서도 돌출하게 부각되는 것은 문학의 운동성과 정치성입니다. 상대적으로 미학주의의 존재는 그 흔적조차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희미해보입니다.

팔봉과 회월의 ‘붉은 지붕’과 ‘서까래 논쟁’ 이후 한국의 비평 논쟁 지형에서 솔하게 반복되어온 형식과 내용 논쟁의 연장이나 변종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제 질문의 결론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발표자께서 오늘 5·18 광주를 현재화하기 위해 제시한 과제와 관련하여 가장 바람직한 문학작품이나 문학연구가 있다면 어떤 것들을 수 있을까요? 더불어 ‘모든 문학작품은 정치 팜플렛이 될 수 있지만, 모든 정치 팜플렛이 문학은 될 수는 없다’는 명제에 대해 발표자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발표자의 고견을 기다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발표 3

5·18 민주화운동과 한국 민주주의



5·18 39주년 기념 학술대회 | 5·18 연구의 계보학

5·18 민주화운동과 한국 민주주의⁶⁸

민 희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SSK연구단 연구교수)

1. 들어가며

오늘날 5·18 민주화운동은 한국의 민주화 이행의 원천으로 거론된다. 5·18 민주화운동은 한국 정치의 탈군부화를 이끌어내는 역사적 동력이었다(김용철 2001; 김정한 2010; 최장집 2007). 또한, 국가에 대항하는 시민사회가 태동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사회 기반의 다양한 민주화운동의 부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김용철 2001; 정근식 2007). 동시에 근대적 의미의 시민 개념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길을 열었다(정상호 2007). 그 결과 지역 기반의 5·18 민주화운동은 외형상 전국화에 성공했다. 5·18 민주화운동은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었고 망월 묘역은 국립묘지가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담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고 국회는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런데 한국 정치에서 5·18 민주화운동은 여전히 정치세력 및 시민사회 내 분열의 소재로 활용된다. 북한군 개입 설 등과 같은 가짜뉴스가 유행하는가 하면 5·18 희생자를 비하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이 때 '호남'이라는 지역 코드는 정치적 혹은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불씨 역할을 한다. 사람들은 지역을 소재로 자극한다. 극우 사이트에서 몇몇 네티즌들이 5·18 희생자를 흉어로 비하하는 행태 등과 같이 말이다.

역설적이다. 5·18 민주화운동의 기반인 '호남'이 80년대 한국의 민주화 이행에 기여한 바가 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의 장애물로 인식되는 현상이 말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놀랍지 않다. 1987년 이후 한국 정치가 지역 패권주의 양상을 취해왔던 것을 상기시키면 그렇다. 그 과정에서 호남은 이중적 상황에 처해 있었다(정근식 1991). 이는 민주화의 성지이면서 동시에 지역적 고립의 특성을 드러냈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학문적 평가 역시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지역적 차원의 논의에 머물렀다(나간채 2009; 정근식 2005). 오히려 정치적으로 이용되기 십상이었다. 물론 5·18 민주화운동은 1980년

대 사회운동 및 민주주의 논의의 지평을 넓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1980년대는 사회운동이 크게 팽창한 시기였고 이 때 사회운동의 핵심 과제는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었다(조대업 2003). 덕분에 우리는 5·18 민주화운동의 원초적 사건에 대한 조명과 성찰의 기회도 얻었다(조희연·정호기 2009). 이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은 한국의 민주화 이행의 역사적 과정의 하나가 되었다(정태일 2012).

그런데 5·18 민주화운동의 기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민은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작동방식에 만족하지 못한다. 한국 민주주의는 과거와 다른 차원의 문제들로 갈등 한다. 정치 불신은 갈수록 심화되고 정치권은 공익이 아닌 사익을 위한 권력 추구에 몰두한다. 빈부 격차는 완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사회 신뢰 역시 낮아졌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이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닌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발전 동력으로서 자리매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제 5·18 민주화운동의 새로운 진로를 설계하는 일에 관심을 돌려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살펴야 하는 것은 현재 한국 정치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가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 정치에서 5·18 민주화운동 담론이 어떻게 구조화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 본 연구는 이를 '호남 정신'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호남 정신은 호남의 지역적 정체성을 의미한다. 이는 지역적 결속의 힘이다. 동시에 호남 정신은 특정한 정치적 정향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정치적 정체성(political identity)이다(최영진 2001). 특히 5·18 민주화운동이 호남의 지역적 정체성을 역사외적으로 진전시키는 계기로 작동하면서(백운선 2001) 호남 정신은 1980년대 민주화를 견인한 핵심 동인이 되었다.

그런데 지금 호남 정신은 호남 지역주의가 되었다. 이는 그 어느 때보다 선거 국면에서 더욱 자주 등장한다. 우리에게 호남 정신은 호남지역을 지지 기반으로 하는 정당 및 후보자의 선거 캠페인 전략으로 익숙하다. 선거 때만 되면 정치인들은 호남 정신을 앞세우며 광주에 집결한다. 이들은 호남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강조하면서 호남 민심을 사로잡고자 한다. 한국 정치에서 호남 정신은 정치인들의 전략적인 대상 가운데 하나가 된 셈이다.

본 연구는 호남 정신을 중심으로 5·18 민주화운동이 민주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backsliding)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논의에서 민주주의 후퇴를 다루는 시각은 민주화 이행기의 그것과 다르다. 민주화 이행기 시각은 민주주의의 명백한 붕괴에만 관심을 가진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시각에서 민주주의는 다른 시대의 다른 행위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의 콜라주(collage)로 이해된다(Bermeo 2016). 즉 민주주의는 제도와 제도의 조각들이 모여서 만들어지고 같은 방법으로 분해되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후퇴는 민주적 제도들을 통해 정당화된 형태로 나타나기 쉽고 전면적인 체제 변화를 초래하기 보다는 모호한 민주적인 제도를 산출할 가능성이 크다(Bermeo 2016).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면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후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심을 갖는다. 그 중에서 전략적인 선거 선동(manipulating elections strategically)에 초점을 맞춘다. 구체적으로 선거 국면에서 호남 기반의 정당들이 선거 캠페인 전략으로 '호남 정신'을 활용하는 양상과 그 결과로써 호남 유권자의 투표 행태를 살펴본다.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민주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 및 역할을 제고하는 것이다. 세대별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보면 젊은 세대가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5·18기념재단 2019). 호남 지역의 젊은 세대조차도 호남 정신을 생소하게 여긴다. 이러한 환경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정치인들의 전략적인 선거 선동으로 활용된다면 민주화를 이끈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 역시 후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5·18 민주화운동은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와 접점을 찾는 노력을 끊임없이 시도해야 한다. 5·18 민주화운동 연구의 방향기를 과거에서 미래로 전환해야 한다.

요컨대 본 연구는 2장에서 호남의 지역적 정체성으로서의 호남 정신에 관해 고찰한다. 3장에서는 호남 기반 정당이 5·18 민주화운동의 호남 정신을 전략적인 선거 선동의 일환으로 활용하는 양상과 유권자 반응을 살펴본다. 특히 세대별 표심이 어떻게 다른지에 주목한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광주 동남구(을) 선거구⁶⁹에 후보를 낸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에 초점을 맞춘다. 그 당시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갈라져 나와 호남에서 경쟁 구도를 형성했다. 또한 호남에서 광주 동구는 '호남정치 1번지'라는 상징성을 갖는다. 동구는

68 이 글은 5·18 39주년 기념 학술대회 발표용 원고(초안)이오니 인용을 삼가주기 바랍니다.

69 광주 동구는 20대 총선에서 남구 일부와 통합되면서 동남구(을) 선거구로 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 동남구(을)의 지역적 특성은 주로 '동구' 지역을 중심으로 설명될 것이다.

과거 전남도청 소재지가 위치했던 곳으로 행정의 중심지면서 동시에 5·18 민주화운동의 산실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분열된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서로 호남의 뿌리임을 자처하면서 광주 유권자를 동원하려는 전략을 취할 것이다. 이 가운데 광주 유권자들의 표심 역시 이러한 정치적 경험을 공유한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 사이에서 분열될 것이다. 4장에서는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에서의 5·18 민주화운동의 역할을 논의함으로써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II. 호남 정신 vs. 호남 지역주의

그간 한국 정치에서는 유독 지역적 정체성이 강하게 작용했다. 이는 선거에서 투표를 결정짓는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였다(백운선 2001; 한상진 1991). 지역적 정체성은 정치적 정향이다(최영진 1999). 이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단 구성원이 공유하는 이해와 정서의 응축인데 이것이 집단 구성원의 정치행위를 설명하는 변수로 작용한다(최영진 2001; Turner 1987). 지역적 정체성을 공유한 사람들은 동질의 정치적 이해와 동기를 갖기 쉽고 이를 준거로 자신의 정치행위의 선택을 변경시킨다(Hardin 1995). 또한, 지역적 정체성은 운명 공동체로서의 집단적 정체성이다. 이는 특정 지역의 운명을 집단 구성원 전체의 정치적 이해와 일치하여 인식한다는 것이다(최영진 1999, 144).

한국 정치에서 강한 지역적 정체성을 보여주는 곳이 바로 호남이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은 호남의 지역적 정체성이 진전 및 강화된 결정적인 계기로 언급된다(백운선 2001). 호남 지역 주민들은 5·18 민주화운동을 통해 타 지역과 구별되는 지역적 정체성을 확고히 했다(정근식 1997; 김두식 2003). 그 과정에서 지역적 정체성은 호남 지역주의라는 프레임으로 선거 등 다양한 정치과정을 통해 표출되었다(최영진 2001). 그러나 호남의 지역적 정체성의 보다 정확한 표현은 호남 정신이다. 본 연구는 호남 지역주의를 호남의 지역적 정체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표현으로 본다. 그간 호남 정신은 한국 정치 과정에서 왜곡되거나 한계를 드러내면서 호남 지역주의가 되었다.

호남 정신은 지역 기반의 5·18 민주화운동을 이해하는 대표적인 방식 중 하나이다. 호남 정신은 호남문화의 민중성과 이에 포함된 한(恨)의 정서이다(이해준 1996). 호남문화의 민중성은 광주라는 공간에서 불의에 항거하는 지역 정신이 계승된 역사와 관계가 깊다(배재창 2015). 광주는 1929년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난 곳이고 192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항일독립운동의 중심지였다(김성민 2003; 박찬승 1995). 이 때 광주 시민은 저항운동의 행위자로서 타 지역 시민은 관찰자로서 기능한다(이재의 2005, 79).

또한, 호남은 전통적으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소외 및 배제의 대상이었는데 한의 정서는 이로부터 응축되고 표출되었다. 경제적인 차원에서 호남은 경제발전에서 배제되었다. 호남은 농업지대로서 오히려 신흥공업지대에서 증대하는 노동력을 공급하는 역할에 충실했다. 이로써 호남인들은 도시의 하급 중산층이나, 빈민, 노동자 계급을(최장집 1991, 32), 반면 영남인들은 대자본, 숙련노동자, 도시자영업자 계급을 형성했다. 이는 호남인들이 사회적 혹은 심리적 차별을 받는데 영향을 미쳐 호남인들의 소외의식을 증폭시켰다. 나아가 호남을 대표하는 김대중이라는 정치인이 탄생하는 데 기여했다. 정치적으로도 호남은 박정희정권의 지역 패권적 정치 전략의 영향 아래 정치 권력으로부터 지역적 차별을 경험했다.

이렇듯 호남 의식은 5·18 민주화운동에서 광주 시민의 결집을 설명할 수 있는 변수가 된다. 5·18 민주화운동에서 광주는 국가권력의 폭력과 억압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었던 공간이자 배제의 공간이었다(최영진 2001, 337). 이는 호남 시민들에게 계층적 차이를 뛰어넘어 지역적 결집을 표출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그 결과 5·18 민주화운동에서 호남 정신은 민주화의 도덕적 동인으로 작용했다. 학자들은 한국의 민주화 이행을 가능케 한 것으로부터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부여한다. 5·18 민주화운동은 아래로부터 민주화운동을 유인하는 추동력이었고 1987년 민주화운동을 실천하는 힘의 원천이었다(김용철 2001, 250). 이러한 평가는 곧 호남 정신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

그런데 민주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에서 호남 의식은 호남 지역주의로서의 역할에 더욱 충실했다. 1987년 이후 한국 정당들은 지역적 정체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또한, 김대중을 매개로 한 호남의 집단적 결속은 더욱 강화되었다. 1987년 대선에서 호남 유권자들은 90% 이상의 결집력을 보이면서 김대중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이로써 정치적 지지기반은 지역적으로 편중되었고 광주는 호남의 집권세력에 대한 비판과 이에 따른 집권세력의 견제가 가장 강하게 표출되는 지역 중 하나가 자리매김 했다(백운선 2001, 176).

III. 호남 정신?: 호남 유권자의 선택

이 장에서는 민주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에서 호남 정신이 호남 지역주의로 활용되는 양상을 선거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5·18 민주화운동에서 호남 정신은 민주화의 동인으로 작용했다. 그런데 민주화 이후 이는 정당 및 정치인의 전략적인 선거 선동의 소재로서 호남 지역주의의 특성을 보이기 시작한다.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은 너도나도 호남 정신을 앞세운다. 본 연구는 이 같은 호남 정신의 호남 지역주의화가 민주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호남 지역주의는 대표 기제와 유권자 간의 선호 불일치의 지속을 초래하고 그 결과 유권자의 정치 무력감은 심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대 총선에서 광주 동남구(을) 선거구에 후보를 낸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어떠한 선거 캠페인 전략을 펼치고 호남 민심은 어디로 향하는지 알아본다.⁷⁰

2016년 20대 총선에서 호남은 우리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야권 분열이 바로 그것이다. 그 당시 제1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쪼개지면서 야권이 호남에서 경쟁 구도를 형성한 것이다. 이는 2015년 12월 안철수가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면서 비롯된 것으로 안철수는 천정배, 김한길, 정동영, 박지원 등 호남을 대표하는 정치인들과 함께 국민의당을 이끌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으로 바꾸고 과거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이었던 김종인을 영입하는 선거 전략으로 이에 맞대응 했다.

이와 같은 호남의 선거정치 지형의 변화는 선거 기간 내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간의 마찰을 증폭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다. 양당은 당 내부의 공천 경쟁뿐 아니라 양당 간 본선 후보 경쟁, 후보 단일화 이슈, 그리고 호남 민심을 선점하기 위한 캠페인 전략 등에서 대립 구도를 형성했다. 대표적으로 양당의 광주 서구(을) 공천 사례를 꼽을 수 있다. 국민의당은 5선 경력의 천정배 의원을, 더불어민주당은 고졸이면서 삼성전자 임원 출신인 정치 신인 양항자를 공천하였는데, 양당의 현직의원 대 정치신인의 대결구도는 20대 총선의 핫 이슈 중 하나였다. 이 같은 맥락에서 이번 야권재편의 소용돌이는 그 어느 때보다 호남 표심의 향방에 대한 귀추를 주목하게끔 했다.

선거 캠페인: 구태정치 청산 vs. 호남정신 부활

호남에서 경쟁 구도를 형성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선거캠페인 전략에서도 차별화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 메시지 내용 역시 선거 초반에서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변화된 양상을 취했다. 선거 초반에는 정치신인을 내세운 더불어민주당이 ‘구태정치 청산’을, 현직의원을 내세운 국민의당이 ‘호남정신 부활’을 강조했다.

이러한 선거캠페인 전략은 2030세대와 5060세대의 정치적 선호에도 균열을 일으켰다. ‘호남정신 부활’이라는 국민의당 메시지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실망이 큰 호남의 50대 이상의 유권자에게 제격이었다. 이들은 “야권을 재편해야 한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호남을 무시하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 “진정성 없는 문재인과 친노들을 심판해야 한다” 등과 같이 반문재인 정서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부정 감정을 강하게 드러냈다.

반면 광주와 전남지역의 젊은 유권자에게 ‘호남정신 부활’이라는 국민의당의 메시지 전략은 상대적으로 효과적이지 못했다. 광주와 전남지역의 40대 이하 연령층에서 정당 선호도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경합하는 양상을 보였다(전남일보 2016년 3월 10일자). ‘호남정신 부활’이라는 메시지 자체가 젊은이들에게 잘 흡수되지 않은 것이다. 지금의 광주 젊은이들은 문재인과 친노 세력, 국보위에 참여한 김종인, 공천학살 등과 같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들을 잘 알지 못하고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의 메시지 전략이 젊은 층의 표심을 사로잡았다. 더불어민주당은 SNS를 통한 이미지 정치를 잘 구현했는데, 국민의당의 ‘호남정신 부활’ 메시지를 ‘구태정치’로 가공해 낸 것이 바로 그것이다. 젊은 층은 ‘호남정신 부활’이라는 메시지 보다 다소 젊어진 더불어민주당의 이미지를 더욱 선호한 것이다. 선거 기간 동안 젊은 층은 “그래도 정권교체와 대안이 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뿐이다.”, “새누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수권정당이 되어야 한다” 등과 같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보다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다.

70 이 사례는 본 연구자가 작성한 20대 총선 참여관찰보고서(KBS-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6)에 소개된 것으로 여기서는 사례의 일부를 인용한 것이다.

〈표 2〉 광주 선거구별 후보 득표율 (%)

	동남구(갑)	동남구(을)	서구(갑)	서구(을)	북구(갑)	북구(을)	광산구(갑)	광산구(을)
더불어민주당	최진 29	이병훈 39.6	송갑석 34.6	양항자 31.3	정준호 22.2	이형석 34.4	이용빈 34.2	이용섭 43.3
국민의당	장병완 55.6	박주선 54.5	송기석 57.3	천정배 54.9	김경진 72.2	최경환 56.4	김동철 53	권은희 50.1

이번에는 동남구(을)의 선거결과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20대 총선에서 호남 유권자 중 2030세대는 더불어민주당을 5060세대는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경향을 보였다(오마이뉴스 2016년 4월 14일자 기사). 그런데 광주 동남구(을)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할 때 이 지역은 광주의 다른 선거구에 비해 노년층의 비중이 가장 높다.⁷¹ 동시에 동별 연령 구성을 비교해 보면 노년층에 비해 젊은층이 상대적으로 많거나 이와 반대의 특성을 보이는 지역 역시 존재한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동남구(을)의 동별 후보 득표율이 어떠한지 알아보았다.

우선 동별 2030세대와 5060세대의 분포를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산1동(38%), 지산2동(35%), 서남동(38%), 방림1동(36%), 백운1동(38%)을 제외하고 모든 동에서 5060세대의 비중이 높거나 두 세대의 비중이 대동소이하다(〈그림 2 참조〉). 두 세대의 분포 차이가 5%이상 나타나는 지역은 총장동(2030세대: 33%, 5060세대: 38%), 계림1동(2030세대 31%, 5060세대 37%), 사직동(2030세대: 30%, 5060세대: 36%) 그리고 지산1동(2030세대: 38%, 5060세대: 31%), 지산2동(2030세대: 35%, 5060세대: 30%), 서남동(2030세대: 38%, 5060세대: 33%), 백운1동(2030세대: 38%, 5060세대: 33%)이다. 이 중에서 총장동, 계림1동, 사직동은 2030세대에 비해 5060세대의 비중이 높은 지역이다. 이들 지역 대부분이 낙후된 영세상가가 지배적인데 이것이 세대 간 분포 차이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총장동과 계림1동은 도심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면서 상업 지역이 밀집되어 있다. 총장동의 경우 과거 광주상권의 중심지로서 상가 및 음식점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다. 지역경제 활동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기도 하다(광주동구 구정백서 2015, 443). 계림1동은 대인시장이 자리하고 있으며 영세상가와 재래식 주거 밀집지역으로 도시 기반시설이 낙후되어 있다(광주동구 구정백서 2015, 443). 사직동 역시 주거환경이 매우 취약한 영세 노후 밀집지역이다. 또한 동 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약21%로 남구(행정구역상) 평균 13% 보다 훨씬 많으며 광주공원 노인복지관 및 무료급식소 2개소를 이용하는 노인 인구가 1일 1,500명에 이른다(광주남구 구정백서 2015, 5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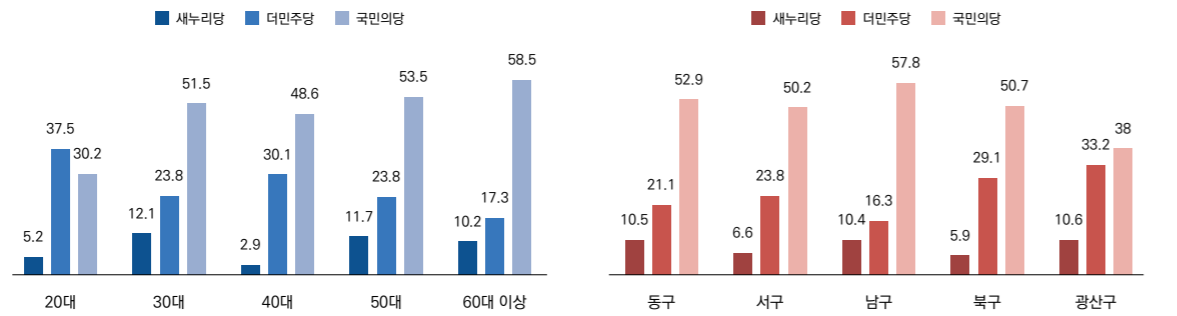
반면 지산1동, 지산2동, 서남동, 백운1동은 5060세대에 비해 2030세대의 비중이 높다. 그 이유는 첫째, 이 지역의 대부분에 교육기관, 공공기관 등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산1동과 지산2동은 법조타운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다. 법원, 검찰청이 소재하고 있어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이 다수다. 서남동은 동구청, KT 뿐만 아니라 조선대학교 및 산하 6개교와 서석초등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행정·교육의 중심지이다(광주동구 구정백서 2015, 445). 최근에는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건립과 영상복합 문화관의 준공으로 세계 문화예술인의 교류와 문화허브 역할을 꾀하고 있다(광주동구 구정백서 2015, 445). 둘째, 이 지역들은 최근까지 구도심 낙후지역이었으나 대규모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시행된 곳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젊은 층의 거주가 증가하였다. 지산1동은 2010년 6월 제주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산휴먼시아 아파트(375세대)가 들어섰다(광주동구 2015, 451). 백운1동 역시 2005년 대규모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시행되어 2011년 휴먼시아 3단지 입주를 시작으로 휴먼시아 1, 2단지와 2014년 우방아이유셀 입주로 인구가 크게 증가하였다(광주남구 구정백서 2015, 563).

이를 통해 볼 때 동남구(을)의 연령 분포는 광주의 다른 선거구에 비해 고령층이 중심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소재하거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이루어진 지역에서는 젊은 층이 보다 밀집되어 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특성은 20대 총선에서 동남구(을)의 선거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71 광주 동구는 2005년 전남도청이 전남 무안군으로 이전하면서 인구가 꾸준히 하락했다. 동구의 주민등록인구는 2013년 103,016명이었으나 2014년에는 100,786명으로 2013년에 비해 2,230명이 줄었다. 그리고 이는 광주광역시 전체 인구 1,477,780명의 6.99%에 불과하다(광주동구 구정백서 2015, 26). 반면 고령인구의 비율은 광주에서 가장 높다. 2015년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광주 인구의 9명 중 1명(11.1%)이 65세 이상의 고령인구에 해당되는데, 동구 18.8%, 남구 13.5%, 북구 11%, 서구 10.4%, 광산구 7.5%를 기록했다.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젊은층과 노년층의 이와 같은 정당 선호의 균열은 그대로 드러났다. 한백리서치 연구소가 광주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20대 총선에서 나이가 많을수록 국민의당 후보자를 더 많이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20대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더욱 선호한다(〈그림 1〉 참조). 특히 동구와 남구의 경우 다른 선거구에 비해 국민의당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참조). 이는 이 두 지역이 국민의당 지지층인 고령층 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광주광역시 연령·선거구별 정당후보 지지도(%)



* 한백리서치연구소 여론조사 결과(2016년 2월)를 토대로 연구자가 재구성
** 기타 정당 및 지지하는 정당 후보 없다 수치는 그래프에서 제외함

광주 동남구(을) 선거결과

20대 총선은 최종 투표율 58%를 기록했다. 2012년 19대 총선 투표율 54.2%보다 3.8% 높은 수치이다. 지역별 투표율을 보면 전남이 63.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세종 63.5%, 전북 62.9%, 광주 61.6% 등을 기록했다(한겨레신문 2016년 4월 13일). 이를 통해 볼 때 20대 총선에서 야권의 분열이 호남 유권자의 투표율을 증가시킨 것으로 보인다. 광주 동남구(을)은 총 127,632명 유권자 가운데 79,946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약 63%의 투표율을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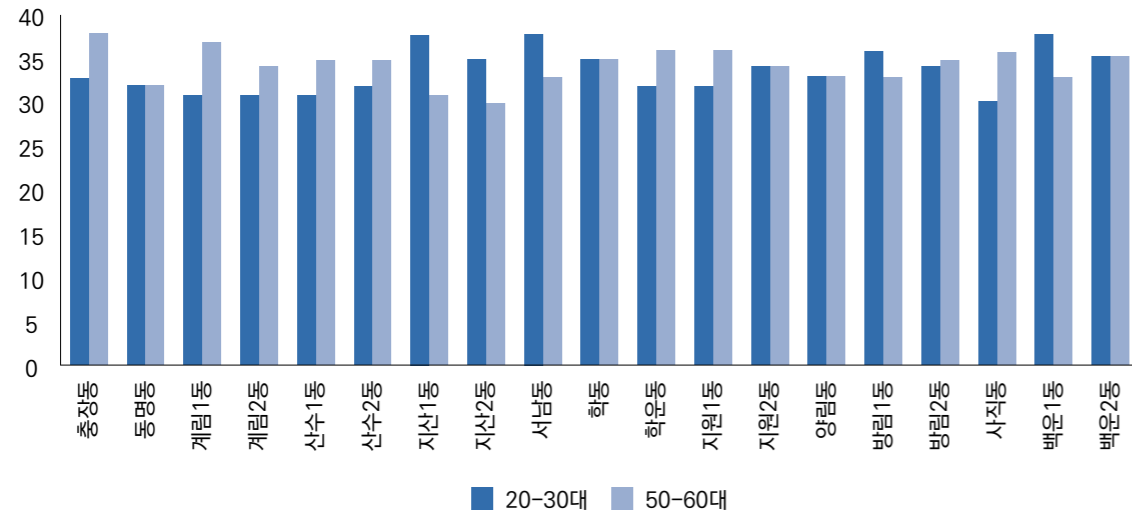
〈표 1〉 광주 선거구별 투표율 (%)

선거구	동남구(갑)	동남구(을)	서구(갑)	서구(을)	북구(갑)	북구(을)	광산구(갑)	광산구(을)
투표율	62.7	62.6	61.4	63.8	59.2	62.9	58.8	61.7

중앙일보 자료(2016/04/16)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재구성

선거 결과를 살펴보면(〈표 2〉 참조) 광주 모든 선거구에서 국민의당 후보가 당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동남구(을) 역시 국민의당 박주선 후보가 54.5%의 득표율로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후보를 여유 있게 따돌렸다. 후보 간 가장 큰 득표율 차이를 보인 선거구는 북구(갑)으로 국민의당 김경진 후보가 72.2%,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후보가 22.2%의 득표율을 얻어 무려 50%의 격차를 보여줬다. 반면 가장 근소한 차이로 당선된 후보는 광산구(을)의 국민의당 권은희 후보였다. 권은희 후보는 50.1%의 득표율로 43.3%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이용섭 후보와 약 7% 격차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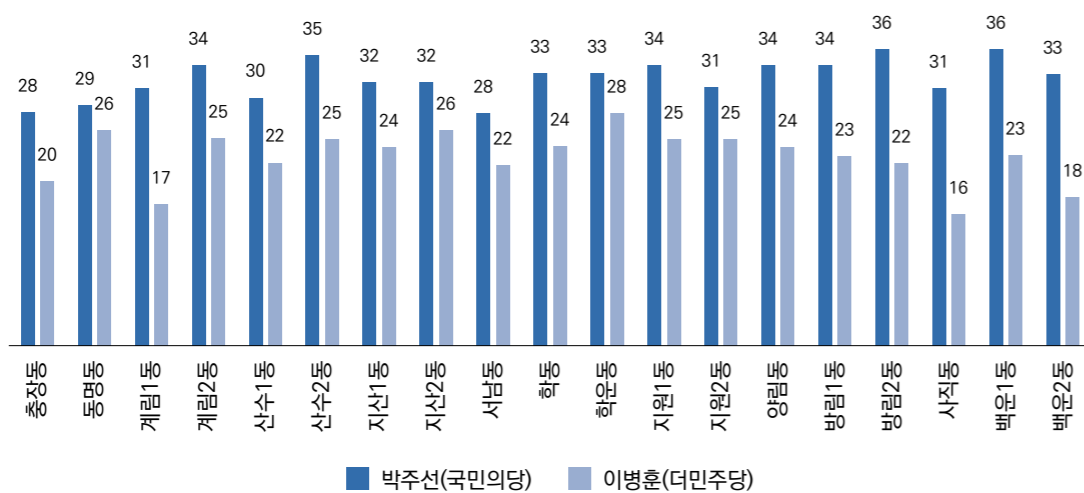
〈그림 2〉 광주 동남구(을) 연령 분포 비율: 2030세대 vs. 5060세대 (%)



*광주광역시 동구청·남구청 통계연보 참조하여 연구자가 재구성(2016년 2월 기준)

〈그림 3〉은 광주 동남구(을)의 선거 결과를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동남구(을)의 모든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후보에 비해 국민의당 박주선 후보의 득표율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60세대에 비해 2030세대가 상대적으로 많은 동의 경우 두 후보 간 격차가 다소 좁혀졌다. 이는 이 지역의 젊은층이 더불어민주당의 이병훈 후보를 지지한 덕분인 것으로 판단되는 데 지산1동, 지산2동, 서남동이 그렇다. 지산1동에서 박주선 후보는 32% 이병훈 후보는 24%의 득표율을 얻어 양자 간 득표율 차이는 8%에 그쳤다. 지산2동의 경우 박주선 후보 32%, 이병훈 후보 26%로 6%의 득표율 차이를 보였다. 서남동 역시 지산2동과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박주선 후보 28%, 이병훈 후보 22%로 양자의 득표율 차이는 6%를 기록했다. 반면 2030세대에 비해 5060세대가 상대적으로 많은 동 대부분이 두 후보 간 득표율 격차가 가장 큰 지역 중 하나로 손꼽혔다. 이는 이 지역의 노년층이 국민의당의 박주선 후보를 지지한 덕분인 것으로 판단되는 데 계림1동과 사직동이 그렇다. 계림1동의 경우 박주선 후보 31%, 이병훈 후보 17%로 14%의 득표율 차이를 보였다. 사직동은 그 격차가 더욱 컸는데, 박주선 후보 31%, 이병훈 후보 16%로 무려 15%의 득표율 격차를 기록했다. 이러한 결과는 동남구(을)의 젊은층과 노년층의 표심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동남구(을)의 젊은층은 국민의당 후보보다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을 보였고 이에 반해 노년층은 국민의당 후보를 더욱 지지하는 측면을 드러냈다.

〈그림 3〉 20대 총선 동남구(을) 동별 선거 결과(더불어민주당 vs. 국민의당)



IV. 5·18: 운동을 넘어 민주주의로

20대 총선에서 호남 표심은 국민의당에게로 돌아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남구(을)에서의 더욱 중요한 발견은 바로 세대별 유권자 표심이 다르게 표출되었다는 것이다. 젊은 층은 더불어민주당의 '구태정치 청산' 메시지를 지지했고 노년 층은 국민의당의 '호남정신 부활' 메시지를 지지했다. 노년 층은 친노 패권주의에 빠져있는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하겠다는 판단을 더욱 중요하게 여긴 것으로 보인다. 지역주의의 구도 속에서 오랫동안 소외 받는 호남인으로서의 삶을 경험한 노년층이 친노·친문에 기거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통해 소외의식을 동일하게 느낀 것이다. 이러한 복잡한 지역적 정체성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반감으로 작용하고 그들로 하여금 국민의당을 선택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반해 지금 광주의 젊은 층은 호남을 그리고 광주를 과거와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 적어도 그들은 투표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역주의 구도를 크게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본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호남의 젊은 유권자에게 국민의당의 '호남정신 부활' 메시지는 크게 매력적이지 못했다. 이들은 기성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큰데 더불어민주당의 '구태정치 청산' 메시지가 이러한 젊은 층의 마음을 보다 잘 대변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민주화 이후 우리 사회에서 호남 정신이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더욱이 호남 정신이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규정하는 하나의 지표라고 할 때 이는 5·18 민주화운동이 이해되고 있는 방식이기도 하다. 호남 기반의 정당과 정치인들은 호남 정신을 외치지만 호남의 젊은 유권자들은 호남 정신을 쉽게 공유하지 못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현상을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에서 초래될 수 있는 민주주의 후퇴의 다양한 유형 중 하나로 보았다. 전략적인 선거 선동이 그것인데, 이는 현직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선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취하는 다양한 행동들을 의미한다(Bermeo 2016). 그런데 이러한 행위는 겉으로 명백하게 사기로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행해진다.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민주적인 제도 안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이 같은 측면에서 호남 의식은 정치 권력의 전략적인 선거 선동으로 충분히 기능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러한 행태를 역전시킬 수 있는 힘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전략적 선거 선동은 이미 현직의원이 다수의 지지를 확보하거나 강화할 수 있는 조건에서 가능하기 때문이다(Bermeo 2016). 이렇게 되면 민주화 이후 호남 의식의 호남 지역주의화는 민주주의의 더딘 발전에 기여한다. 민주화 시기 호남 의식이 민주화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러한 현상은 아이러니 하다.

요컨대, 본 연구는 현재 한국 정치에서 호남 정신이 활용되는 양상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의 역할을 재고 하고자 했다. 5·18 민주화운동이 민주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에서도 여전히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민주화가 아닌 현재와 미래의 민주주의 과정에서 제 역할을 찾아야 한다. 즉 운동으로서의 5·18을 벗어나 민주주의로서의 5·18을 만드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두식. 2003. [5·18 연구] 광주항쟁, 5 월운동, 다중적 집단정체성. 민주주의와 인권, 3(1), 99-133.
- 김영정. 2009. 한국의 지역불균등: 1960-2005년. 지역사회학 11, 5-39
- 김용철. 2001. [5·18 연구] 광주항쟁과 한국정치의 민주화-탈군부정치의 역사결정적 국면의 원천으로서 광주항쟁. 민주주의와 인권, 1(1), 211-255.
- 김정환. 2010. 5·18 광주항쟁 이후 사회운동의 이데올로기 변화. 민주주의와 인권, 10(2), 161-190.
- 나간채. 2009. 5 월운동에서 국제연대의 발전과정 분석. 민주주의와 인권, 9(2), 97-127.
- 남찬섭, 김수정, 송유진, 장세훈, 최영준. 2013. 서민의 집합적 의미의 시대적 변화에 관한 탐색적 고찰. 비판사회정책 39, 44-82.

참고문헌

- 박찬승. 1995. 기획특집: 광복 50 주년 기념 학술대회; 한말, 일제시기 광주, 전남지역의 민족운동; 전남 지방의 3·1 운동과 광주학생독립운동. 역사학연구 (구 전남사학), 9, 383-406.
- 백운선. 2001. 호남의 지역지배구조 형성배경: 호남의 정치와 지방정치. 서울: 백산서당.
- 성경룡. 2015. 이종균열구조의 등장과 투표기제의 변화. 한국사회학 49(2), 193-231
- 신광영. 2009. 세대, 계급과 불평등. 경제와사회 35-60
- 윤상철. 2009. 세대정치와 정치균열: 1997년 이후 출현과 소멸의 동학. 경제와 사회 제81호, 61-88.
- 이재의. 2005. 5·18 은 왜 아직도 호남에 갇혀 있는가?: 1980 년 광주: 10 일 간의 민주공동체. 기억 과 전망, 10, 20-35.
- 이해준. 1996. 호남지역의 역사와 문화, 최현 역음, 호남사회의 이해. 서울: 풀빛.
- 정근식. 1991. [특집: 한국사회의 지배이데올로기] 한국사회의 지역지배이데올로기. 경제와사회, 10, 56-81.
- 정근식. 2005. 항쟁지역의 의례적 재현-5월 행사와 전야제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5(1), 5-33.
- 정상호. 2007. 시민과 시민권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1987 년 6 월 민주화 운동. 아세아연구, 50(4), 163-190.
- 정태일. 2012. 1980년 한국의 민주화운동과 정치구조의 변화. 한국동북아논총 63, 189-208
- 조대엽. 2003. [5·18 연구] 광주항쟁과 80 년대의 사회운동문화-이념 및 가치를 중심으로. 민주주의 와 인권, 3(1), 175-210.
- 최영진. 1999. 한국지역주의 논의의 재검토: 정치적 정체성 개념과 동기부여구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 학회보 33(2), 135-155.
- 최영진. 2001. 정체성의 정치학: 5·18과 호남지역주의. 민주주의와 인권 1(2), 325-359.
- 최장집. 2007. 한국 민주주의와 광주항쟁의 세 가지 의미. 아세아연구 50(2), 144-184.
- 한상호. 2010. 지역사회의 경제적 조건이 계급별 투표에 미치는 영향: 2010년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서 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Bermeo. N. 2016. On democratic backsliding. Journal of Democracy, 27(1), 5-19.
- Hardin. R. 1995. On for all: The logic of group conflic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Turner. John C. 1987. Rediscovering the social group: A self categorization theory. New York: Basil Blackwell.
- 광주광역시 남구. 2015. 「광주광역시 남구 구정백서」
- 광주광역시 동구. 2015. 「광주광역시 동구 구정백서」
- 5·18기념재단. 2019. 2019 5·18 인식조사 일반국민 결과보고서
- 광주광역시 남구청 홈페이지. 통계연보. <http://www.namgu.gwangju.kr/>
- 광주광역시 동구청 홈페이지. 통계연보. <http://www.donggu.kr/main/main.php>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선거정보시스템. <http://info.nec.go.kr/>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한백리서치연구소 여론조사 결과) <https://www.nesdc.go.kr/portal/main.do>

- 오마이뉴스. 2016년 4월 14일자 기사
- 전남일보. 2016년 3월 10일자 기사
- 중앙일보. 2016년 3월 21일자 기사
- 중앙일보. 2016년 4월 16일자 기사
- 한겨레신문. 2016년 1월 27일자 기사
- 한겨레신문. 2016년 2월 2일자 기사
- 한겨레신문. 2016년 4월 13일 기사
- 한겨레신문. 2016년 4월 14일 기사

「5·18 민주화운동과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토론문

정재관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첫째, '호남 정신'의 기원과 내용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이러한 호남 정신이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결정적 국면(critical juncture)마다 어떻게 발현되어 왔는지를 분석하는 통시적 연구 방향이다. 이를 위해서는 5·18민주화 운동 당시 독재와 국가폭력에 의롭게 저항했던 시민 정신의 기원과 이의 변화를 추적·관찰하기 위한 여료조사나 담론 분석용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1980년 이후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중요국면마다 '호남 정신'이 어떻게 발현되어 왔는지 파악하는 '미시적 자료에 기반한 통시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5·18민주화 운동에 관한 국제적 비교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향을 제안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국가폭력과 분쟁 관련 정치학 연구 분야의 개념에서 보자면, 5·18민주화 운동은 국가에 의한 '일방적 폭력(one-sided violence)'에 해당하는 하나의 사례이다. 따라서 2차대전 이후 전 세계에서 발생한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일방적 폭력 혹은 학살의 사례들과 5·18민주화 운동에 대한 비교 연구는 해당 분야에서 축적되어 온 개념적·이론적 성과들을 바탕으로 5·18민주화 운동 연구가 관련 분야의 학문 발전에 기여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5·18민주화 운동을 단순히 1980년 광주에서 일어난 하나의 독특한 사례로 역사 속에 묻히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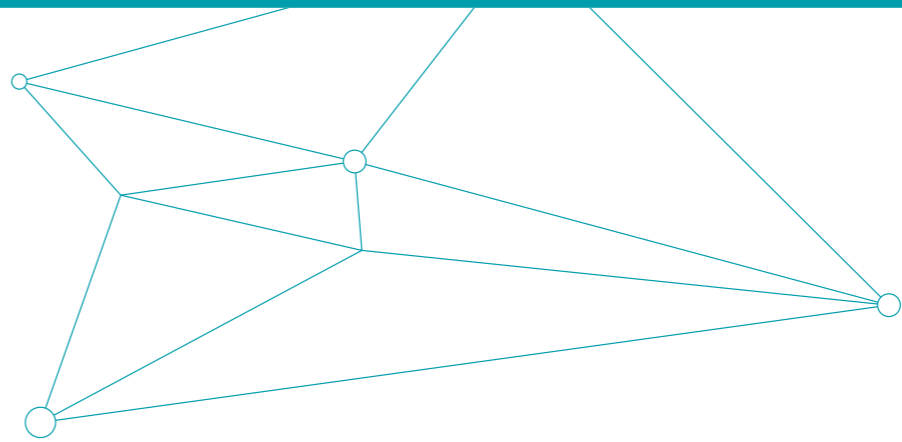
민희 박사의 논문은 5·18민주화 운동과 한국 민주주의 그리고 5·18민주화 운동에 관한 정치학 연구와 관련해 다음 두 가지 질문을 던지게 한다. 첫째, '호남 정신'은 무엇인가? 둘째, 5·18민주화 운동에 관한 정치학적 연구는 향후 어떤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하나?

우선, '호남 정신'은 무엇인가? 호남 정신은 5·18민주화 운동과 어떻게 연결되나? 또한, 호남 정신은 호남 지역주의와 어떤 관계인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하여 민희 박사는 호남 정신이 5·18민주화 운동 이전에 존재한 무엇이자 민주화 이후 호남 지역주의로 변화했기에 한국 민주주의 퇴행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최소한 두 가지 지점에서 학술적 논쟁을 불러올 수 있는 주장이다.

첫째, '호남 정신'의 내용이 무엇인지 규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호남 정신'이 언제부터 어떤 맥락에서 발생한 것인지 밝히지 않은 채, 호남 정신이 5·18 당시에는 민주화의 동인으로 작동했다가 민주화 이후 지역주의로 퇴화해 온 것처럼 묘사했다. 이러한 기술에 의존한다면, 5·18민주화 운동 당시 독재와 국가폭력에 저항했던 광주 시민들의 정신과 시민의식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의아하게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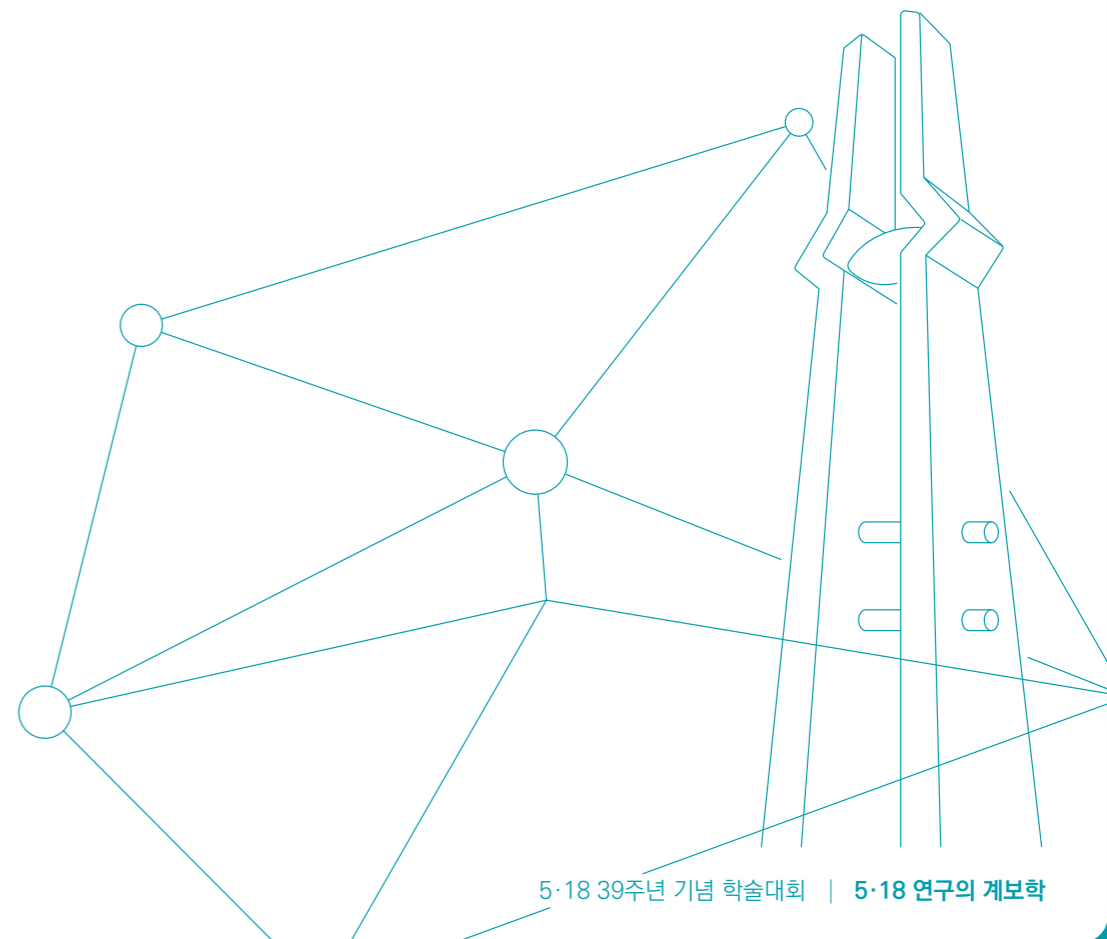
둘째, 어떤 내용을 담고 있던 '호남 정신'이 민주화 이후 호남 지역주의로 퇴화되어 온 것이 사실이라면,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지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설명 없이, 20대 총선 광주 동남구(을) 지역구의 사례만을 가지고 호남 지역주의가 2016년 광주에서 높은 정치적 지지를 받던 주장과 담론이며 이러한 경향이 한국 민주주의 후퇴와 연결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도한 일반화와 논리적 비약으로 비판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5·18민주화 운동에 관한 정치학적 연구는 향후 어떤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하나? 민희 박사의 논문이 던진 질문과 영감을 바탕으로 최소한 두 가지 방향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발표 4

‘5·18 광장’의 여성과 ‘애국 시민’의 경계



‘5·18 광주’의 여성과 ‘애국 시민’의 경계

김영희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들어가며
2. ‘5·18 광주’과 ‘애국가’
3. ‘애국 시민’의 외부
4. 연대를 향한 청취의 장소와 당사자성의 확장
5. 나오며

1. 들어가며

언젠가 ‘국가폭력’ 관련 학술대회에서 누군가 민주적인 정권이 들어선 시기에도 국가폭력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를 질문한 적이 있다. 어느 정권이 얼마나 민주적인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누가 어떻게 세울 것이며 이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별개로 이 질문은 ‘국가폭력’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를 둘러싼 쟁점을 드러낸다.

오늘날 한국에서 그 누구도 1993년 3월 이후 ‘국가폭력’이 사라졌다고 말하지 못하지만 의문사 및 과거사 진상 규명의 모든 초점은 정확하게 1993년 2월을 가리킨다. 민주화유공자 심의 과정에서도 가장 뚜렷한 기준 가운데 하나는 1993년 2월이다. 1993년 2월은 김영삼 문민정부가 들어선 달이다. 김영삼 정권 시기 공권력이 개입한 숱한 폭력들을 일일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김영삼 전대통령의 문민정부 시기 국가폭력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 그렇다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어떠했을까? 이 두 정권 시기에는 사라졌던 국가폭력이 이 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 들어서 다시 나타난 것일까?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 시기에는 국가폭력의 가능성이 없다고 말해도 좋은 것일까?

국가폭력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에는 근대적인 의미의 국가가 폭력의 초석 위에 세워졌다는 인식⁷²이 존재한다. 그러나 근대 국가의 발생론적 근원을 탐색하는 질문으로 회귀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다. ‘국가폭력’은 국가적 시스템을 통해 동원 가능한 공권력에 의한 물리적 폭력만을 가리키는 것일까? 2014년 세월호 사건이 국가폭력으로 이야기될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2016년 블랙리스트 사건은 국가폭력일까, 아닐까? 그렇다면 ‘5·18’을 국가폭력의 사건으로 읽을 때 ‘오월 광주의 국가폭력’은 1980년 5월 광주에서 자행되었던 물리적 폭력에 한정된 표상인 것일까?

김동춘은 ‘국가폭력’이 물리적이고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폭력 외에 비가시적이고 간접적이고 상징적인 폭력을 포괄한다고 말한다. 물리적 폭력만이 아니라 ‘국가의 공식 정책과 방침, 제도와 법, 이데올로기에 의해’ 자행되거나 정당화되는 폭력이 모두 ‘국가폭력’일 수 있다는 것이다.(김동춘, 2013) 따라서 군대나 경찰에 의해 자행되는 물리적 폭력 외에도 사법 제도나 행정 권력, 언론과 교육, 각종 상징 체계와 사회의 헤게모니 기제들에 의한 다양하고 다층적인 폭력이 모두 ‘국가폭력’의 맥락에서 재해석될 수 있다.⁷³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국가폭력은 국가 공권력에 의한 물리적 폭력만이 아니라 국가적 시스템을 통해 자행되고 동시에 정당화되는 모든 폭력을 가리키는 말로 정의되어야 한다. 국가폭력이 이렇게 정의될 때 1980년 5월 광주에서 일어난 국가폭력의 사건은 그 해 5월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성폭력’을 증언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오늘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⁷⁴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성폭력을 말할 수 없게 만들었던 것들 또한 국가적인 시스템을 통해 생산되거나 지속(재생산)되어온 것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이 시점에서 ‘5·18’을 국가폭력으로 재사유하는 일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왜냐하면 1980년 5월에 광주에서 시민들을 학살한 것은 국가의 징집 명령에 따라 군대에 가서 총을 들고 명령에 따라야 했던 군인들이었으며, 오늘날까지 5·18 관련 정보들이 온전히 모두 공개되지 못하는 까닭 역시 국가기밀에 관한 법령에 근거한다. 지난 4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이른바 ‘민주적인 성격’의 정권이 들어서기도 했고 5·18이 교과서에 민주화운동으로 등재되는 일도 있었지만, 지금까지도 시민들을 향한 발표 명령이 어떤 과정을 거쳐 누구의 책임 하에 이루어진 것인지 알지 못한다. 폭력을 자행한 것도, 이후 폭력의 기억을 왜곡한 것은 물론 기억을 봉쇄하고 말할 수 없게 한 것도 모두 ‘국가’였다. 행방불명자를 포함하여 5·18과의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한 다수의 ‘이름없는(이름이 있지만)’ 생존자들은 여전히 자신이 경험했던 폭력을 스스로의 입과 상처받은 몸으로 반복해서 증언해야 한다. 40년이 가까운 지금에 이르러서야 자신이 경험한 폭력을 처음으로 발언하노라는 말로 이제 막 증언을 시작한 이들이 있고, 40년이 지나 가도록 여전히 침묵하며 말문을 열지 못한 이들도 있다.

어떤 ‘광장’에서는 5·18 당시 광주에 있었던 시민들 다수가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이었다며 그 입증 자료를 내세우고, 이를 반박하기 위해서 다시 ‘생존자’들이 사진 속 그 얼굴이 바로 나라며 다시 ‘광주 시민은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이 아니었다’는 말을 39년째 되풀이하는 장면을 오늘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광장’에서 저항했고 ‘광장’에서 피 흘렸고 ‘광장’에서 자기 생의 중요한 한 부분을 잃어버려야 했던 사람들, 혹은 ‘광장’을 통해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했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고통스러운 기억을 헤집어 까발려 놓으라는 사회의 요구 앞에 다시 무기력하게 스스로의 상처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응답하고 있다. 이들은 여전히 예단된 편견과 선이해를 전제로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내며 ‘너는 누구냐’고 묻거나 ‘네가 그날 광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라’는 질문이나 요구가 부당한 것이라고 말하지 못한다. 이런 질문과 요구 자체가 여전히 ‘지속되는’ 폭력이며, 이 질문과 요구를 정당화하는 사회적 기제가 곧 국가폭력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못하는 것이다. 5·18은 어떤 면으로나 1980년에 끝난 것이 아니라 그날 이후 지금까지 지속되는 국가폭력의 사건이자 저항의 장면이다.

72 근대국가가 태생적으로 제도화된 폭력의 기제들을 시스템 내부에 갖추고 있다는 관점에서 더 나아가 국가의 발생 자체가 이와 같은 초석적 폭력에 기반한 것으로 이야기되기도 한다. 또한 국가의 경계가 지속적으로 ‘비상사태’(‘예외상태’: 아감벤, 2009)를 설정하고 이를 외부로 내모는 폭력에 기초하고 있으며, 국가의 주요 상징체계와 헤게모니 도구들이 이와 같은 폭력을 자연화하거나 정당화하는 기제로 활용되어왔음이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제기되기도 하였다. ‘5·18’ 또한 수십 년 동안 국가 혼란과 전복을 야기하는 세력에 의한 ‘비상사태’에 직면하여 불가피하게 국가가 정당한 권력을 행사한 ‘예외상태’로 기술되어왔다.

73 김동춘은 불공정한 사회적 장치들, 파시즘이나 권위주의 같은 지배체제 하의 문화적 장치들, 고도의 상징 체계를 활용한 구조적 폭력(structural violence)들을 국가폭력의 핵심 기제로 설명하기도 한다(김동춘, 2013).

74 물론 시간과 공간을 동질화하여 1980년 5월 광주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에서 벌어진 5·18 관련 장면들을 모두 하나의 ‘국가폭력’으로 읽으려 하는 것은 아니다. 시기에 따라, 층위에 따라, 사회역사적 맥락에 따라 ‘국가폭력’이 드러나거나 작동하는 방식은 모두 다르게 파악되어야 한다. 다만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5·18’에 관한 국가폭력이 1980년 5월에 끝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나는 지금 아프다’는 말조차 국가 시스템이 허용된 범위 안에서, 국가가 승인한 담론장에서 그 담론장의 규범과 관습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 5·18이 국가가 기념하고 애도하는 사건이 된 이후에도, 아니 국가기념일이 된 이후에 더욱 말할 수 없게 된 것들은 무엇일까? 국가가 허용하고 승인한 경험과 기억, 혹은 고통만이 폭력의 증거이고, 국가적 시스템을 통해 입증할 수 없는 것들은 폭력이 될 수 없다는 ‘국가’의 공식적 발언들을 우리는 언제까지 묵수해야 하는 것일까?

40년 가까운 시간이 흘러간 5·18 광장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목격’한 것은 국가가 폭력을 자행하고 국가가 이 폭력을 은폐하고 정당화했다는 사실, 그리고 국가가 왜곡한 기억들을 국가가 바로잡을 터이니 나머지 기억들은 이제 더이상 거론하지 말라고 말하는 현실,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광장에 있었는지 그 참여와 피해 정도에 따라 국가가 갈라서 정해줄 터이니 국가를 상대로 이를 입증해 보라는 국가의 요구, 국가폭력을 자행하고 은폐했던 시스템 안에서 국가가 정한 기준과 방식에 따라 폭력의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현실 등이다.

그 결과 죽은 자들의 안식이 어느 묘지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둘러싸고, 어떤 장소가 5·18을 사회적으로 기억하기에 더 적합하고 적합하지 않은지를 둘러싸고, 5·18의 기억을 국가적 기념과 공식화된 역사로 등재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억이 선발되고 또 어떤 기억이 누락되어야 하는지를 둘러싸고, 진상규명보다는 피해보상을 앞세우며 누구의 피해와 누구의 공이 더 크고 작은지를 둘러싸고, 5·18 관련 국가폭력으로 인해 가장 고통받고 배제되었던 이들이 수십 년간 각자의 상처를 보듬은 채 국가가 아닌 서로를 향한 날을 세우며 또다른 싸움을 전개해왔다.⁷⁵ 국가폭력의 기억과 경험을 안은 이들이 국가가 아닌 서로를 향해 책임을 묻게 하는 것, 어쩌면 이것이 가장 전형적인 국가폭력의 숨겨진 방식인지 모른다. 이와 같은 국가폭력은 적극적으로 고발되거나 비판받지 않은 채 수면 아래 가라앉아 지속되는 방식으로 다양한 층위에서 확대재생산된다.

5·18은 국가폭력의 기억과 폭력에 대한 애도를 다시 국가가 독점하고 전유할 때 어떤 문제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 가운데 하나다. 국가기념식에 국가폭력의 기억과 상흔을 품은 이들을 초대해 놓고 그들이 부르고자 하는 노래를 부를 수 없게 하거나, 피해자로 등록된 사람들에게 대한 보상을 내세움으로써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의 당사자성을 지워버리거나, 교과서에 올려 놓고 화석화된 사건, 혹은 완료된 사건으로 만들거나, 여전히 ‘오월 광주의 광장에서 있던 네가 누구냐’는 질문이 얼마나 폭력적인지 성찰하지 않으면서 되풀이해서 같은 질문을 던지거나, 폭력에 맞서 저항했던 이들을 ‘피해자’와 ‘유공자’로만 묶어 두려 하거나, 국가가 승인한 ‘기억’과 국가가 정한 ‘장소’에서만 애도를 허용하거나 하는 장면들에서 우리는 5·18을 국가폭력으로 읽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

‘5·18’을 국가폭력으로 재사유한다는 것은 5·18에 대한 기억과 애도를 국가의 경계 안에서 수행해야 한다는 모든 주장, 혹은 그것을 당연시하는 모든 태도들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관점에 따라 기억과 애도의 장소를 재배치하면서 5·18 광장의 담론장 자체를 비판적으로 재구하려 할 때 우리는 국가라는 경계를 벗어난 기억과 애도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 질문하게 된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 이르기까지 5·18 당시 저항의 주체로 참여했던 여성들의 목소리를 새롭게 듣게 된 것, 그리고 당시 발생했던 성적 폭력에 대한 고발을 청취하게 된 것은 국가적 애도의 장소나 국가적 기념의 담론장에서 시작된 일이 아니었다. 참으로 공교롭게도 그것은 미투(me too) 운동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 가운데 하나였다. 젠더정치 영역에서 발생한 새로운 저항운동의 흐름이 5·18 기억과 애도의 새로운 장을 열어젖힌 것이다.

이 글은 ‘5·18 광장⁷⁶의 여성’을 중심으로 5·18의 사회적 기억과 애도를 ‘국가’의 경계 안에서 수행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탐색하고 국가 경계를 벗어난 흐름과 만났을 때 기억과 애도의 지형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조심스럽게 살펴보고자 한다. 이것은 그동안 5·18 관련 담론의 장에서 ‘여성’이 어떻게 배제되거나 타자화되었는지 살펴보는 계기

75 국가 공식 기념식에서 누군가의 이름이 불릴 때 또다른 사람들은 ‘왜 저 사람은 5·18 폭력의 경험자이자 광장의 주역으로 호명되는데 나는 호명받지 못하는가’를 질문하게 되는 현실, 그것이 오늘 5·18의 현주소 가운데 하나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국가폭력이 만들어낸 효과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지워나가고 있다.

76 여기서 ‘5·18 광장’은 1980년 5월 광주 전남도청 앞 광장이나 시민들의 행진이 있었던 거리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5·18 광장’은 1980년 이후 지금까지 5·18 관련 담론이 수행되는 정치적 장소인 동시에 사회적 기억과 애도가 수행되는 장소이다. 또한 이 광장은 국가적 시스템의 안팎, 혹은 공식/비공식 경계의 안팎을 가로지르고 이들 영역이 교차하는 공간에서 유동적으로 구성되고 작동하는 장소라고 할 수 있다.

가 되는 동시에 ‘대동세상’의 신화적 이념 속에서 ‘여성’과 마찬가지로 배제되거나 주변부화되었던 존재들을 소환하는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억압된 목소리들이 국가폭력을 뚫고 나올 수 있도록 일으켜세우는 것은 무엇인가, 다시 말해 어떤 사회적 기억과 애도가 이와 같은 파열을 가능하게 하는가를 질문하고 모색하기 위해, 그리고 국가적 기념과 애도의 경화된 표막을 뚫고 나온 목소리들을 어떤 자제로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탐색하기 위해 이 글은 시작되었다.

2. ‘5·18 광장’과 ‘애국가’

“그 과정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었던 한 가지 일은, 입관을 마친 뒤 약식으로 치르는 짧은 추도식에서 유족들이 애국가를 부른다는 것이었다. 관 위에 태극기를 반듯이 펴고 친친 끊으로 묶어놓는 것도 이상했다. 군인들이 죽인 사람들에게 왜 애국가를 불러주는 걸까. 왜 태극기로 관을 감싸는 걸까. 마치 나라가 그들을 죽인 게 아니라는 듯이.

조심스럽게 네가 물었을 때, 은숙 누나가 동그란 눈을 더 크게 뜨며 대답했다.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잖아, 권력을 잡으려고. 너도 봤을 거 아냐. 한낮에 사람들을 때리고 찌르고. 그래도 안 되니까 총을 쏘잖아. 그렇게 하라고 그들이 명령한 거야. 그 사람들을 어떻게 나라라고 부를 수 있어.’

전혀 다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들은 것처럼 너는 혼란스러웠다. -중략- 호노킵 사이로 돌립노래처럼 애국가가 불려지는 동안, 악절과 악절들이 부딪치며 생기는 미묘한 불협화음에 너는 숨죽여 귀를 기울였다. 그렇게 하면 나라란 게 무엇인지 이해해낼 수 있을 것처럼.”(한강, 2014, 17~18쪽)

소설 <소년이 온다>의 한 장면 속에서 시신을 수습하는 일을 하던 소년이 질문한 것은 명백히 ‘국가’였다. ‘은숙 누나’는 당시 어린인 광주 시민들이 가졌을 법한 ‘국가’에 대한 관념을 답으로 들려준다. 그것은 군인들이 시민들을 향해 총을 쏘는 ‘나라’는 ‘나라’가 아니거나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념의 이면에는 시민들이 지키고 있는 것이 진정한 ‘나라’이며 ‘나라 아닌 나라’의 폭력에 저항하는 시민이야말로 진정한 ‘나라의 주인이자 수호자’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답변에도 소년은 자신이 느낀 모순과 이질감을 해소하지 못한다. 소년에게 이 모순은 납득해야 하는 무언가로 느껴지며 이로 인해 소년은 모순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럴수록 소년의 귀에 들리는 것은 ‘불협화음’이다.

정유하(2017)는 5·18 당시 광장에서 불린 노래를 분석하면서 5월 16일 저녁 햇불대행진에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출라송’, ‘아침이슬’, ‘투사의 노래’ 등을 부른 반면 5월 18일 이후 시민들이 광장에 참여하면서 ‘한국인이라면 알 수 있는 노래와 쉽게 배울 수 있는 노래’만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기술한 바 있다.(정유하, 2017, 93쪽) 이때 불린 노래가 ‘애국가’, ‘봉선화’, ‘우리의 소원은 통일’ 등인데 가장 많이 불린 것은 ‘애국가’였다. 또 시민군들이 부른 노래 가운데에는 ‘전우야 잘가라’, ‘진짜 사나이’, ‘예비군가’ 등의 군가도 많았다. 광주 시민들이 ‘봉선화’를 즐겨 부른 것에 대해 정유하는, 당시 시민들의 증언을 참조하여 국가로부터 소외된 심정을 나라를 빼앗긴 설움에 빚대 표현한 것이라고 기술하였다.(정유하, 2017, 105쪽)

정유하는 ‘5·18 공간에서 <애국가>의 아이러니는 지독하다’고 표현하였다.(정유하, 2017, 94쪽) 시민들에게는 광주를 지키는 것이 애국이었기에 시민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애국가’가 불렸는데, 바로 그런 그들을 향해 정복 군인이 총을 발포하였기 때문이다.⁷⁷ 그는 시민결기대회에서 사회를 봤던 김태종씨의 인터뷰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5·18 당시 시민들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군대가 시민들에게 인간의 본성을 깨트리는 야수적인 만행을 저지르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더구나 집단 발표까지 합니다. 그랬을 때 시민들은 ‘이럴 수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군대가 시민한테 총을 쏘다니! 이걸 그들만의 나라인가? 아니야. 이곳은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우리들의 나라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너희들만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나라’라는 생각이 그 많은 ‘태극기와 <애국가>’를 불러낸 것 같습니다.”(정유하, 2017, 96쪽)

77 시민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도청 앞 광장에 모여들어 슬픔과 울분 속에 ‘아리랑’을 부르는 장면이 여러 사람들의 기억에 깊이 남아 있기도 하다.(정유하, 2017, 114쪽)

그러나 5·18 광장의 매커니즘은 시민들 스스로에게 ‘당신들의 정체는 무엇인가’를 폭력적으로 묻고 어떤 방식으로든 지 이 질문에 시민들 스스로 대답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 질문의 핵심에는 ‘당신들이 북한군과 무관하다는 증거가 있는가’, ‘당신들이 국가반란을 도모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는가’라는 또다른 질문들이 내포되어 있다. 그리고 ‘네가 누구인지 나는 안다’는 전제 위에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증거를 대라’는 방식으로 반복해서 질문을 던지고 이를 질문 받는 자 스스로 입증하게 만드는 이 폭력적인 정체성의 정치 전략은 지금까지도 반복되고 있다.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광주 시민들은 1980년 5월이나, 심지어 4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국 사회로부터 동일한 질문의 폭력 속에 놓여 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은 지속적으로 스스로를 ‘애국’의 주체로 규명하려 하였다. 정복 군인들을 ‘반란군’으로 규정하고, 전두환을 비롯한 정치 군인들을 ‘국가 반란 세력’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스스로를 ‘진정으로 나라를 바르게 일으켜 세우고 지키는 주체’들로 의미화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체화는 앞서 언급한 정체성의 정치가 만들어 낸 폭력적 담론 구조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었고 이 때문에 정체를 묻는 무언의 질문 속에서 광주 시민들은 끊임없이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것’, 다시 말해서 ‘북한군과 연계된 세력’이나 ‘무질서와 사회 혼란을 획책하는 국가 반란 세력’이 아님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정체화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광주 시민들이 표명한 ‘애국’의 의미 안에는 ‘반공’과 ‘반북’, 그리고 ‘국가를 향한’, ‘올바르고 정의로운 국가를 향한 총정’이 깃들지 않을 수 없었다.

광주 시민들을 복귀와 연관된 폭도나 소요 세력으로 선규정한 후 ‘너의 정체는 무엇인가’를 반복해서 묻는 질문의 구조는 1980년 5월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5·18 광장의 담론장에서 집요하게 따리를 들고 있다. 이 질문은 애초에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응답을 통해서만 자기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들을 향해 있으며 질문자의 의도와 기획을 넘어서는 답변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출발점부터 폭력의 구조 안에 있다. 질문을 받는 순간 답변자는 실질적인 공포와 불안 속에서 ‘내가 무엇이다’가 아니라 ‘내가 당신이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자신의 전존재를 걸어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질문자의 기획을 벗어난 답, 다시 말해 질문의 폭력적 구조를 벗어난 방식으로 자신을 설명할 길은 없다.

영화 <김군>(강상우, 2018)에 등장하는 5·18 참여자 가운데 한 명은 5·18 광장의 시민들이 북한 괴뢰군과 무관한 존재라는 사실을 왜 입증해야 하나고 감독에게 되묻는다. 그는 그런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고 날선 눈빛으로 대답한다. 그런 질문에 답변하려는 순간 그 질문이 구조화하고 있는 폭력에 휘말려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는 정확히 통찰하고 있는 것이다. 이 영화는 사진을 중심으로 1980년 광주에 있었던 시민군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북한 고위직에 있거나 북한군인 사람들의 이미지와 일대일로 대응시켜 5·18 항쟁이 결국 ‘북괴 공작’의 산물임을 주장하는 이들의 논리를 되짚어 이들의 주장이 허구일 수밖에 없음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화는 5·18 당시 시민군이었던 사람들, 오월 광주의 광장에 섰던 사람들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영화 초반부 카메라의 시선과 질문은 ‘북괴 공작’을 주장하는 이들의 관점과 방법을 그대로 쫓아간다. 다양한 기술을 동원하여 사진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생존자들의 증언’을 ‘탐문’하여 ‘김군’의 정체는 ‘북한군’일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던 영화는 영화 중반 이후 다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다. 영화는 인터뷰이들의 발언을 통해 이와 같은 질문이 그 자체로 인터뷰이들에게 폭력이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촉구하거나 요청하는 것 역시 이와 같은 폭력에 동참하는 일일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5·18 광장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내려 했던 사람들의 말을 어떤 자세로 들으려 했는가 하는, 지난 시절 청취의 역사에 대한 성찰로 이어진다. 정반대 방향의 다른 의도를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5·18 항쟁이 ‘북괴 공작’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우리들 역시 끊임없이 당신이 누구인지 묻고, 당신이 광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 달라 요청하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국가가 아닌 폭력의 피해 당사자들에게 탐문과 진술 요청을 계속해왔기 때문이다.

5·18 당시 광주에서 항쟁에 참여했던 이들에게 ‘광장에 선 당신은 누구였으며 그것을 당신은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그 자체로 트라우마를 환기하는 폭력이 된다. 상무대 등의 공간에서 직접적인 폭력을 당하면서 이와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들었을 뿐 아니라, 고문에 못 이겨 동의할 수 없는 진술서에 서명을 한 기억이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1980년 5월 이후 지금까지 이들을 고립시킨 담론장의 폭력이, 그 폭력의 역사가 이들의 기억 속에 존재하

기 때문이다. 1980년 5월 전국의 신문들은 5월 18일 이후에도 광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일체 보도하지 않다가 20일 이후에야 ‘광주 사태’ 혹은 ‘광주 소요’ 등으로 보도를 시작했는데(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 2010, 308~487쪽) 정부 공식 문건이나 이 문건의 지침을 그대로 받아쓴 언론의 보도를 통해 항쟁에 나선 이들은 ‘무장폭도’로 호명되었다.(정상용/유시민, 1990, 168쪽)

광주에 대한 언론보도가 본격화된 것은 5월 20일 이후였는데 24일 무렵부터는 서울역에서 광주 시위를 선동하기 위해 잠입한 남파간첩을 검거했다(서울신문, 1980년 5월 24일자)는 등의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다.(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 2010, 308~487쪽) 25일과 26일 이후에는 경향신문 등을 비롯하여 주요 언론사들이 일제히 복귀의 대남책동을 비판하는 기사와 사설이 보도되기 시작했고, 광주에서의 갈등이 무기를 든 시민과 이를 진정시키려는 군인들 사이의 싸움으로 묘사되면서 관련 사진들이 대거 등장하는 동시에 ‘북괴의 책동’을 암시하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 2010, 426~489쪽) 그리고 이와 같은 흐름은 1980년 내내 지속되었으며 전두환, 노태우가 구속이 되고 5·18이 국가 공식 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도 한국 사회 담론장 내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당신이 누구이며 이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아온 이들은 이와 같은 상징 폭력의 역사를 경험해온 이들이며 이런 경험의 기억들은 고스란히 이들에게 트라우마로 남아 있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을 고려할 때 5·18 광장에 등장했던 ‘애국’의 표상은 다층적으로 읽어낼 필요가 있다. 특히 5·18을 ‘국가폭력’의 관점에서 조망할 때 이 ‘애국’의 문제는 여전히 어떤 ‘불협화음’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 5·18 관련 사진 속의 시민군 차량에는 모두 태극기가 달려 있으며 시민들의 시신을 덮은 것 또한 태극기였다. 도청 앞 분수대의 한가운데 구심점에 펼쳐진 것도 대형 태극기였고(나경택 촬영, 1980년 5월 15일 도청 앞 민주화대성회), 광주 시민들에게 배포된 유인물 맨 첫줄에 적시된 호명의 대상 역시 ‘광주 애국 시민’이었다.(5·18민주화운동기록관, 2017, 14쪽, 22쪽) 당시 광장에 울려 퍼졌던 다수의 구호와 성명서 및 유인물 문구 속에서도 이런 흔적을 다수 발견할 수 있다.

대한민국 만세! 민주주의 만세!
 전남 애국 청년들이여 총궐기하라.
 전남 애국 근로자들이여 총궐기하라.
 전남 애국 농민들이여 총궐기하라.
 삼천만 애국 동포여. 모두 일어나라.
 애국 시민이여. 애국 근로자여. 애국 농민이여.
 광주 애국 시민 여러분. 민주 쟁취의 그날까지 무장을 더욱 강화합시다.
 김일성은 순수한 광주의거를 옹호하지 말라.
 삼천만의 동포들이 정의의 칼을 들라.
 친애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친애하는 애국 국민이여. 3천 5백만 동포여.
 3천 5백만 애국 동포여.
 계엄군은 가짜 애국 광주 시민 진짜 애국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 (전남사회문제연구소 편, 1988, 110~143쪽)
 호소문: 광주 애국시민 여러분(5월 19일 광주시민민주투쟁회)
 구국 과도정부를 민주인사들로 구성하라.
 애국시민, 애국근로자, 애국농민, 애국3청년, 애국동포를 향한 호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1987, 142~200쪽)
 권력 안보 배격하고 총력 안보 지지한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 2017, 24쪽)

최정운은 이에 대해 광주시민들이 ‘적에 대항하는 우리의 모습을 애국시민, 민족, 태극기, 애국가 등 기존의 국가의 논리와 상징체계를 통해 표출한 것’으로 분석하고 이를 공동체가 독자적인 언어와 상징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국가주의 담론체계에 흡수되어버린 것으로 평가하기도 하였다.(최정운, 2012, 105쪽) 김정환은 이와 같은 ‘애국’의 표

상들이 냉전체제의 산물인 반공주의와 결부된 것은 분명하지만 ‘빨갱이들의 폭동’이라는 누명과 탄압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전략이었다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그는 광주 시민들이 일관되게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정체성을 견지해 나가려고 한 태도에 주목하고 이들의 행위가 ‘빨갱이가 아님’을 천명하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행위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임’을 보여주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행위였다고 기술하기도 하였다. 광주 시민들의 상상적 공동체는 대한민국이었고 그들이 인지하는 정체성은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시민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는 이 점이 5·18 항쟁이 대안국가로 나아가지 못한 한계, 혹은 국가와 계급의 경계를 넘지 못한 한계를 보여주는 지점이라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5·18광주항쟁이 보여준 대중 봉기의 가능성과 힘에 주목해야 한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였다.(김정환, 2013, 55~61쪽)

천유철은 5·18 항쟁 기간 동안 ‘애국’과 더불어 ‘민족’의 표상이 강조되었음에 주목하면서 이것이 당시 시민들에게는 종족이나 정치적 개념을 넘어서서 민중공동체의 의미를 포함하는 함의였다고 기술하였다. 그리고 현장에서 불린 ‘애국가’나 ‘아리랑’이 ‘애국적 민주-공화주의’의 관계를 드러내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의 제창은 ‘빨갱이 취급하던 정부를 향해 시민들이 하나가 된 정체성을 드러내고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을 드러내는 행위’였다고 평가하였다.(천유철, 2016, 144~147쪽) 김상봉은 5·18을 전년대 지향의 서로 다른 두 나라 사이의 충돌과 갈등으로 해석하였다. 그는 항쟁이 주체를 ‘씨울’로 명명하고 이들이 지향하는 나라, 그리고 항쟁 기간을 통해 이들이 직접 실천적으로 구현해냈던 나라⁷⁸가 한쪽에 있고 다른 한쪽에 국가폭력을 자행하고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모든 국가기구가 독점된 나라가 다른 다른 한쪽에 존재했다는 것으로 기술하였다.(김상봉, 2008, 319~373쪽)

5·18 광장의 ‘애국’ 표상은 1970년대 지속된 국가주의나 반공주의 이념 선동과 교육의 산물이기도 했지만 앞서 연구자들이 지적한 대로 부당하고 불합리한 국가폭력에 직면하여 상식적이고 정의로우며 민주적인 국가를 지향하는 항쟁 주체들의 염원을 담은 ‘다른 나라’를 향한 열망을 표현하는 것이었다. 또한 ‘빨갱이나 무장 폭도, 사회 소요 세력, 북괴 공작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천명하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이기도 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5·18을 국가폭력으로 읽어내려 할 때 이 ‘애국’의 의미를 어떻게 기술하든지 간에 ‘국가’의 경계에서 충돌하는 지점들이 생긴다는 사실이다. 무엇보다 이 충돌이 항쟁 참여자들의 현재 기억과 현재 삶의 사회적 조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5·18’을 국가 경계를 건드리지 않은 채 그 경계 안에서만 사유하려 할 때 현재까지 지속되는 폭력의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기 어려워지며, 무엇보다 스스로를 ‘애국 시민’으로 정체화하게 만들었던 질문의 폭력이 여전히 현존하는 현실에서 이 폭력의 담론을 비판하는 준거들을 확보하기 어려워진다. 그러나 저항 주체의 경험과 기억이라는 관점에서 가장 문제적인 지점은 ‘애국 시민’의 표상 아래 타자화되는 대상들, 그리고 소거되는 목소리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3. ‘애국 시민’의 외부

“[조사자: 선생님, 그러니까 그때 ‘애국시민’이라는 말을 쓰셨던 기억이 나세요?] 그랬죠. 그 거시기에가 유인물에 ‘애국시민’, 마 저, 마 그렇게 쓴 것이 기억이 나는데? -중략- [조사자: 선생님, 그러니까 그때 애국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신 거예요, 선생님은?] 애국? 우리는 그때게 저 우리 광주, 열심히, 우리 광주, 열심히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열심히 일 하니까 애국자라고 생각했죠. 산업의 역군으로서 우리가, 애국을 한 거잖아요. [조사자: 네, 네. 그런데 그때 그러니까 군인들이 와서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국가에서 군인을 보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공계 우리는 그 관점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정말 열심히 살고 그, 국가 발전에 거 열심히 사니까 우리는 애국자라고 생각을 한 거지. 글 앉겠습니까? 근디 그런, 그런 사람한테 그들이 무자비하게 어떤 그렇게 그때게야 뭐 빨갱이라고 그라지야 안 했지만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인자 우리는 뭐 노동운동판에서는 인자 빨갱이라고 했기 때문에 인자 알고는 있지만은 시민들한테 그냥 ‘시민 여러분’ 요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거 아닙니까? [조사자: 네, 네.]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다 애국자로 생각했지. -중략- 근데 80년에, 어떤든 시민들한테, 시민들이 뭔가 이 불의 앞에서 그 어떤 정리된 게 아니잖아요. 즉석에서 시민들이 나와갖고

78 김상봉은 최정운의 견해를 빌어 이 ‘나라’를 ‘절대공동체’로 명명하기도 하였다. 그는 다른 책에서 ‘5·18’에 대해 ‘아무리 죽이고 또 죽여도 죽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5·18’을 ‘악령으로부터 선량한 사람들을 지키는 방패이자 대문의 빔장’으로 표현하였다. 그는 ‘5·18’이 ‘미처 날뛰는 군대 마귀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고 이 땅의 민중들을 구원하고 해방한 사건’이며 ‘패륜적인 군대 마귀들을 향해 이 선을 넘지 말라고 박아놓은 헤라클레스의 기둥’이라고 비유하였다. 또한 그는 ‘5·18’이 ‘시작이 아니라 완성된 사건’이라고 말한다. 1894년 동학농민전쟁에서 시작된 새로운 나라에 대한 동경이 완성된 사건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그는 ‘1980년 5월의 열흘에 비하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타락하고 때 묻은 시대’라고 서술하기도 하였다.(김상봉, 2015)

이야기를 하는 어떤 거였고.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어떤 국가적인 개념 속에서 노동자는 산업의 역군으로서 애국을 한다고 생각을, 그 그 시대는 했었잖아요. [조사자: 네, 네.] 공계 지금은 그것을 안 쓰세. [조사자: 그때는 그냥 올바르게 살거나 그, 열심히 뭔가 사회를 위해서 이롭게 하는 걸 애국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건가요?] 그랬제. 그거죠. 그, 그 표현을, 우리는 순수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런 시민들, 열심히 생활 전선에서 국가가 말한 대로 자기 본분을 다하는 것이 애국이라고 생각 했잖아. 노동자는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애국을 하는 길이고. 어떤 반공 이데올로기에 의한 일방적인 교육을 받는 시대였잖아요. 공계 그것이 소시민들은 이야기를 할 땐에 그때는 그 나름대로의 어떤, 요즘 걸으면은 어, 시민의식이 다, 어떤 존중적인, 각자의 자기 삶을 되게 귀하게 존중, 존중받는 이런 시대로 왔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것이 되게 자기가 열심히 일하는 거, 어떤 말은 바 이룰테면 본분을 다하는 것이 애국이라는 긍정과 자부심이 있었제. 그러, 그러는데 저들이 그렇게 총칼을 앞세워가지고. 그 이후로는 그 애국시민이라는 것이, 아이 거 이것은 잘못된, 우리가 애국자라는 것은 그거야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정점이 5·18. 그니까 우리가 5·18 이후로는 그런 용어를 안 쓰잖아요. -중략- 그냥 우리 광주 시민들은 그것이 되게, 소시민적인, 누군가 우리는 모두가 의식은 없었잖아. 국가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찌그락짜그락 하면서 보통 시민들은 무슨 의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은 알았겠지만. 그냥 우리 광주 시민들은 자기가 일테면 일상적인 어떤 삶을 열심히 사는 거, 거짓 없이 사는 것이 뭐 국가에 애국하는 거라고 생각을. 공계 너무 순수한 거죠, 그런 것들은. 교육받지 안 했지만 자기 삶의 일부분을 열심히 살아주는 것이 국가에 일테면 애국하는 것인데, 근데 생각하지 못한 국가에 애국이라는 것이, 음, 이거 인자 군부가 이룰테면 옴으로써, 우리한테 이렇게 함으로써 그런 것들이 싸그리 무너져 내리는 그런 거였잖아요. -중략- **이가 우리가 간첩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더니깐요. [조사자: 네.] 공계 그것이 아무리 의식이 있었든, 그라도 우리는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의식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저네들이 그런, 그런 사람들을 분명히 침투를 시켰을 것이다. 공계 알아 보지도 않고 **이가, **이 하고 거시기 하고 둘이가 잡혔다고 한게 좋다고 박수 쳤더니깐요. 공계 얼마나 모순적인 거잖아요. 공계 우리가 우리를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는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그들은 어떤 작전과 더불어서 침투하게 어떤 우리의 분열까지도 우리 안에서 사람들을 계속 분열을 시키는 작업들을 해냈잖아요. 선동하고, 선전하고, 일방적으로. [조사자: 네, 네.] 그리고 그때는 국방부에서 다 그, 사진을 찍어갖고 계속 방송국에다 올렸잖아요. 그러는데 그렇게만 한 것도 우리는 참 이렇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너무나 우리는 기가 막히제. 그, 저들의 그것에, 농락에 같은 동지들도 고발하는 이런 형국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얼마나 컸겠어요?” (2019년 10월 전화인터뷰 A씨 (5·18 당시 항쟁 참여 여성 노동자))

노동운동단체를 통해 5·18항쟁에 참여했던 위 ‘여성’ 구술자는 당시 ‘애국’의 표상에 70년대 ‘산업역군으로서의 노동자’라는 정체성이 침윤되어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 저항의 지향과 정의 실현 가치 또한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인식한다고 구술하였다. 구술자는 공동체나 사회를 향한 헌신이나 자기 삶의 본분에 충실한 성실, 정의를 향한 갈망 등이 모두 이 ‘애국’의 표상 안에 담겨 있었다고 말하였다.⁷⁹ 그러나 5·18이 이런 가치에 대한 인식들을 뒤흔들고 국가의 의미를 새롭게 질문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내용을 구술을 통해 암시하기도 하였다.

그가 위 구술에서 마지막으로 언급한 장면은 당시 가장 널리 알려졌던 가두 방송 차량의 두 여성이 항쟁 기간 중에 ‘모란꽃’이라는 암호명을 쓰는 간첩이라는 오해를 받아 시민들의 손에 의해 군인들에게 인계된 사건을 가리킨다. 이 여성들의 가두 방송은 애국심에 호소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증언 기술이 존재하기도 하는데 당시 시민들은 두 여성을 간첩 혐의로 신고하는 과정에서 ‘간첩이 아니라면 여자들이 이렇게 말을 잘 할 리가 없다는 주장’에 동의하기도 하였다.⁸⁰ 구술자는 당시 광장에 있었던 사람 대부분이 이들이 실제 간첩이라는 주장에 동의했고 본인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한 명이었다고 말했다. 노동운동 과정에서 ‘빨갱이’라는 공격을 받기도 했던 본인마저도 그런 생각

79 위 구술자 외 다른 구술 기록과 증언록 등을 참조할 때 당시 항쟁에 참여했던 시민들은 군인이 시민을 향해 총을 쏘는 부조리한 나라가 아니라 그와는 다른 민주적이고 상식적이며 정의로운 국가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점이 드러난다.

80 “애국심에 불타는 여성들이 이 엠프를 차에 싣고 광주시내를 돌면서 광주시민의 용기와 애국심을 북돋우기 시작한 것은 바로 20일 오후부터였다.”(정상용/유시민, 1990, 207쪽) 가두 방송을 했던 이들은 26일 시민들 속에서 튀어나와 그녀를 ‘간첩’으로 지목한 사람들과 그들에 동조한 이들에 의해 보안대로 끌려가 ‘본인이 간첩 모란꽃이라는 사실을 자술하라’는 강요를 받으며 오랜 기간 고문을 받아야 했다. 그녀가 ‘간첩’으로 오인받은 이유 중 하나는 ‘여자치고는 너무 말을 잘 했기’ 때문이다.(황석영 외, 2017) 두 여성 가운데 한 명은 정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국민(시민)으로서의 공식적 위치’를 명백히 밝히고 입증하지 못해 더 큰 고초를 겪기도 하였다. 이들 외에도 가두 선전에 나섰던 여성들이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1980년 이후 지금까지 5·18 관련 활동의 전면에 나서지 않은 채 각자의 상처를 안고 살아왔다. 최근에 와서야 이들 가운데 몇 사람이 발언을 하기 시작했으며 이들은 자신들이 광주를 떠나 살았던 이유 가운데 함께 싸웠던 사람들에게서 받은 상처도 존재했음을 고백하기도 하였다. 김상봉을 비롯한 많은 이들은 이 사건을 ‘5·18’ 과정 중의 가장 안타까운 장면으로 꼽기도 한다. 관련 내용은 ‘5·18’ 관련 기술에 종종 등장하는데 과거에는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다가 최근에 다수의 서술에서 언급되고 있다. 이 사건은 흔히 시민군 내부에 존재했던 프락치를 증명하는 일로 언급되기도 한다.

을 할 정도였다는 말을 덧붙이기도 하였다.⁸¹

여성노동자들은 박정희정권 기간 내내 ‘산업역군’으로 호출되었으며(김원, 2005)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도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 더 나아가 ‘국가’에 헌신하는 ‘애국’의 길이라고 생각하며 매일 아침 공장으로 들어서는 길을 걸었다.⁸²

노동자들의 이와 같은 수행을 통해 ‘애국’은 ‘공동체를 향한 헌신’, ‘사회정의의 실천’, ‘공공선의 수행’ 등의 내용과 같은 것으로 인식되었다. 더구나 1970년대 노동운동에 참여한 이들은 5·18 항쟁 당시의 광주 시민들처럼 ‘자신들이 사회소요 세력이 아니며 더구나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한 빨갱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했다. 노동운동을 하는 이들을 향한 가장 많은 공격의 내용이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세력’이라든가 ‘공산당에 물든 빨갱이’라는 말이었기 때문이다.(이육지, 2001)

‘애국’이라는 말의 표상은 5·18 당시 담론장의 구조나 발화 주체에 따라 조금씩 다른 의미 맥락을 드러내기도 한다. 그러나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겪으면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던 당시 ‘광장’에서 ‘애국’의 의미를 묻거나 논쟁하는 일은 불가능했다. 다만 정규 군인이 시민을 향해 총을 쏘는 국가는 정상적인 국가일 수 없다는 인식, 그렇게 때문에 시민들이 나서서 상식적이고 민주적인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열망을 가졌던 것은 여러 사람의 구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다함께 지향하는 공동체의 이상이나 대안이 ‘국가’로 수렴되는 것이 마땅한지, 지향하는 ‘국가’는 어떤 것인지 등에 대해 논의하고 탐구하기에 항쟁은 너무 짧고, 또 너무 갑작스러웠다. 5·18항쟁에 참여한 이들 대부분은 자기 행위를 부당한 폭력에 대한 저항과 불의에 대한 항거, 자신과 이웃을 지키기 위한 일로 의미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성 구술에서 이와 같은 경향이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여성들은 자신의 행위를 민주화, 애국 등의 정치적 것과 결부시키거나 자신의 영웅적 행동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자기 서사를 구축하지 않고 자기 삶의 연속선상에서 5·18을 설명하고, 스스로의 행동을 ‘광주 시민 누구나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행위’로 기술한다.(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2012)

5·18 광주항쟁 이후 광장에서 ‘애국’의 의미는 독재정권에 대한 항거와 민주적인 사회 시스템건설을 위한 저항적 실천의 의미로 구체화되었다. 1980년대 학생운동과 사회운동이 5·18을 새로운 구심점으로 삼아 확장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애국’의 의미는 ‘반외세’, ‘반미’, ‘분단극복’, ‘통일’ 등의 의미로 확장되었고, 다른 한편 폭넓은 의미의 ‘사회정의’-‘민주주의 실현’을 포함하는-를 함의하는 말로 해석되기도 하여 ‘시민’과 결부된 ‘애국 시민’이라는 말로 구체화되었다.

노동운동이나 농민운동 등 모든 부문운동의 목표가 각 단위의 구체적 목표를 실행하면서도 ‘군부독재타도’와 ‘민주정권수립’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언제든지 결속할 수 있는 조건 속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애국시민’이라는 말의 표상은 ‘민주시민’의 의미를 띤 것으로 이해되었고 저항 주체로서의 노동자, 농민, 빈민, 소시민을 아우르는 동질성을 내포하는 개념으로 통용되었다. 이 시기 운동은 그만큼 결집된 하나의 목표를 지향하면서 상호 연대하고 ‘단결’하는 것을 확고한 운동 전략으로 삼고 있었고 87년 6월까지 광장의 수행성은 이런 흐름 속에 ‘애국시민’을 광장의 주역으로 구성해냈다. 이질적인 흐름들은 분명 존재했지만 표면적으로 ‘독재정권타도’라는 운동의 대의 속에 ‘애국시민’의 동질성은 1987년 6월 광장에 이르기까지 견고하게 유지되었다.⁸³

‘애국 시민’은 사실상 ‘애국’과 ‘시민’이라는 서로 다른 가치 지향을 함의한 말이다. 그러나 시민이 ‘주권성’에 대한 함의를 드러낼 때 ‘애국’과 ‘시민’은 ‘국가’의 경계 위에서 만날 수 있다. 87년 6월의 광장이 ‘주권자 시민’의 힘을

81 다른 구술자(뒤에 나오는 구술자B)는 본인은 이것이 정부에서 만든 분열 책동의 일환이라고 당시에도 생각했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82 황병주는 한국의 국민국가 형성(nation building)에 있어 박정희 체제 18년은 결정적 국면을 차지한다고 말한다. 국가 주도의 근대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국민적 주체 형성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 시기 박정희는 평등주의의 가치를 내세워 대중을 선동했는데 그 내용은 불평등의 기원이 과거 봉건에 있으니 근대화를 통해 평등주의를 실현하자는 것이다.(황병주, 2006) 그리고 이때 이 근대화는 국가의 시스템을 재구축하고 이 새롭게 정비된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동원하는 방식을 통해 국가의 경계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 개개인을 평등과 통합의 가치를 지향하는 민족/국가의 ‘주인’이나 신실한 성원으로 재호명하였다. 특히 이와 같은 호명은 국가의 미래를 짊어진 ‘산업전사’, 혹은 국가경쟁력 제고의 선두에 선 ‘산업역군’의 이름을 얻은 노동자들에게서 매우 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했으며, 이때는 ‘노동자이기 이전에 국민’이라든가 공동체를 향한 헌신을 무조건적 선으로 인식하고 이를 곧 애국의 가치로 치환하는 애국주의적 공동체주의의 이념이 노동자들의 내면 깊숙이 스며들던 시기였다.(황병주, 2006, 494-504쪽)

83 물론 이 과정에서 ‘애국’의 가치는 80년대 사회운동의 전반적 흐름을 주도하던 특정 정파의 입장에 따라 ‘반미’와 ‘자주’, ‘외세배격’과 ‘분단극복’의 이념으로 구체화되기도 하였다. 80년 5월의 광주에서도 ‘반미’의 구호가 나오긴 했으나 이때 ‘애국’의 개념이 정치적으로 정교하게 이념화된 것은 아니었고 시민들이 외치는 ‘애국’의 의미 역시 사회구성체 논쟁을 둘러싼 담론장의 흐름 속에서 정치적으로 구체화된 시기의 그것과는 다른 것이었다.

확인하고 천명한 역사적 사건으로 신화화될 때 신화적 원형의 사건으로 소환되는 것은 80년 5월의 광주다.⁸⁴ 그러나 5·18 당시 ‘애국 시민’은 아직 이와 같은 의미를 확고히 표방하는 개념으로 활용되지 않았고 오히려 5·18 이후 그 의미가 점차 구체화되거나 확장되어나갔다. 5·18과 관련해서도 진상규명, 사후 처리, 보상, 민주화운동으로의 의미화 등이 모두 ‘애국 시민’의 운동적 지향 안에서 전개되었으며 그와 같은 운동의 성과로 5·18이 국가적 보상과 기념, 국가적 애도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애국 시민’의 서사가 확장되고 그 신화가 점차 자기 토대를 구축해 가는 과정에서 ‘주권성’의 외부나 시민권의 젠더화된 지점, 국가주의 기획에 내재된 차별과 배제의 문제들, ‘애국 시민’으로 호명된 내부의 이질성 등은 담론장 밖으로 축출되거나 억압되었다. 김원은 70년대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운동을 재기술하고 재평가하는 글의 결론에서 ‘민주화담론의 국가화’와 ‘여성노동자 배제의 현재화’를 제기한 바 있다.(김원, 2006, 558~561쪽) 그가 이 글에서 비판한 것은 ‘민주화’가 ‘국가’의 경계 내로 편입하여 재기술되면서 ‘민주화’ 담론이 특정한 방식으로 날조되고 국가에 의해 전유되는 현실이다. 이 과정에서 ‘민주화’ 혹은 ‘민주화가 아님’을 판단하는 특정한 담론 질서가 형성되는데 문제는 이와 같은 판단기준에 해당하는 지식체계-담론을 형성하는 주체가 국가라는 점이 중요하다. 민주화 담론이 민주화운동을 ‘무모순의 운동’과 ‘신화’로 만드는 무반성적인 관습적 실천을 재생산하는 예로 광주민중항쟁의 ‘국민화’를 들기도 하였다.(김원, 2006, 559~560쪽) 특히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정통성을 세우고 계보를 만드는 과정에서 ‘무오류의 진리’라는 담론 흐름을 발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비판하였다.

그는 국가화와 노동운동의 역사와 계보에서 여성노동자들이 배제되거나 주변화되는 현실을 별도의 사안으로 지적했지만 사실상 이 두 가지 문제는 ‘국가’라는 경계를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다. 민주화운동이 신화화되는 과정에서 이 신화의 주역으로 호명된 것은 ‘애국 시민’이었는데 이 젠더화된 ‘애국 시민’의 신화 속에서 저항과 운동의 주체로서 ‘여성’의 역사는 소거되거나 주변부화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애국 시민’이라는 표상은 어떻게 젠더화되어 있는 것일까?

5·18 항쟁의 주역을 떠올렸을 때 사회적 기억 속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결연한 표정으로 총을 들고 선 ‘시민군’의 표상이다. 5·18 광장을 둘러싼 담론에서 시민군은 대부분 ‘남성’ 이미지로 표상되었다. ‘여성’ 또한 항쟁의 한 주역이었다는 기술을 곳곳에서 볼 수 있지만 항쟁에 나선 ‘여성’의 표상은 대체로 시민들을 향해 호소하는 목소리, 혹은 주먹법이나 마스크 등을 만들어 시민군에게 전달하는 후방의 지원 부대로서의 이미지로 그려졌다. 5·18 항쟁은 정규 군인들이 시민들을 향해 총칼을 휘두르고 총기를 난사하는 일종의 ‘전쟁’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저항이 군대와 같은 형태로 조직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을지 모른다. 특히 군 의무병제를 시행 중인 분단 국가인 한국에서 20대 후반 이상의 남성 대부분이 총기를 다룰 줄 안다는 사실은 이 장면에서 복합적인 의미를 지닌다. 특히 ‘5·18’이 역사적으로 재해석되고 때로 사회정치적 조건에 따라 ‘신화화’될 때 ‘전우야 잘자라’나 ‘예비군가’를 부르는 시민군의 결의에 찬 모습(정유하, 2017, 121~122쪽) ‘비장하고 송고하며 또한 아름다운 혁명의 한 장면’으로 소환되는 것에 대해서는 성찰의 지점이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전우야 잘자라’가 친일 이력을 갖고 있는 박시춘 작곡의 노래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노래가 한국전쟁 당시 서울 수복 후 북진통일을 희망하며 만든 노래이기 때문이 아니라, 또 ‘예비군가’가 군필 후 비정규군으로 재편된 ‘남성’들이 훈련을 받으러 가서 부르던 노래이기 때문이 아니라 ‘5·18’이 40년 가까운 시간을 지나오는 동안 ‘여성’을 일정하게 타자화하면서 ‘남성동성집단(homo social)’의 시민항쟁으로 의미화된 지점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

여성은 국가폭력이 발생했던 장소이자 그 폭력을 고발하는 훼손된 신체로 치환되거나 자식의 죽음 앞에 울부짖는 어머니의 통탄으로 치환되기 일쑤였다. 정유하는 5·18 광장에서 가장 많이 불린 노래로 ‘임을 위한 행진곡’과 함께 ‘오월의 노래2’를 꼽았는데(정유하, 2017, 153~157쪽) 이 노래에서 가장 인상적인 노랫말은 ‘꽃잎처럼 금남로에 부

84 87년 6월 항쟁의 서사가 ‘민주국가’ 건설을 이루어낸 ‘애국 시민’의 탄생신화로 해석될 수 있다면 이 서사의 계보를 잇는 것 가운데 하나가 2016년 촛불시위 광장에서 나타나 주권자로서의 시민에 대한 강박적 강조라고 할 수 있다. 이 광장에서 울려 퍼진 노래는 시종일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었고 사회자는 주권자의 권리를 설명하기 위해 헌법 조문을 줄줄 외울 정도였다. 그러나 당시 여기서 호명된 주권자 시민이 어떤 존재인지 이 시민이 무엇을 ‘구성적 외부’로 삼아 자기 경계를 설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질문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이에 대한 논의가 조금씩 활발해지고 있다. 단, 한 가지 지적할 것은 이 동질화된 시민 공동체 내에서 계속해서 배제되거나 주변부화되었던 ‘여성’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수행을 적극적으로 천명하면서 목소리를 드러내는 사건이 있었다. 당시 촛불시위 광장에서 이들은 ‘페미존’을 형성하고 ‘시국페미’ 활동을 전개했으며 박근혜 전대통령에 대한 여성혐오적 발언에 문제를 제기하여 시위 주최측으로부터 공식적인 사과를 받아내기도 하였다. 이에 관한 다큐멘터리 영화(〈시국페미〉(2017), 〈해일 앞에서〉(2019))가 최근에 만들어졌다.

려진 너의 붉은 피 두부처럼 잘려나간 어여쁜 너의 젖가슴'이다. 당시 광주 시민들을 가장 울분에 차게 만들었던 폭력의 장면 가운데 하나는 헌혈을 하기 위해 교복을 입고 줄을 서서 기다리다 총을 맞고 숨진 여학생의 교복이 붉게 물들던 장면이며, 또다른 하나는 유방에 자상을 입은 '여성'의 시신, 혹은 '여성' 부상자의 신체였다.

“공산당보다 더 흉악무도한 살인마 전두환의 사병 특전단은 우리의 젊은 학생들을 총칼로 찢러 배를 갈라 죽였으며 처녀들의 귀를 자르고 부녀자들을 발가벗겨 배를 갈라 거리에 널었으며 심지어는 어린애들을 개머리판으로 골통을 부셔 죽였다.”(〈민주수호총결기문〉, 전남사회문예연구소 편, 1988, 111쪽)

“심지어는 여학생의 옷이 총검으로 찢기우고 살점이 오려지는 만행을 시민은 분노의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전남사회문예연구소 편, 1988, 135쪽)

국가폭력이 자행된 장소를 고발하고 증명하는 '여성'의 신체는 그들을 '지키지 못한 남성'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이들을 저항의 전선에 뛰어들게 만드는 기폭제가 된 것으로 서술된다. '5·18' 관련 '남성' 구술에서 많은 이들은 '여고생의 시신'이나 '유방이 잘려나간 여성의 시신', '임산부의 죽음' 등을 계기로 총을 들게 되었다고 말한다.

'5·18'에 참여했던 시민군들만이 아니라 이후 80년대 사회 운동에 뛰어든 많은 이들에게도 폭력에 훼손된 '여성'의 신체는 분노와 실천을 이끌어내는 기폭제가 되었다. 천유철은 '오월의 문화정치'를 분석하면서 항쟁 이후 광주민중항쟁을 형상화한 시들에서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피해자로 부각하면서 비극을 심화하는 데 주력'하였다고 서술한 바 있다.

“광주의 참상을 클로즈업하기 위해 '젖가슴이 잘린 여학생', '대검에 찢려 죽은 만삭의 임산부', '헌혈 후에 귀가하다 총상을 당한 여학생의 모습' 등의 훼손된 여성의 신체를 통해 살상의 장면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다. 예컨대 이도운은 <오월이 살아>에서 '옥례의 스무살 젖가슴에 꽃힌 대검의 오월'이 '이리도 모질게 살아', '굳센 주먹이 되고 단단한 돌맹이가 되고 이 땅의 함성이 됐다'는 사실을 지적했고, -후략-(천유철, 2016, 72~73쪽)

그러나 여성들은 5·18 당시 국가폭력의 수신처로서의 신체로 치환될 수 없는 목소리를 가진 존재, 수행의 주체였다. 어린 나이의 여중생, 여고생들이 참혹하기 그지없는 시신을 수습하는 일에 나섰고 어떤 여고생을 관을 구하려 다니다 총격으로 사망하기도 하였다. 시신을 수습하는 일은 5·18 광주에서 가장 중요한 애도의 첫 작업이었으나 트라우마로 인해 신경정신과 약을 상복해야 할 만큼 힘든 일이기도 하였다. 이 작업에 가장 먼저 나선 것은 여성들과 일용직노동자들이었다. 한 여성은 구술을 통해 5·18 당시의 경험을 계기로 그 이후에도 행려병자나 무연고자 시신을 수습하는 일을 계속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2012)

또한 여성들은 시민군과 항쟁자들의 식사를 준비했다. 도청 내 취사반과 시민군들에게 주먹밥을 실어나른 이들은 모두 '여성'들이었다. 영화 <김군>에서 한 시민군 참여자는 자신에게 밥을 건네주었던 시장 상인들을 잊지 못한다고 말했는데 이런 내용은 구술은 항쟁 참여자들의 발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 가운데 하나다. 구술의 대체적인 내용은 이들의 지원으로 밥을 배부리 먹을 수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밥이 자신들을 향한 시민의 지지와 성원으로 받아들여졌고 '저렇게 내것 네것 할 것 없이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우리'였다는 자긍심과 자부심을 만들어주었다는 것이다. 시민군 참여자들은 이 밥을 먹고 죽음을 무릅쓰는 공포와 불안을 조금이나마 극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여성들은 거리 선전에 나서서 메가폰을 들고 시민들을 향해 발언했는데 화장실을 갈 시간이 없어 선 채로 옷 위에 볼 일을 볼 수밖에 없었다고 구술하기도 하였다.(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2012) 이들은 체포된 후에 많은 고초를 겪었고 5·18 이후 대부분 광주를 떠났다. 거리 선전에 나섰던 한 여성은 함께 체포되었던 '황금동 술집 근무 여성들'이 시민군들 지원에 나섰다 매를 맞고 붙들려온 장면을 잊지 못한다고 말했다.(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2012) 또 여성들은 투사회보를 만들거나 각종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는 일을 맡기도 했고(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2012; 5월 여성연구회, 1991) 돌멩이와 화염병을 던지거나 총기 다루는 법을 배우기도 하였다.(5월여성연구회, 1991) 시위자

들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여성들이었는데 그들 대부분은 학생이 아니라 노동자와 주부, 학생들이었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하였다.(5월여성연구회, 1991)

이처럼 여성들은 항쟁 당시 다양한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단체를 중심으로 활동하기도 하고 이미 민주노조를 건설해 있던 사업장의 노조원들은 대형차량에 회사 유니폼을 입고 함께 나와 시위에 참여하기도 하고 일손이 필요한 곳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항쟁을 이끌어나갔다. 영화 <외롭고 높고 쓸쓸한>(김경자, 2017)에는 당시 노조활동을 하던 여성노동자로서 항쟁에 참여했던 인물들의 인터뷰가 다수 나온다. 이들은 5·18을 계기로 노동운동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이미 조직적인 노조 활동을 전개하던 와중에 5·18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들의 활동은 탈출 배우기 등의 문화 운동이나 여성주의 이론 공부로까지 확대되었으며 노동운동에 참여하는 결의나 열정 또한 매우 높은 것이었다.

“처음에 굉장히 재미있었죠. 저는 제가 어느 정도로 열성적이었나면 제가 욕을 좀 못했어요. 워낙이 좀 순해 갖고. 그랬는데 회사와 싸우기 위해서는 이제 욕도 하고 막 그래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거울 보고 욕 하는 거 연습 하고. 그냥 뭐 쌍두욕 같은 거. 그래서 제가 이 개새끼 이런 욕 되게 잘 하거든요, 화 나면. 그리고 계속 회사가 방해공작을 하나 조합원들 이렇게 모여 놓고, 노조 대표자 됐을 때에도 조합원들 모여 놓고 인제 얘기하면은 워낙에 또 이 말투 자체가 지금도 순하지만 그때는 정말 순했죠. 그래서 그때 제가 누구든지 노조 활동을 방해할 하면 칼로 주둥이를 쫓아버린다고 그런 욕을. (웃음) 그랬는데 조합원들이 뒤에서 웃었다는 거예요, 너무 안 어울린다고.(웃음) -중략- 동아리, 지금 저희가 했던 게 **팀이었던 것 같은데. 지오씨에서는 작게는 서너 명, 많게는 일곱 여덟 명 이렇게 해가지고 팀을 이루고 일주일에 한 번씩 회합을 해요. 그것의 핵심은 관찰 판단 실천. 그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예수님의 가슴으로 판단하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거. 그래서 일주일에 한 가지씩 현장 문제를, 무엇이 우리 현장의 문제인가 같이 찾아보고 이걸 바꾸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행동할까. 그렇게 해서 실천 약속을 하죠. -중략- 거기서 뭐 나는 누구인가, 근로기준법은 무엇이고 뭐 다, 책이 이 정도 두께로 회합하는 책이 있어요. 그거 인제 그러면서 이제 누가 특별히 가르쳐준 것은 아니고 지오씨에서 투사 선서를 받은 노동자가 같이 팀을 이루고 그 회합지 내용대로 그 순서대로 같이 토론하고 실천 약속 하고 그 다음에 얼마나 그 약속을 얼마나 잘 이행했는지 그 다음 주에 와서 또 같이 토론하고. -중략- 투사선서는 6개월을 그렇게 회합을 하고 나면, 공부를 하고 나면 아 나는 정말 투사가 돼서 다른 노동자들, 아직 의식화되지 않은 다른 노동자들과 같이 공부하고 회합도 하고 하면서 이 사람들을 다시 또 나처럼 투사가 되게 하겠다, 이거예요. [조사자: 그거를 선서하는 거예요?] 네. -중략- 어떻게 보면 제가 민주노총에서, 내부투쟁이잖아요? 내부투쟁 할 수 있었던 동력도, 사실 마흔이 넘어서 여성노조하고 평등노조하고 이라는 일련의 과정들 안에서 활동의 기준이나 원칙이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지오씨 정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어도 끝까지. 그거 저는 지오씨였던 것 같아요.”(2019년 11월 5일 서울 시내 카페 B씨(5·18 당시 항쟁 참여 여성 노동자))

그러나 저항의 주체로서 '여성'들의 이런 적극적인 모습은 3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가시화되지 않았다. 다큐멘터리 작가들과 여성단체가 주도한 구술 작업을 통해 이런 목소리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불과 6-7년 안팎의 일이다. 특히 항쟁에 참여했던 여성들이 모여 만든 단체가 5·18 공식 행사에 적극적으로 초대받기 시작한 것은 '미투' 이후의 일이었다. 1991년 '오월여성연구회'에서 발간한 『광주민중항쟁과 여성』이라는 책에는 항쟁에 참여했던 여성들이 겪어야 했던 다양한 성적 폭력에 대한 증언들이 구술, 채록되어 있다. 그 가운데에는 작년에 언론을 통해 조명되었던 '5·18 당시 군인들에 의한 여고생 집단 성폭력 사건' 또한 기술되어 있다. 이 책에는 그밖에도 5·18 항쟁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가정폭력에 시달려야 했던 여성의 이야기와 폭력을 경험한 트라우마로 인해 심리적인 문제를 안고 살아야 했던 다수 여성들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 그러나 이 이야기들은 모두 항쟁 10년 후에야 채록될 수 있었고 그 후 30년 동안 다시 묻혀 있어야만 했다.

“[조사자: 한국에서는 왜 국가폭력과 관련된 문제에서 항상 먼저 보상 문제를 들고 나오잖아요. 그러곤 보상을 받았으니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하고 말문을 막아 버리죠.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말하고.] 저는 그것이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정권이 그렇게 만들어 낸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커다란 저항을 무마하고 그러기 위해

서는 뭔가 재갈을 물려야 이게 수그러들 텐데 그니까 완전히 짓밟음으로써 이거를 잠재우는 방식이 있고 당근을 던져줌으로써 잠재우는 방식이 있는데 피해자를 보상한다고 하는 것은 후자 쪽이라고 생각해요. -중략- [조사자: 여성분들 구술에서 인상적이었던 게, '보상' 문제 좀 이제 이야기하지 마라 지긋지긋하다 이런 이야기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분들은 자신들이 뭘 했다고 나서지를 않으세요. 선생님은 유공자세요? 아니에요. 제가 왜 유공자예요. [조사자: 그런데 보상 문제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보상을 받거나 유공자 지정을 받은 사람만이 당사자가 되는, 그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 같아요. 당사자의 위계가 만들어지는. 누가 가장 진짜 당사자이고 누가 그렇지 않은가를 나누는.] 네, 그러니까요. -중략- [조사자: 여성분들은 왜 말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세요?] 기회, 기회의 장이 없어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니까 남성들 중심의 5·18 단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었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 중심으로 광주가 이렇게 알려지기 시작을 했고, 그 사람들 중심의 이야기들이 광주의 이야기들이 됐고, 어 오월 여성회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늦게 출발을 해서 여기 이쪽은 그나마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 그동안에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을 발굴하고 찾아내서 이제 단체를 만들고 그렇게 지향을 가져왔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랬으니까 광주는 노동 쪽보다는 민주화운동 쪽으로, 학생운동이라든가 지역의 민주화운동 이런 쪽으로 많이 발전을 해 있었고 이제 솔직히 약자들인 여성의 이야기를, 또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없었다고 생각해요. (기침) 그러지 않았을까. 제가 이제 그쪽에 없어서 모르겠지만. (기침) [조사자: 선생님 서울에 오신 이후에 주변 사람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 나 80년 5월에 광주에 있었다는 이야기 해 본 적이 있으세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말할 기회도 없었고. 광주에 대해서 물어보면. 아까 제가 그 MBC 불타던 그 날 정도의 이야기를 했고, 5·18 도청 앞의 집회. 제가 경험한 것들 중심으로 이야기했었던 것 같아요. -중략- 그때 적극적으로 드러낼 만큼 자기가 한, 자기가 참여한 이것들에 대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왔으니까, 다 나왔으니까, 그냥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단지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기숙사에 있었던 사람들하고 같이 다녔지만 우리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나왔거든요. 모두가 다 분노했고 모두가 다 싸워야 된다, 폭력 국가 이거 해체해야 된다, 다 했기 때문에. [조사자: 그러니까 선생님은 선생님이 어떤 특별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죠?] 네. [조사자: 누구나 다 그때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네. 누구나 다, 사실 그랬어요. 누구나 다 했던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디를 같이 가자 그러고, 그게 연결이 돼서 다 가자고 했으면 다 갔을 거 같아요. 그 분위기는 그랬으니까. -중략- [조사자: 미투가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줬다고 생각하세요, 선생님?] 저는 미투의 주체들이 약자잖아요. 그리고 그 약자들도 약자들이 했을 때 전 용기를 얻었다고 생각해요. [조사자: 같이 말할 수 있는?] 네.” (2019년 11월 5일 서울 시내 모 카페 B씨(5·18 당시 항쟁 참여 여성 노동자))

“그나마, 그나마 그래라도 지금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시작. 우리가 이럴 것 같으면, 목소리를, 어떤 기억들을 음. 조금 그것을 만들 때도 그때게 자세하게 얘길 하지는 않았지만 다 여성들이 자기 삶에, 그것도 이렇게 자기 남편도 모르고 다 모른 것을, 우리가 그거를 짚은 거예요. [조사자: 네, 네.] 그리고 우리 감독님이 그런 것들을 숨겼어. 그냥 우리가 '선생님 기억을 기록합니다. 선생님 아는 만큼만 어트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언젠가는 이것이 또 살을 붙이고 이렇게 해서 여, 저기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했던 것이지. 뭔가 구체적으로 막 우리가 개인적인 모두가 다 가 막 의식이 투철해서 헛 것은 절대 아니에요. [조사자: 네, 네.] 그런데 되게 어려운 이야기를 꺼내서 그나마 그것이라도 우리 ***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본인이 *** 이야기만 갖고도. 선생님 그때 보셨지만 ***이가 우리가 간첩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다니까요. [조사자: 네.] 금계 그것이 아무리 의식이 있었든, 그라도 우리는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의식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저네들이 그런, 그런 사람들을 분명히 침투를 시켰을 것이다. 금계 알아 보지도 않고 ***이가, ***이 하고 거시기 하고 둘이 잡혔다고 한게 좋다고 박수 쳤다니깐요. 금계 얼마나 모순적인 거잖아요. 금계 우리가 우리를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는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그들은 어떤 작전과 더불어서 침투하게 어떤 우리의 분열까지도 우리 안에서 사람들을 계속 분열을 시키는 작업들을 해냈잖아요. 선동하고, 선전하고, 일방적으로. [조사자: 네, 네.] 그리고 그때는 국방부에서 다 그, 사진을 찍어갔고 계속 방송국에다 올렸잖아요. 그러는데 그렇게만 한 것도 우리는 참 이렇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너무너무 우리는 기가 막히게. 그, 저들의 그것에, 농락에 같은 동지들도 고발하는 이런 형국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얼마나 컸어요? [조사자: 네.]”(2019년 10월 30일 전화인터뷰 A씨(5·18 당시 항쟁 참여 여성 노동자))

“글고 수십 년이 지나도록 서로에 대한 안부도 묻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여성들은 각자 결혼을 해서 다 침묵을 지킨 거잖아요. 이것이 최근에사야 에, 이야기지.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했었지, 우

리가 그러고 우리는 제도하고도 싸움을 첨예하게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조사자: 네.] 금계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서 그 속에 여성들이 어떤 겪을 수밖에 없었던 그 말 못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컸을까라고 하는 이것을 되게 크게 선생님이 그때게도 그 공감해 주셨잖아요. [조사자: 네, 네.] 금계 우리가 우리는 조금 그렇게 했지만은 어 우리 후대들한테는 그것은 용기를 주는 거잖아요. [조사자: 네, 네.] 어떤 부당함성에 대한 용기를 만들어내고 또 그러면서 그 속에서도 그런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그, 그때게는 다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불의 앞에서 그냥 누구든지 다 자신을 그냥 내어놓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숭고하고 아름답고, 어, 민주주의 시민으로서의 대한 이런 정신을 가지고 가든 되는 거잖아요.”(2019년 10월 30일 전화인터뷰 A씨(5·18 당시 항쟁 참여 여성 노동자))

“여성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그러면서도 남편한테도 얘기 못하고, 다 뿔뿔이 흩어져갔고 나오는 데 있어서, 말을 하는 용기를 얻기까지는 몇 년이 불과하다고요. 그런다 해서 다 나오나 하면 소위 몇 사람만 이렇게 이야기할 하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금계 이런 용기에 대한 것들을 높이 사주는 게 어,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중요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중략- 다 죽어가고 아파가고 그라고 있잖아요. 우리 때도 벌써 다 끝나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무서운 거지.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지금에사라도 그런 것들을 얘기해 내고 누군가가 끊임없이 이 문제를 붙들고 갈 수 있는 용기있는 사람들이 붙었을 때 어떤 성과가 나온 거잖아요. -중략- 이 제도와와의 싸움을 광주 사람만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얘기죠. 난 이것이 화가 나는 거예요. 금계 다른 동네 가갔고 그 광주가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세상 사람한테 인자 이제 어떤 정신적인 어, 이런 분들이 리더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성찰하면서 또 광주를 바라볼 때, 뭘 일만 있을 때 광주가 앞장서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정말 나쁜 행위야. 그러잖아. 우리는 낫지 마라고 해도 우리가 필요하면은 나서요. 국가가 어려울 땐에 뭘 자기 일을 다 내팽개치고 서울로 어디로 쏘다니면서 살고 있잖아요. [조사자: 네, 네.] 저는 가게를 한 달에 반도, 반도 못 열 거예요. 그러면 내 생존권은 누가 보장을 해주냐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묻지 안 해요. 이것이 우리는 상처예요. 아 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제 세상이 우리들한테 저들이 살고 있는 삶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되거든. 이게 트라우마를 치유를 하는 것이지. 개코구멍이나 뭘 뭘 뭘. 맨날 즈그들 필요할 때나 뭘 말하라 하지만은 우리는 허고 나면 공허하고 우리는 쓸쓸하고 '내가 지금 뭣하고 있지?', '왜 내가 자꾸 그런 데 나가갔고 앵무새처럼 조잘거리고 있는가' 하는,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갖고 있는, 여성들이 인자 앓고 있는 문제예요, 선생님. [조사자: 네. 새겨 들었습니다.] 금계 그런 여성의 관점에서 이분들이 아직도 그 이야기를 하고, 아직도 그 현장에 있어야 되고, 아직도 자기 생존권은 내팽개치고 다니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 부분을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사회가 이런 문제를, 우리들한테 트라우마 치유를 해준다면은 그런 거예요. -중략- 이게 아직도 개인이 내가 얘기해야 되고, 내가 어디 가서. 금계 인자 우리는 과거에는 그랬거든요. 그 어떻게든 알려야 된다. 이것을, 세상 사람한테. 누구를 붙들어잡고든 이런 거였다, 광주는 이런 현실이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왜 우리한테, 우리는 그것이 우리 살아남은 자로서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40년이여.”(2019년 10월 30일 전화인터뷰 A씨(5·18 당시 항쟁 참여 여성 노동자))

항쟁 참여 여성들은 모두 이제부터 '발언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한다. 4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들을 침묵하게 한 것은 군사독재정권이나 비민주적 정권의 물리적 폭압만은 아니었다. 이들을 침묵하게 한 것은 동질적인 내용으로 기술되고 정당화된 '애국 시민'과 '대동세상'의 이름 아래 그들이 설 자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오월 광주의 애국 시민 표상은 개별화된 정체성이 아니라 공동체적 정체성을 함의한다. 80년 이후 운동과 저항의 공동체 속에서 애국 시민의 표상이 형성되었는데 그 원형의 서사를 구축하는 것이 '오월 광주'의 '대동세상'이다. 이 '대동세상'을 묘사하는 기술들 속에는 공동체를 향한 희생과 헌신, 시민들의 자율적 통제와 치안 유지, 도덕적 순결성, 계급과 계층을 막론한 단합 등의 표현이 종종 발견된다. 그리고 이 '대동세상'의 이미지를 구현하는 이들로 종종 소환되는 것이 구두담이, 녀마주이, 고아⁸⁵, 일용직 노동자, '황금동 술집 여성들'이었다.⁸⁶ 그러나 이들은 언제나 '대동세상'을 구현하는 이

85 상무대와 광주교도소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하고 내란중요임무종사죄로 군법회의에 회부된 주요인사들의 명단을 살펴보면 도청 주요 간부 가운데 일용직 노동, 식당 종업원 등이 보이고 기동타격대 소속 구속자들은 고등학생 2명을 제외하면 모두 자개공, 방위병, 샷시공, 양화공, 양복공, 레코드사, 식당종업원, 전파사, 도자기공, 목공, 타일공, 다방, 농업, 나저니리공, 용접공, 일용직 노동자 등으로 직업이 표시되어 있다.(정상용/유시민, 1990, 324-327쪽)

86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를 비롯하여 '5·18'의 기억을 서술하는 대부분의 책에서 반복된 것은 자율적으로 질서를 유지하는 시민들, 도청 앞 광장에서 의 민주적 토론이었다. 그밖에도 '오월 광주'의 공동체를 가장 뚜렷하게 드러내는 표상적 이미지는 도청을 마지막까지 사수했던 구두담이, 녀마주이, 고아들의 의 연합, 나이와 계층과 출신 지역을 따지지 않고 서로 평등하게 만나고 서로를 신뢰했던 시민군들의 관계, 골목마다 술을 걸고 밥을 해다 시민군들에게 날라다 주었던 어머니들의 모습이었다.

미지의 하나로 동원될 뿐 이들의 목소리는 들을 길이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월 광주의 정신을 계승했다고 하는 87년 6월과 2016년 촛불시위에서 '주권자로서의 시민'이 호출될 때 이들은 여전히 배제되어 있거나 타자화된 대상으로 드러날 뿐이다.

2012년 항쟁 참여 여성들의 구술자료집 말미에는 이 구술 자료집 말미에는 구술에 참여한 이들이 나눈 좌담이 첨부되어 있는데(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2012, 331~372쪽) 이 좌담에서 한 연구자가 5·18을 '승리한 역사'로 평가하며 '역사에 대한 자부심'과 '사건의 경약성보다는 그것이 만들어 냈던 경이로움에 대해 말할 단계'라고 언급하자 다수의 여성들이 이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제기하였다. 그 의견의 핵심은 이처럼 오월 광주가 성공한 신화로 서사화될 때 여성들의 목소리는 더 깊이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이 좌담에는 앞서 언급된 '모란꽃 사건'에 대한 대화도 수록되어 있는데 사회를 맡은 연구자가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 논의를 회피하자 역시 여성활동가들과 구술작업 참여자들이 나서 '승리한 역사, 자부심, 이런 언어들에 남성주의적'이라는 견해를 내놓기도 하였다.(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2012, 348쪽) 흥결없는 신화적 역사를 만들기 위해 무엇이 배제되고 지워지는지, 그리고 이처럼 성찰 없는 역사적 평가가 어떤 또다른 억압을 낳는지 말하고자 했던 것이다.(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2012, 349~350쪽)

“저는 ‘민주적인 정권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구조적으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익과 이 다수의 민중들의 이익은 다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국가폭력은 일어날 수 있다’……. 일례로 민주노총을 보면, 민주노총이야말로 정말 민주적인 조직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직 안에서 권력이 행사되고, 구조적으로 입 다물게 하고 자갈 채우거든요. 자갈 채우고, 정말 조직에 충성하게 만들고, 순응하게 만들고, 비판하는 자는 가차없이치고, 그것도 아주 합법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회의 구조 안에서.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권력을 갖고 있는 지도부의 입장이 민주, 민주 정부라 하더라도, 민주 국가로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입장이 얼마나 국민들과 같은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중략- 대부분은 여성들은 주요 의사 결정 구조에서 빠져요. 아주 조직이 크지 않는 한은. 남성 중심의 어떤 회의 구조나 남성 중심의 활동, 이 안에서 여성은 항상 그냥 끼워주는 존재 [조사자: 그냥 구색 맞추는?] 네, 네. 그렇게 됨으로써 진짜 우리들의 이야기를 할 수 없는, 네. 민주노총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진짜 오히려 더 심할 수도 있어요. 워낙에 조직이 남성 대공장, 대기업 중심이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바닥에 있는 여성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목소리를 낼래야 낼 수가 없지요. 내도 인정도 안 해주고. -중략- 제가 91년인가, 아 99년. 99년 1월달에 서울지역 여성노조,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 조직 사업을 했는데. -중략- 서울지역 여성 노조 했었는데, 민주노총이 우리 진짜 전혀 지원 없었어요. 그냥 우리가 자력갱생. 오히려 제가 집에서 교통비 갖다 쓰고. 사업비도 없었고.”(2019년 10월 서울 시내 모 카페 B씨(5·18 당시 항쟁 참여 여성 노동자))

구술에 참여한 여성노동자는 민주적인 정권이 들어서면 5·18과 같은 폭력이 사라질 것 같냐는 조사자의 질문에 위와 같이 대답하였다. 민주노총에서의 자신의 경험을 예로 들어 합법의 영역에서 구조화된 폭력들이 어떻게 폭력을 은폐하고 여성과 같은 특정대상들을 배제하는지 자신의 경험을 통해 구술하였다. 특히 여성 구술에서는 '모두가 평등한 공동체였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진술이 종종 발견되며, 이후 사후 보상 처리 과정에서도 자신의 피해를 국가적 시스템이 승인한 방식으로 입증할 수 있는 대상만이 피해를 보상받고 피해를 보상받은 이들만이 당사자성을 획득하게 되는 구조적 모순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남편이 너무 폭력 해가지고 이렇게 5·18 유공자여가지고 그 가정이 좀 힘들어했던 분이 계시는데 근데 그분이 남편이 저기가 안 됐네요. 폭력으로 상대를, 누구를 이렇게 그 뭐 뭐지, 이랬으면 그 뭐니까, 칼을 들고 [조사자: 상해.] 응, 상해를 입혔나봐요.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그분이 망월 묘지에 못 들어간 거예요. [조사자: 아, 돌아가셨는데?] 응. 일처구니 없는 거야. 그니까 이 사람이 제 정신이 아니었어, 그니까. 가족들이 그제 막 화가 나가지고 엇그저께 저한테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중략-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무 말을 못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서 저를 잡고 막 그렇게 이게 과연 5·18이 이렇게 하는 게 맞냐 이러는 걸 제가 좀 너무 힘들었거든요. -중략- 말이 안 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러는데. 근데 뭘 법이 이렇게 복잡하더라고. 금계 이 사람

이 충분한 5·18 때문에 그 상처, 그래갖고 그 가족이 완전히 그렇게 고생을 해갖고 뿔뿔이, 부인도 막 얘기들하고 막 밖으로 나가버리고 그랬는데 그 애들이 이랬으면 아버지가 왜 못 들어와야 되냐 막 이러면, 이렇게 했다고 그 아내가 이야기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2019년 10월 30일 전화인터뷰 A씨(5·18 당시 항쟁 참여 여성 노동자))

“그 광주 이후에 녀마주이들이 안 보인다라고. 그래서 그때 다 우리 앞서서 먼저 가셨구나, 다들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조사자: 그게 약간 죄책감이나 이런 걸로.] 네, 그랬죠. 그래서 다들 그냥 이렇게 [조사자: 말을 안 하고.] 네. 몇 십 년이 지나서 이제 말하고, 진짜 미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미투 분위기, 여전히 가장 우리 사회에서 약자인 여성들이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잖아요. 저는 그것이 광주를 얘기하는 데, 그니까 앞의 명망가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바닥에 숨 죽이고 있었던 목소리들이 올라오기 시작한 계기가, 더 적극적으로, 미투가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중략- 맞아요, 애국시민 얘기 많이 했었어요. [조사자: 애국시민이요?] 네. [조사자: 어떤 의미로 이야기하셨어요, 그때? 그리고 지금은?] 저는, 저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 그 당시에 국가, 그 당시의 정부는 우리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주체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는 정말 민주적인 국가였던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 민주 노조 이런 것들은 하나의, 한 맥락으로, [조사자: 민주 노조, 민주 국가.] 네, 네. 민주 노조, 민주 국가, 민주주의 이걸 저는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대상화되고, 폭력의 어떤, 진짜 폭력의 대상이었던 거잖아요, 광주 시민들이. 노동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본에 의해서, 정권에 의해서 그거는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진짜 노동운동 하는 내내 민주주의는, 민주 노조는 그래서 중요하고 정말 바닥의 많은 다수의 노동자나 다수의 조합원이나 이런 이런 목소리가 드러내야 되고, 중요하고, 그런 생각이 늘 있었어요. [조사자: 그때의 애국이라는 건, 바라는 민주주의, 민주 국가, 좋은 나라를 향한 열망, 열정 이런 걸까요?] 네, 네. 그런 거예요.” (2019년 11월 5일 서울 시내 모 카페 B씨(5·18 당시 항쟁 참여 여성 노동자))

5월 광주의 광장에 대한 기억 속에서, 특히 시민군의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가장 강렬하게 남은 것은 얼굴도 알지 못하던 여성들이 건넨 주먹밥이었다. 영화 <오월애>에서 인터뷰에 응한 시민군 남성들은 당시 자신들에게 주먹밥을 건넨 사람들을 잊지 못하며, 할 수 있다면 그분들을 모두 초대해서 대접을 하고 싶고, 사실 그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오월 광주의 '대동세상'을 표상하는 대표적 이미지였던 이 '주먹밥'의 주인공들은 수십 년 동안 이미지로만 존재했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었는지, 또 이후 어떤 삶을 살았는지 질문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 다큐멘터리에 등장한 이들의 인터뷰와 구술 자료집을 통해 주먹밥을 만들고 시신을 수습하고 투사회보를 만들고 마스크를 만들고 가두 선전 및 도청 안 홍보와 취사를 담당했던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중요한 것은 분절된 이미지와 파편화된 사건으로서 '성공한 항쟁', '실패했지만 성공한 혁명'의 신화가 아니라 목소리를 가진 이들이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그 장 속에서 어떤 연대의 태도로 그 말을 청취할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다. 여성 구술자들의 발언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항쟁에 참여했던 이들이 항쟁 전에도 그 후에도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들의 '이야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여성구술자들은 5·18만을 따로 떼내어 회고하기보다는 자신의 삶 속에서 이 사건을 설명하려 애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자신의 행동을 5·18 당시의 영웅적 행위로 그려내기보다는 이제껏 살아왔던 자기 삶의 일관성 속에서 자신이 했던 일상적 선택으로 기술한다. 그리고 이것을 특별하고 영웅적인 행위로 설명하기보다는 당시 누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행했던 행동으로 기술한다. 그리고 도청에 남았던 사람들, 결국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들에 대한 기억을 잊지 않으려 애쓰면서 '오늘의 싸움'에 직면하여 자신이 할 일을 찾아가려 한다.

그들은 과거에 고착되거나 화석화된 존재도 아니며 '애국 시민'이나 '이상적 공동체'의 이미지를 구현하기 위해 동원될 파편화된 대상들도 아니다. 오히려 이런 추상적 이미지와 이념적 가치들에 대한 강박과 신화가 확장될 때 목소리는 설 자리를 잃고 더욱 움츠러들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이와 같은 목소리를 듣기 위해 우리가 어디에 어떤 자세로 있어야 하는지 성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4. 연대를 향한 청취의 장소와 당사자성의 확장

폭력을 경험한 이들의 목소리는 어떻게 들어야 하는 것일까? ‘중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구술 청취가 이와 같은 장면의 가장 역사적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껏 우리는 이 목소리를 어떻게 들어왔을까? 한국 사회에서 목소리를 청취하는 것은 역사화되지 않은 사건을 역사화하기 위한 기억투쟁, 정치적 싸움과 운동의 지향성 속에 시작되었다. 이 때문에 드러나지 않은 목소리를 청취하는 것은 그 자체로 ‘너무나 옳은 일’이었고 이 때문에 어떤 자세로 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과 성찰은 지금까지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목소리, 혹은 말은 청취의 장소와 자세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는 것이며 그 해석 또한 이와 같은 조건에 따라 다른 사회적 맥락 위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청취에서 중요한 것은 장소와 위치와 자세다.

다시 ‘중군위안부’의 사례로 돌아가 보면 ‘중군위안부’ 여성들에 관한 서사에서 가장 절정에 해당하는 장면이 대부분 공적 장소에서의 증언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감정을 절제하고 공적 담화에 적합한 언어 규범과 코드로 말해야 하며 오류가 없도록 발언을 조정해야 한다. 자칫 첫 번째 발화와 두 번째 발화 내용이 달라져서도 안 되며 흥분하여 감정을 드러내어서도 안 된다. 감정의 언어를 쓰기보다는 사실 관계를 명확히 드러내는 언어를 발화해야 하는데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증언에 나선 여성들은 자신의 옷을 벗어 신체에 남은 상흔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제서야 공적 담론 장에서 이들의 증언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영화나 소설에 나오는 이와 같은 장면들은 사실상 우리 사회에서 이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청취해왔는지 보여준다. 우리는 모두 검사나 판사나 국회의원들처럼 공적 담론의 장소에 앉아서 그들의 ‘증언’을 듣고 그것의 사실 여부를 따지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래서 폭력의 경험을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고통스런 기억을 환기하는 가운데 반복해서 입증해야 하며 이 입증은 대부분 실패한다. 그리고 이 실패의 책임은 발화자에게 돌아가며 이 때문에 발화자는 다시 더 정제된 발화를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수정과 훈련에 나선다.

우리는 모두 판사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며 그들의 이야기를 법정 진술로 들어야 할 위치에 있지 않다. 그럼에도 이런 이야기를 듣는 한국 사회의 가장 보편적인 태도는 ‘자 이제부터 아주 엄정한 태도로 성실하게 들어볼 테니 정확하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증언해 보세요’에 가깝다. 이런 청취의 태도는 사실상 제도화된 폭력에 가깝다. 이 역시 말문을 닫게 하는 폭력의 지속이며 그래서 페미 정치를 주장하는 최근 젊은 페미니스트들이 ‘내가 말한다. 이제 들어라. 나는 싸워야만 한다’고 외치기에 이른 것이다.((해일 앞에서), 2019)

오키나와 주민들을 대상을 ‘위안소’나 ‘위안부’로 불리던 이들에 대한 기억을 구술 조사해온 홍윤신씨는 오키나와에서 ‘위안부’로서의 기억을 안고 살았던 배봉기씨에 대한 오키나와 주민들의 태도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⁸⁷ 이들은 배봉기씨에게 ‘당신은 이제 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당신들을 기억한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말하겠다’고 말하고 배봉기씨의 곁을 조용히 지켰다. 배봉기씨는 해방 후에도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했고 오키나와가 일본에 반환되는 시점에 자신의 거주 이유를 밝히고 일본 정부로부터 이를 승인받기 위해 불가피하게 자신의 과거를 아웃팅해야 했다. 오키나와의 주민들은 일본 제국주의와 미군들의 점령 등의 경험을 공유했고 이 공유된 경험 기억을 바탕으로 배봉기씨에게 어떻게 연대해야 하는지 성찰할 수 있었던 것이다.

“자신의 고통을 말하지 못한 상황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지식을 생산해낼 수 있을까요. -중략- 일관된 증언을 요구해온 우리들의 태도 자체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던 가해성을 깨달아야 해요. 이 증언은 거짓이지 않을까, 시간이 지나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재단하게 되는 시선도 생기게 되어요.”⁸⁸

〈외롭고 높고 쓸쓸한〉에는 항쟁에 참여했다가 상무대에 끌려가 모진 폭력을 경험해야 했던 여성이 상무대터를 방

문하는 장면이 나온다. 카메라는 그 여성을 클로즈업하거나 뒤쫓지 않고 먼 발치에 머무른다. 이 영화에서 여성 인터뷰이들을 대하는 카메라의 태도는 지극히 ‘조심스럽다’. 그리고 말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이 말을 전달해도 될까를 고민한다. 그리고 이 발언이 매개될 때 이 말을 했던 사람들이 매개된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고민하면서 말을 선별하고 배치한 흔적을 엿볼 수 있다.

폭력을 경험한 이들의 말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이 웅크려 앉아 있다면 그들의 위에 서서 질문할 것이 아니라 그들과 같은 높이로 앉아 그들이 말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다. 물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말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거나 그들이 만든 장소로 가서 기다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말이 진실인지 여부를 따져 묻거나 정확하지 않은지 검열하거나 객관적인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 이런 모든 자세는 애초에 발생한 폭력의 연장선상에 놓인 태도들이다.

“공계 지금 우리가 용어 자체가 되게 불만이 많았던 게 우리는 항쟁, 항거였거든요. 그 불의에, 불의에 항거를 했는데, 어느날인가는 민주주의 무슨 저, 저기로 바뀌진 거예요. [조사자: 민주화운동.] 민주화운동. 이런 과정들이 다 그 박사라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가서든지, 그것이 항쟁 기간 동안에 어떤 모든 시민들이 항거를 한 거잖아요. 항거. 근디 뭐 저거 용어 자체가 어느 날인가 민주 시민이 돼 버리고, 이렇서 이렇게 그냥 그 부드러운 거 있잖아요. [조사자: 순화되어 버리는 거?] 네 순화되어 버리는 거. 이런 용어 같은 것도 되게 우리가 지금은 그런 것들도 그것이 과연 민주주의라는, 인자 지금 정도에서는 이것이 맞겠죠. 어떤 전체의 어떤 대한민국의 시점에서, 지금 시점에서, 촛불 시민 어떤, 민주주의적 입장에서 보면은 모든 시민들이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때는 그런 것도 막 용어가 어느 날인가 그렇게 막 희석되어 버리고 그런 게, 그니까 막 부드러운 거 있잖아요. 부드럽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데. 그리고 이거 이 최근에서 이틀이면 광주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지 그 앞전에는 누구 하나 꺾 소리 못했잖아요. [조사자: 네, 네. 그래서] 근게 이게 지금, 저는 어디 가서든지 그런 것들이 불합리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왜 느끼들은 그렇게 뭐든지 그렇게, 느끼 관점에서는 그것이 좀, 어, (웃음) 또 내가 자주 다른 장면으로 가 버린 것 같아서.” (2019년 10월 30일 전화인터뷰 A씨(5·18 당시 항쟁 참여 여성 노동자))

“전화했더니 엄마가 절대 밖으로 나가 돌아다니면 안 된다고. 그리고 이틀인가를 **이 집이 있었어요. 이틀인가 있다가 공장에 오니까 나 죽었다고, 죽은 줄 알았다고. 광주는 그렇게, 기억에 그렇게 시작이 됐다라고 기억이 되고. 그래서 **이집에 있었던 그 이들의 시간이 저한테는 정말 부끄럽고 막 그런 기억으로 몇 십 년 동안 [조사자: 아 그 이후로요?] 네네. 있었어요. 굉장히 부끄럽고 아 정말 비겁하다. 왜 거기 **이집에 있었나 그런 생각들. 어머니가 아무리 그랬어도 나왔어야 되는데 막 그런 생각들이 들고. 그래서 그때 **이 집에서 나와서 공장에 들렀다가 저 혼자 금남로를 왔는데 군인들이 이렇게 우체국으로 이렇게, 이렇게 쪽 이렇게 들어왔는데. -중략- 우리가 총소리 들은 그 이튿날 이제 소문이 확 퍼지잖아요. 이제 소문이 확 퍼지면서 시체가 그 시외버스 터미널 거기 다 쌓여, 쌓였다. 그렇게 막 소문이 돌았고 그리고 나서 공장도 인제 쉬었죠. 속 우리는 기숙사에서, 양쪽 기숙사 인근의 조합 한 20여 명, 15명에서 20명 정도가 날마다 도청 앞에 나와서 같이 이제 걸어서 한 시간 정도,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 도청까지 걸어와가지고 집회하고, 만약 시위대가 상무대로 간다 그러면 거기까지 같이 갔다가 다시 또 마무리집회까지 하고 다시 기숙사로 돌아오고. 이제 날마다 인제 그렇게 한 거죠. 또 중간에 이제 ***랑 같이 양림동에 있는 기독교병원 거기도 가서 막 같이 현혈한다고 줄 서서 기다리기도 하고. 이런저런 것들 같이 이렇게 한 거죠. -중략- [조사자: 그때 그 보면, 바깥에서 당시에 광주 시민들을 북한과 연결짓는거나 빨갱이 마 이렇게 생각한다는 건 알고 계셨어요? 신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막 그렇게 몰았는데 저는 그 당시에 안 믿었던 거 같아요. 그리고 그 방송하는, **는 진짜 몇 구간에서는 믿었다고, 옛그제 올라와서 그렇게 이야기 하던데 저는 사실 그런 거 잘 안 믿었어요. [조사자: 그 믿었다는 게 TV 방송 같은 데서 하는 그런 거요?] 진짜 이제 그 방송하던 사람이 잡혔다고 했을 때, [조사자: 아, 저 간첩으로 잡혔다고 했을 때?] 네. 그렇게 했을 때 그걸 **는 믿었다고 하더라고요. [조사자: 아 저 사람 간첩이구나, 그렇게?] 네, 네. 근데 저는 진짜 그것에 대해서 안 믿었던 것 같아요. 간첩으로 몰고 있는 거다. [조사자: 그런데 시민들이 잡은 거잖아요, 어쨌든. 그 간첩으로. 그러니까 저건 잘못된 건데,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요?] 네. 근데 그 시민이, 우리 쪽 사람이, 우리 시민이 아니고 저쪽에서 보낸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도 다 있었어요, 그때도.”

(2019년 11월 5일 서울 시내 모 카페 B씨(5·18 당시 항쟁 참여 여성 노동자))

87 홍윤신(와세다대), 〈기록, 기억, 오키나와의 위안부〉, 전시 『기록 기억』 연계 행사 강연회, 2019년 3월 16일, 서울도시건축센터 2층 세미나실; 전시 『기록 기억: 일본군 ‘위안부’ 이야기, 다 듣지 못한 말들』, 2019년 2월 25일 ~ 3월 20일, 서울도시건축센터,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주최, 서울대 정신성 연구팀 주관; 전시 도록 『기록 기억: 일본군 ‘위안부’ 이야기, 다 듣지 못한 말들』, 2019; .

88 이정규 기자, 〈‘최초의 위안부 증언자’ 배봉기와 ‘위드유’한 오키나와 사람들〉, 『한겨레신문』, 2019-03-17, m.hani.co.kr. (2019-11-01);

“***언니가 함께 이제 카톨릭 노동 청년회 지오씨 활동을 하신 본인데 [조사자: 지오씨, 카톨릭노동청년회.] 카톨릭 노동 청년회. 그런데 그 언니 같은 경우가 아마 도청 안에 들어가서 식사, 취사조로 활동을 했는데 그 전혀 이렇게, 그렇게 한 것으로 자기는. 그래도 부채감이 많아서. 그때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환경운동단체에서 활동하고 계세요.” (2019년 11월 5일 서울 시내 모 카페 B씨(5·18 당시 항쟁 참여 여성 노동자))

“하루 12시간 일했어요. 보통 휴무는 한 달에 두 번. 시골에서 농사짓는 것보다는 편했어요. -중략- 유니폼을 입었는데, 남색. 폴리에스테일이 많이 들어간 천이어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기름때가 많이 묻었거든요. 기름때가 많이 묻었는데 일부 몇몇 조합원들 같은 경우에는 칙칙한 색이 싫어서 이렇게 칼라가 있었는데 칼라 위에다가, 칼라 위에다가 흰색 칼라를 면으로 해서 덧대가지고 깔끔하게 다림질 짝 해가지고 입고 그랬어요.” (2019년 11월 5일 서울 시내 모 카페 B씨(5·18 당시 항쟁 참여 여성 노동자))

“둘이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래 노동문제 정말 심각해. 내가 12시간 일했는데 연탄 때고 둘이 남동생하고 자취를 시작했잖아요. 연탄 때고 뭐 어찌고 나면은 우리 두 사람 생활하는 돈이 안 돼 가지고 다시 부모님한테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밤에 일하면서 너무 졸립기도 하고 피곤하고, 이렇게 내가 열심히 일 하는데 왜 내것은 없지? 왜 남는 게 없지?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미래를 위해서 준비도 하고 그럴 수 있는 정도의 돈은 돼야 되는데 왜 이리 안 되지? 이런 의문이 들었던 거지요. 그래서 노조 같이 하자 이렇게 합의를 하고 노조 가입도 하고 그렇게 사실 출발이 됐고.” (2019년 11월 5일 서울 시내 모 카페 B씨(5·18 당시 항쟁 참여 여성 노동자))

여성 참여자들의 구술에서 이들은 5·18의 국가적 기념과 보상 문제, 혹은 5·18을 신화화하면서 성찰하지 않는 이들의 문제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언한다. 그리고 5·18 당시 자신의 행동만이 아니라 그 전과 후의 삶, 특히 오늘의 자기 모습을 적극적으로 드러낸다. 이들에게 5·18의 기억은 현재와의 연결고리 속에서 재구성된다. 그래서 <외롭고 높고 쓸쓸한>에 등장한 여성노동자들은 세월호와 강정과 성주 사드 배치 반대 싸움에 연대한다. 이들은 5·18을 국가의 것으로 귀속하거나 국가가 전유하는 데 반대하고 오월 광주의 경험을 훈장으로 삼으려 하지도 않는다. 이들은 죽은 이들을 기억하면서 현재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들의 죽음을 목격했던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일은 무엇인가를 질문한다. 이 질문은 때론 강박적이며 이들의 삶을 고단하게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은 현재의 삶 속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또다른 누군가의 옆에 서는 연대를 통해 여전히 스스로의 정치적 장소로서 '광장'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5. 나오며: 당사자성의 확장

“5·18에 대해서는 중학교 역사 시간, 이럴 때 [조사자: 교과서에?] 네, 네. 교과서에서 처음 배웠거든요. [조사자: 뭐라고 나왔어요, 교과서에서?] 그때 교과서도 교과서고 선생님들이 그런 거 배울 때, ‘화려한 휴가’ 나왔을 때 그때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그때 그때 보고 처음 알게 된 것 같고. -중략- 교과에서 그냥 5·18의 사건 전개 이런 식으로 배웠던 거 같은데. [조사자: 역사 시간에? 그러니까 어떤 감각으로, 어떤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그때?] 저는 그때 그 교과서에서 배우면서 그 지식채널e에서 막 그렇게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는 진짜 군사정권 이런 게, 전두환 개새끼다 이렇게 딱 제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거 하나랑 시민들이 되게 윤리적이었다, 아니면 시민들이 되게 푹푹 잘 뭉쳐가지고 되게 되게 힘든 상황이었었는데 막 시청에 아주머니들이 막 주먹밥 갖다 주면서 막 힘내라고 했다 그러면서, 와 정말 멋지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 그거랑. 네. 그런 식으로 거의 기억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중략- 지금도 거의 똑같이 남아 있어요.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책을 찾아서 읽어보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조사자: 5·18이 지금 자기의 삶에, 자기 삶하고 연결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조사자: 그럼 그건 과거에 있었던 그냥 역사적 사건?] 네. 근데 이제 그거에서 이제 배워야 될 건 있다. [조사자: 배워야 될 교훈이 뭐라고 생각해요?] (웃음) [조사자: 그때 무슨 사건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부가 잘못된 사건이다. -중략- 민주화 운동이나, 정부가 잔인했던 사건이나 하면 둘 단테 저는 후자가 더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정부가 그렇게 잔인했는데도 그때 시민들 나름대로 서로를 지키면서 되게 잘 이겨 냈다고 했구나.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려고 했구나. 그런 거? [조사자: 한국 사회에서 다시 그런 일은 없을 거라

고 생각해요?] 음.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부 쪽에서 그렇게까지 사람을 때려 죽이진 않을 거다. -중략- 고등학교 때는 잠깐 영상만 보여주고 넘어가는 정도. 영상 잠깐 보여주고 ‘너네 다 봤니? 그럼 감상문 쓰고 넘어가자’ 뭐 이런 정도. 그 보여주는 영상이 지식채널e를 또 보여줬던 것 같아요. 몇 년 동안 계속 같은 걸 보여줬던 것 같은데. (웃음) 그리고 ‘화려한 휴가’를 한 번 왜 시험 끝나고 진도 안 나갈 때 한 번 틀어주신. -중략- [조사자: 친구들이랑 5·18 이야기 한 적 있어요?] 없는 것 같아요. [조사자: 어느 정도의 감각일까, 5·18이? 예를 들면 5·18이랑 안중근 의사 항거 이런 거랑 비슷해요?] 아니요. 그래도 5·18이 저한테는 훨씬 최근같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미 그 일이 났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저한테 시기적으로 그렇게 멀게는 안 느껴져요. [조사자: 그러니까 식민지 시기 그 정도는 아니고.] 네 그 정도는 아니고. [조사자: 그럼 4.19이랑은 비슷해요?] 네, 4.19랑은 비슷한 것 같아요.”

(2019년 10월 서울 모처 20대 중반 여성K씨 구술)

“저는 일단 교과서에서 보고 그 한강 책 읽고 더 많이 알게 됐어요. [조사자: 교과서에서는 언제 봤어요?] 고등학교 때? [조사자: 고등학교 때? 역사 시간에?] 네. 한국사 시간에. [조사자: 어떻게 배웠어요?] 가르쳐주시진 않았구요. 그냥 한국사 시간에 그냥 역사에 대해서 이건 어떤 사건이었고 이건 어떤 배경이 있었고 이런 걸 전혀 가르치지 않았고, 그냥 그냥 교과서에 실려 있는 거 그냥 읽다가 봤어요. [조사자: 아. 처음 봤을 때 어떤 사건이라고 이해했어요?] 되게 이상한 사건이라고, 이상한 사건이다. 왜, 왜, 왜 아무도 안 알려주는 사건이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 수업시간에 안 알려주니까. 수업시간엔 고조선까지만 알려주고 근현대사는 당연히 애들이 안다는 듯이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왜 이걸 안 알려주지? 이라고 사실 무슨 생각을 할 겨를도 없었어요. 아 그냥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하는 정도? -중략- 민주화 운동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고등학교 당시에는 아 뭐가 대단한 일이었다. 사실 국가에 맞선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저는 뭐 고등학교 때 국가 뭐 이런 개념도 없고 뭐 그냥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큰 국가라는 폭력에 맞섰구나. 아 정말 대단하다, 이런 정도? -중략- 솔직히 말하면 그냥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엄청난. 물론 ‘소년이 온다’ 보면서 엄청나게 울고 어, 막 너무 감정이 북받쳐서 며칠 동안 어 그러긴 했지만 그걸 읽고 나서 가끔이라도 그걸 떠올릴 때가 있으면 그렇게까지 막 몸으로 느껴진다거나 너무 울분에 찬다거나 그런 감각은 없거든요. [조사자: 본인한테 연결된 지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5·18이요? 어... 당연히 있겠죠. 그분들이 그래도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시스템을 이렇게 만드는 데 어떤 역할을 해주신 거니까. 당연히 저항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옆에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진 않는 거죠. -중략- 페미니즘 이슈나 강남역 살인 사건 뭐 이런 사건들 보다는 확실히 멀죠. 그 사건들이 저항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보다는. -중략- [조사자: ‘소년이 온다’ 읽었을 때 어떤 점이 그렇게 슬펐나요?] 그 왜 그 부분 있잖아요. 당신들은 30센치 자가 들어왔다는 걸 말할 수 있겠냐고 하는 부분을 읽고 나서 책을 덮고 며칠 동안 안 읽다가 다시 읽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애들이랑 이런 일이 있었는데 왜 몰랐지, 왜 아무도 안 알려줬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냥 다들 그런 분위기였어요. 뭔가, 뭔가 토론을 한다기보다 애도를 한다는 느낌? 뭔가 그렇게, 그렇게 진행됐던 것 같아요, 토론이. -중략- 말도 안 되는 국가폭력에 맞서서 자기들끼리 그 조그마한 공간에서 가족처럼 함께 서로를 지키기 위해 싸운 운동이라고 말해줄 것 같아요. -중략- 북한군이 해서 왔거나 안 했거나 사실 그게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5·18이 왜 일어났고 그 사람들이 무엇을 목적으로 했는지가 중요한 거지, 그게 당연히 진실은 아니겠지만 그게 설령 진실이라 하더라도 진실이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 (2019년 10월 서울 모처 20대 초반 여성S씨 구술)

“5·18에 대해서는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서 배웠어요. 중학교 때요. -중략- 역사 선생님이 5·18의 명칭에 관해서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교과서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데선 다르게 부르기도 한다. 그런데 그걸 뭐라 그랬나, 그니까, 민주화운동? 그니까 폭동이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조사자: 광주사태?] 네. 광주사태나 뭐 그런 게 아니라 민주화운동이 맞다, 그런 식으로 쌤이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중략- 저를 처음에 가르쳤던 학교 쌤들도 다 어, 전두환부터 시작해서 이 군부독재가 ***해서, 이 광주는 고립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했고 그래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들이 다가 아니다라고 중고등학교 때까지 배웠던 것 같고, 고등학교 때도 쌤이 그 파트 가르칠 때는 좀 이렇게 걱정적으로 가르치셨던 것 같아요. 교과서 내용 말고 이거는 이런 식으로 바라봐야 한다, 이런 관점 같은 거를 많이 보여주셔서, 애들도 다 아, 역사는, 특히 5·18은 이 교과서 내용이 아니라 이렇게 바라봐야 하는 내용이 있구나를 생각했고, 그 뒤에도, 지금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거 같어요. 영화를 보거나 해도 그 뭔가가 가려진 진실이 있는 그런 사건이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네. -중략- [조사자: 5·18 하면 떠오르는 게 뭐

예요? 전두환. 탱크. 금까 아까 국가폭력이라고도 했는데 금까 시민들을 죽이는 그런 장면들이나 영화에서 많이 봐서 그런지 시민들의 저항보다는 금까 대학의 민주화운동을 생각하면 저항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를 것 같거든요. 근데 5·18은 전두환이나 아니면 헬기로 죽였다는거나 아니면 탱크로 밀고 들어갔다거나 이렇게 이 가해자들의 이미지가 더 센 것 같아요. [조사자: 5·18문제는 이제 다 해결된 거라고 생각하나요, 한국 사회에서?] 아니요. 안 됐으니까 계속 계속 계속 회자가 되는 것 같아요. -중략- 물론 저한테 강남역 10번 출구 사건 같은 것들보다는 먼 사건이에요. 많이 먼 것 같아요.” (2019년 10월 서울 모처 20대 후반 여성C씨 구술)

“제가 학생운동 인터뷰하면서 느낀 건데 다들 언제 처음 봤다, 언제 처음 알게 됐다 이런 게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숨겨졌다가 그렇게 알게 된 게 아니라서 장면으로 기억되지 않거든요? 그냥 교과서에서 봤죠. [조사자: 중학교 때? 아니면 고등학교 때?] 그런 것도 잘 기억이 안 나고요. 그냥 역사 교과서에서 배웠겠지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알고 있는 상태라서, 네. [조사자: 그럼 어떤 사건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때는? 아님 지금은?] 국가폭력이라는 생각은 못했구요, 그때는, 옛날에는. 그냥 민주화운동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어요. [조사자: 그때 이해한 민주화운동이라는 건 독재정권을 몰아내는 건가요?] 네, 네. [조사자: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나요?] 아니요.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중략- 4.19보다는 가까워요. 왜냐하면 5·18은 증언하시는 분들의 나잇대가 저희 부모님들과 멀지 않으니까. 제가 영상으로 접하고 이랬잖아요. 그 구술집도 보고. 80년대라고 이야기하면, 그래도 80년대 이야기는 최근까지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아주 멀지는 않은 느낌이에요. [조사자: 본인이 5·18이라는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드나요?] 연결이요? 자랑요? [조사자: 네.] 연결? 그니까 세월호나 강남역이나 이런 거는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그래도 강하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조사자: 그럼 5·18은 부모님 세대의 어떤 사건처럼 느껴져요?] 네. -중략- 키워드는 대동사회 뭐 이런 것 같아요, 이미지는 제가 그걸 봤거든요. 그거 뭐지? 아, 그 영화가 컸던 것 같아요. ‘화려한 휴가’. 그거 제가 초등학교 땐가 중학교 땐가 나왔어요. 어렸을 땐데 아빠가 영화 보러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그거는 같이 보러 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요원이 그거잖아요. 그, 그, 그 차 타고 다니면서 빈 거리 다니면서 도와달라고 나와달라고 방송하는 그 역할 했잖아요. 그 장면으로, 그 이후에는 그 영화를 보고 나서는 그 이후에는 기억하게 됐던 것 같아요.” (2019년 10월 서울 모처 20대 중반 여성KJ씨와 P씨 구술)

KJ: 저는 당연히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조사자: 교과서?] 네.
P: 저도 교과서로 아무래도 처음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니까 사실 이게 정확하지 않은데 교과서가 먼저인지 아니면 저희 집에 옛날에 역사만화책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근현대까지 다룬 거예요. 거기서 처음 알게 됐는지 불분명한데 어쨌든 책 아니면 교과서? -중략-
KJ: 근데 진짜 두세 줄. 자그마한 사진 세 개와. [조사자: 어떤 사진이었어요?] 기억도 잘 안나요. 너무 조그맣고 어떤 장면인지도 잘 모르겠는, 어쨌든 작은 사진 세 개 밑에 각각 달린 캡션, 뭐 이 정도였어서, 사실 어떤 이미지로 와닿았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조사자: 어떤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음. 뭔가 국가폭력에 대항했던 그런 사건이라고. [조사자: 그 때 그렇게 이해했어요? 지금 그렇게 정리한 게 아니고?] 네, 네. -중략-
P: 비슷했는데, 뭔가 국가폭력이라기보다는 뭔가 독재에 의한 민중의 저항, 그것에 가까운 이미지였던 것 같아요. 딱 떠올렸을 때 뭔가 의병, 약간 이런 느낌이 이미지가 되는? [조사자: 의로운 항거, 뭐 이런 거?] 네, 네.
KJ: 그제 약간 교과서 내에서 앞서 다뤄졌던 민중적인 활동과 좀 연장선상에서 뭐 동학농민운동이라든가, 뭐지? 그 여러 가지의 민중 봉기의 연장선상에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조사자: 교과서에 그렇게 돼 있었던 건 거군요?] 아니요. 제가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아 이 한 학기 전에 이것도 배우고 이것도 배우고 이것도 배웠는데 이번 학기에는 이걸 배우는구나. 이것도 그런 민중 봉기겠구나, 그냥 그런 느낌? -중략-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초중고 역사 교육이 사실 근대는 잘 안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그냥 태조 왕건 이런 거 배우고, 그것만 거의 기말고사까지 태조 왕건만 하다가 갑자기 시험기간 일주일 전부터 지금부터 근현대사 진도 맞춰야 된다 막 이래가지고 엄청 급하게 하는 부분이 항상 근현대사여서 사실 배운다는 느낌보다는 진도 빨리 나가고 있다.
P: 중간고사까지 고려를 하고 기말 때 근현대를 딱 들어갈 시점까지 봐요. 근현대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거의 하지 않는, 시험범위는 안 들어가는. (KJ: 교과서는 읽지만 시험 범위는 안 들어가는.) 진도를 거기까지 못 배요. 그래서 방학이 와요, 보통. 그래서 다음에 국사를 배울 때는 다시 고조선부터 시작하는. (웃음)
[조사자: 그럼 5·18은 두 사람한테 어느 정도의 거리에 있어요? 세월호나 강남역보다는 멀 거고.]
KJ: 근데 저는 오히려 교육을 통해서가 가깝게 느끼지 못했지만 세월호나 강남역을 거치면서 뭔가 그때에서야

어떤 진지한 사건으로 와닿았던 것 같아요. [조사자: 아, 세월호나 강남역 이후에 5·18을?] 네. 그 전에는 그냥 좀 그냥 간략화해서 배웠던 어떤 장면밖에 남지 않았었다면 오히려 세월호를 지나면서 ‘아 이게 그렇게 다르지 않을텐데’ 뭐 그런 생각을 거치면서 진지하게 돌아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조사자: 아, 그래서 찾아보게 되고 뭐 그런 게 있었어요?] 네, 네. [조사자: 아, 그래서 찾아본 거예요?] 네. [조사자: 지금은 어떤 사건으로 이해해요?] 지금은 사실 그런 질문에 대답하기가 뭔가 하나의 이해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그리고 사실 제 또래 애들은 <소년이 온다> 이후에 한 번 더 확 관심을 갖게 된 시기가 있었어서 그때도 좀 많이 찾아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조사자: <소년이 온다> 읽었을 때 제일 인상적인 게 뭐였어요?] 저는 이걸 너무 개인적인 감상인데. 여러 가지 시체에 대한, 1부에서도 시체가 깔려 있는 장면이 나오고 마지막에는 그 유령이 된 아이가 [조사자: 중간에] 네. 네. 이제 시체 더미 속에서부터 가는 장면을 묘사하잖아요. 저는 사실 그게 조금 지금 바로 남아 있는 기억과 인상적이었던 장면을 떠올리려 하면 그 이미지들을, 많이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중략-
P: 근데 저는 조금 더 가깝게 느낀 면은 있었거든요. 원래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죠. 뭔가 그걸 내내 생각하고 살진 않아도 이 시기를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나, 생각보다 되게 가까운 거예요. 뭔가 아주 먼 역사처럼 배우지만 사실 다 겪고, 뭐, 뭐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가끔씩 선생님께서 그런 이야기 해주셨거든요. 이 시기에 나는 무얼했다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전혀 정말 관련 없는 과목 선생님이 가끔씩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었고, 불현듯 ‘아 맞아 이거 되게 가까운 이야기지’ 하고 하는 순간들이 있어서. 물론 세월호나 이런 거 이후에 더 직접적으로 와닿은 부분이 저도 있지만 원래 근데 그것보다 좀더 가깝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2019년 10월 서울 모처 20대 중반 여성 KJ씨와 P씨 구술)

참고문헌

5·18 광주 의거 청년동지회 편. 1987. 『5·18 광주 민중항쟁 증언록』 1, 광주.
5·18민주화운동기록관. 2017. 『5·18 인류의 유산, 오월의 기록-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5·18민주화운동기록물』,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기록관.
5월 여성 연구회. 1991. 『광주민중항쟁과 여성』,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Maurice Halbwachs. 1992. On Collective Memory, Univ.Chicago Press.
강상욱 감독. 2018. 영화 <김군>.
광주광역시 5·18자료편찬위원회. 2001. 『5·18광주민중항쟁사』, 고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획. 2012. 이정우 편집, 『광주, 여성-그녀들의 가슴에 묻어둔 5·18 이야기』, 후마니타스.
김경자 감독. 2017. 영화 <외롭고 높고 쓸쓸한>.
김동춘. 2013. 「분단이 낳은 한국의 국가폭력-일상화된 내전 상태에서의 ‘타자’에 대한 폭력 행사」,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3권, 민주사회정책연구원, 110-141쪽.
김상봉. 2008. 「그들의 나라에서 우리 모두의 나라로」, 『5·18 그리고 역사-그들의 나라에서 우리 모두의 나라로』, 최영태 외, 도서출판 길.
김상봉. 2015. 『철학의 헌정』, 길.
김성일. 2014. 『대중의 계보학-모던 길에서 촛불 소녀까지, 대중 실천의 역사와 새로운 대중의 시대』, 이매진.
김영희. 2017. 「표현의 갈망과 청취의 윤리: 여성 구술의 사회적 역능」, 『상허학보』 51, 상허학회, 51-102쪽.
김 원. 2005. 『여공 1970 그녀들의 반 역사』, 이매진.

김 원. 2006. 「1970년대 여공과 민주노조운동」, 『근대를 다시 읽는다』 2, 역사비평사, 525~561쪽.

김정숙 구술 후 정리, 황선금 글쓰기. 2016. 원풍동지회 지음, 『공장이 내게 말한 것들-민주노조의 전설 원 풍노조 노동자들의 구술 생애사』, 실천문학사.

김정한. 2013. 『1980 대중 봉기의 민주주의』, 소명출판.

김태일 감독. 2011. 영화 <오월애>.

김현경. 2015. 『사람, 장소, 현대』, 문학과지성사.

린다 맥도웰. 2010. 『젠더, 정체성, 장소』, 여성과 공간 연구회 옮김, 한울아카데미.

변주나/박원순 편. 2000. 『치유되지 않은 5월-20년 후 광주민중항쟁 피해자 실상 및 대책』, 다해.

유정숙 외. 2011. 유정숙 구술, 『나, 여성 노동자』, 그린비.

이광영/전춘심 외. 1990. 『광주민중항쟁 증언록 광주여 말하라』, 실천문학사.

이옥지. 2001. 『한국여성노동자운동사』 1, 한울아카데미.

이충각 구술. 2004. 박민나 지음, 『가시 철망 위의 넝쿨장미-여성노동운동가 8명의 이야기』, 지식의 날개.

장윤선. 2018. 『우리가 촛불이다』, 창비.

전남사회문제연구소 편. 1988. 『5·18광주민중항쟁자료집』, 도서출판 광주.

정근식. 2013. 「한국에서의 사회적 기억 연구의 궤적: 다중적 이행과 지구사적 맥락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13-2, 전남대 5·18연구소, 347-394쪽.

정상용/유시민. 1990. 『광주민중항쟁』, 돌베개.

정유하. 2017. 『그래도 우리는 노래한다-민중가요와 5월운동 이야기』, 한울.

주디스 버틀러. 2013. 『윤리적 폭력 비판』, 양효실 옮김, 인간사랑.

천유철. 2016. 『오월의 문화정치』, 오월의봄.

최정운. 1999. 『오월의 사회과학』, 풀빛.

한 강. 2014. 『소년이 온다』, 창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1987. 『1980년대 민주화운동-광주민중항쟁자료집 및 상반기 일 지』 1~4.

황병주. 2006. 「박정희 체제의 지배담론과 대중의 국민화」, 『근대를 다시 읽는다』 1, 역사비평사, 469~507쪽.

황석영 외. 2017.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창비.

<‘5·18 광장’의 여성과 ‘애국 시민’의 경계> 에 대한 토론문

한 순 미 (조선대 인문학연구원)

1

선생님의 글은 5·18연구의 계보학이라는 학술대회에서 반드시 언급되어야 할 주요한 주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광장의 기억을 기록하는 곳에서 소외된 존재는 비단 여성만은 아닐 터이지만, 돌이켜 보면 여성이라는 존재가 망각된 맥락을 짚어보는 것은 혁명의 서사가 담아내지 못한 주변부의 목소리를 다시 들춰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니다. 지나간 역사 기록에서 왜 여성의 존재를 다시 주목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새삼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논문은 부랑아, 행려병자, 여성 등이 역사 기록에서 단지 망각되었다는 이유 때문에서가 아니라 다시 말해야 할 다른 이유를 상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다시 말해, 혁명과 항쟁의 장소에 참여했던 여성, 그 가시화되지 못한 이름을 가시화하려는 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5월 항쟁의 그늘에 묻혀 있던 여성들은 재소환하는 작업은 세월호 사건을 거쳐 미투 운동의 여파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입니다. 젠더의 시각에서 항쟁의 그늘진 곳을 살피면서, 여성의 발화 방식과 서사 차이를 더듬어보려는 시도만으로도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

오랜 동안 구술 기록을 해오신 선생님의 작업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한편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로 구술의 현장에서 전개되는 대화의 내용이 구술 채록자의 의도 속에서 가공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또한 구술에 의존한 진실 찾기가 갖는 한계도 있으리라고 생각해 봅니다. 구술로 발휘할 수 없는 역사적 진실이 여전히 묵묵하게 거주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이 되지 못한 것들, 손짓, 발짓, 몸짓이 모여 역사의 그림을 겨우 그려갈 수 있겠다는 생각에 미칠 때도 있습니다.

구술자에게 정직한 구술, 사실 그대로의 진술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까. 가끔은 우연하게 발언된 말들, 말줄임표

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침묵에서 진실의 파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진실은 준비된 서사의 층위에서가 아니라 갑자기 우연하게 생각나고 떠오를 수도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을 던져 봅니다.

3

지나간 역사적 사건은 구술과 기억, 서사를 거듭하는 동안 새로운 것으로 변형되기도 하고 새로운 사실이 추가, 삭제되어 끊임없이 재해석되기도 합니다. 실증적인 자료 중심의 역사 기술에서 벗어나, 몸과 감각의 역사로 재구성될 여성의 이름을 그려보기도 합니다. 폭력과 저항 사이에서 재현된 여성의 몸은 시민군, 혁명가, 열사라는 이름을 갖지 못한 채로 망각된 역사의 다른 이름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선생님의 다음과 같은 언급은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애국 시민’의 서사가 확장되고 그 신화가 점차 자기 토대를 구축해 가는 과정에서 ‘주권성’의 외부나 시민권의 젠더화된 지점, 국가주의 기획에 내재된 차별과 배제의 문제들, ‘애국 시민’으로 호명된 내부의 이질성 등은 담론장 밖으로 축출되거나 억압되었다.” 여기에서 저는 여성이 발언하는 방식, 다시 말해 여성이 경험과 기억을 서사화하는 방식에 관심이 갑니다. 다음에 인용한 문단은 아마도 그런 서사의 특수한 지점을 언급한 부분인 듯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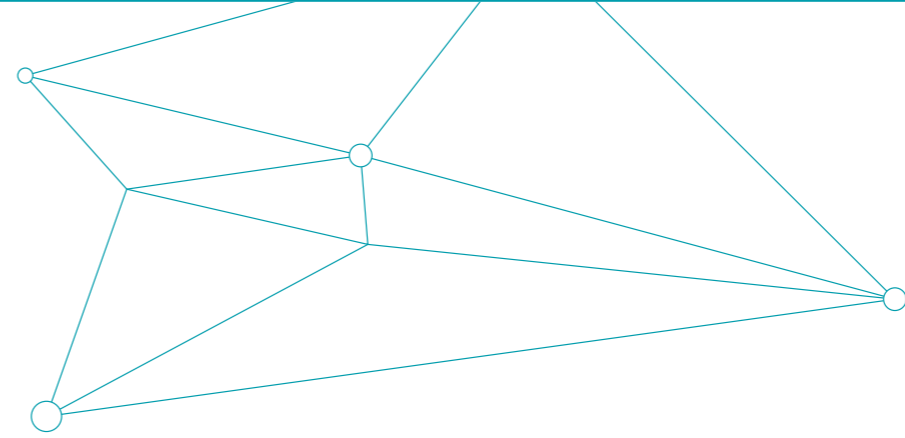
-여성구술자들은 5·18만을 따로 떼내어 회고하기보다는 자신의 삶 속에서 이 사건을 설명하려 애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자신의 행동을 5·18 당시의 영웅적 행위로 그려내기보다는 이제껏 살아왔던 자기 삶의 일관성 속에서 자신이 했던 일상적 선택으로 기술한다. 그리고 이것을 특별하고 영웅적인 행위로 설명하기보다는 당시 누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행했던 행동으로 기술한다. 그리고 도청에 남았던 사람들, 결국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들에게 대한 기억을 잊지 않으려 애쓰면서 ‘오늘의 싸움’에 직면하여 자신이 할 일을 찾아가려 한다.(발표문)

여성의 자기서사라는 것이 있다면 5월 항쟁의 구술 채록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과거의 경험과 기억이 다르게 구성되는 지점이 있으며 지금 여기의 현실에서 어떤 문제의식과 다시 마주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원래의 경험적 사실에서 멀어지는 경우도 있겠다 싶습니다. 언제나 기억이란 과거의 사실을 새로운 각도에서 변형한 결과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요, 그런 과정에서 역사적 사실이 일상이라는 시공간 속으로 용해되는 지점도 있으리라고 추측해 봅니다.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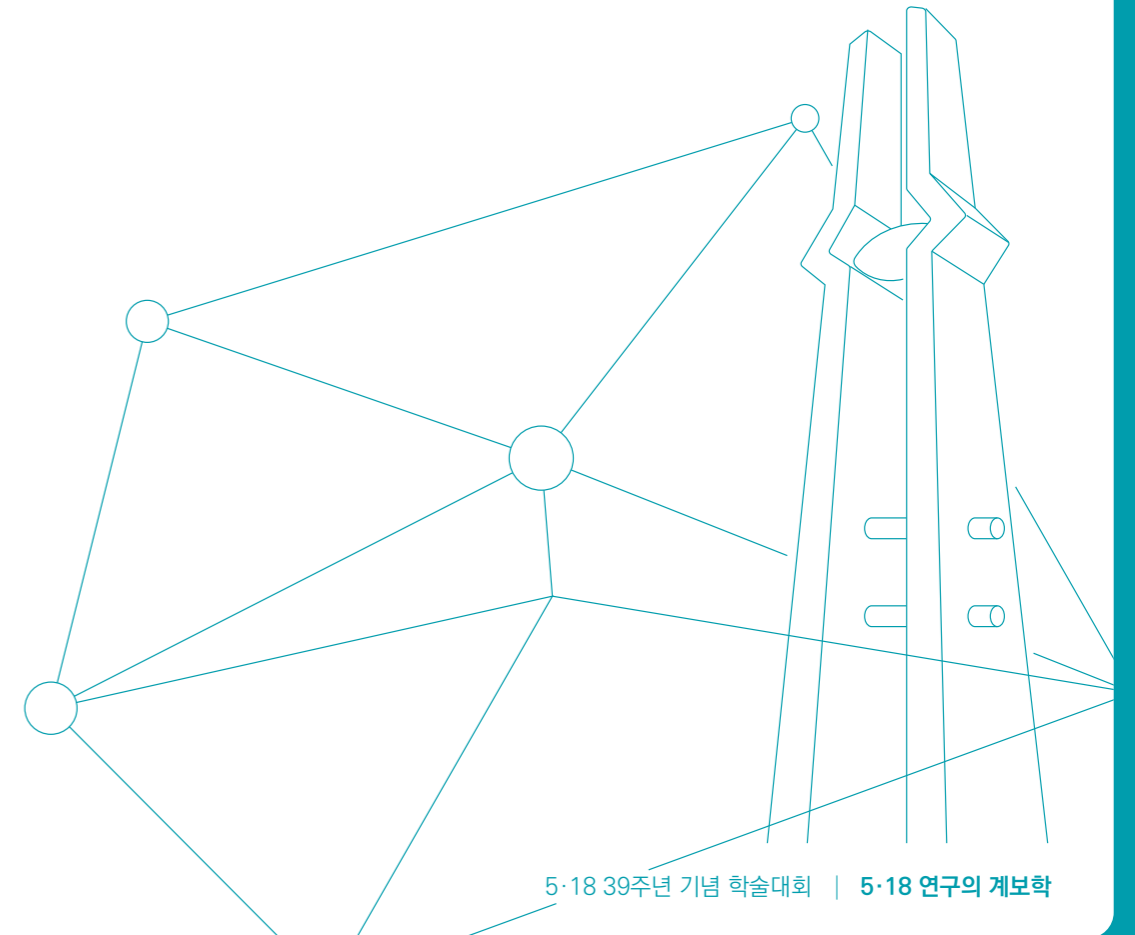
조르조 아감벤은 “~이 아닌 것처럼”이라는 표현으로 드러낼 수 있는 모종의 진실을 말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자기서사와 구술 속에 자신의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자기 자신을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성의 발화와 서사만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사회적 소수자, 역사적 타자들에 게도 그와 같은 것이라는 예감이 듭니다. 아울러 사실을 사실 그대로 담아내려는 말의 표현과 더불어, 소문과 이야기, 괴담 등과 같이 명료한 진실을 가릴 수 없는 표현들이 역사적 진실을 거느리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역사적인 트라우마는 감각과 일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적지 않은 충격과 변화를 줍니다. 세계를 다르게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직접 그 사건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들도 기억의 기억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트라우마에 전염되기도 합니다. 밀양 할매들의 구술 채록에 관한 선생님의 논문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공동체가 겪는 아픔을 서로 나누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연대감은 작은 공동체 안에서의 실천이 어떻게 다른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들과 접촉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역사 기록에서 배제된 여성들은 순한 역사 기억들과 접촉하면서 새로운 의미를 지닌 이름으로 재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발표 5

5·18의 제도화와 기억의 자리



5·18 39주년 기념 학술대회 | 5·18 연구의 계보학

5·18의 제도화와 기억의 자리

박 경 섭 (전남대학교 문화인류고고학과 강사, 5·18연구소 전임연구원)

이 사태를 직접보지 않은 사람은 이 사태를 이야기할 수 없다

- 계엄군(공수부대)의 잔악성을 보았는가?
 - 쓰러져가는 많은 시민을 보았는가?
 - 시민군대에게 호응하는 모든 광주시민을 보았는가?
 - 그 많은 수가 먹을 것에 구애 받지 않을 만큼 시민들의 호응이 컸다는 것을 아는가?
 - 잠깐사이 모금함에 85만5천원이 걸어진 사실을 아는가?
 - 광주시민 전체를 불순분자와 깡패로 본 정부를 인정하는가?
- 이에 우리 광주시민은 울분했다. 그리고 불순분자를 색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또 많이 잡았다. 어떻게 우리가 불순분자인가?

이외 모든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사태를 안다고 이야기할수 없다.

- 한 여고생의 오월 일기 중에서

제도화 이후의 5·18기억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5·18민주화운동관련 기록물에는 당시 항쟁을 기록한 4편의 일기가 있다. 일기에는 공수부대와 계엄군의 무자비한 폭력이 울분과 고통을 통해 드러나 있다. 항쟁기간 동안 구 도청에서 취사반으로 일했던 한 여고생은 자신들의 폭도로 몰린 것이 억울하고 진실이 묻힐까 두려워서 '견딜 수 없어서'⁸⁹ 쓴 일기의 뒷부분에서 '이 사태를 직접보지 않은 사람은 이 사태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적고 있다. 그리고 일기는 여섯 가지 질문을 던지고,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태를 안다고 할 수 없다고 단정한다. 겪어본 사람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 5·18과 그 기억에 대해 연구한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사건을 겪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경험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들을 넘어서 5·18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일기의 저자가 제시한 과제인 사태를 촉발한 공수부대의 폭력, 항쟁 기간 중 시민들의 협동과 시민군에 대한 호응, 시민들을 불순분자와 폭도로 호도한 정부의 부당함과 거짓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 또한 직접 보고 겪지 않은 사람이 안다는 것은 어려운 과제일 것이다. 그래서 일기가 쓰여진지 39년이 지난 지금 저자가 5·18과 우리 사이에 놓은 질문에 답할 수 있을까? 5·18과 관련된 자료는 인터넷을 검색해보더라도 차고 넘치고 5·18 기록관에도 한 사람이 몇 년을 걸려도 읽을 수 있을까 말까한 분량의 자료가 있다.

아무나 이야기할 수 없는 이 사태가 여전히 이해불가능한 형태로 남아 있다면 그것은 자료의 방대해서도 연구가 부족해서도 아니다. 이 발표문에서는 5·18의 이해불가능성이 일차적으로는 뚜렷한 형태가 없고 역사적·정치적 상황과 매개 없이는 드러나지 않는 기억 자체의 특성 때문에, 그리고 항상 '표상불가능성'을 안고 있는 트라우마적 기억(서길완 2015: 36-37) 때문임을, 이차적으로는 기억의 매개, 재현 장치의 권력적 속성 때문에 복수의 기억이 단수화되고 서사적 기억으로 대체되면서 기억의 계승이 어려워지기 때문임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러한 두 가지 제약은 5·18의 제도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5·18 20년을 돌이켜보며 문부식(2002)은 특별법 제정, 보상, 기념사업과 국가기념일 지정 등을 통해 광주항쟁에 대한 기억이 국가의 '공식적 기억'이 되는 순간 위기에 처하게 되었음을 지적하면서 "순결한 정신"이나 이념만이 강조될 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기억은 '광주'의 기억 밖으로 쫓겨나 버리지 않겠는가?"(274)라고 반문한다. 5·18이 국가의 공식화 과정을 민주화에 기여한 역사가 되는 순간 그러한 공식화된 기억에 부합하지 않는 복수의 다양한 기억은 억제되는 경향이 있다. 5·18광주민중항쟁 30주년 관련 토론회에서 김기곤은 5월운동의 과정에서 성취한 제도화의 결과로 인해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공식기억을 획득했지만 상대적으로 '5·18의 기억작용의 지체'로 표현될 수 있는 각종 징후들이 드러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2010: 1). 5·18의 기억과 가치의 재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는 제도화로 인한 기억작용의 지체는 무엇이였을까?

김기곤(2010)에 따르면 기억 자체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기념행위와 같은 매개이다. 기억은 기억의 보유자가 처한 역사적·정치적 상황, 기념행위의 주체와 상호작용에 따라 비공식적 발화의 형태를 취하기도 제도화된 틀에 따라 주도된다. 김기곤은 "제도화는 5·18의 기억과 의미를 고정시키고 그것을 안정적으로 지속시키려 한다는 점에서 제약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도화 이후 5·18의 기억을 현재적 관점에서 확장시켜 이를 현재화하려는 주체들이 넘어야 할 과제"(9)로 삼으며 문화를 통한 기억공간의 활성화에 대안으로 제시한다. 따라서 제도화 이전의 5·18기억이 수행했던 역할과 5·18이 법적으로 인정받고 명예가 회복된 이후의 역할은 상이할 수 밖에 없다. 다양한 기억들은 오월투쟁 과정에서 확립된 서사적 기억에 종속되고 국가와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후원하는 기념행사에서 소환되는 제한적 역할을 떠맡게 된 듯하다.

정호기(2009)는 국가가 제도 실행의 독점적 주체가 되는 경우 "제도화는 불안한 상태의 인식을 공식화하고 경계를 확장시키는 것으로 보이지만, 강고한 성벽을 둘러치고 스스로를 감금하는 역기능을 발현"(455)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저항적 혹은 비공식적 기억이 국가의 공식 기억으로 편입되는 과정과 이후 발생한 현상의 연구의 여백으로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기억의 공식화는 "제도화된 망각"(전진성, 2006: 452)이기도 하며 5·18을 기억한다는 것은 "공식적 기억, 단수화된 기억을 형성해 가는 과정"(김진호, 2010)이 될 수 있다. 제도화 이전에 국가폭력의 피해자 및 항쟁참여자라는 침묵을 강요당하면서 투쟁을 통해 기억의 공식화를 이뤄냈지만 제도화 이후에는 국가의 보존 체제 및 기념 제도와 분리불가능해진 듯하다. 현재 5·18의 기억은 법으로 규정된 관련자와 유공자의 기억이 국가의 기억이 되면서 국가의 보존 체제와 공식적 기념 메커니즘의 틀 안에 갇혀 버린 것은 아닐까? 제도화 이후의 기억투쟁이 존재한다면 정신계승과 진상규명에 부합하는 공식적 기억이 그렇지 않은 기억, 비공식 기억을 억제하거나 또 다른 침묵을 강제하는 상황 속에 놓여있을지 모른다. 이제 제도화를 통해 5·18의 집단적 기억의 내부가 공식적 기억과 비공식적 기억, 단수의 기억과 복수의 기억으로 분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많은 항쟁 증언자들은 겪어보지 못한 사람과 다른 지역 사람에게 당시 상황을 말로 설명하기 어려워 했다. 최정운도 『오월의 사회과학』(1999) 서두에서 필설로 형용할 수 없는 사태에 대해 말로 이야기하고 글을 쓴다는 것의 곤란함과 난감함을 지적한 바 있다. 5·18 민중항쟁의 기억에 대한 연구는 바로 이 '표상(이해)불가능성'으로 인해 기억 자체에 대한 연구보다는 기억을 호출하는 기념의례와 기념공간에 대한 연구(정호기 2015, 정현애 2017)나 5·18을

89 일기의 저자가 2018년 5월 한 라디오와 방송 인터뷰에서 썼던 표현이다.

다른 시, 소설, 희곡, 연극, 춤 등 문학과 예술 장르에서의 비평⁹⁰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기억공간과 문학공간에서 5·18의 재현 장치, 매체와 권력의 문제는 향후 기억연구의 하나의 중요한 초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18의 기억은 트라우마와 분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접근하기 어렵다. 따라서 5·18기억 연구는 트라우마에 대한 연구와 분리되기 힘들다. 그리고 오월투쟁을 통해 제도화와 공식화를 이룬 이후 형식적으로나마 광주시민들의 명예가 회복된 이후에서야 기억은 구술채록 사업의 대상이 되었다. 5·18기념재단은 설립 이후 꾸준히 구술 채록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5·18기록관 또한 기억을 수집하여 저장하는 사업을 꾸준히 실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수집된 구술 자료는 자료집의 형태로 출간(5·18기념재단이 2006년부터 출간하고 있는 『구술생애사를 통해 본 5·18의 기억과 역사』 시리즈 참조)되고 있음에도 연구의 대상이 된 것은 극히 드물다. 이는 기억의 저항적 역할이 사라진 상황에서 그 역량을 상실하면서 공적 아카이빙의 대상이 된 이유도 있고, 연구자의 질문과 해석가능성과 맞물리지 않으면서 기록과 연구가 분리되어 진행된 탓도 있다.

구술 채록 자료는 연구의 대상이 되지 않고 쌓여가고 있고 기억이 담겨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매체를 통한 우회적 기억 비평들이 생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월 일기는 그동안의 기억에 대한 연구를 재고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일기는 5·18 진상 규명과 정신 계승이라는 목적에 종속되어 있지 않은 기록이고 공식적인 서사적 기억⁹¹을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기억의 재현물이기 때문이다.

오월 일기에 대한 독해와 5·18기억 연구⁹²

오월의 그날들을 시민들이 써내려간 일기가 다른 기록물과 다른 것은 사건에 대한 공공기록물이 가진 객관적인 치안의 관점이 아니라 주관적인 시점에서 낯은 언어로 ‘정치의 새로운 감각’(랑시에르 2015)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광주의 오월에 대한 기억과 기록이 의지와 목적에 이끌려 구심력을 가진 채로 피해자와 항쟁에 참여한 의로운 사람들, 영웅과도 같은 이들, 직접적인 피해자와 그 유가족들을 다루었다면, 그동안 총을 들지 않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거의 드러나 있지 않다.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4편의 일기를 기존의 증언들과 기록들과 비교해 보면 21일까지의 공수부대와 계엄군의 인간을 파괴하는 폭력에 대한 공포와 분노에 대한 묘사는 유사하지만 21일 계엄군의 집단발포 이후 시민들의 무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다른 관점과 태도들이 드러난다.

적이 위협하여 생명이 위태로운 사람, 삶과 죽음의 문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무기를 들고 대항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이는 광주 시민들이 총을 들었기 때문에 정당한 항의가 아니라고 말한다. 2010년대 촛불시위를 경험한 사람들은 폭력에 평화로 대응했다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당시 광주는 평화로운 때처럼 질서와 법이 존재한 것이 아니라 죽고 죽임을 당하는 전쟁과 같은 상황이었다. 거기에 어떤 행동이 정당하고 정당하지 않은지, 불법과 적법이 어떻게 분별되는지 알 수 있는 국면이 아니었다. 더군다나 가해 당사자는 인간의 외형을 하고 있으면서도 인간처럼 행동하지 않았다. 광주 시민들이 18일부터 21일까지 거리에서 마주하고 있었던 공수부대는 사람이 아니었다. 많은 목격자와 피해자들이 증언하는 표현처럼 공수부대는 사람의 탈을 쓴 맹수였다. 맹수가 자신의 가족을 친구를 해치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도망가거나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다면 옆에 돌이든 칼이든 총이든 무엇이든 붙잡고 싸울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상황이 그저 한순간이 아니라 광주에서 5월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벌어졌다면? 한 일기에는 이러한 참담하고 가슴 아픈 상황이 고스란히 묘사되어 있다. 그래서 글쓰이는 사랑과 평화를 갈구하는 기독교인임에도 학살의 책임자를 죽이고 싶다고 일기에 쓴다. 그리고 무장을 해서라도 이 고통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느님께 간청한다.

90 5·18의 기억과 그 소설화를 고찰하고 있는 강진호(2016)의 「5·18과 현대소설」을 비롯하여, 『봄날』의 작가 임철우의 소설에 대한 비평이 두드러지는데 2018년에 손미란의 「5월 18일까지의 시간과 공간, '봄날'의 정치학 : 임철우의 장편소설 『봄날』을 중심으로, 김주선의 「임철우 초기 중·단편 소설 연구 : 역사 폭력에 한 트라우마적 기억을 중심으로」과 「국가 폭력의 망각과 상속 : 임철우의 『백년여관』을 중심으로」, 김영삼의 「재현 너머의 5·18, '타자-되기'의 글쓰기 : 임철우의 『백년여관』을 중심으로」 등이 학술지에 게재되었다.

91 5·18항쟁의 공식적인 재현 서사의 골격과 이해의 틀을 마련한 것은 『죽음을 너머, 시대의 어둠을 너머』(1985)이다. 이 책의 목적은 4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에서는 항쟁의 배경을 설명하고, 2부에서는 18일부터 21일까지의 상황을 저항에서 전면항쟁과 시민들의 승리를 다루고, 3부에서는 21일부터 26일까지의 해방기간의 일을 정리하고 있으며, 4부에는 26일에서 27일의 최후 항전에 대해 쓰고 있다. 이러한 구성은 기-승-전-결의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고 고대 그리스 역의 비극의 전형적 모티프를 취하고 있다.

92 이 절의 내용은 『이야기 세계기록유산』(가제)에 실릴 발표자의 원고의 일부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도와주십시오! 천주님, 우리 광주시민을 도와주십시오. 우리들에게도 무기를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5월 19일 일기 중에서)

1980년 5월 21일 오후 1시경 옛 전라남도청을 등지고 있던 계엄군은 금남로쪽의 시민들을 향해 집단 발포하면서 시민들은 오후부터 인근 지역 파출소 있던 재래식 소총을 탈취해 무장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집으로 오는데 우리 시민들이 무장을 하고 M1과 칼빈총을 화순지서와 탄광에 가서 탈취했다면서 공포를 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 드디어 우리 시민들도 무장을 했구나 하는 안도감과 함께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많은 희생을 가져올 것을 생각해보니 앞이 캄캄했습니다.(5월 22일 일기 중에서)

글쓰이는 시민들이 무장을 하여 맞서 싸워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안도했지만 이로 인해 어떤 피해가 있을지 걱정했다. 그는 자신은 사람을 죽일 수 없다는 생각에 총을 들 수 없었기에 싸우는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광주에서 계엄군과 시민군이 싸워야 하는 현실에 그는 울고 말았다. 전쟁 아닌 전쟁 상황에서 공수부대의 인간성을 말살하는 폭력과 학살, 계엄군의 총탄에 쓰러져가는 시민들을 볼 수 없었던 시민들 중 일부는 왜 총을 들어야 했는지, 감히 군대와 맞서 싸울 수 있는지 의문이었을 것이다. 당시 공직에 있었던 사람의 일기에는 평화로운 해결 방법은 없는지, 총으로 인해 다른 피해가 없을지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담겨있다.

새벽에 대학생 3명에게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자리에서 나는 그들에 물었다.

“자네들 통신연락망은 어떤가?”

“자동차로 직접 전달 받고 전달할 뿐입니다.”

“본부는 조직이 되어 있는가?”

“아마 도청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조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자네들이 총기를 소지하였는데 함께 총격은 할 수 없는 상대 아닌가?”

“그러나 총기가 없을 때는 완전 무기력했지만 이제 대항력이 있다고 봅니다.”

“가령 어떤 면에서?”

“우리들의 주장을 유리한 조건하에서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일 그런 조건이 합의되지 못한다면?”

“그러나 저희들 배후에는 많은 시민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님도 아마 저 같은 아들 때문에 나와 돌아다니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젊은 남 녀가 죽고 희생되고 또 군과 대치하고 있는 한 부모님들은 모두 합세해서 지켜 주지 않겠습니까?”

“글쎄! 그렇지만 자네들! 내말을 잘 듣게나! 내가 판단하기에는 도무지 당초부터 비폭력적으로 만일 꼭 필요했다면 차라리 맨손으로 손에 손에 태극기를 들고 폭력에 대한 평화적인 항의나 시위를 유도 했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네. 그러나 어쨌든 사태가 이토록 심각하게 총기를 가지므로서 오는 예기할 수 없는 불안은 빨리 해소되어야 할 것으로 믿고 있어... 자네들은 그 총기를 일정 계통에 반납하고 귀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저희들도 너무 깊이 빠진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물러나는 것도 희생의 값이 없지 않습니까? 아마 금명간에 좋은 타결이 있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마는 정히 우리 뜻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쫓지 않습니까? 한 몸 희생하는 것까지도 각오를 해야 하지요.”

대단한 비장의 결의가 그들에게 서있다.

(5월 22일 일기 중에서)

일기를 살펴보면 그는 항쟁 기간 중에도 충실하게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기에 계엄군의 폭력과 사격으로 인한 피해와 죽음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주변의 동료들로부터 항쟁 상황을 듣고 있었지만 21일부터 오한으로 인해 아프기 시작하면서 주로 라디오 뉴스와 가족이 이웃이 전해주는 소문을 통해 상황을 듣게 된다. 그는 지혜롭고 정직한 시민학생을 믿으면서 비폭력적 문제 해결을 희망했다. 22일 학생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비폭력 평화 시위와 항의를 바라고 있었다.

5월 21일 계엄군과 공수부대가 광주 시내에서 철수한 것은 시민들이 무장을 해서 총격전이 벌어졌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20일부터 광주 시민 대다수가 시위에 참가했고 더 이상 광주시내의 거점들을 확보하면서 사태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무장을 했음에도 계엄군이 퇴각과 동시에 광주를 철두철미하게 봉쇄한 상황을 돌파해서 외부로 나갈 수 없었다. 누구나 총을 들 수 있었고 신분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들린 총에 대한 불안은 커져만 갔다. 광주 사람들 중 일부는 봉쇄 직전에 전남의 각 지역으로 광주 상황을 알리러 나갔다. 목포에서 5월 22일 목포에서 무기를 든 사람들이 탄 버스를 목격한 사람의 일기에는 불안한 마음이 드러나 있다.

오늘 오후부터는 탈탈거리는 버스의 다 떨어진 차창 밖으로 총구를 시민에게 겨냥한 채 돌아다니고 있었고 곳곳에서는 더러 피해를 입는 모양으로 이들의 존재가 불안한 것이 되고 있었다. 대개 이들은 양아치나 녀마주이, 전과자, 폭력배 등 질이 좋지 못한 사람들로써 구성되어 시민들의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위들을 했고...(조한금의 5월 22일 일기 중에서)

하지만 5월 23일 목포청년회의소와 시민사회단체 사람들이 총기와 무기회수에 나섰고 목포역 광장에서 범시민 켈기대회가 열렸다. 고립된 광주에서도 시민수습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제일 먼저 착수한 일이 총기회수였다. 계엄군도 방송과 삐라 살포를 통해 총을 든 시민을 폭도와 불순분자로 규정하고 그렇지 않은 선량한 시민은 집으로 돌아가라는 경고를 되풀이 했다. 하지만 계엄군의 경고처럼 총을 든 폭도는 불순한 시민이었을까?

1980년 5월 20일부터 목포에서 공수부대의 만행을 전해들은 일기의 저자는 “왜적을 향해 총칼을 휘둘러야 할 군인이 양민을 향해 무분별한 행위를 할까” 의구심이 들었지만 광주의 친척들과 통화를 하고 나서 대부분 사실임을 이해했다. 하지만 방송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국내방송망을 타고 흘러나오는 소리는 계엄사에서 발표하는 광주사태에 대한 것인데 금남로는 피바다가 되어 있고 여학생의 유방을 짚았으며 지나가는 시민을 대검으로 찔러죽였다는 등의 모든 얘기는 “유언비어”다, 그리고 일부 불순분자와 폭도 등의 난동 때문에 계엄군은 계속 자제하며 선무활동을 하고 있다고 모든 사태를 폭도와 불순분자의 짓으로 몰아세우며 한마디로 유언비어라고 일축해버리고 있었다.(한 시민의 5월 21일 일기 중에서)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항거하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살상행위에 저항했던 광주 시민들이 21일 계엄군에 의한 집단 발포로 무장하게 된 후 계엄사령관이 담화문을 발표했다. 계엄군은 18일의 평화적인 대학생 시위가 엄청난 사태로 확산된 이유를 “상당수의 타지역 분순인물 및 고첩[고정간첩]들이 사태를 극한적인 상태로 유도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고장에 잠입, 터무니 없는 악성유언비어의 유포와 공공시설 파괴 방화, 장비 및 재산 약탈 행위 등을 통하여 계획적으로 지역감정을 자극, 선동하고 난동행위를 선도”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담화문은 사실과 다를뿐더러 사태를 확산시킨 자신들의 폭력을 감추고, 평화 시위와 난동을 구분하고 시민들의 항거와 무장을 불순분자와 고정간첩의 선동이라고 왜곡했다. 당시 언론의 광주 보도도 계엄군의 담화와 다르지 않았다. 5월 21일 계엄군의 광주 시민들에 대한 경고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지금 광주지역에서 야기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법을 어기고 난동을 부리는 폭도는 소수에 지나지 않고 대다수의 주민여러분은 애국심을 가진 선한 국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선량한 시민여러분께서는 가능한 한 난폭한 폭도들로 인해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거리로 나오지 말고 집안에 계시는 것을 권고합니다...(중략)...자중자 애하시고, 판단성있는 태도로 폭도와 분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엄군의 치안회복을 위한 노력에 최대의 협조 있기를 기대합니다.”

방화를 했고 총을 들었기 때문에 폭도라고 규정하는 것은 순전히 걸치레만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윤리와 법을 어기고 난동을 부린 것은 공수부대였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선량한 시민을 폭도로

만든⁹³ 계엄군은 경고를 통해 폭도와 선한 국민을 구분하려 했다. 이러한 경고는 광주시민들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려는 심리전의 일부였을 수 있다. 퇴각과 동시에 광주를 봉쇄하고 방송과 삐라를 통해 시민들을 압박하여 공동체 내부에 분열을 만들었다. 그리고 광주시민들은 모두 함께 싸웠음에도 총을 든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시민들, 시민군과 일반 시민 사이에는 틈이 벌어졌다(최정운 2012: 206-217). 수습위 내부에는 총기를 반납하자는 주장과 반납하지 않고 협상을 해야 하는 주장으로 나뉘어져 격론을 벌여야 했다. 총을 든 사람도, 항쟁에 참여한 시민들도 폭도라는 누명은 견딜 수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폭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자발적으로 거리를 청소하고 치안과 질서를 회복하려 했으며 도청 내의 불순분자를 색출했다.

우리 광주시민은 총을 들었을 지라도 절대 폭도는 아니다. 우리는 사태수습을 위해 최대한 노력했고 불순분자 색출에 최대한 노력했다. 우리가 폭도가 아니라는 것은 시내의 모든 은행이 무사한 것으로도 알수 있다. (도청 취사반 여고생의 일기 중에서)

계엄군이 물러간 광주가 무질서와 혼란 상태로 묘사되고 시민들이 폭도로 보도되었음에도 해방됨과 동시에 봉쇄된 광주에서 다른 나라의 폭동과 같은 약탈과 폭력과 무질서는 거의 없었다고 알려져 있다. 오월 일기들이 보여주는 것은 폭력 대 비폭력, 선량한 시민 대 폭도라는 계엄당국의 치안적 구별에 대해 항쟁 참여자들이 선량한 시민이면서 폭도이고, 폭도이자 선량한 시민일 수 밖에 없음을 항변하고 있다.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를 통해 틀을 갖추게 된 5·18의 재현 양식과 비교하면 일기 속의 광주는 혼란과 질서가 교차하고 사실과 유언비어, 투사회보와 계엄군의 선전이 양립하는 장이었다. 일기들은 항쟁의 중심부와 주변부, 총을 든 시민군과 들지 않은 시민들 사이에서 기억들은 매우 다양하고 풍부한 모습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주변부의 기억들은 그동안 광주의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고 진실 규명과 정신 계승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었기에 드러나지 않은 채로 묻혀 있었다. 하지만 이제 다른 기억들, 정돈되지 않은 이야기들이야말로 비경험자, 이후 세대들의 5·18에 대한 이해가능성을 더 넓혀줄 수 있지 않을까?

지역공간과 5·18기억의 전승⁹⁴

3년의 농성을 끝내고 협력과 감시 체제로 전환한 ‘옛전남도청보존범시도민대책위’(이하 대책위)가 5·18 민중항쟁을 상징하는 건물인 옛 전남도청을 복원하고자 한 이유는 ‘있는 그대로’, ‘항쟁 당시로’ 복원해서 5·18에 대한 이해를 돕고 5·18의 의미와 가치를 부단하게 학습하는 장으로서 쓰일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역사적 현장을 고스란히 보존한다고 해서 교육과 학습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것이다. 역사적 현장의 보존과 복원의 문제와 5·18정신의 계승과 기억의 전승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 제임스 영(1993)은 아우슈비츠의 폐허와 관련 기념비들의 설립 과정을 검토하면서 시대가 변하고 방문객이 달라짐에 따라 기념비와 그 의미가 변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리고 영은 기념관은 가장 현명한 진로는 “기념관에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환경에서 변화에 대한 수용력을 늘리는 것, 우리의 현재와 맞닿아 있는 현장의 의미를 분명하게 하는 것, 다음세대에 생성될 새로운 의미를 위한 여지를 두는 것”(154)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한 시민단체의 도청 복원 관련 간담회(2017년 9월 12일)에 참석한 한 시민은 복원이 복원과 기억이 제한된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님을 상시시킨다. “복원을 피해 당사자만의 문제로 두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원형 보존 프레임에 갇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5·18국립묘지가 주는 불편함은 의인과 영웅만을 부각시키고 기억하려 합니다. 수없이 이름 없이 죽은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도 중요하지 않을까요?”라는 말처럼 5·18을 기억한다는 것은 당사자들의 몫뿐만 아니라 기억할 사람들, 다음세대⁹⁵ (혹은 이후세대)

93 한 일기는 선량이 시민이 폭도가 되어버린 상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전 시내 파출소는 부서지고 경찰들은 모두 도망가 버렸습니다. 치안이 마비되고 CBS 방송국과 문화방송국 그리고 전일방송과 KBS 방송이 중단되고 교통이 마비되었습니다. 시민들은 폭도로 변해버렸습니다. 군대지정인 아세아 자동차공장을 습격해서 군 트럭과 짐차를 탈취했고 시내를 누웠습니다.”(5월 21일의 일기 중에서)

94 이 절은 『저항과 재현』(2019)에 실린 발표자의 글의 일부를 발표 주제에 맞게 수정하고 다른 내용을 보충한 것이다.

95 여기에서 다음세대는 5·18의 기억과 계승의 측면에서 1980년 이후 출생한 세대로 5·18을 역사적 사건으로 배워서 알고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다만 다음세대 중에서는 유족으로서 당사자이거나 5·18 당사자들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하거나 다른 계기를 통해 자신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나 기억으로 삼은 사람들도 존재할 것이며, 5·18에 관한 인식과 태도에서 광주에서 태어나고 자란 다음세대와 타 지역의 다음세대 간의 편차가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의 몫이기도 하다.

대책위는 “5월을 기억하고 계승해 나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옛 전남도청 원형을 복원하여 보존하는 것이다. 옛 전남도청을 80년 5월 당시 그대로 복원, 보존하여 후대에 물려주어야 한다”(대책위 2017, 「5·18최후 항쟁지, 옛 전남도청 역사탐방」 자료집 12쪽)고 말하며 다음세대로의 전승이라는 복원과 보존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옛 전남도청의 복원과 보존 사업을 통해 나타나는 것은 범접하기 힘든 신성하고 거대한 기념비일 수 있다. 옛 전남도청과 5개의 항쟁 관련 건물을 80년 항쟁 당시로 복원한다고 해서 5·18과 오월정신이 영원히 기억되고 전승되는 것은 아니다. 대책위와 당사자들의 바람처럼 항쟁 당시로의 도청의 복원이 5·18정신과 기억 계승의 장이 될 수 있을까? 해마다 오월이면 잊지 말자고 각오하고 결의를 다지지만 대부분의 광주 시민들은 일상 속에서 5·18을 잊고 살고 있으며 다음세대에게 5·18은 기억이 아니라 일상과 관련이 없는 역사가 되고 있다. 학교에서 공식적인 5·18교육을 받은 다음세대에게 5·18은 송고하고 옳은 것으로 간주되어 어렵고 거리감을 갖게 만든다. 발표자가 2018년 진행한 면담이나 관련 회의에서도 대학생들은 5·18을 송고한 희생, 트라우마와 상처, 성스러움, 금기와 결부시키면서 자신의 삶과 관련된 직접적인 관심과 질문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전라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광주로 진학한 대학생들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광주에서 5·18을 말 하면 안 된다, 잘못 말하면 큰일 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한다.

5·18을 기억하고 오월의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는 요청은 기념사업과 교육에 의지한다. 당사자들은 오월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5·18에 대해 비경험자와 다음세대를 ‘교육시켜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국가에 의한 5·18의 합법화 이후 광주의 다음세대는 공식 교육과 더불어 사적 체험 교육을 통해 5·18의 의미와 가치를 배우지만 자신의 삶과는 무관하게 생각한다.⁹⁶ 김보현(2009)은 ‘88만원세대’에게 ‘5·18 광주는?’이라는 질문을 통해 교과서를 통해 배우는 5·18 민주화운동이 사고와 성찰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다음세대의 무관심과 망각의 이유 중 하나로 공식화와 표준화와 결부된 가치와 의미의 당위성을 가르치는 5·18교육을 지적한다. 발표자가 강의와 면담 속에서 만난 많은 학생들에게 5·18을 스스로 생각하게 만든 것은 영화 <화려한 휴가>(2007)와 <택시 운전사>(2017), 강풀의 만화 <26년>이었고 드물지만 5·18경험자와의 직접적인 만남이었다. 5·18과 동시대에 살았던 이들이 광주를 경험하지 않고도 광주의 비극이 벌어지던 그때 자신이 모른 채로 살았고, 편히 살았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고 부채의식을 느꼈다면 5·18 이후에 출생한 세대들은 돌이킬만한 ‘그때’는 존재하지 않으며 무지와 순진함에 대한 죄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김형중(2019)은 박솔미의 소설 「그럼 무얼 부르지?」를 언급하면서 ‘post 오월 세대’의 등장을 예감한다. 그는 “...5·18 세대와 동일한 시간 항우회의 일원이 아닌 탓에 공식적 기억(지식과 역사적 사실) 너머(혹은 이전) ‘우리 감정’의 토대를 공유하지 못한다”(275)고 쓰면서 정서가 동반되지 않는 기억은 행위로 이어지지 않음을 이야기한다. 원체험을 둘러싸고 비체험과도 연결되는 5·18의 집단적 기억이 어떤 정서(부끄러움, 죄의식, 부채감)와 결부되어 있다면 5·18 이후 세대에게 그 연결지점이 끊겨있고 정신과 기억 계승은 단절되어 버린 것일까? 광주의 적지 않은 기념공간들은 다음세대에게 어떤 감정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것일까? 그래서 김형중은 감정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지만 이후 세대가 어떻게 감정을 가질 수 있는지, 갖게 할 수 있는지 이야기하지는 않고 있다.

스스로 5·18 이후 세대로 위치짓고 있는 유경남은 자신의 세대가 느끼는 5·18과 거리감과 이전 세대의 무거움과 이후 세대의 가벼움에 대해 이야기한다(2018: 326-327). 이전 세대와 이후 세대의 ‘기억한다는 것’에 대한 감각과 의미의 차이를 “5·18세대가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문제와 같이 5·18왜곡의 상황 속에서 1980년 그리 고 이후 기억투쟁(그 안에 있는 자신)의 ‘원형’을 되찾고 싶어 한다면, 5·18 이후 세대는 현재의 시점(자신)을 중심으로 5·18과의 감각(무게감, 거리감)을 표현/실천”(329)하고 있다는 점에서 발견한다. 5·18 이후 세대는 다른 언어적 형상화나 오르골과 같은 상품화를 통해 5·18에 새로운 것들을 덧붙이고 있다. 유경남은 이 또한 5·18의 일부이며 나

름의 기억은 아닌지 묻는다.

오월정신을 계승하고 5·18의 기억을 전승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지만, 이후 세대로의 기억의 전승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영화나 문학 작품을 통해 5·18의 기억을 탐구하는 최근 작업들은 5·18 이후 세대가 이전 세대와 다르게 환기하고 상상하면서 5·18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주목한다(김미정 2017; 루시 양게벤 2018; 배주연 2019). 배주연은 홀로코스트 연구자인 마리안느 허쉬가 트라우마적 역사를 다루는데 있어 직접 체험한 세대들의 기억과 구분하여, 그 이후 세대들의 기억을 ‘포스트메모리’로 개념화한 것에 착안하여 5·18 이후 세대의 기억에 대해 검토한다. 하지만 허쉬의 포스트메모리는 홀로코스트 생존자와 그 자녀들 사이에 생겨나는 ‘전해진 기억’이다. 따라서 배주연은 “그러나 친밀함을 형성하지 않은, 즉 연루의 감각을 가지지 않은 이후 세대들의 기억, 즉 포스트메모리는 어떻게 가능한가?”(154)라고 질문하면서 거리가 있는 공감, 상상적 투사, 정동이 중요한 기억 전달의 매개일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한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 내부에서 생겨나는 포스트메모리와 어떤 정동을 통해 5·18 이후 세대가 갖게 되는 기억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항쟁경험을 전승하고 기억을 소환하는 기억공간을 짓고 운영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이후 세대의 기억 활동, ‘기억 작업memory work’이다. 은우근(2007)의 말처럼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많은 고난을 감수한 당사자는 존중받아야 하며 기념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지만, 기념사업의 궁극적 주체는 국민 일반, 덧붙이자면 다음세대이다. 기억 작업은 경험자의 기억을 전해받거나 이어받는다고 보다는 사실상 도달할 수 없는 5·18의 기억에 상상과 이미지를 통해 가까이 가는 것, 능동적인 접촉이다. 5·18의 집단적 기억의 바깥에 있는 사람이 그 안으로 진입하기는 힘들 것이고, 기억을 가리키는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 상상하거나 공감을 통해 자신의 삶과 연관짓는 것이 ‘기억 작업’일 것이다.

옛 전남도청 복원 과정을 비롯한 기념공간의 설립과 운영에서 나타나는 피해당사자 중심의 서사와 당위적 기억계승 장치, 공식적이고 관료화된 기념행사의 한계를 넘지 못하면 이후 세대로의 기억의 전승, 광주를 넘어선 5·18의 전국화 및 세계화는 요원한 일이 될 수 있다. 옛 전남도청 보존 대책위의 주장처럼 5·18의 역사적 현장을 보존하여 다음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다음세대를 가르치려하기보다 기억하기의 주체, 기념의 당사자로서 다음세대를 존중하고 비당사자들과 수평적으로 접촉하고 소통해야 한다. 역사적 현장의 보존, 사실의 기록과 교육만큼 중요한 것은 5·18이 동시대의 사람들의 삶과 질문과 상상과 연결되는 것, 즉 5·18의 부단한 현재화다. 옛 전남도청 복원을 통해 등장한 기억공간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주도했던 성역화의 길을 걸을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억을 활성화하기 위한 질문의 공간, 성찰의 공간을 여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5·18 기억 연구의 몇 가지 과제와 열은 전망

정신의 계승과 기억의 전승(혹은 전달)의 관계와 양자의 구별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오월운동과 5·18의 전국화 및 세계화의 초점은 진실 규명과 정신 계승에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5·18정신은 민주, 인권, 공동체, 평화라는 추상적이고 공식적인 가치로 규정되면서 구체적인 맥락을 상실하고 다음 세대와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다음 세대가 정신계승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정신에 대한 검토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논쟁적 정의의 형태로 표출된 적이 없었다. 그리고 기억은 5·18연구의 대상이 된 적이 거의 없었다. 기억연구는 기억과 경험이 내포되어 있는 구술 텍스트나 매체를 통한 간접 연구의 형태를 취했으며 구술 기록과 트라우마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따라서 기억 연구는 5·18을 다룬 시, 소설, 희곡, 연극, 영화 등의 문학과 예술 분야에서 비평의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기억의 재현 과정은 정치적일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기억은 뚜렷한 형태를 취하지 않은 채로 개인과 집단 내부에 잠재되어 있다가 발화의 장, 표현 매체를 통해서야 드러나기 때문이다. 기억 연구는 진정한 기억을 탐색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관통하는 정치적 재현 장치로서 기념과 기억 공간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다음 세대로의 기억의 전승에서 포스트 메모리 개념의 확장가능성, 피해자 및 당사자의 가족 내부에서 기억의 전승 문제에 대한 연구 또한 필요하다. 또한 기억의 전승 문제는 5·18교육의 성과와 한계 속에서 공적 교육체제 내에

96 다음 인용문들은 다음세대에게 5·18의 의미에 대해 물었을 때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대답을 잘 보여준다. “5·18은 당연히 기억해야 할 역사이지만 나도 지금의 나와 무슨 연관이 있을까 의문이다. 내가 살아가는 것에 5·18이 무슨 영향을 주고 있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어떻게 역사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에 연관을 지을 것인지 배워왔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든다.”, “오즘은 5·18에 대해 폭동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임시용 시험용으로 암기하고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속에서 5·18광주를 경험할 수 없을 뿐더러 그것들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광주에서 20년 넘게 살았지만 5·18의 과정 그리고 의의 정도만 생각을 했었지 5·18을 다각도로 생각해보고 성찰할 기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5·18이 광주에만 국한되어 있어서 광주만의 역사가 되어가고 있고, 광주가 민주화를 담당하였고 광주는 민주화의 성지라는 것이 강조될수록 다른 지역사람들에게 이질감을 주고 공감하고 소통하기 어렵게 되가는 것 같고...”(전남대학교 2018년 1학기 <5·18항쟁과 민주인권> 수업 수강생들의 글 중에서)

서 교육과 학교 밖에서의 활동을 동시에 검토해야 그 방향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5·18기념시설들을 다음 세대의 시각에서 재검토하여 일부를 변형하거나 운영과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관료적 방식으로 운영되고 당위적 계승을 위한 이미지와 정보로 가득찬 기억공간이 아니라 이후 세대가 참여를 통해 채울 수 있는 여백이 필요하다. 5·18기록이 특정 주체에게 의미를 갖게 하기 위한 혹은 기억에 남게 하기 위한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상무대 영창과 같이 당시와 거의 흡사하게 피해현장을 복원하여 그 상황을 재연하거나 다양한 영상 재현장치(VR, AR과 같은 기술)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장치가 기억의 계승에 효과적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⁹⁷ 그리고 사람들은 일방적인 전수와 계승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기억은 다음 세대의 의지에 반하여 전승될 수 없다. 유경남(2019)은 '5·18기록물의 과제'를 '기억'과 결부시키면 항쟁 이후 생산된 오월투쟁의 기록과 이후 세대가 5·18과 관련하여 생산한 상품, 영화, 예술 작품들 또한 5·18의 기억에 포함될 수 있는 건 아닌지 묻는다. 이러한 문제 제기 또한 5·18의 이후 세대의 기억 연구와 연관되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진성. 2006. 「기억의 정치학을 넘어 기억의 문화사로: '기억'연구의 방법론적 진전을 위한 제언」. 『역사비평』.

정현애. 2017. 「'상무대 옛터'의 5·18기념공간화 과정에 대한 검토」. 『지방사와 지방문화』 20권 2호.

정호기. 2009. 「'5·18'의 기억과 계승, 그리고 제도화」. 『5·18 민중항쟁에 대한 새로운 성찰적 시선』. 도서출판 한울.

제임스 영(Young, E. James). 1993. The Texture of Memory : Holocaust Memorials and Meaning.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최정운. 1999(2012). 『오월의 사회과학』. 풀빛.

참고문헌

김기곤. 2010. 「5·18기념사업, 제도화를 넘는 실천의 지점들」. 〈5·18 30주년, 새로운 지평을 위한 4차 토론회〉 자료집.

김미정. 2017. 「'기억-정동' 전쟁의 시대와 문학적 항쟁 - 한강의 『소년이 온다』(2014)가 놓인 자리」. 『인문학연구』 제54집.

김보현. 2009. 「'88만 원 세대'에게 '5·18 광주'는 희미하고 무덤덤한 과거사?!-'생성'이 없는 '기억'은 사라진다」. 『5·18 민중항쟁에 대한 새로운 성찰적 시선』. 한울.

김진호. 2010. 〈5·18 민중항쟁 30주년 기념 학술발표회: 기억과 증언〉 자료집.

김형중. 2019. 「5·18을 가르친다는 것」, 『저항과 재현』(5·18연구소 편).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뤼시 양게벤. 2018. 「증언의 형언불가능성에서 픽션의 말할 수 없음으로: 광주의 새로운 재현을 지향하는 한국문학?」, 『비교문학』 26권 1호.

문부식. 2002. 「'광주' 20년 후 - 역사의 기억과 인간의 기억: 끼엔, 나디아, 그리고 윤상원을 위하여」. 『당대비평』 특별호.

배주연. 2019. 「포스트메모리와 5·18: 다큐멘터리 영화 〈김군〉을 중심으로」. 〈5·18 민중항쟁 39주년 기념학술교류포럼 '국가폭력의 청산과 정의'〉 자료집.

서길완. 2015. 「기억의 문화적 재현과 기억투쟁-도래하는 과거를 수용하는 트라우마의 능동적 방편」. 『比較文化研究』 제41권.

옛전남도정보존범시도민대책위. 2017. 「5·18최후 항쟁지, 옛 전남도청 역사탐방」 자료집.

유경남. 2018. 「5·18 기억투쟁의 복원 - 연속과 분절 사이에서」. 2018 5·18기념재단 국제학술대회 〈횡단하는 5·18, 세대와 세계의 경계를 넘어〉 자료집.

유경남. 2019. 「5·18 민주화운동기록물의 활용방안과 과제」. 5·18 민주화운동기록관학술대회 〈기록물로 본 5·18과 김대중〉 자료집.

은우근. 2007. 「5·18기념사업에 대한 하나의 반성」. 『5·18 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5』. 5·18기념재단.

자크 랑시에르. 2015. 『불화』. 길.

97 광주광역시 상무동에 소재한 '5·18자유공원'에 재현된 상무대영창에서 진행된 체험 프로그램은 피해당사자들이 당시의 영창 상황을 알려주기 위해 군인들이 썼던 욕설을 학생들에게 들려주고 열차려 동작을 시켜 초등학생들이 공포감을 느끼고 충격을 받아 많은 학부모들이 항의하여 중단된 적이 있다.

「5·18의 제도화와 기억의 자리」에 대한 토론문 ‘5·18의 제도화’를 넘기 위한 기억과 기념은?

김기곤 (광주전남연구원 사회환경 연구실장)

발표자(박경섭 교수)는 5·18 기억 자체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기억에 대한 재현 장치인 기념과 기억 공간에 대한 성찰을 강조함으로써, 5·18 기억연구의 공백을 지적하고 새로운 연구의 지평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직접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와 같은 기억연구가 결국은 ‘5·18의 제도화’를 넘어서는 하나의 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발표자가 지적인 쟁점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대부분 공감하기 때문에 몇 가지 영역에 대해 토론자의 의견을 덧붙이고자 한다.

1. 제도화 Vs. 의미화

‘5·18의 제도화’는 1997년 ‘5·18특별법 제정 범국민대책위원회’ 활동을 정점으로 이른바 ‘5월운동’이 사실상 멈춘 상황 속에서 거론되기 시작했다. 당시 5·18의 제도화는 ‘진실규명-책임자처벌-명예회복-배상-기념사업’으로 이어지는 5월문제 해결의 5가지 원칙과 연관되어 있었다. 특히 암매장지 발굴 등 진실규명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많은 부분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현재, 진실규명 문제에서 새로운 국면이 형성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항쟁의 격전지 중의 하나인 전일빌딩에서 헬기사격에 의한 탄흔이 발견되면서, 5·18에 대한 진실 규명이 다시 촉발되었다. 그동안 끊임없이 반복된 5·18에 대한 역사 왜곡, 5·18의 최대 격전지인 옛 전남도청 원형보존 요구, 전두환 회고록 파장 등과 맞물려 5·18의 미해결과제를 진실 규명 차원에서 다시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로 부상한 것이다.

5·18의 제도화는 5·18과 관련된 사실의 영역, 즉 진실 규명작업의 과정과 성과에 따라 그 의미와 내용이 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특별법에 의한 ‘5·18 민주화운동진상조사위원회’가 어느 정도의 성과를 만들어 낼 것인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우리가 5·18의 제도화를 거론하는 더 중요한 문제는 ‘5·18의 실천성’에 있다. 1995년 특별법 제정과 그로 인한 기념사업, 즉 1997년 5·18의 국가기념일 제정, 국립5·18민주묘지 조성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5·18 제도화 과정은 5·18을 국가적 수준에서 관리되는 의례적 기념 대상으로 고정시켜 놓았다. 5·18의 제도화 이후 5·18은 역사

의 새로운 창출력과 사회변화를 향한 자신의 실천력을 상실해 나갔다. 제도화의 본질적인 문제는 ‘5·18의 운동성 탈각’으로 봐야 할 것 같다.

이러한 점에서 발표자가 5·18의 제도화를 다루면서 다음의 두 가지에 대한 설명을 더 명료하게 추가했으면 좋겠다. 특히 5·18이 여러 영역에서 재활성화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더욱 그러하다. 하나는, 새롭게 형성된 진상규명 국면이 ‘5·18의 제도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이다. 이것은 5·18에 대한 사실의 문제가 어떻게 추가적으로 규명되고 이것이 공식적 제도(기억)로 담아질 수 있는가이다. ‘제도’는 완결적이고 고정되어진 틀이라기보다는 새로운 관계와 규범을 만들어내기 위한 장치라는 점을 고려하면, 새롭게 형성된 5·18의 재활성화 국면에서 제도화의 긍정적 효과를 만들어내는 작업도 중요한 부분이다.

다른 하나는, 사실(진실) 규명의 차원과 달리 5·18의 의미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갈 것인가이다. 이는 규범과 제도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와는 독립적으로 5·18이 갖는 의미(가치)를 만들어 내고 이것을 삶(정치)과 연결시키려는 실천활동이다. 이것을 굳이 말하자면 ‘5월운동의 새로운 정치화’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의 성격이 의미화 투쟁이라는 점에서 방법적으로는 ‘5·18의 문화적 실천’이 될 것이다.

이 두 가지의 작업은 결국 ‘5·18을 기억하는 방식’과 연관되어 있다. 기억은 단지 과거의 사실을 불러내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미래를 내다보며 과거를 가져다 현재를 재구성하는 매개작용이자 실천적 기획이기 때문이다.

2. 오월 일기와 오월의 기억

발표자는 “오월 일기는 그동안의 기억에 대한 연구를 재고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일기는 5·18 진상 규명과 정신 계승이라는 목적에 종속되어 있지 않은 기록이고 공식적인 서사적 기억을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기억의 재현물이기 때문이다”라고 쓰고 있다.

이러한 오월 일기의 특성 때문에, 발표자는 오월 일기를 통해 제도화된 기억과 공식화된 기억 이외의 ‘새로운’ 기억을 발견하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표현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일기 작성 시점이 5·18에 대한 공식적 기억이 만들어지기 이전이기 때문에 일견 타당한 논리라 생각된다. 공식적 기억 혹은 집단기억이 ‘역사’라는 이름으로 자리잡아 지속적으로 기념되고 있는 것에 비해, 개인의 기억은 사적영역으로 간주되어 의미가 축소되는 것을 보면 오월 일기를 의미 있게 보아야 한다. 오월일기가 개인의 기억에 대한 재발견 차원에서 보다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월이라는 역사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일기에 대한 재발견은 발표자가 말한 “주변부의 기억”, “정돈되지 않은 이야기”로서 온전히 받아들여지기보다는 오월 역사에서 누락된 서사를 보충하고, 사실을 검증하기 위한 객관화의 도구로 활용되는 측면이 강하다. 특히 발표문에서도 오월 일기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분석되고 있는 것 같아 아쉬움이 든다.

일기라는 텍스트의 성격을 고려하면, ‘일기와 사실’ 사이에는 분명한 간극이 있을 것이다. 일기는 나름의 특성을 갖고 있다. 사실을 그대로 반영한 기록물은 아니다. 일기를 쓴 기술자 혹은 화자의 자기 성찰, 내러티브(여기에는 자신들만의 의미와 표현이 반영된 내러티브) 등이 반영된 기록이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면 오월 일기는 개인의 내면과 역사적 상황이 결합되어 문화적으로 창조된 기억에 더 가깝다. 일기로 토대로 한 진실 규명작업이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오월 일기에 대해 우리가 우선적으로 정립해야 할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발표자가 ‘오월 일기의 의미’를 잘 서술해 놓았지만, 이것을 넘어 ‘5·18 기억과 5·18 일기’라는 관계 속에서 오월 일기를 왜(목적),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를 연구적 측면에서 제시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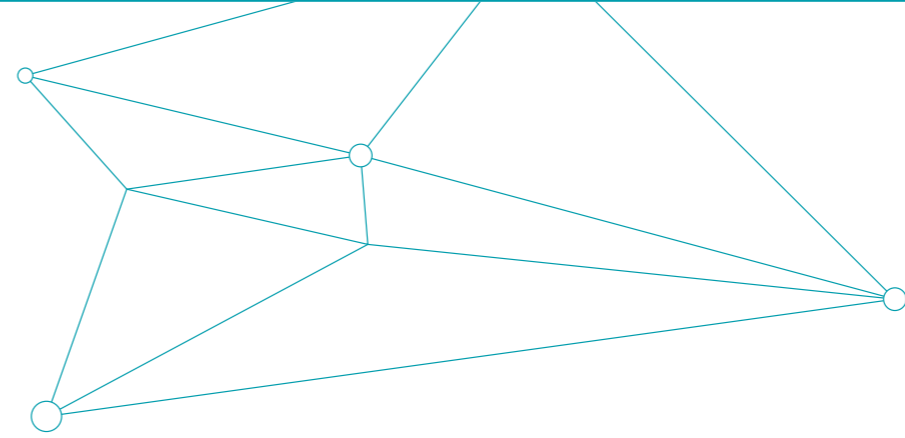
3. 기억과 기념

‘5·18에 대한 기억’ 연구가 더 실천력을 갖기 위해서는 오히려 ‘5·18에 대한 기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기억하려는 이유가 기념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기억과 기념에는 의미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기억은 본래 집단기억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늘 개별화되고 주변화된 기억을 배제하려는 경향을 갖고 있다. 반면 기념은 기억의 일부이자 과정이지만, 주체적 사고와 의식이 강조되는 행위영역이다. 또한 기념을 통해 과거와 연속되어지지만, 기념을 통해 명백한 단절도 가능해진다. 발표자가 말한 “5·18의 기억에 상상과 이미지를 통해 가까이 가는 것, 능동적인 접촉”은 “기억 작업”이라기보다 오히려 적극적인 ‘기념’행위로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5·18의 기억은 5·18의 기념화를 통해 다층의 의미를 담고, 다양한 주체를 포함하고, 새로운 의미를 기획할 수 있게 된다. “5·18의 생명은 40년 간 자기의 ‘기억’을 넘어 40주년 이후 남들의 ‘기념’으로 이어져야 가능하다”는 김상봉 교수의 지적도 이런 맥락과 상통하는 것 같다(“마흔살 5·18의 철학적 담론 대중적·보편적 의미의 5·18정신” 2019.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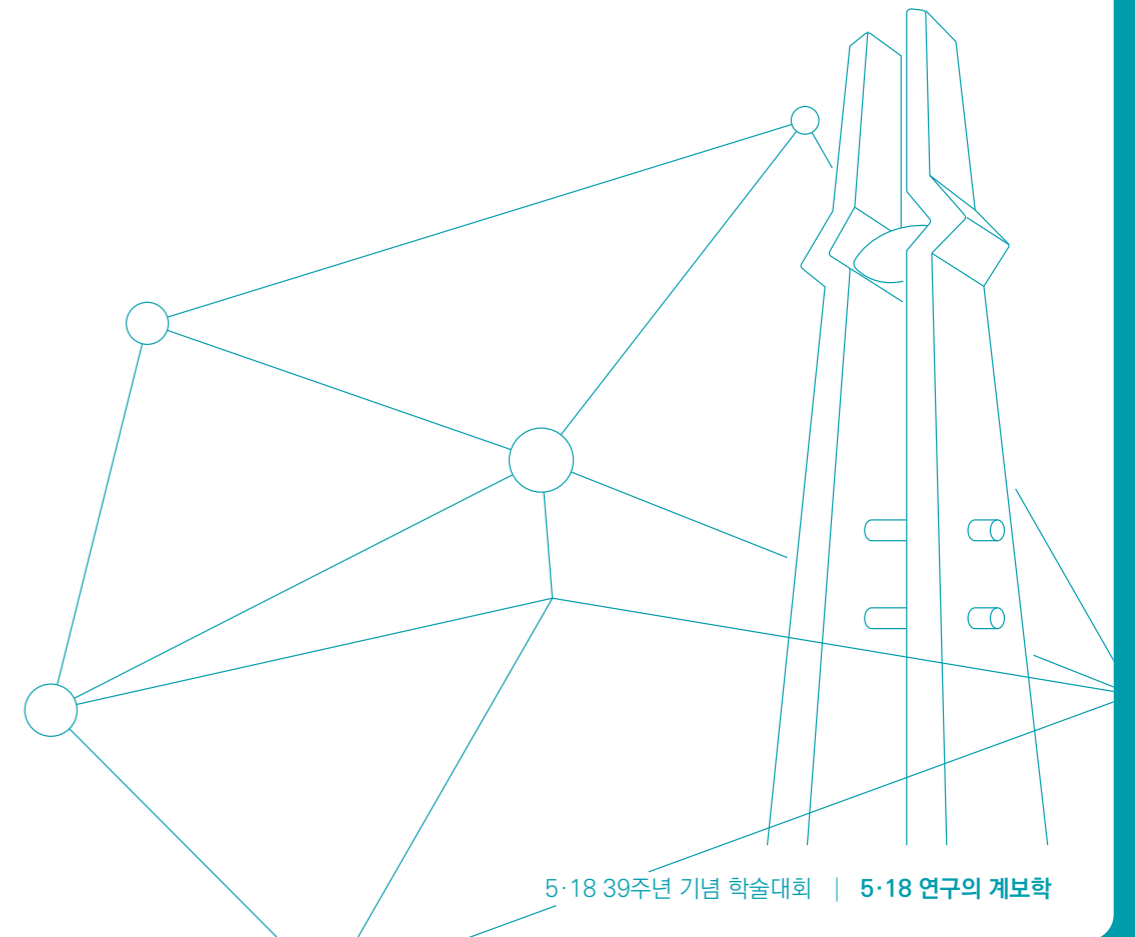
‘5·18세대’와 ‘post 5·18세대’는 5·18이라는 기억을 통해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5·18 기념을 통해 소통하는 게 더 맞을 것이다. 발표문 속에는 그 방법이 부분적으로 제시되어 있지만, 5·18 기념의 의미와 방법 등에 대한 연구가 세대 간 연대, 현재 삶의 재구성, 미래에 대한 정치적 기획 등의 차원에서 보다 풍부하게 이루어지면 좋겠다.

우리가 실천적으로 사고해 할 것은 공공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공식적 기억으로서의 기념이 아니라, 과거와의 연속과 단절의 경계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부단한 실험으로서의 기념이 필요할 것 같다.



발표 6

제노사이드와 정치적 학살(politicide)의 가해자 연구와 5·18



5·18 39주년 기념 학술대회 | 5·18 연구의 계보학

제노사이드와 정치적 학살(politicide)의 가해자 연구와 5·18

곽 송 연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선임연구원)

1. 들어가며

5·18 연구의 계보학에서 '가해자'에 관한 이론적, 경험적 분석은 가장 취약한 부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같은 연구 성과의 빈곤은 첫째, 경험적 현실적으로 민주주의 이행 과정에서 5·18이 국가 차원의 승인을 획득하는 여러 제도화를 단계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가해자들에 대한 폭넓은 실태 조사나 가해 정도에 따른 분류, 법률적 제재 등의 과정이 대부분 생략되었다는 점이 근본적인 원인일 것이다. 둘째, 이러한 제도적 차원의 한계와는 별도로 5·18 관련 단체를 비롯한 민간 부문이나 공공부문, 학계에서도 가해자들의 실태에 대한 기초적 자료 조사의 성과가 광범위하게 축적되지 못했다는 것 또한 주요한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셋째, 학문적 이론적 측면에서 '정치적 학살(politicide)'의 관점에 입각해 5·18을 파악하는 논의 구조의 부재를 들 수 있다.

주지하듯이 5·18에 대한 기존 논의는 주로 국가폭력의 관점에서 다루지는 게 일반적인 관행이었다. 그러나 국가폭력의 관점에서 가해자란 그 추상적 위계가 불분명한 국가로 집약되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곽송연 2013, 14-15). 또한 이러한 접근 방식은 '반대파에 대한 산발적인 폭력이나 고문 등 여타의 억압수단을 동반하는 국가테러'와 '정책결정자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정책인 학살'과의 구분 자체를 염두에 두지 않는 이론적 특성상 가해자의 학살 동기나 가해의 원인에 대한 연구 자체가 이미 그 연구 범위에서 벗어나는 본원적인 문제점이 내장되어 있다(하프 2005, 93-94). 이에 비해 제노사이드와 정치적 학살 이론은 근대이후 나타난 여러 형태의 집단학살의 발생원인, 영향 이외에 그 같은 학살을 수행한 가해자들의 가해 행위의 종류와 처벌 현황은 물론 그 위계 구조와 심성, 동기 등을 학문적 관심의 대상으로 다룬다. 무엇보다 제노사이드와 정치적 학살의 가장 근본적인 의문은 "왜 적으로 지목된 사람들이 절멸되느냐?"는 것이다, 즉 5·18 가해자 연구의 빈곤은 정치적 학살의 관점을 도입함으로써 그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발표문에서는 5·18을 파악하는 이론적 틀로서 정치적 학살의 관점을 도입하는 가운데, 그 정의와 개념 적용의 의미를 먼저 정리하고자 한다. 이후 기존 제노사이드와 정치적 학살의 가해자 연구 현황과 이론적 성과를 중심으로 5·18 가해자 연구 성과와 한계를 점검한 뒤 향후 관련 분야의 전망과 제언을 시론 차원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2. 정치적 학살(politicide)의 개념 정의와 5·18⁹⁸

정치적 학살의 개념은 제노사이드(genocide)이론에서 출발한다. 통상 제노사이드로 통칭되는 개념은 범형식적인 관점으로 사회과학에서 정의한 개념과는 일정한 간극이 있다. 우선 제노사이드라는 용어가 국제사회에서 최초 승인된 계기가 된 법적 개념부터 살펴보면, 제노사이드의 법적 공식적 정의는 1948년 유엔 제노사이드 협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the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이하 협약)에 근거한다. 이 협약 제2 조에 적시된 제노사이드의 구체적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특정 집단의 구성원을 살상하는 일.
- 2) 특정 집단의 구성원에게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히는 일.
- 3) 특정 집단의 삶의 조건을 전면적, 혹은 부분적으로 파괴할 계획 하에 그것을 의도적으로 침해하는 일.
- 4) 특정 집단의 출생을 가로막을 목적으로 어떤 조치를 가하는 일.
- 5) 특정 집단의 어린이들을 다른 집단으로 강제적으로 이주시키는 일.

즉 이 협약에 따른 제노사이드의 법적 정의는 '특정 종교, 인종, 종족, 민족 집단의 부분 혹은 전체를 파괴할 의도로 저질러지는 행위'를 일컫는다(Kuper 1982 Appendix I 재인용). 그러나 이 같은 개념 정의는 제노사이드 협약의 채택 당시부터 많은 논란의 소지를 지녀 제노사이드, 집단학살, 정치적 학살 등 통칭 '학살'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개념과 그에 따른 분류에 관한 끊임없는 논쟁거리를 제공하는 근거가 되었다. 특히 논란이 된 주요 쟁점은 제노사이드의 범위, 의도, 처벌에 관한 것이었다.⁹⁹

이중 이 발표문의 논지와 관련된 제노사이드의 범위에 관한 논의는 제노사이드 대상 집단의 범주와 피해의 규모에 관한 것으로 압축할 수 있다. 우선, 피해의 규모는 협약에 적시된 집단의 '부분'에 대한 해석을 둘러싼 논의다. 집단 전체가 아닌 일부의 피해를 제노사이드 범주에 삽입한 것은 많은 제노사이드들이 배제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소산으로 평가되었지만, 과연 그 판별기준을 어디에 둘 것이냐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겨진 것이었다. 실질적인 희생자 숫자를 그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 만일 그렇다면 몇%의 비율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 아니면 대상 집단 내에서의 지위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지 여전히 남겨진 문제들이 많은 대목이다.

한편 제노사이드의 대상 집단 범위에 관한 논란은 협약이 최종 명시한 종교, 인종, 종족, 민족 외에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집단이 누락됐다는 지적에서 비롯된다. 추후 지속된 제노사이드 개념 논쟁의 핵심 지점이기도 한 이 논란은 협약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부터 치열한 논란의 중심이 되었다. 사실 1946년 최초 결의안에 '인종, 종교, 정치 집단, 그 밖의 보호집단'의 형태로 규정돼 있었던 조항이 변질된 것은 '강대국들의 힘의 논리와 주요 회원국들의 역사적 경험이 충돌을 일으킨 정치적 타협의 결과'였다(Kuper 1982, 23-24). 소련, 폴란드, 이란을 비롯한 주요 반대국들이 법 논리상 내세운 주장은 "정치집단이 다른 집단들과는 달리 구성원들이 자발적 의사에 따라 쉽게 구성 될 수도 있고 해체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항구성과 불가피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스탈린 치하의 정치집단에 대한 학살이 쟁점으로 부각되는 것을 꺼린 소련과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진 또는 저지를 학살 범죄의 처벌을 두려워한 이해당사국들의 저지 의도'가 자리하고 있었다(최호근 2005, 39). 어쨌든 최종 합의된 협약에서 결국 자취를 감춘 제노사이드 대상 집단, 즉 정치집단과 경제 집단은 이후 제노사이드를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개념 정의에 혼선을 가져오는 첫 번째 난관이 되었다. 이는 애초 기획된 대로 제노사이드 정의 자체에 두 집단을 포함해 사용하는 형태를 포함해 연구자마다 각각의 개념과 유형 분류를 제시하는 혼란을 가져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8 이 장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 『5·18광주와 국가의 지역주의담론 연구』(2014) 2장 1절에 크게 의존했음을 밝힌다.

99 협약에 적시된 '의도'의 적용 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의도된 제노사이드와 예상치 못한 결과로서의 제노사이드를 구분해야 한다는 법 논리에 따라 협약에 삽입된 '의도'라는 문구는 현재로서는 제노사이드를 구분하는 핵심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문제는 대부분 증거를 남기지 않거나 의도성 여부를 부인하는 가해자들의 행태를 볼 때 그것을 증명할 분명한 수단을 확보하기 쉽지 않으며, 그 의도성은 명시적일 수도 묵시적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커트와 조나슨 2005, 43). 또한 '강제조치와 처벌' 문제는 협약의 실효성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 국제형사재판소 설립과 재판관할권이 핵심적 화두로 부각됐다. 그러나 당초 유엔사무국 초안에 "제노사이드 범죄자는 국적과 체포 장소와 상관없이 체포된 국가가 관할권을 행사한다."는 문구로 명시됐던 이 조항은 주권 침해 논란에 휩싸여 누락되고 말았다. 이후 '보편적 강제(universal enforcement)'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난을 불러일으킨 근거로 작용한 사안이다(최호근 2005, 44-45).

고 여기서 주목할 것은 어떤 분류방식이나 개념을 사용하는 학자건 정치집단과 경제 집단, 적어도 정치집단의 배제를 문제시하는 관점은 공통적이다. 이러한 간극을 메우려는 시도 중 대표적인 것이 하프와 거(Harff & Gurr 1988)가 제안한 정치적 학살(politicide)이라는 개념이다.

하프와 거는 제노사이드와 정치적 학살의 차이를 ‘국가에 의해 동일시된(identified) 집단에 속한 성원의 특성’에 있다고 본다. 즉 제노사이드에서 희생자 집단은 ‘인종, 종교, 국적과 같이 그들이 지닌 공통의 특질 면에서 우선적으로 정의’되는 반면, 정치적 학살에서 희생자 집단은 ‘그들의 위계적 지위, 또는 정권과 지배집단에 대한 정치적 반대라는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정의’된다는 것이다. 즉 이들의 정의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희생자의 특성’이 아니라 ‘국가의 특질과 의도’이다. 따라서 “만약 비무장 민간인들이 고의적이고 체계적으로 살해했다면, 심지어 그들이 반대집단(rebels)을 지지한다 할지라도, 그 사건은 제노사이드나 정치적 학살”라는 것이다(Harff & Gurr 1988. 360).

이 글은 이 같은 하프와 거의 개념정의에 입각해 5·18을 ‘정치적 학살’이라 정의한다. 따라서 이러한 개념 정의에 따라 이 사건이 정치적 학살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가리는 기준은 5·18광주의 희생자들이 단지 인종, 종교, 국적과 같은 희생자의 특질, 심지어 지역으로 구분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정권이나 지배집단에 대한 정치적 반대’로 인해 희생됐다는 것이 된다.¹⁰⁰ 특히 5·18은 하프와 거(1988)가 분류한 좀 더 정교화 된 유형에 의하면, ‘억압적 정치적 학살’에 해당된다. 이때의 분류는 ‘국가적 측면에서 희생자 집단의 위계적 지위와 지배집단의 정치적 목표에 기초한 것’이다(Harff & Gurr 1988. 363). 이들은 2차 세계대전 시기부터 87년까지 44개의 제노사이드와 정치적 학살 사건을 검토해 6개의 유형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① 헤게모니적 제노사이드, ② 인종배제적(Xenophobic) 제노사이드, ③ 보복적 정치적 학살, ④ 억압적 정치적 학살, ⑤ 혁명적 정치적 학살, ⑥ 억압적/헤게모니적 정치적 학살 등이다.¹⁰¹

이 중 5·18광주의 성격에 부합하는 ‘억압적 정치적 학살’은 “저항운동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정당, 파벌, 또는 운동조직의 지지자들을 억압하는 것과 연관된 지배집단의 대량학살”을 뜻한다(Harff & Gurr 1988. 58. 368). ‘억압적 정치적 학살’에 대한 하프와 거의 설명을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억압적 정치적 학살’의 사례들은 그 특성 면에서 광범위한 차이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 변수로 설명할 수 있다. 하나는 공산주의 동조자들을 제거하기 위한 비밀 처형과 나포 작전이다. 이 사건들 중 대부분은 인도네시아,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칠레, 그리고 아르헨티나 같은 군사정권에 의해 수행되었다. 두 번째 설명변수(distinctive variant)는 여러 신생 아프리카 국가에서 발생한 것이다. 새로이 권한을 부여받은 한 통치자가 반대자로 의심되는 일부 내지 전체 집단, 정치적으로 한정지어진 어떤 사람들, 종족적으로 경계 지어진 다른 사람들에게 극단적이고 치명적인 억압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건들은 특히 예측할 수 없고 치명적인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살해가 군대, 민병대에 의해 자행되고, 수사 및 조사 기관이 희생자들을 위해 군대 교체를 하는 것에 반(反)하는 쪽으로 재량권을 행사하기 때문이다(Harff & Gurr 1988. 368-369).

이 같은 ‘억압적 정치적 학살’의 정의를 5·18에 적용할 경우 명목상으로는 ‘공산주의 동조자들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실제 학살의 성격은 ‘새로이 권한을 부여받은 통치자가 반대자로 의심되는 일부 집단’을 살해한 경우라 볼 수 있다(Harff & Gurr 1988. 368-369).

100 한 가지 지적해 둘 것은 정치적 학살 이론이 제노사이드 개념의 빈 공간, 오로지 정치적 타협의 소산으로 제외된 집단에 대한 외연의 축소를 메우기 위해 출발했다는 것이며, 따라서 학살의 원인과 영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본질적으로 제노사이드와 정치적 학살 이론의 학술적 문제의식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즉 희생자 집단이 인종, 민족, 종교, 종족 집단에 포함되느냐의 여부를 제노사이드의 판별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범형식적 논리에 얽매인 분류일 뿐 이론적으로는 별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 ‘1975년 폴 포트 정권의 캄보디아 대학살이나 1930년대 스탈린 치하 소련 유대인들의 처형은 그들의 종교나 인종적 정체성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 태도의 차이로 인한 것’이었다. 하프의 말대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제노사이드적 정책의 희생자라는 사실이다.”(하프 2005. 94-95; 궤승연 2013. 15).

101 각각의 학살 유형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① 헤게모니적 제노사이드: 다른 인종, 종교, 또는 민족 집단을 중앙 권위에 복종하도록 강제할 때, 예를 들어 신생국가나 국가적 평창과정에서 권력의 공고화 동안에 일어나는 대량학살. ② 인종배제적(Xenophobic) 제노사이드: 희생자들을 이질적이고 위협적인 존재로 한 정치는 사회 정화나 국가방위 같은 교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행해지는 인종적, 종교적, 또는 민족적으로 뚜렷이 구별되는 집단에 대한 대량학살. ③ 보복적 정치적 학살: 과거의 특권이나 악행에 대한 적의로 인해 이전시기 지배집단 또는 영향력 있는 집단이 대상이 된 대량학살. ④ 억압적 정치적 학살: 정당, 파벌, 그리고 운동집단(movement)이 어떤 형태의 저항운동에 관여했기 때문에 대상이 된 대량학살. ⑤ 혁명적 정치적 학살: 새로운 혁명 이데올로기의 수행 과정에서 계급적 정치적 적들에 대한 대량학살. ⑥ 억압적/헤게모니적 정치적 학살: 인종적 또는 민족적으로 구별되는 집단이 어떤 형태의 반대활동에 관여했기 때문에 대상이 된 대량학살(Harff & Gurr 1988. 363).

3. 제노사이드와 정치적 학살(politicide)의 가해자 연구

현재 제노사이드와 정치적 학살 연구 현황은 가해자 연구가 하나의 특정 영역으로 취급될 만큼 연구 성과가 쌓이거나 활발한 분야라 할 수는 없다. 그것은 그동안 제노사이드 연구의 주된 관심이 20세기 이후의 제노사이드와 근대성의 문제, 제노사이드가 발생하는 사회적 상황적 조건의 추출과 유형화 등에 주로 연구의 초점이 놓였던 것과 관련이 있다. 이를 국가나 사회 차원의 접근으로 분류한다면, 이 글의 중심 주제인 가해자 연구는 그 하위 차원인 행위자 중심의 학살 참여 동인에 관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¹⁰²

이는 다시 가해 행위자들의 위계에 따른 연구와 행위의 양식 혹은 범주에 따른 연구로 나눌 수 있는데, 우선 전자의 경우 ‘대량학살을 수행한 지도자들에게 초점을 두는 하향식(top-down), 또는 고안자(intentionalist)적 접근 방식’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논의는 ‘최상층부의 명령이나 결정이 없었다면 그러한 제노사이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쉽게 말해 히틀러나 폴 포트, 5·18의 경우 전두환의 의도나 계획에 집중해 분석하는 방식이다.

반면 다른 학자들은 ‘지도자들의 명령이나 의도가 어떻게 현실화되는지에 대해 검토하는 학살의 실행이나 집행 과정에 관심’을 둔다. 지도자들의 의도가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독재자들의 의지나 명령에 초점을 두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문제의식이다. 때문에 이들은 소위 ‘기능주의적 혹은 상호작용적 접근방식(inter-active approach)’을 채택한다(Gellaely & Kiernan 2003, 11). 주로 사회심리학의 관점에서 다뤄졌던 브라우닝이나 골드하겐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이 밖에 제노사이드의 발생 원인을 거시적 차원에서 탐색한 일부의 연구들에서도 가해자의 학살 실행 동인을 다룬 연구들이 있다. 국내에 소개된 발렌티노의 연구를 예로 들 수 있다.

많은 학자들에게 영감을 준 브라우닝의 연구는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존재했던 폴란드에서 유대인 학살에 참여했던 독일 101 예비경찰대대의 학살 참여의 동인을 분석한 것이었다. 이 연구에서 브라우닝은 나치의 신념이 내면화된 이데올로기적 효과나 본래 가학적인 성향을 지닌 일부의 개인적 특성이 집단학살의 가해자를 만든 주 원인이라는 기존 논의를 전면적으로 기각한다. 그보다는 평범한 윤리의식과 이성을 지닌 독일인이었던 부대원 대다수가 초기의 망설임에도 불구하고 학살의 적극적 실행자로 탈바꿈된 주요 동인은 ‘더러운 임무를 동료들에게 미루는 집단 내 비사회적 행위’를 꺼린 데서 온 ‘동료들의 압력’이었다는 주장을 제시한다(Browning 1993, 184-186). 브라우닝의 이 같은 연구 결과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했던 골드하겐은 그와는 반대로 ‘유대인 학살에 참여한 가해자들은 그들을 절멸시키려는 신념과 문화적 반유대주의의 신조를 내면화해 학살을 정당한 것으로 확신’했다고 반박한다. 더 나아가 골드하겐은 학살의 가해자들은 독일 사회 내 소수 엘리트들이거나 일부 광신적인 나치들이 선택된 것이 아니라 당시 ‘일반 독일 국민들의 보편적 특성을 대표하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즉 히틀러의 통치 시기 반유대주의는 상류층, 중간층뿐만 아니라 노동계급, 빈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었으며, 이들 평범한 독일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해 학살이 집행된 것이었다는 논지다(Goldhagen 1997, 185, 385-389, 402). 골드하겐의 이 같은 주장은 독일 내부는 물론 국제 학술계에서도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이에 대해 양자의 논점을 모두 검토한 발렌티노는 골드하겐이 자신의 주장의 주요 근거로 삼은 확고한 신념을 지닌 가해자들은 오히려 소수에 불과했으며, ‘일반 당원이나 하급 군인들의 경우 대부분 피상적 믿음을 가졌던 것으로 확인’되며, ‘이유 없는 잔인성을 보여주었거나 직접적 감독이 없는 상태에서도 명령에 순응했다는 사실이 가학적 소수의 선택효과 상황적 압력의 가설과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들어 반론을 제기한다.¹⁰³ 그에 따르면, 학살의 가해자들은 학살의 임무를 부여받은 군대나 경찰, 혹은 ‘준군사조직에 가학적이고 광신적인 특수한 개인들을 국가나 최고지도자가 인위적으로 총원하거나 그들 스스로 투신하는 과정’, 즉 선택효과와 ‘평범한 개인이 국가나

102 이외에도 이행 정 의 실현 과정에서 개별 국가의 진실규명, 처벌 현황을 다룬 논의를 중심으로 분류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으나, 이 같은 구분은 이 글이 분석이론으로 도입한 제노사이드와 정치적 학살 이론의 범주를 벗어나므로 이 발표문에서는 그에 대한 언급은 생략한다.

103 발렌티노는 평당원이나 일반 군인들로 이뤄진 홀로코스트의 가해자들이 피상적 신념을 지닌 근거로 다음 세 가지 근거를 제시한다. 첫째, 브라우닝의 연구에서 증명된 것처럼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나치의 인종차별 이데올로기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부족했으며, 둘째, 이들의 신념이 생성된 과정을 살펴볼 때 희생자들을 심각한 위협으로 묘사하거나 그들에 대한 폭력 행위를 촉구하는 선전이 주된 통로였으며, 이는 지도자가 주도한 운동의 결과였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해자들에 의해 희생된 집단이 유대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많은 수의 비유대계 독일인들, 집시, 독일 내부의 정신병자 및 만성병 환자들을 포함한다는 사실이다(Valentino 2006, 97-99, 102-103).

동료집단으로부터 환경적 압력을 받아 극단적인 폭력 행위에 가담'하게 되는 두 단계의 결합 효과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Valentino 2006, 82. 98).

한편, 앞의 연구 경향이 가해자들의 위계 관계와 더불어 가해 행위의 초점이 집단살해에 맞춰져 있다면, 가해 행위의 범주를 확장해 파악하는 연구들도 제출되고 있다. 제노사이드의 법적 개념에 정치적, 경제적 집단이 포함되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한 일군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기존 유엔 협약에 따른 제노사이드의 정의에 이 두 집단을 포함하는 것은 물론 '의도적이나 계획적인 대량학살'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폭력까지도 제노사이드의 범주에 해당된다는 관점에서 진행된 연구들이다. 그들은 구조적인 폭력이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학살만큼이나 많은 수의 생명을 앗아갔으며, 또 이 같은 '구조적인 폭력은 결국 명시적이고 계획적인 폭력을 부추기는 기제'가 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경제적 제노사이드, 잉여인구, 중간자적 소수인종 등이 이들의 주된 관심이다(Walliman & Dobkowski 2004, 30-31. 33-24).

더불어 2000년대 들어 가해행위의 유형과 범주에 새롭게 추가된 젠더사이드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연구 경향이 다. 제노사이드에 젠더의 관점을 도입한 시각이다. 이러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촉발된 것은 구 유고지역에서 인종청소 작전의 일환으로 진행된 대규모 강간에 대한 해석으로부터 비롯되었다.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지역에서 세르비아 군인들이 국가의 후견 아래 이슬람 여성들에 대해 집단 강간을 행한 것이다. 이것은 명백히 '한 집단을 파괴할 의도로 의식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된 기획이었다는 점에서 제노사이드에 해당'된다는 시각이다. 전쟁 시 강간이 '지배를 위한 체계적 무기'로 사용되어 온 것은 역사적으로 낯설지 않은 사실이지만, 한 집단의 '생물학적 미래를 훼손하거나 사회적, 윤리적 실존을 파괴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규모 강간을 조직적 전략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새로운 현상이었다(Gellaely & Kiernan 2003, 12-14). 홀터(Q. G. Holter), 존스(A. Jones)의 연구가 젠더사이드의 개념과 코소보, 르완다 등 제노사이드에서 젠더가 활용되는 방식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 논의를 충실히 다루고 있다(Q. G. Holter 2004; A. Jones 2004).

4. 해외 연구 경향에 비춰본 5·18 가해자 연구 성과와 한계

5·18 가해자 연구의 현황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5·18 관련 연구의 양적 성과를 개략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관련 논의의 수준을 점검하는 기초적인 관문이 될 것이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수치는 모두 국회전자도서관 사이트에서 키워드 검색을 통해 확보한 결과다.¹⁰⁴

우선 5·18 키워드 검색 결과 전체 1,995건의 5·18 관련 자료 중 학위논문은 총 66건, 전체 1,386건의 학술기사 중 등재(후보) 논문은 596건이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5·18 가해자로 재검색 결과, 전체 9건의 학술기사 중 등재(후보) 논문은 총 5건, 5·18 계엄군 키워드 검색 결과는 전체 30건의 학술기사 중 등재(후보) 논문 8건, 5·18 책임자는 전체 6건의 학술기사 중 등재(후보) 논문 3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5·18 가해자 검색 결과 나타난 유가족의 심리 상태를 다룬 논문과 분석 자료가 소실인 경우, 5·18특별법처리 과정에 방점에 둔 연구를 제외하면 실제 가해자를 분석 대상으로 삼은 연구는 2건, 5·18 계엄군과 5·18 책임자 역시 검색 결과가 겹치거나 가해자 연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각각 3건, 2건에 불과하다. 결국 5·18 가해자 연구와 관련해 등재(후보)지에 제출된 연구 성과는 총 7건이나 이중 3건은 책임자 처벌의 법적적인 문제를 다룬 법학 논문에 해당되어 최종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총 4편의 연구 성과 중 5·18 가해자에 대한 논의로 최초 제출된 논문은 노영기(2005)의 "5·18 항쟁과 군대에 관한 연구와 전망"("민주주의와 인권' 제5권 1호)이다. 이 논문에서 저자는 5·18을 학살로 파악한 기존 연구의 공헌을 언급하며, 학살의 가해자로서 군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절실함을 요청하고 있다.

이후 10여 년의 공백 끝에 5·18 당시 가해자인 계엄군과 관련해 2개의 연구가 더 발표되는데 노영기(2015) "1980년 5월 21일 계엄군의 발포와 희생" ("민주주의와 인권' 제15권 3호), 김희송(2017) "5·18 민주화운동의 재구성: 계엄군의 사격행위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제17권 2호) 등이다. 먼저 노영기(2015)는 5·18 당시 계

엄군의 발포를 국가폭력으로 규정하면서 새롭게 발굴된 군 자료, 행정기관, 병원기록, 당시 목격자와 계엄군의 수기를 교차 검증하는 형태로 최초 발표 시점부터 집단 발포에 이르는 상황을 사건사적 측면에서 재구성하고 있다. 이 과정을 거쳐 도출된 발포로 인한 희생자 규모의 제시는 상대적으로 미진했던 발포로 인한 가해 행위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뒤이어 발표된 김희송(2017)의 연구는 그동안 신군부출신 인사들이 부인해왔던 1980년 5월 20일 광주역에서 발생한 사격과 1980년 5월 21일 헬기 사격 여부를 군 사료, 검찰 기록 등을 토대로 집중 분석해 실제 그 같은 사실이 있었음을 사료를 통해 증명하는 것은 물론 그 같은 적극적 전투행위가 실행된 이유가 20사단의 투입을 위한 작전 계획의 일환이었음을 밝혔다. 이 연구는 그동안 명령권자의 지위에 있었던 가해자들이 전면적으로 부정해왔던 발포와 관련된 군 작전개념의 민간인 살상 행위를 밝힘으로써 가해자의 의도와 명령체계에 따른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살해를 입증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즉 이 연구는 5·18의 성격이 정치적 학살임을 밝히는 주요 근거를 제공하는 학술적 가치 외에 통상 제노사이드와 정치적 학살의 가해자들이 문서 증거를 남기지 않거나 혹은 그나마 남아있는 일부 자료의 경우도 세태과정을 거쳐 은폐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임을 고려할 때 연구사적으로도 흔히 않은 성과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5·18을 정치적 학살이론의 관점에서 가해자의 학살 동기를 분석한 곽승연(2013) "정치적 학살(politicide) 이론의 관점에서 본 가해자의 학살 동기 분석: 5·18 광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제13권 1호)의 연구는 고위간부, 지도자의 학살 실행의 동인을 '안정(stability), 안보(security), 발전(development)' 이데올로기에 경도된 신직업주의적 정향을 지닌 신군부의 이데올로기적 특성으로 인해 '반호남주의와 반공주의의 일종의 이데올로기 접합'이 이뤄진 결과로 분석했다. 또한 학살 현장에 투입된 군인들의 학살 동기와 행동양식은 명령체계에 따른 복종, 이데올로기 주입 효과, 동료집단의 압력과 집단의 순응성 등 여타 정치적 학살의 가해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보편적 특성 외에 이전 제노사이드의 경험, 당시 투입된 군이 일반적인 정규군이 아닌 특전사였다는 사실에서 비롯되는 한국의 역사적 특수성 등이 결합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 논문은 5·18 연구의 계보학에서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이론적 경험적 분석이 전무했던 현실에서 제노사이드와 정치적 학살이론의 문제의식을 본격적으로 차용해 제출된 최초의 연구라는 의의가 있다.

한편 이상에서 5·18 가해자 연구의 성과를 살펴본 결과를 토대로 이 분야의 한계를 점검하자면 우선 연구의 양적인 면에서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서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가해자들에 대한 폭넓은 실태 조사나 가해 정도에 따른 분류가 미흡했던 점이 근본 원인일 것이다. 무엇보다 학문적 이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가해자란 무엇인가라는 기초적인 정의도 합의되지 못한 지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가해자의 위계, 가해 행위에 참여한 국가기관과 사회의 주요부문, 가해 행위의 유형, 가해의 방식에 따라 체계적인 분류와 기록이 시급하다. 여기에는 제노사이드와 정치적 학살이론에서 제기하는 많은 질문들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가해자를 그 위계구조에 따라 명령권자에 국한한다면, 전두환이나 실제 작전 지시를 내린 고위 간부에 대한 기록으로 충분하겠지만, 그 범위를 장교와 사병까지 넓힌다면 현장에서 직접 살해를 지시하고, 이를 실행해 옮긴 자들의 명단 확보가 필수적이다. 또 가해 행위에 직접적으로 동원된 군뿐만 아니라 군의 행위가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한 여타 국가기관까지 확대한다면, 여타 행정기관과 피해자들을 기소하고, 판결을 내린 사법기관의 행위들 역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홀로코스트의 협력자들이 기록되었듯이 방관자적 위치를 넘어서 신군부의 5·18에 대한 선전과 왜곡에 대해 공개적인 지지를 표명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정치적 살해 행위에 동참했던 지식인들 언론, 출판인, 학자, 문인들의 행위 역시 다시 공표되고 재평가 되어야 한다. 또한 가해 행위의 유형에 따른 조사와 연구도 빼놓을 수 없다. 대검이나 총기 발사로 인한 직접적인 살상 행위 외에 고문이나 기타 가혹 행위, 강간 등에 대한 실태 파악도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해 국방부가 국방부·여성가족부·국가인권위원회가 주축이 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가해자 또는 소속부대를 조사하고, 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상 진상규명의 범위에 성폭력을 명시할 것"이라는 권고를 받아들일 것을 천명한 사실은 고무적인 움직임으로 평가할 수 있다(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18. 11. 7).¹⁰⁵

105 http://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JSESSIONID_KOREA=KwGKcnTb4JTx62Hh78Sjpyjwsv4DWhqJdPz5x2X3BdHlPpXG-Dxy!-1855868326!1560263480?newsId=156302628 (검색일 2019. 11. 4)

104 <http://dl.nanet.go.kr/SearchList.do> (검색일: 2019. 11. 4)

5. 향후 전망과 제언

서두에서 밝혔듯이 5·18 가해자 연구에서 가장 시급한 지점은 무엇보다 체계적 1차 사료의 확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 학살 사건은 그 가해자가 국가기관이거나 준국가기관, 혹은 국가기관의 비호를 받는 집단이라는 점, 그리고 가해자들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대부분 문서기록을 남기지 않거나 혹은 기록을 훼손, 가공하는 특성 때문에 기록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본질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때문에 특히 정부 측 생산문서의 경우 국가기관과 국가 차원의 조사기관의 도움이 매우 큰 도움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그 출범이 지체되고 있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새로이 구성될 조사위원회의 역할과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5·18 재단이나 5·18 기록관 등 기존 관련 기구에서도 동시에 혹은 별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진압군으로 참여했던 가해자들의 증언, 구술기록은 물론 관련 내용이 담긴 편지나 일기, 일지 등도 중요한 사료가 된다. 연관 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수집 활동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한편 5·18 가해자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독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 볼직하다. 기존에 확보된 자료의 체계적 분류와 공개를 통해 관련 연구자들이 연구 자료에 보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은 물론 관련 연구공모, 연구과제 지원 등의 방법을 폭넓게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구 내적 측면에서 볼 때 앞 4장에서 제기된 가해자 연구의 방향을 바탕으로 홀로코스트 등 기타 다른 국가나 지역에서 발생한 제노사이드, 혹은 정치적 학살 사례와 비교 연구, 한국현대사의 부침 속에서 발생한 여타 정치적 학살 사건과의 비교 연구 등으로 향후 연구의 영역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국문자료

- 곽송연. 2013. "정치적 학살(politicide) 이론의 관점에서 본 가해자의 학살 동기 분석 : 5·18 광주 의 사례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제13권 제1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pp. 13-48.
- _____. 2014. 『5·18광주와 국가의 지역주의 담론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희승. 2017. "5·18 민주화운동의 재구성 : 계엄군의 사격행위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제17권 제2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pp. 5-58.
- 노영기. 2005. "5·18항쟁과 군대에 관한 연구와 전망". 『민주주의와 인권』 제5권 제1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pp. 253-284.
- _____. 2015. "1980년 5월 21일 계엄군의 발포와 희생". 『민주주의와 인권』 제15권 제3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pp. 5-39.
-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18. "5·18 계엄군 성폭행 사과문" (2018.11.7) http://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JSESSIONID_KOREA=KwGKcnTb4JTx62Hh78SJpyjwsv4DWhqJd-Pz5xDn2X3BDhLpXGDxy!-1855868326!1560263480?newsId=156302628 (검색일 2019.11.4)
- 최호근. 2005. 『제노사이드: 학살과 은폐의 역사』. 서울: 책세상.
- Harff, Barbara 저. 장원석 외 역. 2005. "제노사이드 발생의 원인" 『현대사회와 제노사이드』. Michael N. Dobkowski 외 편. 제주: 도서출판 각. pp. 89-115.

- Valentino, A. Benjamin 저. 장원석 외 역. 2006. 『20세기의 대량학살과 제노사이드』. 제주: 제주대학교출판부.
- Wallimann Isidorand & DobkowskiMichael N. (eds). 『현대사회와 제노사이드』. 제주: 도서출판 각. pp. 27-35.

영문자료

- Browning, Christopher Robert. 1993. Ordinary Men : Reserve Police Battalion 101 and the Final Solution in Poland. New York : HarperCollins,
- Gellaely, Robert & Kiernan, Ben. 2003. "The Study of Mass Murder and Genocide", The Specter of Genocid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3-28.
- Goldhagen, Daniel Jonah. 1996. Hitler's Willing Executioners: Ordinary Germans and the Holocaust. Alfred A. Knopf.
- Harff, Barbara and Ted Robert Gurr. 1988. "Toward Empirical Theory of Genocides and Politicides: Identification and Measurement of Cases since 1945."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32(3).
- Jones, Adam. 2004. "Gendercide and Genocide". Jones, Adam (ed). Gendercide and Genocide. Vanderbilt University Press. pp. 1-38.
- Kuper L. 1982. Genocide. its Political Use in the Twentieth Century. New Haven &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 Holter, Øytein Gullvag. 2004. "A theory of Gendercide." Jones, Adam (ed). Gendercide and genocide Vanderbilt University. pp. 62-97.

「제노사이드와 정치적 학살(politicide)의 가해자 연구와 5·18」에 대한 토론문

정 문 영 (5·18기념재단 비상임연구원)

본 발표문은 기본적으로 제노사이드 개념의 협소함을 비판하고 이를 ‘정치적 학살(politicide)’이라는 개념으로 확장하여 문제가 되는 사안을 바라볼 것을 제안하면서 5·18 가해자 연구의 성과와 한계를 개관하고 있다. 발표자는 특히 1948년 유엔 제노사이드 협약에서의 제노사이드(genocide) 개념에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집단’이 누락되어 있다는 한계로부터 그 간극을 메우려는 시도로서 ‘정치적 학살’ 개념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상 이행의 의의는 단적으로 단어의 조성으로부터 파악될 수 있다. 즉 ‘genos’의 정의(定義) 문제에서의 논란을 피하고 학살(-cide)의 ‘의도와 성격’(politi-)을 즉각적으로 강조하는 것이다. 발표자는 이러한 개념 조작을 통해 5·18을 사실상 제노사이드의 반열에 올려놓고 있다.

한편 그 과정에서 발표자는 유대인 대학살 이후 오랫동안 가해자 연구의 양대 조류였던 ‘의도론(intentionalism)’과 ‘기능론(functionalism)’의 대립적 연구 경향에 대해서도 약간의 논평을 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5·18 연구자들 역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대목이다. 국내에서는 그간 이러한 문제에 깊이 있는 천착이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그 오랜 논쟁사에 합당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며 5·18 연구 역시 그러한 연구사의 자장 안에 놓일 때 보다 폭넓고 깊이 있는 성찰이 기대될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본 발표에 대해 문외한으로서 몇 가지 질문과 더불어 약간의 논평을 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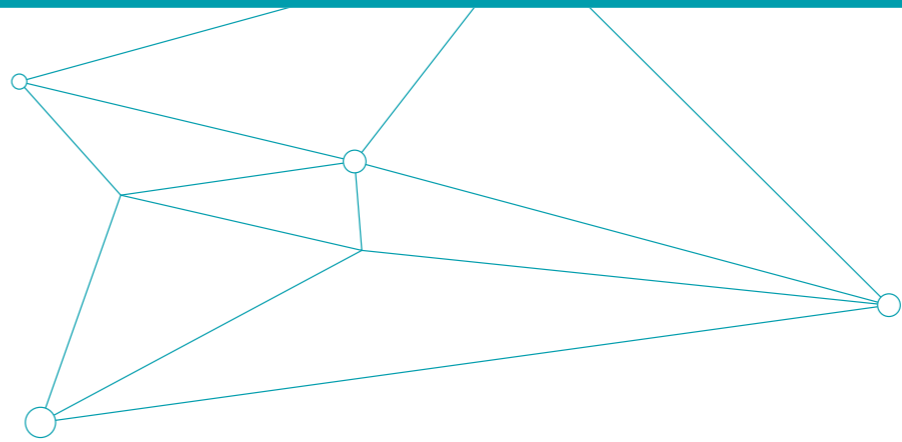
먼저 다소 아쉬운 대목은 본 발표에서 가해자 연구에 대한 비평과 전망이 다소 기술적(technical)인 차원에 머물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발표자는 “학문적 이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가해자란 무엇인가라는 기초적인 정의도 합의되지 못”했고 “가해자의 위계, 가해 행위에 참여한 국가기관과 사회의 주요부, 가해 행위의 유형, 가해의 방식에 따라 체계적인 분류와 기록이 시급하다”면서 “여기에는 제노사이드와 정치적 학살 이론에서 제기하는 많은 질문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예시로 든 질문에는 근본적인 물음, 즉 가해자 연구가 왜 필요한지, 그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한’ 것인지가 빠져 있다. 물론 모두가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누락된 것일 수도 있지만, 발표자 말마따나 5·18 연구에서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이론적· 경험적 분석이 전무했던 현실에서” 제노사이드나 ‘정치적 학살’과 같은 새로운 개념과 시각을 제안한다면 거기에는 보다 명확한 이유가 제시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인권침해의 극단적인 양상은 범죄이다. 그런데 법률적인 의미에서의 범죄(crime)란 ‘형벌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의 죄(guilt)를 의미한다. 따라서 어떤 행동이 ‘범죄’가 되려면 보다 여러 차원의 고려사항이 있다. 대륙법계인 대한민국의 형법에서는 어떤 행동이 ‘범죄’가 되려면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본다(그래서 이러한 요건들을 ‘범죄의 성립요건’이라 한다). 예컨대 구성요건해당성이란 문제의 행위가 형벌법규에 해당되는 행위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 형벌법규는 제정된 법률이어야 하고 법률에서 범죄로 선언되지 않는 행위는 그 행위의 속성이 도덕적으로 아무리 극악하고 반사회적이라도 하더라도 범죄로서 처벌받지 않는다. 형법은 행위 시에 유효한 법률이 아니면 안 되며, 사후적으로 법률을 제정해 처벌하는 것을 소급입법이라고 하는데, 형법에서는 이것이 엄격히 금지된다.¹⁰⁶ 다시 말해 형사법상 책임이 성립하려면 결국 세 가지 기본 요소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먼저 문제의 행위가 있어야 하고, 둘째 이 행위는 정당화되거나 면책(excuse)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어야 한다(우리 형법에서는 이를 각각 ‘위법성 조각’과 ‘책임 조각’이라고 이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범죄에 이르려면 ‘행위’가 개인 또는 공공의 이익을 상당한 정도로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이 있어야 한다. 종합하면 형사책임은 개인 또는 공공의 이익을 상당한 정도로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를 정당화 사유나 면책 사유 없이 행할 때 성립한다.

그런데 문제는 인권을 조직적으로 심대하게 침해함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자나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범죄가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범죄들은 대개 국내법이나 각국의 일반적인 사법기구에 의해 처벌이 어려운 경우로서 ‘국제범죄’의 성격을 띠는 것들이다. 토론자는 제노사이드나 정치적 학살과 같은 개념이 제안된 데에는 이러한 모종의 국제주의의 필요성이 기입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지성사적 관점에서 볼 때 가해자 연구는 단적으로 죄형법정주의와 일반 관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관심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광주학살을 일종의 제노사이드나 정치적 학살로 볼 때 정당화되어야 할 것은 첫째로 광주학살을 국제범죄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만약 국제범죄로 볼 수 있다면 그 의의와 효과는 무엇이나 하는 것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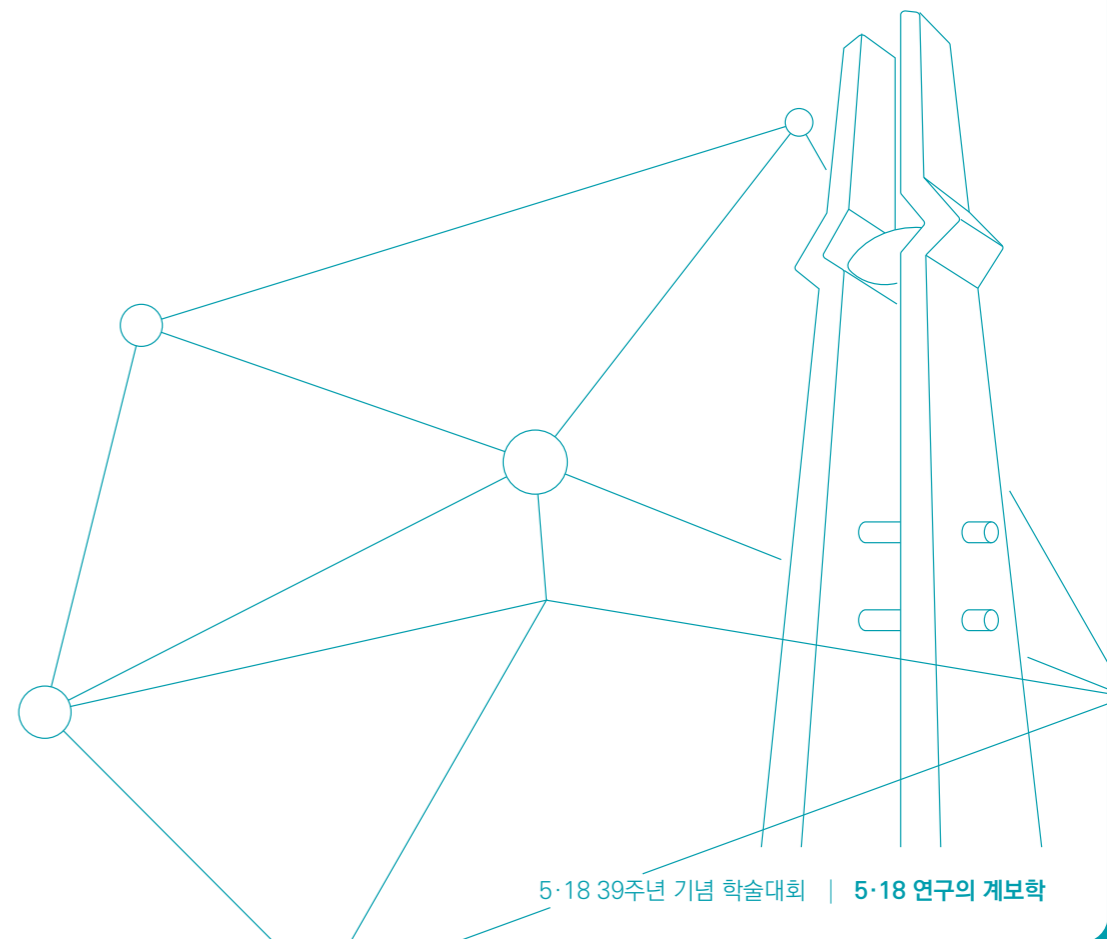
같은 맥락에서 발표자가 5·18 관련 연구의 성과를 논하면서 “책임자 처벌의 법적적인 문제를 다룬 법학 논문”을 최종 분석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왜냐하면 인권보장의 측면에서 볼 때 인권침해자에 대한 형사소추는 분명히 ‘최소한’의 인권보장책의 하나이며, 어떤 의미에서는 인권을 유린하는 사람에 대해 형사소추를 통해 사법적인 응징을 하는 것만큼 ‘적극적’인 인권보장책은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발표자가 적절히 지적하고 있듯이 “정치적 학살 사건은 그 가해자가 국가기관이거나 준국가기관, 혹은 국가기관의 비호를 받는 집단이라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접근은 수사과 기소를 할 수 있는 사법절차 외에 달리 효과적인 방법은 없으며, 따라서 법리적 논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¹⁰⁶ 이러한 모든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요청상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뉘른베르크의 나치 전범 재판은 행위 당시에 구체적인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떤 행위는 ‘인류에 대한 범죄’를 구성한다는 원칙을 확립한 바 있다.



발표 7

5·18 자살과 트라우마의 계보학:
치유되지 않은 5·18



5·18 자살과 트라우마의 계보학: 치유되지 않은 5·18¹⁰⁷

김 명 희 (경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1. 들어가며: 우리는 '광주의 유산'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
2. 5·18 자살과 이행기 정의
 - 1) 5·18 부인(denial) 구조와 피해자의 인권
 - 2) 5·18 자살과 트라우마의 계보학: 숙명론적 자살과 저항적 자살
3. 5·18 자살의 추이와 유형적 특징
 - 1) 5·18의 집단 트라우마와 목격자들의 자살
 - 2) 5·18 생존자들의 자살1: 고문·구금·학대·성폭력의 트라우마
 - 3) 5·18 생존자들의 자살2: 등급화된 보상/인정체계
4. 결론 및 제언: '사건-보상-치유' 프레임 넘어서

1. 들어가며: 우리는 '광주의 유산'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

2020년으로 40주년을 맞는 5·18 민주화운동은 우리 현대사의 민주화운동 및 국가범죄 청산과 관련해 일대 분수령을 이룬 사건으로 평가된다. 1980년 5월에 일어난 이 항쟁은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를 압축적으로 성장시킨 원동력이 되었으며, 그 가해자와 피해자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정된 보상법, 처벌법, 기념사업법 등은 과거청산의 신기원을 열었다. 이러한 광주의 과거청산 결과는 여타 과거청산 운동을 견인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뉘른베르크 법정이 전후 국제인도법의 방향을 정했듯이, 광주 관련 특별법들은 한국에서 과거청산의 전거로 자리잡았다. 서구 사회에 독일의 나치 청산을 상징하는 '뉘른베르크 유산'이 있다면, 한국에는 '광주의 유산'이 있다고 하겠다.¹⁰⁸ 외견상 '5월 문제 해결을 위한 5원칙'을 충족시킨 것으로 보이는 광주의 과거청산 내용은 국내의 다른 과거사 처리 사

107 소중한 정보와 자료 제공으로 본 연구에 큰 도움을 주신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허연식 연구실장님,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정수만 전 회장님, 광주전남추모연대 김순 집행위원장님, 5·18기념재단 박진우 연구실장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108 한국 현대사에서 5·18 민주화운동은 좁게는 12·12 군사반란을 주도한 신군부에 맞서 1980년 5월 광주에서 봉기한 시민들의 저항을 의미하지만, 그 영향을 고려하면 광주항쟁 이후 1980년대 군사독재를 타도했던 장기적인 정치사회운동을 뜻했다(이재승, 2010: 589-590).

례들과 비교할 때 전범에 가까운 것이었고, 광주의 이행기 정의 모델은 권위주의 국가의 폭력을 청산하고 민주주의 국가로 이행하고 있는 여타의 나라들에 과거청산의 모범으로 수출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지난 8월, 계속되는 5·18 왜곡과 무관심을 비판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박정철 씨의 사례에서 보듯, 5·18 생존자들이 처한 현실과 5·18 자살자들이 감내해야 했던 고통의 면면은 우리를 매우 당혹스럽게 한다.¹⁰⁹ 5·18 민주항쟁 구속자회에 따르면 고(故) 박정철 씨는 1980년 당시 16살 나이로 도청을 지킨 '막내 시민군'으로 불렸다. 고인은 당시 광주상고를 다니던 중 시민군에 합류하여, 고등학생의 몸으로 사망한 시민들의 시신을 수습하고 염을 하는 것을 도왔으며 계엄군의 도청 진입이 이루어진 27일까지 자리를 지켰다. 그 과정에서 계엄군에 붙잡혀 상무대 영창과 교도소에서 1년간의 옥고를 치렀고, 이후 고문 후유증으로 생활이 어려워 만큼 트라우마를 겪으면서도 한 가족의 가장으로 직장생활을 계속했다. 55세의 나이로 운명을 달리한 고인은 계속해서 5·18 진상규명 활동에 참여했으며 올해 2월 자유한국당의 '5·18 망언'에 맞서 국회 앞에서 진행된 천막농성에 나서기도 했다(서충섭, 2019).

고(故) 박정철 씨가 겪었던 고통과 삶의 서사는 - 5·18 왜곡과 무관심에 대한 자살자의 비판이 처음으로 보도되었다는 점만 제외하면 - 솔한 여타 5·18 자살피해자들의 서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아니 다르면서도 유사하다). 5월 18일~27일 열흘 동안 경험한 국가폭력은 단지 일회적인 사건에 그치지 않고 고문·학대·구금·감시와 같은 권위주의 국가의 폭력적 장치들을 통해 계속해서 재생산되었고, 이들이 겪었던 중대한 인권유린과 폭력의 흔적은 개인과 가족의 삶에 지울 수 없는 상흔(trauma)을 남겼다. 강산이 네 번 바뀌고 5·18의 이름도 네 번 바뀌는 동안 "폭도"에서 "민주유공자"로 5·18 참여자들을 부르는 이름 또한 변화했지만, 여전히 5·18을 둘러싼 진실은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고 가해 책임자는 실질적으로 처벌되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전두환 회고록』을 비롯해 다양한 루트를 통한 5·18 역사 부인(denial)의 공세를 목도하고 있다.

이 글은 2019년 11월 현재의 시점에서 - 수면 위에 드러난 것만 - 약 46명의 자살피해자를 낳은 5·18 자살이 5·18 이행기 정의의 특정한 국면과 조건에서 발생하는 사회구조적 자살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여기서 5·18 이행기 정의의 특수한 국면이라 함은 철저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 없이 개별적인 금전 보상 위주로 진행된 과거청산의 경로와 그 결과를 뜻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5·18의 진실에 대한 계속적인 왜곡과 전면적 부인이 개입할 여지를 주었고, 실질적인 구제보다는 피해자들을 무마하고 기념사업을 벌이는 데 치중하는 낮은 수준의 정의에 머물게 했다. 특히 2012년 '광주트라우마센터'를 설립하는 배경이 되기도 했던 2000년대 중후반 5·18 (연쇄) 자살 문제는 1980년대 경험한 원초적인 국가 폭력의 상흔과 1990년대 보상 국면 이후 경험한 관계의 위기가 함께 만들어낸 사회적 타살이라는 것이 이 글의 핵심적인 문제의식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5·18 자살에 대한 연구는 광주의 과거청산 방식과 이른바 '치유'의 방식에 대한 재검토와 성찰의 차원을 포함하지 않을 수 없다.¹¹⁰

그러나 아직까지 5·18 자살에 대한 본격적인 학문적 연구는 거의 없다.¹¹¹ 5·18기념재단이 발주하여 조용범·김대오·안병진(이하 '조용범 등'으로 표기)이 1982~2004년 자살한 10인을 분석하여 연구용역보고서로 2008년 제출한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에 대한 심리학적 부검 및 자살피해 예방대책과 사회적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¹¹²가 유일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5·18 피해자로 국립 5·18 민주묘지에 안장된 분들 가운데 자살로 사인을 기록한 15인의 명단 중 10인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전체 피해조사자 10인은 모두 남성이었으며, 5·18 참여당시 평균연령은 24.8세, 그리고 자살결행 시점은 1982년부터 2004년까지였으며, 자살당시의 평균연령은 40.8세였다(5·18기념재단,

109 5·18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름지도 바뀌었다. 1) 전두환 정권 - '광주사태', 2) 노태우 정권 - '광주민주화운동' 3) 김영삼 정권 '5·18 광주민주화운동' 4) 김대중 정권 - '5·18 민주항쟁'이 그것이다.

110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과 보상을 위한 정부의 공식 대책은 1988년 4월 1일부터 본격화되었다. 이 때 노태우 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만들어진 '민주 화합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제출된 대책이 '광주사태 치유 방안'이었음을 상기하자. 이에 근거해 1990년 7월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시작되었다(5·18 기념재단, 2017: 193-194). 약칭 '광주보상법'에 이어 2001년에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이에 따라 5·18 참가자들 4,362명 중 3,586명은 민주유공자로 예우를 받게 되었고, 2002년에는 신묘지가 국립묘지로 승격되었다.

111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 5·18 자살피해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공백 상태에 있다는 것 자체가 별도로 다루어야 할 논제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에서 다룬다.

112 5·18 기념재단은 생명인권운동본부에 심리부검(Psychological Autopsy)을 의뢰하여 당시 보고서를 작성했다. 심리부검이란 자살자가 생전에 남긴 각종 기록들과 주변의 인물들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질문 조사를 통해 자살에 이르는 원인을 밝혀내는 것이다. 심리 부검은 1950년대 슈나이드만(E. Shneidman)에 의해 개발된 조사방법이다(Leenaars, 2017).

2008: 8). 이 보고서에 기초하여 다큐멘터리로 제작된 「KBS스페셜, '5·18 자살자 심리부검 보고서」가 공중파로 방영되면서 5·18 자살자 문제가 우리 사회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후 간헐적으로 언론을 통해 5·18 관련자들의 자살 소식이 보도된 적은 있지만 얼마 안 되어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졌고, 후속 조사 또한 진행되지 않았다. 2004년 이후의 자살자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 자체가 부재하다는 점은 본 연구의 진행과 집필에 커다란 어려움으로 작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제출된 5·18 자살자 10인에 대한 심리 부검 연구결과는 본 연구를 위한 소중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 보고서는 심리부검(psychological autopsy)이라는 자살 연구의 방법론을 본격적으로 도입함으로써 5·18 생존자들이 자살/사망에 이르는 인과과정을 후향적(retrospective) 방향에서 역추적하여 5·18 자살에 개입하는 다층적인(발생학적·사회정치·경제적·가족적·신체적·정신적) 인과기제를 규명할 단서를 풍부하게 제공하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심리부검의 조사도구가 정신의학 모델에 기반해 있다는 점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반면(이미정, 2017: 376), 이 보고서는 1980년 이후 자살을 결행할 때까지의 삶의 행적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을 통해 이들이 자살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밝히고 그 피해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방식에 대한 두터운 설명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심리부검의 모범이라 평가할 만하다. 다만, 5·18 자살자가 처한 사회적 환경으로서 5·18 과거청산 방식과 이것이 만들어낸 독특한 인권레짐에 대한 성찰 없이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자살자의 외상적 경험과 피해 사실을 들추어내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중대한 인권침해를 유발한 폭력구조와 자살의 인과기제들을 충분히 해체하거나 재구성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 결과 결론에서 제안한 5·18 자살자에 대한 예방대책 또한 일관성 없이 나열되어 있다는 한계를 갖는다.

이것이 이 글이 심리 부검의 연구 성과를 재구성을 위한 발판으로 삼되, 5·18 이행기 정의의 사회적 조건이 초래한 인권레짐에 대한 비판적 성찰에서 새롭게 논의를 시작하는 이유이다(2절). 나아가 비록 충분치 않을지라도 2004년 이후 2019년 10월 현재까지 발생한 자살자에 대한 기사와 관련 자료를 추가적으로 수집해 5·18 자살의 유형적 특징을 변별해 후속 과제 제언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3절). 이러한 관점에서 5·18 자살은 한국사회 이행기 정의의 현주소를 진단할 바로미터이며, 5·18 자살에 대한 연구는 국가폭력 피해자의 인권에 대한 연구인 동시에 곧 사회적 치유¹¹³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4절).

2. 5·18 자살과 이행기 정의

1) 5·18 부인(denial) 구조와 피해자의 인권

① 5·18 부인(denial)과 이행기 정의

자살 문제는 여러 층위에서 정치와 연결된다(Webb, 2013). 일차적으로 자살은 '해석'을 통해 정치와 만난다. 언뜻 자살은 매우 비정치적인 현상으로 보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라는 지식 정치와 무관하지 않다. 예컨대 탈북자 자살을 야기하는 사회적 차별의 문제나 적대감을 양산하는 분단 구조를 도외시한 채 정신과적 증상에만 주목하게 하는 의료화의 지식 정치는 탈북자의 삶과 죽음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다. 또한 자살은 각종 '정책'(사회보장·인권·노동·교육 정책)을 통해 정치와 연결된다. 예를 들어 대량 실업으로 인해 개인이 겪는 자살 충동은 국가의 사회보장정책 실패로 충분히 설명될 수 있고,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 계층에 대한 적절한 구제책이 없다면 인권 소수자의 고통을 방관한 국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자살은 '제도'를 통해 정치와 연결된다. 오늘날 국가 권력이 생산하는 모든 정책은 제도로 구현되기에, 특정한 형태의 자살을 야기하거나 경감시키는 제도적 조건과 정치체제의 성격이 아울러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5·18 관련자들의 자살이 자리한 이행기 정의¹¹⁴의 성격과 정치사회적 조건을 따져보아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무

113 '사회적 치유(social healing)'는 국가폭력 및 인권침해 사건과 같이 개인적이고 의학적 차원으로 환원되지 않는 사회적 원인과 과정에 의해 야기된 고통과 트라우마의 해법을 사회적이고 관계적인 차원에서 모색하는 치유의 통합적 패러다임을 지칭한다. 사족을 달자면, 의료적 치료와 사회적 치유는 상호 배타적이고 이분법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 연계되어 있는 층위 관계로 통합적으로 이해되어야 할 마땅할 것이다. 이 점에서 사회적 치유의 방법론은 사회과학적 설명과 사회이론적 비판, 인간의 고통을 다루는 응용과학의 실천 및 윤리적 개입과 두터운 결합을 추구한다(김명희, 2019).

114 이행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는 과거청산 국면에서 작동하는 정의를 포괄적으로 일컫는 개념이자, 심각한 인권침해를 발생시킨 억압적인 구제제를 인권과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혁신하려는 헌정주의적 개념이다. 나라마다 처한 상황이 달라 이행기 정의의 실현 정도는 다를 수 있지만, 이행기 정의를 실현하려는 노력은 세계사적 흐름이다(이재승, 2010: 29).

엇보다 고려되어야 할 것은 1980년 이후 현재까지 완고하게 자리잡고 있는 5·18 부인(denial)의 구조¹¹⁵이며, 이로 인해 계속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피해자의 인권 상황이다. 오늘날 유포되고 있는 5·18 왜곡과 부인 담론의 대부분은 1980년 5·18의 발생 직후부터 틀지워진 것이었고, 1988년 광주청문회를 경유해 현재까지 - 정보통신 기술 및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 유포 루트와 확산 방식에 차이가 있을 뿐 동일한 형태로 지속되고 재생산되어 왔다. 아니 더 엄밀히 말한다면, 5·18에 대한 왜곡은 5·18이 제도화되는 정도에 비례하고 더 조직화되는 경향을 보였다(오승용, 2012: 37, 227)

5·18에 대한 부정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곧 5·18의 진실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공고화되고 있지 않은 현실을 반증한다. 헤아려보면, 5·18 진실 찾기는 현재까지 네 차례에 걸쳐 이뤄졌지만 아예 조사 자체를 하지 못한 부분이 적지 않았다. ① 1988년 11월-1989년 1월까지 진행된 국회 광주특위 청문회에서 광주의 진실을 가장 먼저 다루었다. 하지만 군 작전의 전모와 집단발포 경위와 발포 명령자, 정확한 사망자 숫자, 행방불명자, 암매장 등에서 소출을 내지 못했다. ② 1994-1997년 12·12 사건 및 5·18사건 검찰수사의 경우 12·12 사건에 중점을 두고 수사가 진행되었고, 5·18사건은 덩에 불과했다. 예를 들면, 도청 앞 집단발포에 대해 '공수부대 장교들이 대대장이나 지역 대장의 통제 없이 장갑차 등의 돌진에 대응해 자위 목적에서 발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수사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전두환 등 신군부에 '자위권 발동'이란 면죄부를 준 셈이 되어버린 것이다. ③ 2007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와 2017년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또한 명쾌한 진실의 답을 내놓지 못했다. 이로 인해 2017년 4월 발간된 『전두환 회고록』을 포함해 지만원 등 일부 세력들이 '5·18 진실 뒤집기'를 지속적으로 확대재생산하고 있다.¹¹⁶ ④ 2018년 2월 임시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다시 한 번 국가차원의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의 기회가 비로소 마련되었지만, 아직까지 진상조사위원회는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5·18 민주화운동 기념행사위원회, 2018: 37).

결과적으로 5·18의 핵심 진실들, 예컨대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확대 조치 이후에 광주에 공수부대를 증파한 이유가 무엇인지, 당시 광주에 투입된 공수부대를 진두지휘한 사람은 누구이고, 광주 시민에게 발포 명령을 내린 자는 누구인지, 1980년 당시 미국은 어떤 역할을 했고, 광주에서 사망한 양민은 정확히 몇 명인지, 5월 27일 전남도청을 무력으로 진압할 때 그날 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진실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5·18 기념재단, 2017: 43). 그리고 5·18로 인해 수많은 개인들이 어떠한 고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

여전히 5·18 부인 담론은 이렇듯 총체적인 진실 규명이 미흡한 자리에 그 틈을 비집고 자라났다. 특히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이명박, 박근혜 두 보수 정권 시기를 지나면서 벌어진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는 극우보수 세력이 민주 세력을 와해시키기 위한 이데올로기 공작 차원에서 진행된 측면이 강했다.¹¹⁷ 이러한 조건에서 개별화된 형태로 진행된 보상책과 이른바 '치유'책은 피해자의 회유와 공동체에 분열을 초래할 위험을 태생적으로 안고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¹¹⁸

② 인권침해 피해자의 권리와 사회적 고통

일단 여기서 중요한 논점은 5·18의 진실에 대한 계속적인 침해 상태와 조직적인 부인(denial)은 인권침해 피해자

115 프로이드의 부인(denial) 개념을 끌어와 부인의 사회심리학 또는 인권사회학을 개척한 Cohen(2001)은 20세기 이후 발생한 다 양한 인권침해 사례를 폭넓게 열거하며 가해자와 방관자, 피해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부인 현상을 이론화하였다. 그는 인권침해와 인간의 사회적 고통을 조장 악화하는 행위를 '부인(denial)'으로, 그것을 경감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시인(acknowledgement)'으로 규정한다.

코언의 부인 이론을 적용한 5·18 부인에 대한 연구는 김보경(2014), 광송연(2015), 김명희(2017b)를 참고하라. 광송연(2015)의 연구가 1980년 사건 발생 당시 정부의 공식 설명을 중심으로 가해자(국가)의 공식 부인과 그것 이 대중의 침묵에 미친 문화적 영향을 다루었다면, 김보경(2014)은 1980년대 이후 5·18 과거청산 과정에서 나타난 '가해자 부인'과 과거 청산 이후 나타난 가해자 측 '지지자 부인' 전략을 비교하였다. 김명희(2017b)는 5·18 부인 담론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역사수정주의적 부인 담론과 기법을 비교하여 국가에 의한 국가범죄의 공식 부인(official denial)과 구별하여 가해자의 지지자들에 의한 새로운 부인의 양식을 '문화적 부인(cultural denial)'으로 개념화하였다.

116 5·18을 '북한군특수부대 600명이 일으킨 폭동', '계엄군은 5월 27일 새벽 도청에서 시민을 한명도 죽이지 않았다' 등 터무니없는 주장 등이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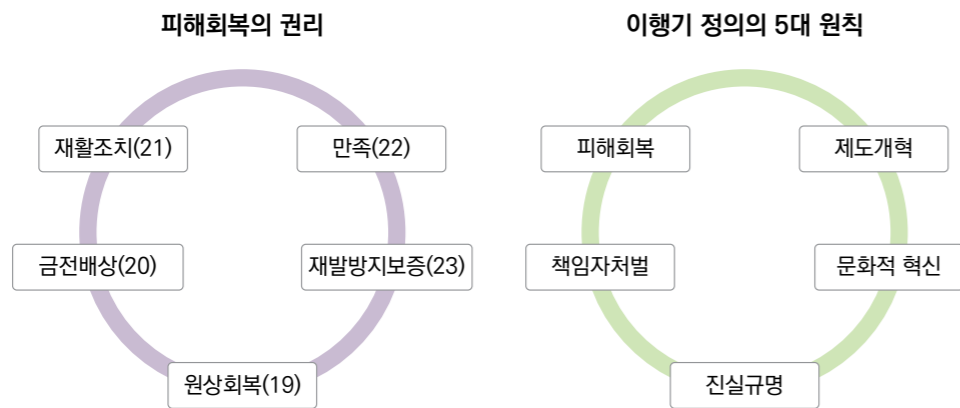
117 5·18 왜곡 및 부인 담론의 핵심 내용은 '북한군 특수부대가 일으킨 폭동', '계엄군은 5월 27일 새벽 전남도청에서 단 한 명의 시민도 죽이지 않았다', '광주 사태는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의 약칭) 잔존 세력이 광주 지역 운동권과 손잡고 일으킨 '폭동'이라는 등 주로 5·18을 북한과 연결시키려는 시도가 큰 흐름을 이루었다(5·18 기념재단, 2017: 43-46).

118 1988년과 89년 사이에 작성된 국회 광주청문회 대비 자료는 이러한 위험성을 잘 보여주는 자료다. 국방부 511위원회는 당시 국방부에서 발굴했던 자료들을 중심으로 청문회에 대비했다(오승용, 2012: 35; 한국국방연구원, 1988).

의 사회적 고통을 강화하는 2차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5·18 당시와 그 직후 자행된 국가폭력이 1차적 인권침해라면, 반복적이고 조직적인 진실의 부인은 2차적인 인권침해다. 이것이 사회적 고통을 강화하는 이유는 중대한 인권침해의 피해자의 '진실을 알 권리'와 '피해회복의 권리'를 정면으로 위협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인권침해 피해자의 역량과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기반을 훼손하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자살을 방지할 핵심적 보호요인이라 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체계의 상실은 개인을 사회에서 추방하는 힘으로, 자살의 핵심적인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2005년 UN 총회가 채택한 반보벤-바시오우니 원칙(일명 인권침해 '피해자 권리장전')은 지원/시혜라는 차원에서 벗어나 인권의 관점에서 피해자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고 국가는 어떤 '의무'가 있는지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 권리장전은 크게 1. 정의에 대한 권리(right to justice 제8장), 2. 피해회복에 대한 권리(right to reparation 제9장), 3. 진실에 대한 권리(right to know 제10장)¹¹⁹로 구성되어 그에 상응하는 국가의 의무(제2장, 제3장)를 조문화하고 있다. 각각은 긴밀한 상호 호응 관계를 맺고 있다(Bassiouni, 2006).

'피해자 권리장전'에 따르면, '진실에 대한 권리'는 모든 수준의 교육 자료에 자행된 위반행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진실을 알 권리와 진실을 보존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5·18 참여자들은 1980년 이후 상당 기간 진실을 알 권리를 갖지 못했고 사법적 재판과 처벌을 통해 정의를 실현할 권리를 박탈당했다. 비록 재판을 통해 핵심적 가해 책임자를 처벌하기는 했지만, 곧 진행된 가해자에 대한 '사면'은 정의를 실현할 권리를 훼손시키는 대가를 치러야 했다. 국가폭력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진실의 부정과 가해자의 불처벌(impunity)이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고통과 트라우마를 재경험(re-experience)토록 하거나 강화한다고 보고하고 있다(김명희, 2017a; 오수성·김석웅, 2018).



나아가 인권침해 피해자는 피해를 회복할 권리와 함께 그 전 국면에서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하지만 - 위에서 보듯 - 금전보상은 '피해회복을 위한 권리'를 실현할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금전보상을 제외하면 ① 원상회복 ③ 재활조치 ④ 만족 ⑤ 재발방지 보증 중 어떠한 권리도 충분히 실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③ 재활조치는 광포한 국가폭력으로 인해 신체적 상이를 무작위로 경험했던 5·18 피해의 규모와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매우 중요하다. 참여자들은 사건의 발생 직후 적절한 의료적 지원을 받기는커녕 "폭도"와 "불순분자"로 몰리지 않기 위해 피해사실조차 숨겨야 했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어렵게 하는 육체적·정신적 후유증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이고 즉각적인 배상"(인권피해자 권리장전, 제15조)의 부재는 피해회복의 모든 책임을 고스란히 당사자와 가족의 몫으로 떠넘겼다.¹²⁰

119 5·18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트라우마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강한 분노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다. 또한 참여자들은 5·18에 대한 왜곡, 가해자의 회고록 출판, 가해자의 불처벌 등을 통해 트라우마를 재경험하고 트라우마가 지속되며,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더 생생해지는 트라우마의 재경험 및 재생산 경험을 하고 있었다(오수성·김석웅, 2018: 86-87).

120 부상자와 구속자들이 개인적 수준에서 5·18로 인한 고통이나 상처를 알코올 등을 통해 해결하려고 했던 현상의 원인은 사회적 수준에서 이루어진 당사자의 상처 해결 노력이 시기를 놓치고 너무 늦게 진행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5·18 참여자들의 정신적 상처 및 후유증을 악화시킨 주요인은 5·18 직후 자신들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참여사실을 숨겨야 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충격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쳤다는 의미이며, 나아가 본인이나 가족 등이 재회생자라는 이중의 외상적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즉 국가폭력이 발생한 직후에 그 상처를 치유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이루어졌다면, 개개인이 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5·18 기념재단, 2006: 36-37).

⑥ 재발방지의 보증과 긴밀히 연관된 ④ '만족(satisfaction)'은 개인의 존엄과 명예회복과 관련되며, 그 구체적 요건은 다음과 같다.¹²¹

- (a) 지속적인 침해의 중단을 겨냥한 효과적인 조치
- (b) 사실의 검증과 진실의 완전한 공개
- (c) 실종자의 소재, 납치된 아동들의 신원, 피살자의 시신의 수색, 시신의 발견, 신원확인,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희망과 가족들의 문화적 관례에 따른 시신의 매장에서 지원
- (d) 피해자 및 친척들의 존엄, 명예, 권리를 회복시키는 공식적인 선언 또는 사법적 결정
- (e) 사실의 인정과 책임의 수용을 포함한 공식적 사과
- (f) 위반행위에 책임 있는 개인들에 대한 사법적 행정적 제재
- (g) 피해자에 대한 기념과 헌사
- (h)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 연수와 모든 수준의 교육자료 안에 자행된 위반행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의 포함

5·18 과거청산 과정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위 항목 중 (d)와 (e) 항목을 제외하고 인권침해자의 '만족'을 구성하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진실의 완전한 공개와 설명, 지속적인 침해의 중단을 겨냥한 효과적인 조치는 5·18 왜곡과 부인의 전면화된 현재의 국면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진실의 완전한 공개는 왜곡된 정보에 대한 인지적 재평가의 기회를 공동체에 제공함으로써 인권 침해 피해자를 향한 부정적 정서를 수정하고 피해자의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기반을, 나아가 재발 방지를 보증하는 사회적 기반을 다시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헤아려보면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자체가 여러 차원을 지닌다. 1) 공감이나 애정, 친밀감을 표현하는 정서적 지지(emotional support), 2) 금전이나 물질적 지원을 포함하는 실질적 지지(tangible support), 3) 관련된 상황이나 사건을 보다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적 지지(informational support), 4) 공동체 차원에서 피해자가 소속감을 잃지 않도록 돕는 사회교류적 지지(companionship support) 등이 그것이다(김서경, 2016: 291). 무엇보다 5·18 발생 국면에서부터 그 진실이 조직적으로 부인(denial)되었던 사건임을 상기한다면 5·18 직후 피해자들이 가장 필요로 했던 사회적 지지는 실질적 지지만큼이나 정보적 지지였다고 할 수 있다. 거꾸로 정보적 지지의 취약성은 피해자들의 회복을 지원할 사회교류적 지지의 기반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1980년 이후 현재까지 5·18 피해자의 인권을 구성하는 핵심적 측면들은 '계속적인 침해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2) 5·18 자살과 트라우마의 계보학: 숙명론적 자살과 저항적 자살

이와 같은 만성적인 인권침해의 상황은 5·18 자살을 촉진하는 사회적 조건으로 자리한다. 이러한 사회적 조건 속에서 이른바 '고의적 자해(자기살해)'를 일컫는 '자살(自殺)' 행위에 개인의 자유의지가 개입할 여지는 사실상 지극히 작다.¹²² 그렇다면 이러한 형태의 자살엔 어떠한 이름을 붙여야 할까? 이를 논하기 위해 1980년 이후 우선 2019년 10월 현재까지 5·18 자살의 추이와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자.

여러 자료를 종합할 때 2019년 10월 현재까지 알려진 자살자의 수는 46명으로 추정된다. 1980년대에 25명, 1990년대에 4명, 2000년대 총 13명으로, 5·18 직후 10년간 높은 자살률을 유지하다가 1990년대에 들어서 하락 추세를 보이지만, 2000년대에 이르면 2004년 한 해에만 7명이 자살하는 등 다시 자살빈도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¹²³ 그리고 2010년대 자살은 모두 4건으로 최근 박정철 씨의 자살 이전까지 5·18 관련 자살은 - 적어도 공적 담론에선 -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21 satisfaction은 라틴어 satisfactio에서 유래한다. 채권자(피해자)의 만족 이라고 했을 때 이는 완전한 피해회복(full reparation)에 가깝다. satis는 '넉넉함' 또는 '보증인', '보증'과 관련된다. satisfactio는 만족, 충족, 만족감, 변제보증, 담보제공, 진사, 사과, 사죄, 배상, 보상, 속죄, 보속(補贖)을 의미한다.

122 '자살'이라는 용어는 희생자 자신이 일어나게 될 결과를 알고 행하는 적극적 혹은 소극적 행위에서 비롯되는 직접적 혹은 간접적 결과로 일어나는 모든 죽음의 사례들에 적용된다(뒤르케임, 2000: 20).

123 기록되지 않은 자살자를 비롯해 관련단체와 교류가 없거나 단체에 의해 파악되지 않는 5·18 참가자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자살자가 있을 거라 짐작할 수 있다.

〈표 1〉 연도별 5·18참가자 자살자수 현황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연도	자살자수	연도	자살자수	연도	자살자수	연도	자살자수
1980	4	1990	0	2000	1	2010	1
1981	5	1991	0	2001	0	2011	2
1982	1	1992	0	2002	0	2012	0
1983	1	1993	2	2003	1	2013	0
1984	5	1994	0	2004	7	2014	0
1985	2	1995	0	2005	1	2015	0
1986	2	1996	0	2006	0	2016	0
1987	3	1997	1	2007	0	2017	0
1988	2	1998	0	2008	1	2018	0
1989	0	1999	1	2009	2	2019	1
합계	25	합계	4	합계	13	합계	4

자료: 1990년대까지의 자살현황은 5·18민주유공자유족회(2009; 2010)가 제공한 자료를 참고하되, 2000년대~2010년대 자살현황은 신문기사의 raw data를 참고·종합하여 필자가 재구성하였음.

우선 5·18 자살자 문제에 대한 세간의 관심을 환기시켰던 2000년대 자살로 논의를 한정한다면, 이들 자살의 주요 원인은 고문 후유증과 생활고인 것으로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 있다. 실제 조용범 등의 보고서에 따르면 10명의 사례 중 8명은 직접적인 고문과 학대를 받았으며, 9명은 자살 전까지 기도원이나 정신병동에서 보냈다.¹²⁴ 석방 이후 4년 이내에 자살한 2명의 사례를 제외하면(1982년, 1984년), 5·18 이후 그들의 모든 삶의 행적은 지속적인 몰락의 길을 밟아 조사시점까지 꾸준히 자살을 감행했다. 8인의 사례에서 고문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고통, 이를 견디기 위한 알코올 의존과 대인관계 실패, 가정문제, 실직, 빈곤문제가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전원이 외상 및 병리적·경제적·사회적·가정적 차원에서 치명적인 자살위험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있었고 이를 상쇄할 절절한 보호요인이 없다면 즉각적이고 충동적인 자살로 이어질 환경에 놓여 있었다. 불행하게도 피해자 전원은 마지막 단계에서는 사회적 지지체계와 가족 지지체계가 매우 낮았던 것이다(5·18 기념재단, 2008: 7-23).

이와 같이 5·18 자살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만성적이고 복합적인 국가폭력의 트라우마 양상들은 기존 연구에서 '5·18 트라우마티즘'(최정기 외, 2001; 정호기, 2003) 혹은 '사회적 트라우마티즘'(정호기, 2003; 강은숙, 2014)의 개념으로 설명되곤 했다.¹²⁵ 모든 자살자가 유사한 형태의 트라우마를 공유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갖는데, 뒤르케임(Émile Durkheim)이 『자살론』에서 일찍이 갈파한 바와 같이, 자살은 사건의 직접적인 결과가 아니다. 사건이 자살의 직접적인 원인인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우발적인 계기 - 혹은 근인(近因)에 지나지 않는다. 개인은 사회가 그를 습사리 자살의 희생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사소한 상황의 충격에도 자살을 하게 되는 것일 뿐이다. '자살의 사회학적 전환'을 이끈 뒤르케임의 선구적 통찰은 특정한 형태의 자살을 야기하는 해당 사회의 도덕구조와 집합적 경향(힘)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데 있었다(김명희, 2017b: 43-44). 이에 착안할 때, 5·18 생존자들이 겪었던 권위주의 국가의 폭력에 의한 복합적인 트라우마는 5·18 자살을 매개하는 집합적 경향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124 5·18민주유공자유족회가 2009년 5·18 당시 부상 후유증으로 숨진 380여명의 사망원인을 분석한 결과, '자살'이 41명(10.8%)으로 가장 많은 원인을 차지했으며, 이중 34%에 해당하는 14명이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5 5·18 관련자들의 심리적 상태에 주목한 최초의 문제제기는 1990년에 오수성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광주현대사자료연구소에서 편찬한 『광주5월민중항쟁』에 실은 "광주 5월 민중항쟁의 심리적 충격"(1990)이라는 논문에서 그가 외상후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개념을 언급한 이후 5·18 참여자들이 겪고 있는 트라우마는 많은 경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라는 진단 개념으로 설명되곤 했다(변주나, 1998; 오수성·조용래, 1999; 변주나·박원순, 2000; 5·18 기념재단, 2006; 최정기, 2006; 신혜량·김학렬·박상학 외, 2011; 강은숙, 2014). 그러나 정호기가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 원초적 사건의 트라우마에 의한 PTSD 증상 뿐 아니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좌절 혹은 정치·사회적으로 억압됨으로써 재희생화(revictimization)를 겪게 되는 PTSD를 분석하기 위해선 보다 확장된 개념이 필요하다. 특히 5·18 트라우마가 신체적·심리적 영역에 한정해서 설명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정치·사회적 층위와 관계 속에서 생성, 강화, 해소 혹은 소멸 등의 복잡한 과정을 겪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호기는 흔히 '외상성 증상'이라고 하는 '트라우마티즘'을 신체적, 심리적(혹은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영역에서 상호영향 하에 있는 증상으로 보고 그 상호작용에 주목하여 5·18 트라우마티즘이라는 개념을 제안한다.

하지만 이러한 자살 형태는 기왕의 자살 유형학에선 잘 포착되지도, 설명되지도 않는다. 여러 논자들이 뒤르케임의 개념체계 중 - '과도한 규제'의 사회적 조건에서 발생하는 자살을 뜻하는 -宿命론적 자살(fatalistic suicide)의 중요성에 주목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다(Besnard, 1993; Kushner, 1985; Mastroianni and Scott, 2011; Pearce, 1984; Tvirmantas, 2017; 김명희, 2012; 김종엽, 1996). 이들의 관심은 뒤르케임의 자살 유형학¹²⁶에서 주변화된 '宿命론적 자살' 개념을 복원함으로써 폭력과 통제의 메커니즘이 관여하는 현대적 자살 형태에 대한 사회학적 설명을 진척시키는데 있다.

뒤르케임에 의하면宿命론적 자살은 "지나친 규제의 결과, 미래가 무자비하게 제한되고, 욕망이 난폭하게 제압되는 사람들의 자살"이다. 다시 말해宿命론적 자살은 "지나친 육체적·정신적 압제"의 결과 절망과 속박(captivity)의 사회적 조건에서 발생하는 자살을 말한다.宿命론(fatalism)의 기본 특징은 어떤 자의적인 힘/의지에 종속된 상태 - 절망과 체념의 정신·신체 상태 - 에 있다. 즉 개인들이 그들의 사회세계를 둘러싸고 있는 제도·규범·가치에 의해 지나치게 규제되고, 개인의 자유의지와 자율성, 그리고 통제력을 박탈당할 때宿命론적 자살의 잠재적 희생자가 될 수 있다(김명희, 2012).¹²⁷

宿命론적 자살은 다음의 두 유형으로 다시 세분해 볼 수 있다. 첫째, 규칙 자체가 악의 근원인 '과도한 규제'의 상황으로 '불가항력적이고 융통성이 없는 규율'에 속박된 상태가 이에 속한다. 전형적으로 전쟁이나 국가폭력, 가정폭력, 포로수용소, 성노예제와 성폭력, 고문(후유증)과 같은 속박(Captivity)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자살을 가정할 수 있다. 둘째, 일종의 '경제적 강제'에 의한 자살을 상정할 수 있다. 물리적 강제는 없지만 별도의 필요(needs)에 종속되어있고, 질서가 정당한 규칙을 결여하고 있기에 합리적인 수단에 의한 개선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사회적 조건에서 유발되는 자살이 이에 해당한다. 여기에 자살은 본디 정치적인 문제임을 밝힌 정신의학자 길리건(2012)의 통찰대로, '열등감'과 '수치심', '죄책감'을 조장하는 사회정책과 사회제도는 자살유발충동을 강화하는 핵심인 기제가 될 것이다. 또한宿命론적 자살이 "지나친 육체적·정신적 압제"로 인한 절망과 비판의 사회 과정을 수반한다면, 이는 자연사적 죽음이 아닌 역동적인 '외상 과정(trauma process)'을 수반한 존재론적 죽음이라 할 수 있다(김명희, 2012: 313-314).

외상 과정(trauma process)은 사건과 사건의 재현 사이에 자리한 간극(gap)에서 발생한다. 이는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층위에서 트라우마의 발생 기제가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외상은 피해자가 사건 이전부터 지니고 있던 심리적 속성의 결과 - 예컨대 '피해성 성격장애' - 가 아니며 단일 사건 이후의 충격에서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예컨대 'PTSD'). 다시 말해 외상이란 사회적 과정을 통해 구성되는 것이며 그 기저에는 사건-구조-인식과 행위간의 인과관계가 자리한다. 그렇기에 외상은 그 외상적 경험을 야기한 사건의 인과(因果)에 대한 납득가능성 또는 설명가능성과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다. 간단히 말해 외상의 근원적인 문제가 다루어지지 않을 때 외상은 지속된다. 따라서 외상은 '사건 이전-사건-사건 이후'의 연속적인 스펙트럼 속에서 이해되어야만 하며, 외상 경험의 핵심은 물리적 폭력에 대한 즉각적 반응이 아니라 관계의 단절과 고립의 사회적 과정에 있다(김명희, 2014: 318-320; 2015: 237-238).

외상에 대한 사회학적 관점을 개척한 알렉산더(Alexadner)는 이를 '집단적·문화적 트라우마'라 부른다. 그에 따르면 집단적 트라우마의 경감은 외상적 사건에 대한 지배적 서사를 공격 청중에게 주장하는 수행집단(carrier group)의 재현 과정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1) 고통의 성격 2) 피해자의 성격 3) 광범위한 청중들과 피해자의 관련성 4) 책임의 귀속 등이 그것이다. 이를 통해 집단 기억과 국민정체성 또한 영향을 받는다. 트라우마에 대한 인식부족과 공적 영역으로의 진입 실패는 수행집단의 전달의 무능력에 기인하며 이 또한 '외상 과정'의 일부를 구성한다(Alexander, 2004; 김명희, 2014; 2015).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5·18 자살의 계보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형태의 자살유형을 함께 고려할 수 있다.

126 잘 알다시피 개인과 사회의 관계 형식에서 도출된다. 이기적 자살은 사회집단에 대한 '통합'이 불충분하기에 인간이 존재 근거를 삶에서 찾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이타적 자살은 사회에 개인이 강력하게 '통합'되어 있어 개별 존재의 근거가 외부(사회)에 존재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아노미적 자살은 개인의 활동에 대한 사회의 '규제'가 부재하기 때문에 일어난다.宿命론적 자살은 개인의 활동에 대한 사회의 '규제'가 과도하기 때문에 일어난다(뒤르케임, 2000: 275, 295; 김명희, 2012: 307-308).

127 필자는宿命론적 자살의 구체적 사례로 군대에서의 자살, 전쟁정치와 국가폭력의 트라우마로 발생하는 5·18 자살과 쌍용차 연쇄 자살, 매항리와 강정마을의 주민들이 느끼는 자살충동, 사회경제적 소외 집단에게 주로 나타나는 가족동반자살 등을 제시한 바 있다(김명희, 2012). 이 외에도 청소년들의 성적비관자살,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성소수자의 자살 등도宿命론적 자살의 구체적 형태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저항적 자살’이 그것이다. ‘저항적 자살’은 『자살론』에서 정의한 ‘이타적 자살’이나 혹은 ‘희생적 자살’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지만, 폭력에 대한 반(反)폭력, 즉 지배세력의 억압에 대한 저항세력의 반작용의 맥락에서 발생하는 특징을 보인다(임미리, 2016a: 323). 또한 저항적 자살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공격 청중과 자신이 귀속된 대항공동체를 향해 저항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에서 집합행동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여타의 자살형태와 차별성을 지닌다.¹²⁸

이들 논의를 참고하여 이제 5·18 자살의 유형적 특징과 이에 개입하는 사회적 기제들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3. 5·18 자살의 추이와 유형적 특징

1) 5·18 집단 트라우마와 목격자들의 자살: 외상 과정과 저항적 자살

5·18 민주화운동은 5·18을 직접 체험하고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협의를 피해자’만이 아니라 5·18을 목격하고 살아남은 ‘광의의 피해자’에게도 커다란 죄책감과 정신적 상흔을 남겼다. 1980년대 집중적으로 발생했던 저항적 자살은 5·18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을 직·간접적으로 목격한 이들이 공유했던 집합적 트라우마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 단체 연대회의(이하 추모연대)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1980년 5·18 이후 운명을 달리한 열사희생자는 전체의 83%인 581명에 이른다.¹²⁹ 80년 5월 이후 이른바 ‘열사’들의 자살 상당수는 ‘광주의 진실’을 알리기 위한 일종의 집합행동의 양상을 보였고, 이들이 직·간접적으로 겪었던 5·18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5·18 진상규명”을 외치며 사망한 이들의 이름과 죽음의 맥락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광주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사망한 열사·자살희생자

	이름	사망년월일	내용	비고
1	김의기	1980.5.30. (향년 22세)	서강대생으로, 광주 학살에 항의하는 ‘동포에게 드리는 글’을 남기고 종로 5가 기독교회관 6층에서 투신 사망	국립5·18묘지
2	김중태	1980.6.9. (향년 23세)	노동자로, 서울 이화여대 앞 네거리에서 “광주학살 책임지도 전두환은 물러나!”고 외치며 분신 사망	국립5·18묘지
3	김태훈	1981.5.27. (향년 23세)	서울대생으로, 학내에서 산발적인 시위 도중에 도서관 6층에서 “전두환 물러가라”는 구호를 세 번 외치고 투신 사망	국립5·18묘지
4	박관현	1982.10.12. (향년 30세)	80년 전남대 학생회장으로 광주항쟁과 관련 구속되어 5·18 진상규명 요구 단식 중 운명	국립5·18묘지
5	홍기일	1985.8.22. (향년 26세)	노동자로 광주 전남 도청 앞 금남로에서 “광주시민이여! 침묵에서 깨어나라!”고 외치며 분신 사망	이천 민주공원
6	송광영	1985.10.21. (향년 28세)	경원대 재학 중 9월 “학원악법 철폐하고 독재정권 물러가라!” “광주학살 책임지도 전두환은 물러가라!” 외치며 분신 사망	이천 민주공원
7	장이기	1986.3.16. (향년 34세)	청주대 졸업, 안양 박달예비군 훈련장에서 전두환정권을 옹호하는 시국훈화에 반박, ‘정권탈취야욕에 불타 광주시민 수천 명을 학살한 전두환을 처단하자’라고 외친 후 교관들에 의해 폭행, 사망	이천 민주공원
8	이동수	1986.5.20. (향년 24세)	서울대 재학중 학생운동 참여, 86년 서울대 오월제 행사 중 학생회관에서 “파쇼의 선봉 전두환을 처단하자”, “미제국주의 물러가라” 외치며 분신	이천 민주공원
9	강상철	1986.6.26. (향년 23세)	사회운동가이며, “전두환 및 5·18 쿠데타 주동자는 물러가라”고 주장하며 목포역에서 분신 사망	국립5·18묘지
10	표정두	1987.3.8. (향년 25세)	노동자로,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광주사태 책임자 처벌”을 외치며 분신 사망	국립5·18묘지

128 이와 같은 저항적 자살의 특징은 전태일의 자살을 기점으로 한국현대사에서 드러난 열사들의 자살을 연구한 마나베(2016), 분신자살이 구조와 메커니즘을 연구한 이창언(2009), 1990년대 대학생 및 민족민주열사들의 저항적 자살 유형을 분류한 임미리(2016b: 2016b)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129 임미리가 정리한 자료에 의하면, 추모연대 등재 열사 중 자살자는 1970년 전태일을 시작으로 137명이다(임미리, 2016b: 257). 1970년대 자살자가 1970년 전태일과 1975년 김상진, 2명에 불과하며 저항적 자살의 본격화된 것은 1980년 광주 이후의 일이다. 한편 1980~1989년 자살자는 48명, 1990~1999년 자살자는 52명, 2000년~2012년까지의 자살자는 33명이다.

11	황보영국	1987.5.25. (향년 27세)	노동자로, 부산 상고앞에서 ‘독재타도’ 광주학살 책임지도 전두환은 물러가라’ 등을 외치며 분신 사망	이천 민주공원
12	박태영	1987.12.10. (향년 21세)	목포대생으로, “군부독재 끝장내고 민주정부 수립하자!”는 주장을 하면서 42일간 학내에서 1인 시위를 하다가 분신 사망	국립5·18묘지
13	조성만	1988.5.15. (향년 25세)	서울대생으로, “광주학살 진상규명”을 외치며 명동성당 교육관 4층에서 투신 사망	국립5·18묘지
14	최덕수	1988.5.26. (향년 21세)	단국대생으로, “광주학살 진상규명”을 외치며 학교 교정에서 분신 사망	국립5·18묘지
15	박래전	1988.6.6. (향년 26세)	송실대생으로, “광주는 살아있다!”고 외치며 송실대 학생회관에서 분신 사망	마석 모란공원
16	김병구	1989.9.2. (향년 34세)	노동자로, 연세대학교 학생회관에서 ‘광주학살원흉처단’과 노태우정권 퇴진 등의 구호를 외치며 투신, 이후 후유증으로 고생하다 자결	이천 민주공원
17	박인기	1990.12.17. (향년 29세)	강원대 전두환 장기집권유모저지 및 민족민주운동 탄압분쇄투쟁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중 구속 수감, 수감생활 중 단식으로 신장염 투병 중 사망	이천 민주공원
18	이길상	1998.12.7. (향년 38세)	경희대 재학 중 80년 11월경 “살인마 전두환 물러가라” “광주민중항쟁 투쟁으로 계승하자” 유인물을 제작, 학내 살포로 연행되어 고문 조사, 그 후 유증으로 투신사망	이천 민주공원

출처: 5·18 민주항쟁기념행사위원회(2018: 34~35)¹³⁰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 이들 자살의 수단은 대부분 분신 또는 투신이며,¹³¹ 광주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과 동일시 하면서 학살 가해자의 책임과 또는 사건의 진실을 공격 청중(또는 방관자들)이나 소속 집단에 전달하며 투쟁과 저항을 강력히 호소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대표적으로 5·18 당시 서강대학교 76학번으로 여름 농촌활동 차 광주에 갔다가 광주의 참상을 목격하고 1980년 5월 30일 종로 기독교회관에서 5·18민주화운동 유혈진압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뿌린 뒤 투신 사망한 고(故) 김의기의 유서를 보면 이 점이 잘 드러난다.¹³²

동포에게 드리는 글

피를 부르는 미친 군화발 소리가 고요히 잠들려는 우리의 안방에까지 스며들어 우리의 가슴과 머리를 짓이겨 놓으려 하는 지금, 동포여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보이지 않는 공포가 우리를 짓눌러 우리의 숨통을 막아버리고 우리의 눈과 귀를 막아 우리를 번득이는 총칼의 위협 아래 끌려 다니는 노예로 만들고 있는 지금, 동포여 무엇을 하고 있는가?

동포여,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장한 살육으로 수많은 선량한 민주시민들의 뜨거운 피를 뜨거운 오월의 하늘아래 뿌리게 한 남도의 봉기가 유신잔당들의 악랄한 언론탄압으로 왜곡과 거짓과 악의에 찬 허위선전으로 분칠해지고 있는 것을 보는 동포여,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20년 동안 살벌한 총검아래 갇은 압제와 만행을 자행하던 유신정권은 그 수괴가 피를 뿌리며 쓰러졌으나, 그 잔당들에 의해 더욱 가혹한 탄압과 압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중략) 마지막 한 사람까지 일어나자! 우리의 모든 싸움은 역사의 정 방향에 서있다. 우리는 이긴다. 반드시 이기고야 만다. 동포여, 일어나 유신잔당의 마지막 숨통에 결정적 철퇴를 가하자 일어나자! 일어나자! 일어나자 동포여! 내일 정오, 서울역 광장에 모여 오늘의 성전에 몸 바쳐 싸우자, 동포여!

130 이 자료는 5·18 민주항쟁기념행사위원회(2018)의 자료집에 수록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1991년 분신 정국까지를 고려하면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131 이 점은 5·18 자살자 심리부검 결과에 따르면, 자살피해자가 주로 사용한 자살수단은 40%가 농약을 사용하였으며, 30%는 교사, 2인은 추락, 1인은 연탄가스 중독이었다(5·18 기념재단, 2008: 9, 24). 특히 전두환 정권 이후 압도적으로 등장한 분신자살은 개인적 결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체제의 부정의성을 드러내는 ‘정치적 행위’이자 ‘대의를 위한 최고의 희생’을 의미하고 방관자나 반쪽 참여자들의 무관심과 비검함을 성찰하게 하여 일상으로 철수하려는 사람들의 퇴로를 막으려는 집합행동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김효정, 2002; 이창언, 2009: 154, 161).

132 서강대생이었던 고(故) 김의기(당시 22살)는 1980년 5월 30일 종로 기독교회관에서 5·18민주화운동 유혈진압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뿌린 뒤 떨어져 사망했다. 그가 유인물 ‘동포에게 드리는 글’을 직접 타이프 쳐서 인쇄한 것은 확인되었으나 그가 떨어져 당시의 정황은 밝혀지지 않아 자살인지 타살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배선영, 2017). 밑줄의 강조는 필자.

요컨대 5·18 이후 1980년대 집중적으로 나타난 저항 집단의 자살은 사건 당시부터 은폐·왜곡·부인되었던 5·18의 진실과 그 재현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메우기 위한 수행집단(carrier group)¹³³의 외상 과정 속에 자리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2) 5·18 생존자들의 자살1: 고문·구금·학대·성폭력의 트라우마

5·18 생존자들의 자살은 발생 기제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먼저 1980년대 주로 발생한 5·18 생존자들의 자살은 국가폭력의 트라우마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강하게 호소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인데, 이는 기존의 전쟁피해자나 고문피해자, 포로수용소나 감옥에서의 인권피해자와 비슷한 유형의 외상으로 판단된다(오수성, 2006). 실제 1980년대 초반 5·18과 관련되어 전개된 국가폭력의 범주는 구타 등의 단순 물리적 폭력에서부터 집단학살에 준하는 무차별 살상, 불법 감금(투옥, 연금),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고문 등의 의도적 가학 행위, 불공정 재판 및 불법적 형 집행, 실종 및 의문사 등 사망에 대한 의도적 은폐와 허위조작 등 가히 국가폭력의 범주를 거의 모두 담고 있다. 이러한 국가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은 우연과 상황에 따라 모든 범주의 폭력기제에 노출된 사람들부터 한두 가지의 특수한 폭력에 깊이 노출된 사람들까지 그 스펙트럼도 매우 다양하다(평화박물관, 2012).

이들 중에는 거리에서 공수부대의 만행과 발포에 의해 상해를 입은 자도 있고, 항쟁 기간 중이나 이후 상무대나 감옥으로 끌려가서 학대와 고문을 당한 자도 있으며, 심지어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학대와 강제노역을 겪고 나온 사례도 여럿 발견된다.¹³⁴ 자살 피해자들의 가족들과 지인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고문과 학대를 겪은 이들은 살아 돌아 오기는 했지만, 돌아왔을 때 이들은 이미 ‘산송장’과 같았다. 이들에 대한 증언자들의 기억은 ‘5·18 이전’과 ‘이후’로 극명하게 나누어져 있다(5·18 기념재단, 2008: 25).

피해자들이 겪었던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정신 분열이나 가족 안에서의 폭력으로 예외 없이 재생산되었고, 80년 당시 겪었던 혹독한 체험은 그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석방된 이후 생활에서도 공권력에 의한 일상적인 감시와 사찰이 잇따랐고, 감시와 사찰은 가족들에게까지 적용되었다(5·18 기념재단, 2006: 29; (사)5·18 민주유공자유족회, 2005: 261). 이들에게 전두환 정권이 집권한 8년간의 기간은 곧 1980년의 연장이었으며, 이 기간 동안 5·18 생존자들은 국가폭력의 ‘직접적인’ 통제와 영향력 아래 놓여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1980년대 자살자들이 보여주는 정신병리는 곧 국가폭력의 직접적 흔적이자 결과인 셈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5·18 직후 자행된 불법적 연행과 구금, 고문과 학대 과정이 일종의 정신적 세뇌의 형태로 상당히 조직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자살피해자들은 스스로가 ‘폭도’라는 인식을 하도록 언제나 관등성명을 폭도 ○○○라고 말하도록 강요당했고, 고문과 조사과정에서 겪은 일을 발설하지 못하도록 교육받았다. 이러한 방식의 고문과 가해가 수반될 경우 가해자와 동일시하거나 세뇌되는 것 같은 후유증이 발생하게 된다. 자살피해자 가운데 한 명은 실제로 5·18 이후에 국가를 지켜야 한다면서 바로 해병대에 지원하기도 하였고, 이후 심한 폭력적 행동을 보이며 아내를 살해하기까지 하여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그는 끝내 교도소에서 자살하였다(5·18 기념재단, 2008: 14; KBS 5·18 자살자 심리부검보고서, 2009).

이 같은 사실들은 미증유의 국가범죄와 학살의 증거가 ‘인멸·은폐’되는 과정의 단면을 보여준다. 아울러 국가폭력이 물리적 폭력의 형태로만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 폭력을 정당화·내면화하는 상징적 폭력과 함께 행사된다는 점을 환기시킨다. 폭력은 그 자체만으로도 인간의 육체와 정신에 깊은 고통과 상처를 입혀 그를 죽이거나 육체적·정신적 불구자로 만든다. 그런데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고 그것을 사회구성원들에게 내면화하도록 하면 이 또한 폭력이다. 그 결과 자신에게 가한 폭력(self-centered violence), 즉 자해나 자살도 사실상 국가폭력의 범

주에 포함할 수 있다. 군대 내에서의 구타 등으로 인한 사망은 물론 물리적 폭력에 속하지만, 군대의 가혹한 명령체계, 조직문화, 가혹행위, 집단 따돌리기 등이 원인이 되어 자살을 택하는 경우도 국가폭력에 범주에 포함할 수 있다. 실제 세계의 모든 폭력 희생 중에서 여전히 자살은 통계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선택인 것처럼 보이는 행동의 상당 부분은 국가나 사회에 책임이 있는 것이다(김동춘, 2013).¹³⁵

뿐만 아니라 지난해 10월 31일 여성가족부·국가인권위원회·국방부로 꾸려진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5·18 당시 군이 자행한 성폭행이 있었음을 공식 확인한 바 있다. 성폭력 17건, 성추행·성가혹(고문)행위는 45건이다. 피해자는 10대에서 30대의 어린 학생과 젊은 여성들이 대부분이었다. 시위에 나섰거나 가족을 찾아나서는 과정에서 성폭행을 당했고, 시위에 가담하지 않은 여학생, 임신부도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공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드러났다. 성폭행 피해 이후, 승려가 된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박병국, 2019). 5·18 20주년을 맞아 5·18 민주유공자유족회가 유족들의 증언을 수집해 2000년 발간한 『부서진 풍경1: 5·18 정신병동 이야기』(2000)에는 계엄군에 의한 집단성폭력의 트라우마로 정신병이 발병하거나 치욕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세 여성의 가슴 아픈 사연이 등장한다. 2019년 5월 18일 방송된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계엄군에게 집단성폭행 당한 후 부친을 살해하거나 자살한 사례가 소개되기도 했다(이다래, 2019).

이렇게 볼 때 5·18 피해자들의 “자살의 궁극적 원인은 5·18 진압, 취조, 감금과정에서 국가의 무자비한 폭력에 의한 외상적인 사건이었다”는 심리부검보고서의 진단은 정확히 옳다. 자살피해자들은 수많은 자살위험요인들을 갖고 있었지만 이것들은 모두 5·18 이후 이어진 고문과 학대로 파생된 것이기 때문이다(5·18 기념재단, 2008: 29). 고문·구금·학대·성폭력의 후유증으로 인한 자살은 과도한 규제의 결과, 지나친 육체적·정신적 압제로 인한 속박(captivity)과 절망의 사회적 조건에서 발생하는 숙명론적 자살의 전형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3) 5·18 생존자들의 자살2: 등급화된 보상/인정체계

하지만 공공이 헤아려보면 모든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이 자살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만일 이들 자살의 위험 요인을 상쇄할 다른 보호 요인이 작동했다면, 즉 자살의 저항력 혹은 대항력(counter power)이 활성화되어 있다면 자살은 막을 수 있는 일이 된다. 실제 1988년 보상정책의 실행 이후 1990년대 5·18 관련자들의 자살은 현저히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아울러 5·18 피해자들은 ‘피해자’였던 것만이 아니라 1980년 5월 ‘절대공동체’의 일부였고 이후에도 자신의 트라우마를 나름의 방식으로 극복하기 위해 인정투쟁의 노력을 이어갔던 ‘행위자’이기도 했다. 자칫 고문 및 국가폭력의 피해자의 범주에 시선이 고정될 경우, 피해자인 동시에 권리의 주체이자 정치적 행위자였던 5·18 참여자들의 총체적 면모를 놓칠 위험이 있다.

실제 1990년대 시행된 보상 국면 이후 2000년대 발생한 자살은 훨씬 더 역동적인 양상을 보이며, 이는 광주의 과거청산 방식, 곧 등급화되고 개별화된 형태로 진행된 금전보상의 과정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¹³⁶ 유사한 관점에서 5·18 시민군 기동타격대원의 생애사를 재구성하여 강은숙은 5·18 참여자들이 ‘5월 정신’이라는 일반화된 타자를 공유하며 외상을 자신의 삶에 통합하고 애도하며 공동체와의 연결을 회복할 수 있었던 1980년대의 국면과 달리 피해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상 정책이 진전된 1990년대 이후의 국면에서 항쟁의 주체로서 권리 및 자존감이 훼손되고 사회적 지지가 축소된 과정이 새로운 트라우마티즘을 형성하게 되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드러내고 있다(강은숙, 2014).

다시 말해 1990년대에는 모든 상처가 치유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크게 보면 광주가 국가적 성역으로 정립되고 피해자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1995년 12월 노태우, 전두환 전직 대통령의 재판을 가능케 한 특별 처벌법이 통과되는 등 많은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4년에만 7명의 자살자가 발생하는 등 2000년대 불거진 연쇄 자살 문제는 1990년 7월 민자당의 날치기로 통과·제정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

133 수행집단은 외상 서사를 공식 청중에게 전달하는 일종의 발화자다. 수행집단은 상징적 생산수단을 갖고 있으며, 공적 영역에서 의미를 창출하는 담론적 능력이 있다(Alexander, 2004).

134 자세한 내용은, 5·18 민주유공자유족회(2009) 중 정남철, 장석호의 사례 참조. 1980년 8월 4일 ‘불량배 일제검거’라 명명된 계엄포고 제13호 발포로 대대적인 검거와 함께 시작된 삼청교육대는 이른바 순화교육 이후 근로봉사로 이어져 수용자들은 반년 넘게 갇혀 고통과 노역을 당해야 했고, 1981년 1월 25일 계엄 해제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호법에 의거하여 재판도 없는 보호감호 처분으로 여전히 사회에 복귀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망자와 가혹행위, 인권유린이 자행되었다(임상혁, 2002: 75-76). 1988년 국회의 국방부 국정감사 발표에 의하면 삼청교육대 현장 사망자가 52명,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자 3백 97명, 정신장애 등 상해자 2천 6백 78명이 발생하였다.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69235&cid=40942&categoryId=31778>(2019. 11.2 접속)

135 이 점에서 1980년 계엄군에 투입되었다가 정신 착란을 일으켜 친형까지 죽이고 1992년 자살한 사례나(김재삼, 1993), 정신병원에서 삶을 보내야 했던 김동관의 사례는 가혹한 복종의 체계에 종속된 ‘가해자이자 피해자’의 경로를 보이며 이들의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이 인정되어야 마땅하다.

136 2018년 현재 5·18 기간 중 보상 인정된 피해자는 모두 5,801명이다. 사망자 155명, 행방불명 인정자 84명, 부상 후 사망자 113명, 부상자 3,504명, 연행 구금 부상자 1,217명, 연행 구금자 1,610명, 재분류 및 기타 118명(제7차 보상 포함, 2018.10.10. 현재 기준)이다. 이 통계의 피해자 기준은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1990)에 의한 보상 인정자 숫자에 따른 것이다(5·18 민주항쟁기념행사위원회, 2018: 31).

책 실행의 효과가 한계에 다다른 어떤 지점을 보여주는 징후라 판단된다. 근본적으로 광주민주화운동의 피해자들에 대한 금전적인 지급을 배상 아닌 보상으로 사용한 것은 5·18의 진상을 국가 공권력의 적법한 행사로 보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것이었고, 5·18 문제에 대한 정부대책의 대부분은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치유대책보다는 금전 보상 위주의 미봉책과 여러 가지 무형의 기념사업 등에 치중되었다(변주나·박원순, 2000: 149).

광주보상법이 5·18 자살피해자의 사회심리적 환경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와 관련해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할 몇 가지 쟁점이 있다. 첫째는, 산재보상을 적용한 호프만식 보상 정책이 5·18 저항공동체 내부에 균열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고, 둘째는 시혜를 받아야 할 대상으로서 보상 집단에 부착된 사회적 스티그마(social stigma)¹³⁷와 함께 보상을 특권으로 인식하는 광주 내부의 이중적 시선은 5·18 피해자들에 대한 광주 시민들의 사회적 지지를 역설적으로 낮추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이다. 셋째로,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친 일시적 보상은 실질적 보상의 효력을 갖지 못하고 되레 보상금을 둘러싼 가족 내부의 갈등이나 보상사기, 사업실패 등으로 경제적 위기와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가족 관계의 단절과 훼손을 초래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첫 번째 문제부터 살펴보자. 1980년대 유족, 부상자, 그리고 구속자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관련 단체들은, 부분적으로는 피해자의 출신 계급에 따른 정부의 차별화된 보상을 이유로 좀 더 복잡하고 세밀하게 분리되어 갔다. 예를 들어, 행불자 가족의 경우 정부에 의해 5·18 피해자로 공식 인정을 받은 부류와 그렇지 않은 부류가 생겨남에 따라 정부에 대한 5·18운동에 대한 요구사항, 목표, 이해관계나 전략적 차이로 갈라지게 되었다. 또한 광주의 지식인/전문가 집단이나 정부 중심으로 진행된 5·18 기념의 제도화 과정은 5·18 유족회나 직접적 피해자 집단에게 돌아가야 할 지도적 위치를 배제시켰던 반면, 웅장한 규모의 새 묘지와 5·18 희생자가 국가 유공자로 인정을 받은 데서 오는 그들의 성공은 더 이상의 요구를 불가능하게 하였다(루이스, 2000: 204-211). 중요한 것은 광주보상책이 ‘피해에 등급을 나누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인데, 2006년 11월 14등급 이하인 1천 200여명으로 구성된 5·18 기타희생자 동지회의 집회 도중 분신자살을 기도한 홍○○의 사례나(장하나, 2006), 2005년 5월 23일 증거불충분으로 인해 유공자 신청이 기각된 것을 비판하며 자살한 노○○의 사례는¹³⁸ 등급화된 피해보상책의 효과라 할 것이다.

둘째, 대다수 광주 시민의 눈에는 5·18 피해자 단체들은 수차례에 걸쳐 지급된 보상금으로 이미 정부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았다고 보이며, 피해자들에 대한 그들의 동정은 사라져갔다. 더 이상의 권리 주장은 이기적 탐욕으로, 이 집단의 특수한 필요사항에 근거한 구체적 제안들은 편협한 이기심의 발로로 간주되었다. 어떤 점에서 5·18피해자 집단의 계층 구조는 1980년 항쟁 당시 광주에 존재했던 당시의 사회 경제적 분열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항쟁 당시 다수의 피해자가 하층 계급 출신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사망자들은 대체로 평균보다 더 빈곤하고 교육 정도가 낮은 계층이었고 그들의 유족과 동지들도 또한 같은 계층이라 할 수 있다.¹³⁹ 또한 금전적 개인 보상정책은 허위 신고자에 의한 소위 ‘가짜 5·18 보상금’ 사건까지 발생하게 했고, 이는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크게 훼손시켰다.¹⁴⁰ 결국 보상국면은 5·18 관련 집단의 사회적 지지 기반을 훼손시키는 역설적 결과를 초래했고, 이는 다시 5·18 참여자들의 자존감과 명예회복을 위협하는 자살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했다.¹⁴¹ 그리고 이러한 위험은 2000년대 중후반부터 현재까지 극우보수세력에 의해 유포된 ‘특권-보상 프레임’과 5·18 과거청산 부인 담론을 통해 지금 이 순간도 재생산되고 있다.¹⁴²

137 5·18 피해자들에게 부착된 스티그마는 5·18 부상자인 박효선의 아내인 허순이의 증언에서 잘 드러난다. 5·18 관련 장애 보상금을 지급받는 자는 모두 ‘1층 의료보호카드’를 발급하여 의료보호 혜택을 제공했던 바, 그녀는 의료보험 담당자에게 “5·18 의료카드를 제시하는 순간 느껴야 했던 싸늘하고 조소어린 그의 눈길”을 잊지 못한다고 회고한다(변주나·박원순 편, 2000: 248).

138 노씨는 시민군이자 2년 6개월 동안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고초를 겪은 피해자임에도 “5·18때 군부독재에 항거하기 위해 싸우다 삼청교육대에 끌려가기 때문에 5·18 유공자라며, 끝까지 삼청교육대 피해신청을 하지 않았고 유족들은 전한다. 노씨는 5월만 되면 부상 후유증과 우울증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1993년부터 3차례나 5·18유공자 신청을 했지만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모두 기각됐다(형민우, 2005).

139 5·18 사망자의 약 70%가 공장 노동자, 서비스 계층 종사자, 노점상, 농부 등의 노동자 계급이거나 실직자들이었고 부상자와 체포 구금된 피해자들도 사망자와 같은 계층적 양상을 보인다. 실제로 학생들은 1/3도 못 미쳤다(루이스, 2010: 206-210).

140 3차 심사과정에서 소위 ‘가짜 5·18 보상금’ 사건이 발생했다(동아일보, 2000, 6.24). 가짜 보상금 사건은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제1~3차 보상심사에서 가까운 사람들과 서로 짜고 맞보증을 서거나 허위진단서를 첨부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상을 신청하여 거액의 보상금을 타낸 것이다. 이 같은 범죄는 1980년 5·18 당시 병원진료기록이나 수감자 명부 등이 거의 없어 신청자의 진술이나 인적 보증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허점을 악용했다고 볼 수 있다(신일섭, 2005: 194).

141 인간은 생명권과 존엄성 침해 받았을 때 극심한 분노감, 비참감 및 좌절감을 느끼게 되며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안녕을 도모하기 어렵게 된다(Mann, 1998).

142 대표적인 것이 ‘5·18 유공자 귀족 예우설’이다. 지만원 등 극우보수 세력은 5·18유공자를 비방하면서 △거액의 보상금과 연금 수령 △유공자 가산점을 통한 공직 씩씩이를 근거로 들고 있다. 특히 6·25 참전용사 등 타 유공자와의 수혜 비교를 통해 5·18유공자가 지나친 특혜를 받고 있으며, 다음 세대의 권익마저 위태롭게 만든다는 식으로 전개된다. 예컨대 유공자 가산점의 경우 자녀의 취업 문제와 결부시켜 위화감을 조장한다. 극우보수 세력의 프레임 안에서 5·18유공자는 대한민국의 특권층으로 나머지 다른 집단에게 피해를 끼치는 존재일 뿐이다. 5·18 기념재단 홈페이지, [http://www.518.org/sub.php?PID=030003&page=&category=&searchText=&searchType=&action=Read&idx=2\(2019.11.3 검색\).](http://www.518.org/sub.php?PID=030003&page=&category=&searchText=&searchType=&action=Read&idx=2(2019.11.3 검색).)

셋째, 심리부검 보고서에 따르면 보상금을 받은 이후 5·18 유공자들의 경제적 상태가 나아진 경우는 많지 않았다. 당사자(부상자·구속자)들을 대상으로 보상금의 사용처를 질문한 결과 생활비 총당(57.5%), 기타(17.4%), 치료비(15.0%), 채무 해소(7.2%) 등으로 과반수에 이르는 응답자가 생활비에 총당했다고 답하며, 보상금이 삶을 개선하는 토대가 되지 못하고 그대로 소모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5·18기념재단, 2006: 41-42).¹⁴³ 또한 당연한 얘기지만 치료시기를 놓친 질병은 악화된다. 부상자의 경우 1990년에 와서야 지급된 보상금은 그대로 병원비와 치료비에 들어가는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었고(5·18기념재단, 2007: 24), 일회성의 5·18 피해보상금은 보상금을 노린 사기 범죄의 타겟이 되기도 했다(5·18기념재단, 2008: 77), 상당한 경우 보상금은 사업 자금으로 들어갔지만 사업의 실패로 파산이나 추가 부채가 발생해 가족의 경제적 위기를 되레 가중시켰다. 이러한 생활고로 인한 갈등은 자연스럽게 이혼을 비롯해 가족구성원 및 친척들 간의 불화로 이어졌고, 생존자의 정서적 지지체계의 와해와 사회적 고립(social isolation)을 촉진했다. 생존자들이 5·18 이전에 가졌던 능력과 자신감은 이 같은 몰락의 과정을 거쳐 서서히 사라져 갔고, 자살피해자의 대부분은 실패자로 그리고 영구적인 빈곤자로 전락해 갔다(5·18 기념재단, 2008).

이 모든 것을 아울러 볼 때 광주의 과거청산 국면에서 발생한 자살피해는 1980년에서 광주식의 보상 국면까지 켜켜이 누적된 국가폭력의 트라우마와 경제적 강제의 압력이 중첩되어 발생한 숙명론적 자살의 한 형태로 이해될 수 있다.¹⁴⁴ 더욱 심각한 것은 이에 멈추지 않고 5·18 자살자들이 삶의 과정에서 겪었던 고통이 제2세대와 유가족의 피해로까지 확대 재생산되는 양상을 보이는 바(5·18 기념재단, 2008: 25), 5·18 자살의 발생 과정은 한국사회에서 국가폭력 피해자의 ‘재희생자화(revictimization)’가 진행되는 메커니즘과 루트를 구체적으로 드러내 보여준다.

4. 결론 및 제언: ‘사건-보상-치유 프레임’을 넘어서

앞서 말했듯 광주 5·18 민주화운동은 광주시민만을 위한 운동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를 압축적으로 성장시킨 밑거름이었고, 다른 과거청산 운동의 상징적 척도가 되었다. 과거 압제 하 정치적 폭력과의 대면이라는 과제 앞에서, 한국의 이행기 정의의 요구는 그간 진실규명을 위한 사회운동으로, 그리고 민주화운동의 일부로 전개되어온 5월 운동의 본격화로 나타났다. 5월 운동 속에서 이행기 정의는 ‘5월 문제 해결을 위한 광주 5원칙’으로 구체화되었지만, 과거청산의 제도화 과정에서 5·18의 이행기 정의는 딜레마를 드러내며 일관락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 과거청산 레짐은, 1980년대 후반 진행된 광주민중항쟁에 대한 ‘증언’을 통해 한국에서 기억연구를 배태시키고 발전시키는 온상이 되었고 그간 누적되어온 분단 현대사의 묵은 과제들을 전면화하는 물꼬를 텃다(김명희, 2016b: 365). 동시에 광주의 과거청산은 국가폭력 피해자의 고통과 트라우마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범죄의 사회심리학을 발전시킬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기여를 했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한국 이행기 정의의 특수한 국면과 인권 레짐이 5·18 자살에 미치는 사회심리적 메커니즘을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5·18이라는 발생적 사건에 기원을 갖는 두 유형의 자살형태를 숙명론적 자살과 저항적 자살로 개념화하고, 각각의 구체적인 작동방식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1980년대와 2000년대 두 국면에서 높은 빈도를 보이는 5·18 생존자들의 자살이 국가폭력의 트라우마의 지속적인 영향력만이 아니라 개별적인 금전 보상을 중심으로 진행된 광주의 과거청산 방식과 내밀한 연관을 맺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5·18을 직접 체험하고 그 이후에도 삶을 살아가야 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5·18이 여전히 진행 중인 폭력임을 드러내는 동시에,¹⁴⁵ 진실규명 없는 금전적 보상책과 피해자의 참여권과 처벌권을 존중하지 않는 과거청산이 어떠한 연쇄적인 사회 병리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 보여준다. 또한 현재 광주의 과거청산 방식이 1988년 노태우 정부하에 제출된 ‘광주사태 치유 방안’에 원형을 갖고 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동일한 비판이 광주의 ‘치유’ 방식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5·18의 금전화’와 동전의 양면을 이루는 ‘5·18의 자원화’ 경향 속에서 피해자들의 아픔과

143 보상금의 사용과 보상금을 둘러싼 시민들의 인식변화에 대해서는 (사)5·18 민주유공자유족회(2005)가 발간한 『그해 오월 나는 살고 싶었다2』의 여기저기를 참고하라.

144 2010년 5·18 구속부상자후에 유서를 보낸 후 자살한 지○○씨의 유서에는 이러한 복합적 위기가 잘 드러난다. 유서는 “꿈에 항상 군인들이 나타나 살 수가 없습니다.(중략) 축산업에 실패해 엄청난 생활고를 겪고 있고, 고문 후유증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쉽사리 없어지지 않은 국가폭력의 파멸적인 체험을 “내 생애 가장 치욕스런 순간”으로 기억하는 한편 “5·18묘역에 안장해 달라”, “망령(亡靈)의 자식을 도와달라”는 간절한 유언이 담겨있다(한국경제, 2010. 9.15).

145 이러한 맥락에서 『부서진 풍경2: 끝나지 않은 5·18 이야기』의 서문에서 정수만 유족회장이 던진 질문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5·18 민주화운동의 명예가 회복되고 학살의 책임자 일부가 단죄되었다고 해서, 관련 피해자들인 5·18민주유공자들에게 보상이 지급되고 국가유공자로 예우한다고 해서 이만바 5·18은 끝났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적어도 이 자료집에 소개될 희생자들의 면면으로 보면 아직은 아니다. 아니 앞으로도 영원히 끝날 수 있는 문제일지도 모른다.”

트라우마의 역동(dynamics)에 늘 깨어있지 않는다면, 금전보상을 통한 개별적 '치유'가 가능하다는, 또 연구와 설명 없는 '치유'가 가능하다는 폭력적 전제에 대한 암묵적 공모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진정 '광주의 유산'에서 현재의 병목지점을 넘어설 새로운 전망을 얻고자 한다면, 잘못된 청산의 방식은 또 다른 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광주의 과거청산 방식을 주도하고 있는 '사건-보상-의료적 치료'의 프레임을 넘어 인권과 정의, 진실¹⁴⁶과 기억의 연대에 기초한 사회적 치유 모델의 구축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과 심도 있는 토론이 요청되는 시점이다.

참고문헌

논문 및 저서

- 5·18 기념재단. 2006. 『구술생애사를 통해 본 5·18의 기억과 역사2: 사회활동가 편』, 5·18기념재단.
- (사) 5·18민주유공자유족회. 2000. 『부서진 풍경1: 5·18 정신병동 이야기』(비매품)
- (사) 5·18민주유공자유족회. 2009. 『부서진 풍경2: 끝나지 않은 5·18 이야기』(비매품).
- _____. 2017. 『5·18 열흘간의 항쟁』, 5·18기념재단.
- (사) 5·18민주유공자유족회. 2005a. 『그 해 오월 나는 살고 싶었다1: 5·18 민중항쟁 증언록』(비매품)
- _____. 2005b. 『그 해 오월 나는 살고 싶었다2: 5·18 민중항쟁 증언록』(비매품).
- 강용주. 2010. "아시아는 지금: 과거청산과 국가폭력 치유센터", 《아시아저널》 제20권, 109~139쪽.
- 강은숙. 2014. "'5·18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5·18 시민군 기동타격대원의 생애사", 김동춘·김명희 외, 『트라우마로 읽는 대한민국: 한국전쟁에서 쌍용차까지』, 역사비평사, 81~114쪽.
- 곽승연. 2015. "5·18 당시 대중의 침묵에 관한 연구: 국가의 부인전략을 중심으로", 《사람》 53호, 393~419쪽.
- 광주트라우마센터. 2015. 『제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습니까?: 5·18 생존자 6인이 처음으로 털어 놓는 이야기 증언치유프로그램 '마이데이(MY DAY)' 기록집 I』, 광주트라우마센터.
- _____. 2017. 『제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습니까?: 증언치유프로그램 '마이데이(MY DAY)' 기록집 II』, 광주트라우마센터.
- 길리건, 제임스(Gilligan, James). 2012. 『왜 어떤 정치인은 다른 정치인보다 해로운가』, 이희재 옮김, 교양인.
- 김동춘. 2013. "분단이 낳은 한국의 국가폭력: 일상화된 내전 상태에서의 '타자'에 대한 폭력행사",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제23권, 110~141쪽.
- 김명희. 2012. "한국사회 자살현상과 『자살론』의 실재론적 해석: 숙명론적 자살(fatalistic suicide)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통권 제96호, 288~327쪽.
- _____. 2014. "외상의 사회적 구성: 한국전쟁 유가족들의 '가족 트라우마'와 복합적 과거청산", 《사회

와 역사》 통권 제101호, 311~352쪽.

- _____. 2015a. "고통의 의료화: 세월호 트라우마에 대한 실재론적 검토", 《보건과 사회과학》 제38집, 225~245쪽.
- _____. 2015b. "세월호 이후의 치유: 제프리 알렉산더의 '외상 과정' 논의를 중심으로", 《문화와 사회》 통권 제19호, 11~53쪽.
- _____. 2016a. "한국 이행기 정의의 감정동학에 대한 사례연구: 웹툰 <26년>을 통해 본 5·18 부인(denial)의 감정생태계", 《기억과 전망》 통권 제34호, 55~101쪽.
- _____. 2016b. "동아시아 분단체제의 재구성 장치로서 친밀적 공공권(親密的 公共圈)의 가능성", 《민주주의와 인권》 제16권 2호, 351~398쪽.
- _____. 2017a. "탈북자 자살의 생태계에 대한 생명인문학적 성찰: 자살의 의료화와 정신의 식민화", 《통일인문학》 제70집, 35~70쪽.
- _____. 2017b.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부인(denial)의 정치학: 『제국의 위안부』 사태' 다시 읽기", 《한국여성학》 제33권 3호, 235~278쪽.
- _____. 2018. "일본군 '위안부' 운동과 시인(recognition)의 정치: 한국의 사회적 기억 공간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34권 3호, 113~146쪽.
- _____. 2019. "재난의 감정정치와 추모의 사회학: 감정의 의료화를 넘어 사회적 치유로", 《감성연구》 제19권, 145~178쪽.
- 김명희·김왕배 편. 2016. 『세월호 이후의 사회과학』, 그린비.
- 김서경. 2016. "재난 시대의 혐오", 김명희·김왕배 편, 『세월호 이후의 사회과학』, 그린비, 288~309쪽.
- 김보경. 2014. "누가 역사를 부인하는가: 5·18 과거청산 부인의 논리와 상상", 김동춘·김명희 외, 『트라우마로 읽는 대한민국: 한국전쟁에서 쌍용차까지』, 역사비평사, 328~366쪽.
- 김정인·김정한 외. 2019. 『너와 나의 5·18: 다시 읽는 5·18 교과서』, 오월의 봄.
- 마나베 유코(眞鍋祐子). 2015. 『열사의 탄생: 한국민중운동에서의 한의 역학』, 김경남 옮김, 민속원.
- 루이스, 린다. 2000. "5·18 피해자 집단의 재피해 현상", 변주나·박원순 편저, 2000, 『치유되지 않은 5월: 20년 후 광주민중항쟁 부상자 실상 및 대책』, 다해, 199~213쪽.
- 박영주·정혜경. 2017. "5·18 생존자의 외상 후 성장에 대한 탐색적 연구: 광주 트라우마센터의 심리적 및 사회적 외상치유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민주사회정책연구》 통권 33호, 71~102쪽.
- 변주나. 1996. "광주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들의 15년 후 후유증에 관한 연구: 일상생활 변화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회》 제29권 2호, 221~259쪽.
- _____. 2000. "광주5·18 민중항쟁 부상자들의 비참감 인지정도 및 관련요인에 관한 종적연구", 《스트레스연구》 제8권 2호, 63~73쪽.
- 변주나·박원순 편저. 2000. 『치유되지 않은 5월: 20년 후 광주민중항쟁 부상자 실상 및 대책』, 다해.
- 신일섭. 2015. "광주민주화운동 보상법의 정치사회적 의미", 《민주주의와 인권》 제5권 2호173~201쪽.
- 신혜량·김학렬·박상학 외. 2011.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 서울/경기 및 전남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사회정신의학》 제16권 2호, 57~65쪽.
- 안종철. 2007a. "광주민중항쟁의 전개과정 연구", 『5·18 민중항쟁의 정치·역사·사회 3-5·18 민중항쟁의 전개과정』, 5·18기념재단.
- _____. 2007b. "과거청산과 미해결 과제", 『5·18 민중항쟁의 정치·역사·사회 5-5·18 민중항쟁의 전개과정』, 5·18기념재단.
- 임상혁. 2002. "삼청교육대의 위법성과 민사상 배상", 《법과 사회》 제22권, 75~105쪽.
- 오수성. 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의 심리적 충격", 『광주5월민중항쟁』, 풀빛.
- _____. 2001. "5·18관련자의 심리적 고통", 『5·18 민중항쟁사』, 광주광역시5·18사료편찬위원회.

146 Cohen(2000)의 분류를 참고하자면, 여기서 '진실'은 다음의 차원을 포함한다. ① 사실적·법실체적 진실, ② 개인적·서사적 진실, ③ 사회적 진실, ④ 치유적·회복적 진실이 그것이다. ① 사실적·법실체적 진실은 사실에 근거하고, 정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획득한 법적·과학적 정보를 말한다. 전사회적 차원에서 이것은 인권침해의 맥락·원인·유형의 기록을 뜻한다. ② 개인적·서사적 진실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더 철저히 밝힌 진상을 말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진실의 소통은 증언의 치유적 잠재력을 실현하고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사람들의 주관적 경험을 확증함으로써 화해를 추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③ 사회적 진실은 사람들 간의 의견교환, 논의, 토론을 통해 구현된 진실을 말한다. ④ 치유적·회복적 진실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과거를 직시하는 서사 방식을 말한다. 사실의 기록만으로 총체적 진실에 다가가기에 충분치 않다. 자기치유, 화해, 배상이라는 목표를 위해 우리는 진실을 해석해야만 하고 그러려면 우선 모든 피해자가 실제로 고통 받았으며, 그것이 주목받을 가치가 있다는 점을 시인해야 한다. 진실위원회의 임무는 이 모든 진실에 대한 사회적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며, 개인적 진실을 포함한 총체적인 진실의 사회적 (재)해석과 소통은 '설명 없는 치료'를 넘어 설명의 힘이 촉발하는 '설명적 치유(explanatory healing)'의 가능성을 확대한다(김명희, 2019: 167).

참고문헌

- 오수성·신현균·조용범. 2006. "5·18피해자들의 만성 외상 후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제25권 2호, 59~75쪽.
- 오수성·신현균. 2008. "5·18 피해자들의 생활스트레스, 대처방식,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외상후 스트레스, 심리건강 간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27권 3호, 595~611쪽.
- 오승용 외. 2012. 『5·18 왜곡의 기원과 진실』, 5·18기념재단.
- 윤민재. 2008. "군의 인권과 사고(자살)예방프로그램 연구", 《민주주의와 인권》 제8권 1호, 79~109쪽.
- 이미정. 2017. "심리부검의 쟁점 및 개선방안: 현행 심리부검 절차 및 방법론을 중심으로", 《입법과 정책》 제9권 제3호, 363~384쪽.
- 이재승. 2010. 『국가범죄: 한국 현대사를 관통하는 국가범죄와 그 법적 청산의 기록』, 앨피.
- 이창연. 2009. "분신자살(焚身自殺)의 구조와 메커니즘 연구: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기억과 전망》 제21호, 148~179쪽.
- 임미리. 2016a. "한국 학생운동에서 대학생의 저항적 자살에 관한 연구", 《기억과 전망》 통권 34호, 321~360쪽.
- _____. 2016b. "저항적 자살의 유형 분류에 관한 연구: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열사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통권 111호, 253~290쪽.
- 정호기. 2003. "광주민중항쟁의 '트라우마티즘' 과 기념공간: '5월운동' 과 국립5·18묘지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통권 58호, 121~145쪽.
- _____. 2015. "기념사업으로 본 '5·18'의 의미 변용: 민주성지, 문화도시, 인권도시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71호, 52~74쪽.
- 최정기. 2006. "과거청산에서의 기억 전쟁과 이행기 정의의 난점들: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보상과 피해자의 트라우마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제14권 2호, 3~22쪽.
- _____. 2008. "국가폭력의 트라우마 기제: 광주 '5·18'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연구》 통권 77호, 58~78쪽.
- Cohen, S. 2001. State of Denial, States of Denial :Knowing About Atrocities and Suffering, 조호제 옮김, 『잔인한 국가, 외면하는 대중: 국가와 사회는 왜 인권침해를 부인하는가』, 창비.
- Alexander, J. 2004. Meandin of Social Life, 박선웅 옮김, 『사회적 삶의 의미: 문화사회학』, 한울 아카데미.
- Atkinson, JM. 1978. Discovering Suicide: Studies in the Social Organization of Sudden Death, London: Palgrave Macmillan.
- Besnard, P. 1993. "Anomie and Fatalism in Durkheim's Theory of Regulation", in Emile Durkheim: Sociologist and Moralist, ed. by S. P. Turner. London: Routledge.
- Busfield, J. 1996. Men, Women and Madness. New York University Press.
- DSM-III. 1980.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III,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Washington.
- Durkheim, E. 2000(1897). Suicide: A study in sociology,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김충선 옮김, 『자살론』, 창아.
- _____. 2004. Durkheim's Philosophy Lectures: Notes from the Lycee de Sens Course, 1883-1884, N. Gross & R. Alum(ed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ushner, H. I. 1985. "Women and Suicide in Historical Perspective", Signs: Journal of Woman in Culture and Society 10(3): pp.537~552.

- Leenaars, A. 2017. The Psychological Autopsy: A Roadmap for uncovering the barren bones of the suicide's mind, New York: Routledge.
- Mann, J. M. 1998. Dignity and Health The UDHRs revolutionary first article, Health and Human Rights 1(1): 6~23.
- Mastroianni, G.R., and Scott, W.J. 2011. "Reframing Suicide in the Military Parameters", Parameters : journal of the US Army War College 41(2): 6~21.
- Pearce, F. 1989. The Radical Durkheim, London: Unwin Hyman.
- Pilgrim, David.Richard Bentall. 1999. "The Medicalisation of Misery: A critical realist analysis of the concept of depression", Journal of Mental Health 8(3): 261~274.
- Webb, David. 2013. The Politics of Suicide: <https://thinkingaboute suicide.org/2608-2/>.
- Ruffalo, M. L. 2014. "The Medicalization of Suicide", African Journal of Psychiatry 17(6).

보고서 및 자료집

- 5·18 기념재단. 2001. 「'5·18 트라우마티즘' 실태파악을 위한 기초조사」.
- _____. 2006. 「5·18민주유공자 생활실태 및 후유증실태 조사연구 보고서」.
- _____. 2007.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생활실태 및 후유장애 실태 조사」.
- _____. 2008.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에 대한 심리학적 부검 및 자살피해 예방대책과 사회적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 5·18 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2018. 「5·18 민중항쟁 안내 해설 가이드북」.
- 광주아시아포럼·5·18기념재단. 2018. 「2018 국가폭력 트라우마 국제회의: 불처벌」.
- 군인문사진상규명위원회·자살예방협회. 2007. 「군 복무중 자살에 대한 이해와 판례분석」.
- 김명희. 2017a. "자살의 사회학적 관점과 다학제간 통합적 자살연구의 가능성", 한국자살예방협회, 2017년 자살예방 종합학술대회 자료집(2017. 9. 1).
- _____. 2017b. "지역사회 기반 사회통합적 자살예방정책의 가능성", 화성시 자살예방센터, 2017 생명사랑포럼 자료집(2017. 11. 27).
- 김효정. 2002. "집합행동에 대한 사회운동론적 연구", 성공회대 사문연 포럼.
-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2017. "40~50대 남성 자살시도자들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는 무엇인가?", 2017 서울시 자살예방 근거마련 연구사업 보고서.
- 오수성 외. 2006. "5·18민주유공자 생활실태 및 후유증실태 조사연구보고서", 5·18기념재단.
- 오수성·김석웅. 2018. "가해자 불처벌이 국가폭력 생존자와 가족의 심리치유에 미치는 영향", 광주아시아포럼·5·18기념재단. 「2018 국가폭력 트라우마 국제회의: 불처벌」, 83~91쪽.
- 최정기 외. 2001. "'5·18 트라우마티즘' 실태파악을 위한 기초조사", 5·18기념재단.
- 평화박물관. 2012. "광주 트라우마센터 설립을 위한 기초 연구", 평화박물관.
- 한국국방연구원. "1988, 대국회 광주문제 대책안".

언론자료 및 사이트

- 5·18 기념재단 홈페이지. <http://www.518.org/main.php> (2019. 11. 3 접속).
- 강민지. 2006. "[프로그램리뷰] 또 다른 '5·18 피해자의 앵글'", PD저널, 2006. 5.17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no=9357> (2019.10.20 접속)
- 곽승희. 2012. "5·18 관련자 현재까지 44명이 자살했다", 오마이뉴스, 2012. 5·18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33698 (2019.10.20 접속)
- 김도균. 2005. "80년 광주항쟁 피해자들 자살로 고달픈 생 마감", 민중의소리, 2005. 1. 12 <http://www.vop.co.kr/A00000017908.html> (2019.10.20 접속)

김재삼. 1993. "5·18 훈장, 반납 용서구하라", 1993. 6.10.

김형노. 2011. "생활고·후유증...5·18 유공자 자살 이어져", 노컷뉴스, 2011.10.23
<https://www.nocutnews.co.kr/news/885778> (2019.10.20 접속)

박병국. 2019. "'진상조사 응한 것 후회'... 5·18 계엄군 성폭력 확인 1년, 달라진 건 없었다", 헤럴드경제, 2019.10.31.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1031000183> (2019.10.31 접속)

배명재. 2010. "5·18 고문피해자, 후유증 앓다 자살", 경향신문, 2010. 9.1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009151640561 (2019.10.20 접속)

_____. 2011a. "5·18 유공자 또 안타까운 죽음", 경향신문, 2011.10.24
http://www.samilbo.com/sub_read.html?uid=12962§ion=sc3 (2019.10.20 접속)

_____. 2011b. "고문 후유증에 생활고...5·18 유공자 자살 잇따라", 경향신문, 2011. 3. 4
http://www.samilbo.com/sub_read.html?uid=12199§ion=sc3 (2019.10.20 접속)

배선영. 2017. "자신이 오월 광주가 된 이들: 김종태, 김의기, 홍기일, 강상철, 최덕수, 김태훈", 카톨릭뉴스 <지금 여기>, 2017. 5.23, <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955>, (2019.10.25 접속)

서충섭. 2019. "'5·18 왜곡에 괴로워하다...' 시민군 막내 타계", 무등일보, 2019. 8. 8
<http://mdilbo.com/article.php?aid=1565190000589962011#Redyho> (2019.10.20 접속)

안현주. 2009. "<5·18 29주년>5월 피해자 고통 여전...정신질환 자살률 높아", 뉴시스, 2009. 5.1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2673248> (2019.10.20 접속)

윤교은. 2009. "KBS스페셜, '5·18 자살자 심리부검 보고서'", 서울연합뉴스, 2009. 5.14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329940> (2019.10.20 접속)

이다래. 2019. "광주 5·18 광주민주화운동, '계엄군에게 집단성폭행 여고생, 아버지 살해-자살까 지...'", 공감신문, 2019. 5·18 <http://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196631> (2019.10.20 접속)

장덕중. 2009. "5·18 유공자 자살 잇따라... 관심 절실", 광주연합뉴스, 2009. 4.15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09041584168> (2019.10.20 접속)

장하나·홍정규. 2006. "5·18 피해자 집회중 분신자살 시도", 2006.11.11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061111093338> (2019.10.20 접속)

한경닷컴 뉴스팀. 2010. "5·18유공자, 고문 후유증 고통에 자살", 한국경제, 2010. 9.15
<https://news.v.daum.net/v/M0Mc9lu5oD?f=p> (2019.10.20 접속)

형민우. 2005. "5·18 유공자신청 기각 40대 자살", 광주연합뉴스, 2005. 5. 2
<http://legacy.www.hani.co.kr/section-005000000/2005/05/005000000200505250922232.html> (2019.10.20 접속)

ITWORLD. 2013. "'빅데이터 분석으로 퇴역군인 자살 예방' 미국 뒤르캠 프로젝트", <http://www.itworld.co.kr/news/83662?page=0,0>(2013. 9. 6.)

Webb, David. 2013. "The Politics of Suicide: Contemplating and comprehending the urge to die", <https://thinkingaboutsuicide.org/2608-2/>.

「5·18 자살과 트라우마의 계보학」에 대한 토론문

홍성태 (대구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후연구원)

2018년 3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1980년 5월 광주민중항쟁 이후 무려 38년이 지나고 나서야 온전한 진상규명을 향해 무거운 한 걸음을 내딛는 듯했다. 그러나 시행일로부터 일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진상조사위원회조차 꾸리지 못했다. 사실 정치사회에 만연한 위선과 무능력, 역사의 상식마저 통하지 않을 정도로 고착된 보수정당의 '무염치의 정치'에 익숙해진 누군가에게는 이미 예견된, 그래서 더는 놀랍지도 않은 일인지 모른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인가? 우리 사회가 디디고 있는 진실과 책임의 밑바닥에 과연 어떤 힘이 작용하길래 5·18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정의(正義)를 정의(定義)하는 일이 이토록 힘겨운가? 열흘간의 항쟁의 시간보다 무려 1440배 이상 긴 역사의 시간을 포괄하며 이른바 '예언적 사건'이 된 5·18은 언제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까? 국가폭력에 의한 억울한 죽음마저 속명으로 대해야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민주화 이후 30년이 지난 오늘날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광주민중항쟁 40주년을 6개월 앞둔 오늘. 착잡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김명희 교수의 "5·18 자살과 트라우마의 계보학"에 대해 토론하고자 한다. 다만,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언급할 두 가지가 있다. 우선, 발표자의 잘 정돈된 문제의식과 논지가 토론자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본 학술행사에서 요구되는 실천적 함의를 강조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발표문을 읽으면서 밑줄 그었던 부분은 다른 기회를 통해 의견을 나누었으면 한다. 지금부터 토론할 내용은 이러한 사항을 고려해 크게 세 가지 논점에 대한 문제제기 형태로 같음하고자 한다.

첫째는 '인권레짐'과 '이행기 정의'의 관계설정에 대한 문제이다. 발표자는 '이행기 정의' 또는 협의의 '5·18 과거청산 방식'에 의해 주도된 인권레짐에 대한 비판적 성찰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토론자 역시도 인권레짐에 대한 성찰이 5·18 자살의 인과기제를 포착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 그러나 이행기 정의가 인권레짐에 선행한다는 가정이나 관점은 더 많은 토론을 필요로 하는 대목인 것 같다. 물론 같은 주장을 다른 각도에서 재론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이행기 정의는 “중대한 인권침해의 유산을 바로잡기 위한 일련의 사법적-비사법적 조치들”을 의미하며, 그 핵심 내용에는 형사소추, 진실위원회, 배상 및 보상 프로그램, 다양한 제도 개혁 등을 포함한다.¹⁴⁷ 이러한 이행기 정의의 개념과 실천은 UN 인권제도와 같이 국제적인 규범체계에 원류를 두고 있는 추상적이며 보편성을 지향하는 인권레짐의 문제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실천의 전략을 가진다. 이런 점에서 좀더 현실적인 관점으로 이행기 정의와 인권레짐의 관계설정에 문제를 삼자면, 5·18 자살 문제를 사회적 타살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인권제도와 인권레짐의 프레임은 추구하기보다 과거청산의 관점에서 민주화 이후 ‘지체된 이행기 정의’에 대한 근본 원인을 집요하게 따져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과정에서 이행기 정의와 인권레짐의 문제를 상보적 관계로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 5·18 트라우마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이행기 정의 운동’은 다양한 인권문제의 영역에서 제도적-규범적으로 숙성된 인권레짐에서 유력한 도덕자원을 동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문제제기는 5·18 자살의 성격 규정에 관한 것이다. 주지하듯, 뒤르켐이 (아노미적 자살과 반대되는 자살의 유형으로 각주에서) 짧게 논의했던 숙명적 자살은 “과도한 규제로부터 발생한, 즉 무자비하게 차단된 미래와 억압적인 규율에 의해 폭력적으로 질식된 열정을 가진 사람의 자살”을 의미한다.¹⁴⁸ 발표자가 지적했듯이, 5·18 자살에는 “생존자들이 겪었던 권위주의 국가의 폭력에 의한 복합적인 트라우마”가 매개하는 집합적 경향이 비교적 뚜렷하게 존재한다. 하지만 (자살에 관한 뒤르켐의 사회학적 통찰과는 별개로) 5·18 자살을 ‘숙명적 자살’과 저항적 자살로 분류해 일반화하는 것은 어딘지 모르게 불편하다는 점을 조심스럽게 고백하고 싶다.

5·18 자살의 의미를 숙명적 자살의 이름으로 일반화하는 방법 외에 다른 덜 구조화된 해석적 접근이 개입할 여지는 없는 것인가? 개념의 엄밀성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국가에 의한 직접적-구조적-문화적 폭력을 배경으로 한 자살이라는 행위에 ‘숙명적’(fatalistic)이라는 의미를 부가한다는 것이 어딘지 모르게 불편하고 서글프기까지 하다. 한편으로는 5·18 자살(자)을 타자화하지 않으면서도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자 이 순간에도 분투하는, 바로 남겨진 자들의 운명을 잠재적으로 규정하는 것처럼 오인될 소지가 없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 사회과학의 개념과 의사소통의 어감 사이에 불편하게 걸려진 이러한 토론자의 고민은 지나친 기우인가? 그렇다면 천만다행이다. 그러나 토론자만이 그렇게 느끼는 문제가 아니라면, 그 불편함을 견어내기 위한 새로운 접근과 해석들에 대한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5·18 트라우마의 사회적 치유 과정에서 공동체의 역할에 대한 발표자의 고견을 듣고 싶다. 이 요청은 발표문의 마지막 문장에 밑줄을 그으면서 저절로 생긴 독자로서의 궁금증을 토론의 기회를 빌려 풀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광주와 과거청산 방식을 주도하고 있는 ‘사건-보상-의료적 치료’의 프레임을 넘어 인권과 정의, 진실과 기억의 연대에 기초한 사회적 치유 모델의 구축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과 심도 있는 토론이 요청되는 시점”에서 공동체의 역할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나? 5·18 트라우마를 사회적으로 치유한다는 것은 피해자 개인의 ‘기억으로부터의 자유’와 동시에 애도의 울타리를 만들고 사회적 인정을 동원하며 진실을 정의하는 기억의 연대로서 ‘상상의 5·18 공동체’를 구현하는 일인지도 모른다.

연구자들이 국가폭력의 트라우마를 반복적으로 소환하는 일이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토론을 매듭짓고자 한다. 발표자의 이번 연구가 트라우마의 계보학을 정리하는 마지막 장이 되길 바란다. 좋은 글을 미리 읽고 토론할 기회를 준 김명희 교수와 부족한 토론자를 초청해준 5·18기념재단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드린다.

147 International Center for Transitional Justice(ICTJ). 2019. <https://www.ictj.org/about>

148 Durkheim, Émile. 2002. *Suicide: A Study in Sociology*. London: Routledge. 239f.

